

공무원연금 실무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2021

공무원연금 실무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2021

머 리 말

1960년부터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시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0년간 누적된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개정된 공무원연금 법령과 재해보상 및 융자관련제도 등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무원연금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함으로써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가다듬어 보다 충실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공무원연금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충고를 깊이 명심하고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되어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5.

공무원연금공단 이 사 장

목 차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1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3
제2절 공무원연금의 운영주체와 적용 대상자	33
제3절 공무원연금 업무의 체계	35

제2장 연금업무지원시스템 37

제1절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9
제2절 시스템 구성도	39
제3절 시스템 접속 및 종료	40
제4절 업무별 처리 세부내용	41
제5절 연금 업무 알림	48
제6절 연금업무담당자 등록 및 변경 절차	49
제7절 홈페이지 접속 오류 시 조치방법	53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56

제3장 공무원재직기간 59

제1절 재직기간의 정의 및 계산	61
제2절 재직기간의 합산	64
제3절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73
제4절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	77

제4장 징수관리 83

제1절 기 여 금	85
제2절 부 담 금	119

제5장 급여관리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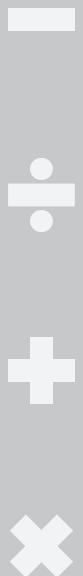
제1절 급여통칙	145
제2절 퇴직급여	161
제3절 유족급여	221
제4절 퇴직수당	228
제5절 급여의 제한	231
제6절 행정구제 제도	233
제7절 연금 및 퇴직과세제도	236
제8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257

제6장	제1절 재해보상급여	265
재해보상급여	제2절 부조급여	311
263	제3절 기준소득월액 최고·최저 보상기준	333
제7장	제1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337
연계제도		
335		
제8장	제1절 사업개요	349
주택사업	제2절 임대주택	351
347	제3절 주택분양	364
제9장	제1절 공무원 연금대출	377
융자사업	제2절 대여학자금 대부	389
375	제3절 금융기관 알선대출	414
부 록	1. 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419
417	2. 맞춤형복지시스템 이용안내	423
	3. 제후복지사업 이용안내	428
	4. 은퇴자 공동체 마을 안내	433
	5. 모바일 앱 이용안내	435
	6.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40
	7.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513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3
제2절 공무원연금의 운영주체와 적용 대상자	33
제3절 공무원연금 업무의 체계	35





제1절 /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1. 의 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무원 개인이 준비 또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 등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퇴직·장해·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의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성 격

01 사회보험의 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미리 책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급여 지출액이 기여금 등 수입을 상회하여 2001년부터는 당해 연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수입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02 종합 복지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을 포함한 종합 복지제도이며, 유능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상호부조 성격의 급여인 부조급여 등은 별도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3. 공무원연금제도의 창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 모든 분야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동란기 및 전후 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1.1.에 공포·시행하여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 연금제도가 창설되었다.

4. 연 혁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6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군인(장교·준사관 및 중사 1등병조 이상의 하사관) ○ 급여종류 : 퇴직연금(준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미만 재직자는 기여금만 반환 ○ 비용부담 : 기여금 → 봉급월액의 23/1,000, 부담금 → 기여금과 동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 기여금 → 봉급월액의 35/1,000 부담금 → 봉급월액의 23/1,000
'6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인상(5년 이상 재직자) $\left[\begin{array}{l} \text{재직 시 납입 기여금총액} \\ + \text{부담금총액} + \text{그 이자}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봉급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 \frac{100 + 5\% \times \text{초과재직연수}}{100} \end{array} \right]$ ○ 부담금을 봉급예산액 기준으로 일괄 산출
'6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군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연금법의 제정('63 1.20 법률 제1260호)으로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분리 ○ 급여의 종류에 있어 요양비·분만비·상병수당·분만수당·장제비 등 5종의 단기급여 추가신설 ○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휴직·정직기간에 대한 감축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 휴직 1/2, 정직 2/3 감축 ○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함. ○ 퇴직연금 지급요건 중 연령제한(60세) 및 준퇴직연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액을 봉급연액의 30/100~50/100 에서 40/100~50/100 으로 인상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선택제도 폐지 ○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기여금 반환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일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월의 기여금×재직월수 ○ 장해연금의 등급 구분 및 연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연액의 50/100 → $\left[\begin{array}{l} 1\text{급 봉급연액의 } 80/100 \\ 2\text{급 봉급연액의 } 60/100 \\ 3\text{급 봉급연액의 } 40/100 \end{array} \right]$ ○ 유족부조금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신설함. ○ 급여청구시효를 7년에서 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급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1년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63. 3. 1.	○ '48.8.15~'59.12.31사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강제 소급통산토록 함.
'63.11. 1.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설치 ○ 공무상요양기간을 10월에서 1년으로 연장('63.8.1부터 적용) ○ 요양일시금제도 신설 ○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제도 도입 ○ 장제비의 금액을 봉급 1월분에서 3월분으로 인상 ○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일시금 제도인 장해보상금 및 유족부조금(연금액의 5배)을 신설하여 택일하게 함.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액을 봉급연금의 40/100에서 60/100으로 인상
'67. 1. 1.	○ 공무원 및 군인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제도 실시 ○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분만비 지급 폐지 ○ 퇴직연금액 인상: 봉급연금의 40/100~50/100 → 50/100~70/100 ○ 퇴직일시금액 인상 ※ 5년 미만 재직자 퇴직월기여금 × 재직월수 → 퇴직월기여금 × 재직월수 + 이자 ※ 5년 이상 재직자 $\left[\frac{\text{봉급월액} \times \text{재직연수}}{100 + 5\text{년초과재직연수}} \right] \rightarrow \left[\frac{\text{봉급월액} \times \text{재직연수}}{150 + 5\text{년초과재직연수}} \right]$
'69. 1. 1.	○ 기여금과 부담금의 징수율을 23/1,000에서 35/1,000으로 인상
'70. 1. 1.	○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인정 ※ 퇴직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신설 ○ 기여금과 부담금의 징수율을 35/1,000 에서 55/1,000 으로 인상
'73. 1. 1.	○ 재직기간 감축제도 신설 ※ 휴직·직위해제기간 : 1/2 정 직 기 간 : 2/3 ○ 공무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부조제도 실시 ※ 종래의 공무외요양과 가족요양에 대해 요양비의 1/2 범위 안에서 요양부조금 지급 ○ 재해부조금 신설(봉급월액의 3배) ○ 연금지급방법을 매년 4등분 지급(3,6,9,12월)에서 12등분하여 매월 지급 ○ 해외이민자에 대한 연금청산제도 실시 ○ 장해급여·순직부조금을 다른 장기급여(퇴직급여 등)와 병급인정 ○ 장해연금을 종래 3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봉급연금의 15/100~80/100 을 지급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및 유족부조금을 폐지하고 봉급월액의 36배 범위 내의 순직부조금 지급 ○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청구시효를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공무원연금제도심의위원회 설치
'75. 4. 1.	○ 퇴직·장해연금수급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정지제도 신설 ※ 종래에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만 지급정지 ○ 재직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제한 ○ '48.8.15~'59.12.31 사이의 공무원 및 군인경력을 재직기간의 중단 등에 관계없이 재직 중 언제든지 소급통산을 가능케 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8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급직원·전문직원 등 임시직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킴(‘80.7.1부터 적용) ○ 급여산정의 기초인 보수월액에 기말수당 포함(‘80.7.1부터 적용) ○ 공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 감축대상에서 제외 ○ 의료보험의 실시로 요양부조금·분만비·장제비 폐지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신설 ○ 재직기간의 상한을 33년으로 연장 ○ 퇴직연금의 상한을 보수연액의 70/100 에서 75/100 로 인상 ○ 유족연금부가금 신설
'81.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한(재임용월로부터 3월) 폐지 ○ 퇴직연금의 상한을 보수연액의 76/100 으로 인상 ○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연계제도 실시 ○ 순직부조금을 보수월액의 36배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지병 등과 결합되어 발생한 공무상 장애·사망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 연금제도심의위원회 폐지
'82.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과 기금증식사업을 담당하게 함.
'8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규정함. ○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던 연금관계 집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 ○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실시 ○ 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병역복무 휴직기간의 1/2 감축 폐지 ○ 공무상 요양기간을 1년에서 실제요양기간 2년으로 연장 ○ 재해부조금을 보수월액의 3배 범위 내에서 6배 범위 내로 인상 ○ 상병수당·분만수당 폐지
'8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 신설 ○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인상 (퇴직월기여금 × 재직월수 + 이자) → (퇴직월보수월액 × 재직연수)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도 신설
'8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 포함 ○ 급여를 받을 유족 및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 사망 전의 요양비에도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에는 분묘·제기·기념비 등의 마련 및 기념사업 등에만 사용 ○ 재해부조금 지급에 있어 대상주택 및 재해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거주에 관계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 • 상시 거주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 인위적인 재해 포함 ※ 종래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자연적인 재해에만 해당
'87.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매청 직제폐지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전매청을 제외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87.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월액에 장기근속수당 포함 ○ 공단의 부동산 취득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총액의 100분의 150내
'8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합산의 취소 및 재승인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취소 → 본인이 원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때 • 재승인 → 재직기간 합산취소 된 자가 다시 합산을 원할 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는 총무처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8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연금지급률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장해연금의 50%에서 70%로 ○ 국적상실자의 연금청산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액의 4배 상당액 지급 후 종결 ○ 퇴역(퇴직)연금 이체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이체제도를 폐지하고 분기별에서 반기별 이체로 개선 ○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퇴직급여가산금 지급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 합산 후 재퇴직한 경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가산금과 다음 금액(합산 시 반납한 퇴직급여가산금 + 그 이자 +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산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 * 종전에는 퇴직당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지급 ○ 급여 심사청구기간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88.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유족급여가산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 30%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20년 미만 25% • 20년 이상 30% ○ 사망조위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본인 사망 시 보수월액의 1배에서 3배로 인상 ○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 휴직·직위해제 1/2, 정직 2/3 감축 ○ 1일자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월부터 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
'89.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에 대한 연금을 종전에는 전액 지급정지에서 1/2 지급정지로 개정
'89.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직무수당 포함 ○ 과오납기여금을 징수 또는 환부할 경우 이를 징수 또는 환부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91.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수당제 신설 ○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10. 1부터 시행
'95.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는 전출입 특례에서 제외 ○ 재직기간의 합산신청 기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토록 함. * 재직 중인 공무원은 1996. 1. 1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합산재승인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승인기간에서 제외(취소)된 기간은 합산재승인 제도의 폐지로 인해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급여의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 시 이자 계산기간: 채납기간 • 이자율: 전국은행의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최고금리 ○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 및 비용부담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국고에서 부담, 공단에서 결정·지급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공단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 퇴직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함. ○ 급여상호간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 또는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퇴역)연금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 때에는 유족연금액의 1/2을 제한 ○ 기여금 및 부담금의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보수월액의 65/1000 • 부담금: 보수예산의 65/1000
'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및 부담금의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보수월액의 75/1000 • 부담금: 보수예산의 75/1000
'0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정 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변경함. ○ 병역복무기간을 임의 산입제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함. ○ 급여환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환수가 실질적으로 불가할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의 환수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환수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01. 1. 1.	<p>○ 연금 지급연령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2021년에 60세(법령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가 되도록 함. • 법령에서 정한 계급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폐직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즉시 또는 그 때부터 연금을 지급함. ※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년이 된 후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p>○ 연금수급자 연금 정지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 시에만 연금을 감액 지급하던 것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 하도록 함. ※ 소득과약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p>○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 지급액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p>○ 행방불명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방불명된 자의 상속인이 퇴직연금으로 급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보완함. <p>○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의 심의기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의 공무상 폐직여부 판단도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p>○ 비용부담률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각각 1,000분의 85로 조정함. <p>○ 급여부족액 정부 추가부담(보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p>○ 부담금의 납기조정 및 정산방법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납부를 1개월씩 앞당기고 분기마다 정산하도록 함. <p>○ 재해보상급여 지급 일원화 및 비용 부담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 공단으로 일원화하되, 업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재해보상부담금은 회계별 급여소요액을 소관회계별로 부담함. <p>○ 대여장학금 대여대상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토록 함. <p>○ 재직기간 합산기회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단축으로 정년 또는 근무 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에 미달하는 공무원에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03. 1. 1.	<p>○ 연금액 조정방법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매년의 보수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보수인상률 $\pm 2\%$ 범위 안에서 조정 •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직급 간 연금액의 역전현상이 발생된 때에는 별도 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함. • 최초 정책조정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조정시기를 매 5년에서 매 3년으로 단축
'05. 7. 1.	<p>○ 연금일부 지급정지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p>○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함. <p>○ 단기급여의 소멸시효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 보조금, 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07. 1. 19.	<p>○ 육아 및 출산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감축기간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감축기간 없이 퇴직수당 산정기간에 산입함.
'07. 5. 16.	<p>○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근무 시 받게 될 보수월액 기준으로 기여금 산정 및 징수함.
'08. 1. 1.	<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호적법」상의 증명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로 변경 <p>○ 부모의 부양사실 인정 기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는 유족으로 인정함. <p>○ 급여수령 금융기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급여 수령을 가능토록 함.
'10. 1. 1.	<p>○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산정의 기초를 전년도 기준소득 중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초과근무수당(시간 외, 야간, 휴일근무)·연가보상비의 평균금액을 기준소득월액에 반영 • 법 시행 이후(2010.1.1)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조정 <p>○ 연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 상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하지 못함. <p>○ 연금지급률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금지급률을 1.9%로 함. <p>○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함. •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근무상한연령·계급정년으로 퇴직한 때 또는 직제 개편 등으로 퇴직한 때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적용하여 현행보다 5세 연장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10. 1. 1.	<p>○ 유족연금지급률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액 및 장해연금액의 70/100에서 60/100으로 하향 조정함. <p>○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사유의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p>○ 환수금 분할납부 방법 및 연체이자율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금 분할납부 금액과 분할횟수를 조정함. •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인하함. <p>○ 비용부담률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산정기준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함 • 기여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하지 못함. •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table border="1"> <thead> <tr> <th>년 도</th><th>징 수 비 율</th></tr> </thead> <tbody> <tr> <td>'10. 1 ~ '10.12</td><td>기준소득월액의 6.3%</td></tr> <tr> <td>'11. 1 ~ '11.12</td><td>기준소득월액의 6.7%</td></tr> <tr> <td>'12. 1 ~</td><td>기준소득월액의 7.0%</td></tr> </tbody> </table> <p>○ 기여금 등의 납부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납부 <p>○ 휴직자의 기여금 납부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휴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기간 중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음 <p>○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예산(공무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예산)의 70/1000 • 연도별 징수율 <table border="1"> <thead> <tr> <th>년 도</th><th>징 수 비 율</th></tr> </thead> <tbody> <tr> <td>'10. 1 ~ '10.12</td><td>보수예산의 6.3%</td></tr> <tr> <td>'11. 1 ~ '11.12</td><td>보수예산의 6.7%</td></tr> <tr> <td>'12. 1 ~</td><td>보수예산의 7.0%</td></tr> </tbody> </table> <p>○ 급여 산정방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기간과 법 시행 이후 기간이 있을 경우 종전기간은 종전법(법률 8996, 2008. 3.28)에 의하여 급여를 산정함. • 법 시행 이후 기간은 개정법(법률9905, 2009.12.31)에 의하여 급여를 산정함. • 종전기간의 급여산정은 이 법 시행 전날(2009.12.31)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퇴직수당, 유족급여(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p>○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급여 3년마다 조정하는 매연도별 소비자물가변동률과 공무원보수변동률의 비율에 의한 연금조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3퍼센트 포인트 	년 도	징 수 비 율	'10. 1 ~ '10.12	기준소득월액의 6.3%	'11. 1 ~ '11.12	기준소득월액의 6.7%	'12. 1 ~	기준소득월액의 7.0%	년 도	징 수 비 율	'10. 1 ~ '10.12	보수예산의 6.3%	'11. 1 ~ '11.12	보수예산의 6.7%	'12. 1 ~	보수예산의 7.0%
년 도	징 수 비 율																
'10. 1 ~ '10.12	기준소득월액의 6.3%																
'11. 1 ~ '11.12	기준소득월액의 6.7%																
'12. 1 ~	기준소득월액의 7.0%																
년 도	징 수 비 율																
'10. 1 ~ '10.12	보수예산의 6.3%																
'11. 1 ~ '11.12	보수예산의 6.7%																
'12. 1 ~	보수예산의 7.0%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조위금의 지급사유에서 조부모 이상의 사망을 제외하고 자녀의 사망을 추가하여 최근친 위주로 조정함. ○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재직기간 비 감축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계산 • 강등기간(2010.1.1.이후 발생)을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 대상에 포함 ○ 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기준소득·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연가보상비의 연간 지급액 내역 등을 매년 3월 말까지 통보(연금취급기관→공단) •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 자료를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매년 5월 보수 지급일 10일 전까지 통보(공단→연금취급기관) ○ 재임용 후 2년 이내 합산신청 기한 폐지 ○ 공무상요양비(특수요양비)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요양비에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함. ○ 공익근무요원의 군복무 산입기간 근거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역 근무기간(2년)으로 산정 ○ 퇴직급여종류 변경신청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청구자가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급여 종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병역복무 휴직 중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을 퇴직 시 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 등에서 공제토록 명시함.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 시행규칙 서식 개정은 공단에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공단이 정하도록 함.
'11. 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지급액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본인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종전과 같이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
'11.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기간(법 23조제3항) 산입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 산정특례 신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총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div> <div style="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본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 + 소급급여금 및 이자</div> </div> <p>⇒ 급여 산정은 “기본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소급급여금 및 이자”를 지급</p> ○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급여금 및 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소급급여금 일시납부제도 신설 ○ 2010년 이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 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2009년말 보수월액 × 급여사유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08년·'09년 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합의 평균액</div> <div>('10년 1월~4월, '10년 5월~'11년 4월)</div> </div> </p> </div>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11.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직공무원”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추가 ○ 퇴직수당 감축대상 근무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1/2 감축에서 감축 없이 전 기간 인정 ○ 사망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만 가능하던 것을 직계존속도 가능 ○ 연금수급자 사망신고 규정 신설(사망후 30일 이내로) ○ 공무상 요양기간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 시까지 요양비 지원, 공무상요양일시금 폐지 ○ 공무상 재요양제도 신설(치유된 공무상 질병·부상이 재발·악화된 때) ○ 공무상 사망 시 유족연금 도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width: 60%;"> <tr> <td>20년 미만</td><td>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td></tr> <tr> <td>20년 이상</td><td>" 32.5%</td></tr> </table> 	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 이상	" 32.5%
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 이상	" 32.5%				
'13.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이전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12월 퇴직자(부칙 제5조제1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2009년 말 보수월액 × 급여사유발생한 달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8년, '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합의 평균액('10년 1월~4월, '10년 5월~'11년 4월) </div> ※ 1월~4월 퇴직자(부칙 제5조제2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2009년 말 보수월액 × 급여사유발생한 달의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08년, '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합의 평균액('10년 1월~4월, '10년 5월~ '11년 4월) × 공무원보수인상률 </div> ○ 일시금 산정 시 승진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차액 증가분 봉급월액 1/2 반영에서 실제 증가기간에 비례하여 반영 ○ 연금개시 미도래자 연금액 현가화 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시점을 매년 5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 ○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의 연체이자 기간 산정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이자자 계산 시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산정 ○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손자녀의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 ○ 소액 퇴직급여·수당 청구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이 짧아 퇴직급여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전화녹취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지침 : 재직기간 3년 이내) ○ 급여종류 변경신청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장해급여'도 포함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13. 5. 1.	<div>○ 연금급여 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div> <table><tr><td>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td><td>• ‘6인~11인’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 • 구성원을 공적연금 업무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td></tr><tr><td>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td><td>• ‘자문’(수당지급 가능) 근거규정 마련</td></tr><tr><td>순직보상심사위원회</td><td>•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td></tr></table> <div>○ 공단수행 후생복지사업 추가신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수련시설, 퇴직자 상담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추가 <div>○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방식 조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취급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6인~11인’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 • 구성원을 공적연금 업무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자문’(수당지급 가능) 근거규정 마련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6인~11인’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 • 구성원을 공적연금 업무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자문’(수당지급 가능) 근거규정 마련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16. 1. 1.	<div>○ 기여금 징수를 인상</div> <p>※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인상</p> <table><tr><td>2016년</td><td>2017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r><tr><td>8.0%</td><td>8.25%</td><td>8.5%</td><td>8.75%</td><td>9%</td></tr></table> <div>○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하향 조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하향 <div>○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5년간('20년까지) 매년 0.022%, 추가 5년간('25년까지) 매년 0.01%, 추가 10년간('35년까지) 매년 0.004% 인하 <div>○ 기여금 납부기간 및 연금산정의 재직기간 상한 연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33년에서 2015.12.31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div>○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공무원 평균소득 대비 본인 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을 본인 평균소득에 반영하여 퇴직연금 산정• 연금액 산정 시 지급률 1.0%에 대해서 소득재분배 적용(재직기간 30년까지)하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본인기준소득월액을 적용 <div>○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단계적 연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 이후 임용자(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포함)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div>○ 유족연금액 인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개정 이후 신규 유족연금수급자 부터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 <div>○ 연금액 한시 동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유족·장해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향후 5년간(2016년~2020년)동결 <div>○ 연금일부정지 제도 강화</div> <table><tr><td>전액정지대상 확대</td><td>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인자 추가</td></tr><tr><td>일부정지대상 확대</td><td>부동산임대소득 포함</td></tr><tr><td>일부정지액 산정 기준</td><td>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하향</td></tr></table> <div>○ 퇴직·유족연금 수급요건 조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0%	8.25%	8.5%	8.75%	9%	전액정지대상 확대	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인자 추가	일부정지대상 확대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일부정지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하향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0%	8.25%	8.5%	8.75%	9%													
전액정지대상 확대	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인자 추가																
일부정지대상 확대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일부정지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하향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1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일시금 산정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5년 미만자의 퇴직일시금 산식을 5년 이상자와 동일하게 변경 ○ 분할연금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1/2 분할하여 지급 ○ 비공무상 장애급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무상 질병·장애 시에도 장애급여를 지급(공무상 장애연금의 50% 수준) ○ 연금 압류금지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제도 신설 • 압류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연금액 중 월 185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는 연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공무상 유족연금(유족보상금) 지급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요건을 재직 중 공무상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서 퇴직 후 사망한 경우로 개선 ○ '91.10.1. 이전 퇴직자가 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금 지급(퇴직연금의 2년분) 조항 삭제 								
'18.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상 분법으로 인한 재해보상 관련 규정 삭제(이관) 및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 ○ 시간선택제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공무원연금적용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 ○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로 명칭 변경 ○ 분할연금제도 보완 <table border="1"> <tr> <td>분할연금 적용대상 명확화</td><td>2016년 이후 이혼자로 명시</td></tr> <tr> <td>실질적 혼인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인정</td><td>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 아닌 기간 제외 (2019. 9.21. 이후 이혼자부터)</td></tr> <tr> <td>분할연금 선 청구제 도입</td><td>이혼시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개시 전이라도 선 청구 가능</td></tr> <tr> <td>퇴직일시금 분할 도입</td><td>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수급 가능</td></tr> </table> ○ 타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의 퇴직유족연금 병급 제한 • 퇴직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복 시 선택 가능 명시 ○ 급여제한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지급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이상 형벌, 파면·해임(금전비리) 취소 시 감액된 급여액에 이자가산 지급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정산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금 과·미납 정산 시 일단위로 과·미납 기간에 대해 정기 예금 금리로 이자 산정 ○ 합산반납금 납부횟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기간에 따라 24회~60회로 차등적용 되었으나, 합산기간 관계없이 60회 이내로 변경 ○ 연금법상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 폐지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 장애 유족·비공무상 장애등급 판정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연금법상 급여 재심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후생복지」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7장) 	분할연금 적용대상 명확화	2016년 이후 이혼자로 명시	실질적 혼인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인정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 아닌 기간 제외 (2019. 9.21. 이후 이혼자부터)	분할연금 선 청구제 도입	이혼시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개시 전이라도 선 청구 가능	퇴직일시금 분할 도입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수급 가능
분할연금 적용대상 명확화	2016년 이후 이혼자로 명시								
실질적 혼인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인정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 아닌 기간 제외 (2019. 9.21. 이후 이혼자부터)								
분할연금 선 청구제 도입	이혼시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개시 전이라도 선 청구 가능								
퇴직일시금 분할 도입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청구, 수급 가능								

연 도	제 도 변 경 요 지
'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재판 중 유보되었던 급여 지급요건으로 “불송치” 결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 반영
'21.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합산 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와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재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퇴직시점까지 현재가치화 할 때 재임용 전 非공무원 기간은 보수인상률이 아닌 물가변동률 적용 ○ 재직기간 합산 등 신청기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합산·산입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개인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초과금액 제외*한 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시 사용되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개인별 8개 수당 수령액+직종·직급별 8개 수당 평균액)÷12월×(1+공무원보수인상률) ↳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로 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 증빙서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증명서를 대체하여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 ○ 연금 일부정지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월액 산정과 일부 정지기간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를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변경 ○ 재직기간 합산 시 급여제한 적용 방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제한 자 합산 후 퇴직 시에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 제한 유지 ○ 공무원연금 대출 이율을 ‘연 3%이상’에 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로 변경 ○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요청 가능한 자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자료 추가
'21.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 19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애 판단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애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201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업무 변경사항

01 부조급여(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지급액 일원화

종 전

-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조급여 지급



개 정

- 공무원의 부조급여 지급액 일원화
-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

02 순직공무원 요건(범위) 추가

종 전

- 없음



개 정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추가

03 퇴직수당 감축대상 근무기간 조정

종 전

-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1/2 감축



개 정

- 감축 없이 전 기간 인정

04 사망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특례 개정

종 전

- 직계비속만 가능



개 정

- 직계존속 포함

05 연금수급자 사망신고 규정 신설

종 전

○ 없음



개 정

○ 사망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

06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산정특례 조항 신설

종 전

○ 군복무기간 산입 후 퇴직하여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재직 기간을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손해 보는 상황 발생



개 정

○ “군복무 산입 후 퇴직(연금)일시금액” < “소급 기여금 + 이자 + 군복무산입 전 퇴직(연금) 일시금”인 경우 유리한 금액 지급

07 군복무기간 등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 선택 가능

종 전

○ 복직 후 매월 분할 납부



개 정

○ 복직 후 매월 분할 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 가능

08 공무상 요양기간 제한 폐지 및 재요양제도 신설

종 전

○ 실제 요양기간 2년, 향후 1년간의 예정요양기간
○ 없음



개 정

○ 치유 시까지 요양비 지원 공무상요양일시금 폐지
○ 치유된 공무상 질병·부상이 재발·악화된 때

09 공무상 사망시 유족연금제 도입

종 전

○ 없음



개 정

○ 종전의 유족연금·일시금과 공무상 유족 연금 중 택일
※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 20년 이상 : " 32.5%

2013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업무 변경사항

01 종전 보수월액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

종 전

- '10년 이전 기간의 급여산정을 위하여 보수월액을 퇴직시점으로 환산 시, '개인별 기준소득 월액 변동률' 적용



개 정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퇴직시점으로 현재화

02 1~4월 퇴직자의 연금산정시 전년도 소득 반영

종 전

- 매년 1~4월 퇴직 시 전전년도 소득으로 급여를 산정함에 따라 전년도 소득분이 미반영



개 정

- 매년 1~4월 퇴직자도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여 급여 산정

※ 2010~2013년 1~4월 퇴직자(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재산정, 향후 연금지급액부터 적용

03 승진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 반영 합리화

종 전

- 승진에 따른 소득증가분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일시금 산정 시 봉급월액 증가액의 1/2 반영



개 정

- 승진월~퇴직월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승진차액 반영

04 연금개시 미도래자 연금액 현재화 시기 조정

종 전

- 2010년 이후 퇴직 후 연금개시 미도래자의 연금액(10년 이후 기간분)은 매년 5월 현재화반영



개 정

- 종전기간('09년 이전)분에 대한 연금액 현재화 시기와 동일하게 1월로 조정

05 재직기간 합산반납금의 연체이자 산정기준 개선

종 전

○ 합산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를 월(月) 단위로 산정



개 정

○ 미납에 따른 연체이자를 일(日) 단위로 산정

06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 개정

종 전

○ 자녀·손자녀의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



개 정

○ '19세 미만'으로 개정

※ 공무원연금법 개정('12.10.22)에 따른 시행령 관련사항 반영

07 소액 퇴직급여 청구절차 간소화

종 전

○ 퇴직급여 신청 시 청구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재 문서 및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개 정

○ 소액 퇴직급여에 대해 유선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08 급여종류 변경신청 대상 확대

종 전

○ 급여종류 변경(일시금⇔연금) 대상을 퇴직 급여 및 유족 급여만 명시



개 정

○ 장해급여도 급여종류 변경 가능 (장해보상금⇔장해연금)

09 공무원연금급여 관련 심의위원회 등 운영 개선

종 전

○ 위원을 11명 이하로 구성



개 정

○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pool제)
○ 전문가 자문제도 도입

10 공단수행사업의 구체적 명시

종 전

○ ‘그 밖의 후생복지 사업’으로 포괄적 규정



개 정

○ ‘수련시설’ 추가
○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추가

11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방식 조정

종 전

○ 매년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자료를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으로 제출함



개 정

○ 기관 간 전출입자 소득자료 누락 등 방지를
위해 필요시 기관별로 소득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업무 변경사항

01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

종 전

○ 기준소득월액의 7%

개 정

○ 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2016년 : 8% ※ 2017년 : 8.25%
 ※ 2018년 : 8.5% ※ 2019년 : 8.75%
 ※ 2020년 : 9%

0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하향 조정

종 전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개 정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03 기여금 납부기간 및 연금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종 전

○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최대 33년까지 인정

개 정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2015.12.31. 재직기간 기준

재직기간	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

04 퇴직유족연금 수급요건 조정

종 전

○ 20년 이상 재직 시

개 정

○ 10년 이상 재직 시

05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종 전

○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

개 정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7%까지 20년간 단계적 인하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매 1년마다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16년	1.878	'23년	1.76	'30년	1.72
'17년	1.856	'24년	1.75	'31년	1.716
'18년	1.834	'25년	1.74	'32년	1.712
'19년	1.812	'26년	1.736	'33년	1.708
'20년	1.79	'27년	1.732	'34년	1.704
'21년	1.78	'28년	1.728	'35년~	1.7
'22년	1.77	'29년	1.724		

06 소득재분배 도입

종 전

○ 없음

개 정

○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도입
※ 30년 초과 시 소득재분배 없음

07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종 전

○ 2009.12.31. 이전 임용자 : 70%
○ 2010. 1. 1. 이후 임용자 : 60%

개 정

○ 2016.1.1. 이후 사망자부터 60%

※ 이 법시행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70%

08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

종 전

- 2009.12.31. 이전 임용자 : 60세
- 2010. 1. 1. 이후 임용자 : 65세



개 정

-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

※ '95년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합산자 포함)는 종전 규정(60세 원칙, 20년 미달기간 2배 근무 시 즉시 개시) 계속 적용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연장>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21년	60세	'27~'29년	63세
'22~'23년	61세	'30~'32년	64세
'24~'26년	62세	'33년~	65세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 퇴직시>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21년	퇴직 시	'27~'29년	퇴직 후 3년 경과시
'22~'23년	퇴직 후 1년 경과시	'30~'32년	퇴직 후 4년 경과시
'24~'26년	퇴직 후 2년 경과시	'33년~	퇴직 후 5년 경과시

09

연금액 한시적으로 동결

종 전

-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 연금에 증액 또는 감액



개 정

- 5년간 (2016년~2020년) 연금액 동결

10 연금정지제도 강화

● 연금 전액정지 확대

종 전	개 정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재임용	○ 선거직 공무원 ○ 전액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추가(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인자)

● 일부정지 산정기준 및 정지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 평균연금월액으로 하향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11 분할연금제도 도입

종 전	개 정
○ 없음	○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

<분할연금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 요건	①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12 비공무상 장애급여 신설

종 전	개 정
○ 없음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

<비공무상 장애급여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그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 급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무상 장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1~2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6% 장애등급 3~4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75% 장애등급 5~7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19.5%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 8급 이하: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병급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애급여의 병급 제한 공무상 장애급여와 비공무상 장애급여의 병급 제한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유족승계 없음
급여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재정(기여금+부담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법 시행 이후 질병·부상 발생시부터 적용

13 연금압류 금지 계좌 도입

종 전	개 정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압류방지 계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까지 ※ '19.4.1. 시행기준 185만원

14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일시금 산정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78/100	○ 퇴직연금일시금 산식과 동일

※ 2016년부터 기여금 징수를 증가에 따라 5년 미만자의 퇴직일시금 산식 변경

15 퇴직연금일시금 특례지급 신설

종 전

○ 없음



개 정

○ 퇴직연금일시금액 보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많으면 유리한
금액을 지급

16 공무상 유족연금(유족보상금) 지급기한 폐지

종 전

○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개 정

○ 퇴직 후 지급기한 폐지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업무 변경사항

01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법 제3조)

종 전

○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



개 정

○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 적용

02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법 부칙 제19조)

종 전

○ 시간제 근무기간(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재직기간 일부 감축



개 정

○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

03 분할연금제도 보완

● 분할연금 적용대상 명확화(법 부칙 제4조)

종 전

○ (16년) 개정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자부터 적용



개 정

○ 2016년 이후 이혼자부터 적용

● 실질적 혼인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인정(법 제45조)

종 전

○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시 분할연금 인정



개 정

○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18. 9.21. 이후 이혼자부터 적용)

● 분할연금 선 청구제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도입(법 제49조)

종 전

○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이후 분할연금 청구 가능
○ 퇴직연금만 분할청구 가능



개 정

○ 이혼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수급개시 전이라도 분할연금 선 청구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 수급 가능

04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명확화(법 제41조)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자도 퇴직유족연금 병급 제한

종 전	개 정
○ 군인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역·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동시 수급 시 유족연금 1/2 감액	○ 퇴직유족연금감액수급대상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포함

-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유족연금 중복 시 선택 가능 명시

종 전	개 정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급여(유족일시금 등) 선택규정 없음	○ 퇴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선택 명시

05 급여제한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지급 명시(법 제65조)

종 전	개 정
○ 없음	○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감액된 급여액에 이자 가산 지급

06 기여금 과미납 정산방법 변경(영 제66조)

종 전	개 정
○ 기여금 과미납 시 정산하는 달의 기여금 기준으로 비례 계산	○ 기여금 과미납 정산시 일단위로 과미납기간에 대해 정기 예금 금리로 이자 산정 ※ 과미납월과 정산월의 기여금이 변동되는 경우 이자 부과

07 합산반납금 납부횟수 조정(영 제21조제2항)

종 전

- 5년 미만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 48회
10년 이상 60회



개 정

- 합산기간 관계없이 60회 이내
※ 시행일 이전 분할납부 중인 경우는 납부 횟수 변경 불가

08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법 제7장)

종 전

- 없음



개 정

-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수립·시행 근거 규정(제83조)
-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시책 및 관련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84조)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공단 위탁 및 사업 경비 지원 명시(제86조)

09 타기관 보유 개인정보 조회 근거 구체화(영 제94조, 별표3, 별표4)

종 전

- (요청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 (요청자료) 소득 중 조사와 그밖에 공무원 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개 정

- (요청기관)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학재단 등 명시(별표3)
- (요청자료) 주민등록자료, 소득·과세·환급자료, 직장·사업장 관련 자료, 국민연금법·별정우체국법 적용자에 대한 자료 등(별표4)

2021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업무 변경사항

01 재직기간 합산 시 기준소득월액 등 현재가치화 방식 개선(영 제10조)

종 전

○ 종전 퇴직 후 재임용 전 기간 '보수인상률' 적용



개 정

○ 종전 퇴직 후 재임용 전 기간 '물가변동률' 적용
※ 개정규정 시행 이전 합산 인정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02 재직기간 합산 등 신청기간 명확화(영 제20조, 제23조)

종 전

○ 합산·사병 산업이 재직 중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 없음



개 정

○ 합산·산업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0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영 제26조)

종 전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시 상한액 적용 없으므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단순 합계를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눔



개 정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초과 금액 제외 후 그 총액을 공무원 전체의 수로 나눔

04 이민 증빙서류 합리화(영 제32조)

종 전

○ 출국(예정) 증명서



개 정

○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05 연금일부정지제도 합리화(영 제47조)

종 전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수”



개 정

○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수”

06 합산 시 종전 급여 제한효과 명확화(영 제61조)

종 전

○ 형벌 등으로 제한된 급여 수급권자가 재임용
되어 종전 재직기간 합산 후 퇴직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온전한 급여 지급



개 정

○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 제한 유지
※ 합산반납금 납부자 등 일부적용 제외

07 공무원연금 대출 이율 합리화(영 제84조)

종 전

○ 연 3%이상



개 정

○ 한국은행 고시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
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08 신상변동 확인자료 추가(별표4)

종 전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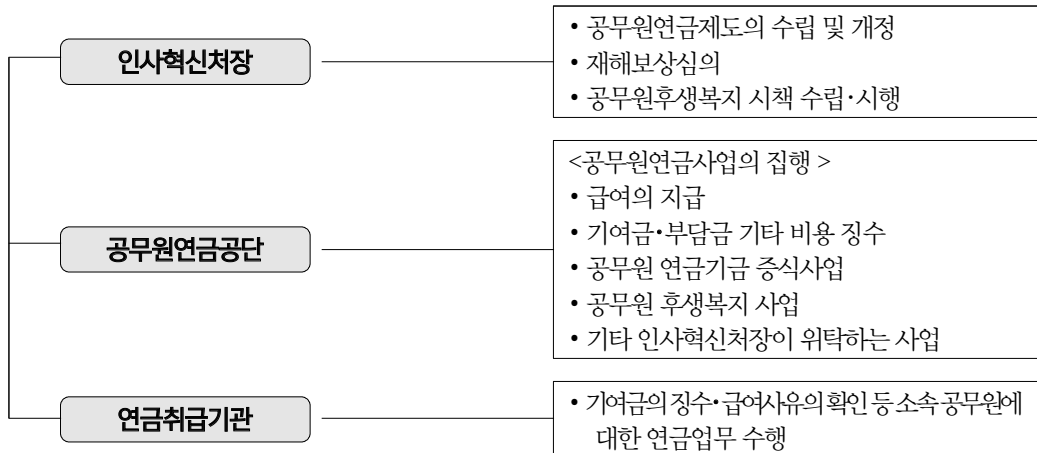
개 정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제2절 / 공무원연금의 운영주체와 적용 대상자

1. 운영주체



< 위 원 회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상 질병·부상·장해·사망 해당여부 및 장해등급의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여부에 관한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법)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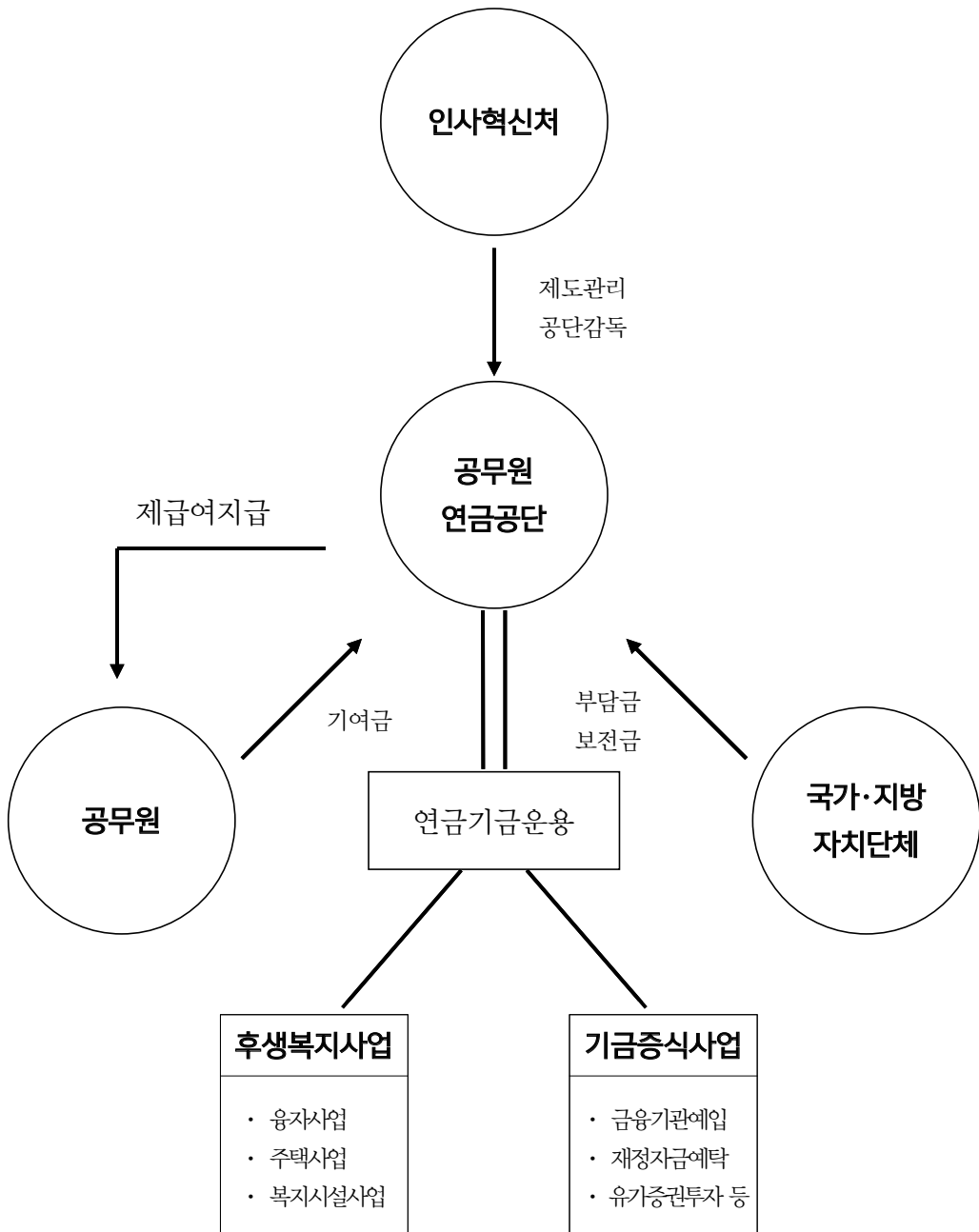
2. 적용대상자(법 제3조제1항제1호, 영 제2조)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시간선택제공무원('18. 9.21.부터 적용)
-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징병전담의사(병역법)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정규공무원외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정규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 적용제외자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군 인 : 군인연금법 적용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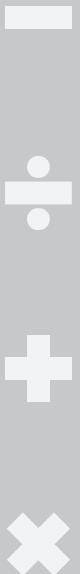
제3절 / 공무원연금 업무의 체계



제2장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1절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9
제2절 시스템 구성도	39
제3절 시스템 접속 및 종료	40
제4절 업무별 처리 세부내용	41
제5절 연금 업무 알림	48
제6절 연금업무담당자 등록 및 변경 절차	49
제7절 홈페이지 접속 오류 시 조치방법	53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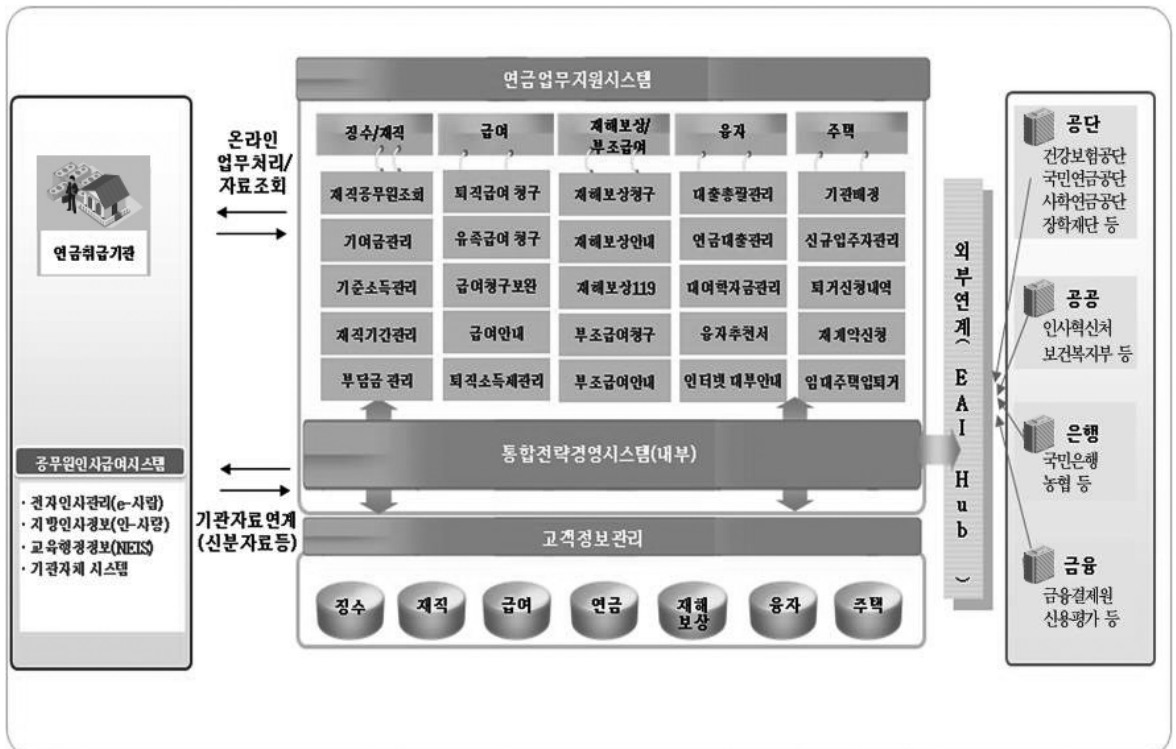


제1절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연금취급기관 및 부서(학교)에서 연금업무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단의 연금정보를 공유하며, 각종 연금업무(재직·징수·급여·재해보상·용자·주택)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처리하는 기관지원시스템



제2절 / 시스템 구성도





제3절 / 시스템 접속 및 종료

01 시스템 접속 시 사전 확인

- 공단에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의 사용자 구분 확인
 - 미가입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금담당자 화면에서 연금담당자 신청 아이콘 클릭 후 연금담당자 신청서 등록
 - ※ 연금담당자 선택 시 담당업무 선택 필요(징수, 급여 등)

02 시스템 접속 및 종료방법

- 시스템 접속
 - 공단홈페이지에 접속(www.geps.or.kr)
-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여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 연금담당자는 인증서 로그인을 기본으로 하며, 인증서 등록 절차는 제6절 연금업무담당자 등록 및 변경 절차의《인증서 등록절차》참조
-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금담당자』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중 특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연금담당자 화면이 열리며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접속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여 업무처리
 - 단위 업무별로 작업수행
- 시스템 종료
 - 사용자는 업무 처리가 종료되면 반드시 로그아웃 클릭
 - ※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아웃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단은 해당 기관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일정시간(약 20분) 미사용 시 연금지원시스템이 자동 Logout 처리가 되도록 구현 하였습니다.



제4절 / 업무별 처리 세부내용

【 정 수 】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정 수 관 리			연금담당자 문의 및 자료전송	문의사항 등록 및 답변으로 업무지원
			재직정보조회	재직자 기본정보 조회
			기관별 개인과미납내역 조회	기관별 개인과미납내역 조회
			개인별 개별납부내역 조회	기관원천공제액이 아닌 개별 납부사항 조회
			기여금납부종료안내	기여금 면제자 조회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소급기여금(휴직, 사병 등) 대상자의 소급기여금 납부기간 조회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합산반납금 납부대상자 조회
			휴직(보수미지급)자 조회	보수미지급 휴직자 조회
			입대휴직자 조회	입대휴직자 조회
			전입자 기준소득월액 확인	기관전입자의 기준소득내역 확인 및 다운로드 (텍스트 및 엑셀)
			기관원천자료 전송 및 확인	기여금 기관원천공제자료 전송(업로드) 및 총괄납부 및 개인별납부내역 확인
			연금지원기관오류내역	매월 기여금심사에서 확인(오류)할 사항 조회
			기여금납부서출력(개인용)	가상계좌 및 일반계좌를 채번한 개인용 개별 납부 영수증 출력
			기여금납부서 출력	기관 기여금 납부서 출력
	연금 공통 정보	재직 공무원 정보조회	재직정보조회	재직자 기본정보 조회
			재직기간조회	기관 재직자의 재직기간 조회
			연금가입안내문	신규임용자의 가입안내문 명부 및 개인 연금가입안내문 출력
		기관정보 등 록	연금취급기관 부서관계등록	연금취급기관에서 부서(학교) 등록/수정
			연금기관정보 등록	해당기관의 기관정보 조회 및 주소, 전화번호 및 영문기관명 수정
		기관 납부금 관리	국가재정기관	국가재정기관에서 이체된 자금납부자료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기여금 납부내역조회	기관납부기여금 수납 자료 조회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징수 관리	기여금 관리	개인별 납부내역 조회	개인별 일반/소급/합산 납부내역 조회
		기관별 개인과미납내역 조회	기관별 개인과미납내역 조회
		기관원천자료 전송 및 확인	기여금 기관원천공제자료 전송(업로드), 총괄납부 및 개인별납부내역 확인
		기관원본 추가대상자 개별등록	기관원천공제 작업 시 누락자의 개별등록 작업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소급기여금(휴직, 사병 등) 대상자의 소급납부 기간 조회
		기여금납부서 출력	기관 기여금 납부서 출력
		기여금 소득공제(기관용)	연말정산시 활용하기 위한 해당연도의 기여금 소득공제내역 조회
	기여금 납부면제 관리	기여금납부종료 안내	기여금 면제자 조회
		납부종료 도래월 예측	기여금 면제 시점 예측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종래보수월액 기관별 기간별조회	기관별 기간별 종래보수월액 승인자 조회
	기준 소득 관리	예상 기준소득입력	예상기준소득 입력하여 기준소득월액 예측
		예상소득금액 입력자 조회	예상소득금액 입력된 대상자 조회
		누락자확인	기관별 기준소득 누락자 확인
		성과급여 없음	기관별 성과급여 없는자 확인
		성과급여 종류 확인	기관별 성과급여 종류 상이자 확인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징수 관리	기준소득 관리	소득증가율 적정범위	소득증가율 적정범위	전년대비 20% 증감 등 적정범위 확인
		소득심사 자료(전체)	소득심사자료(전체)	기관별 기준소득 심사자료 확인
		금액변경 조 회	금액변경조회	기준소득심사 시 금액이 변경된 대상자 조회
		기준소득 자료전송	소득자료 전송 대상자 조회	기준소득자료 전송 대상자를 조회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 (연금취급기관용)	연금취급기관별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
			기준소득 세부자료 전송 (연금취급기관용)	연금취급기관별 기준소득 세부자료 전송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 (급여시스템기관용)	급여시스템기관별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 (급여시스템기관용)	급여시스템기관별 기준소득 세부자료 전송
		기준소득월액 통 보	기준소득월액 통보 일반 file 생성	기준소득통보파일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기준소득월액 진출입자 file 생성	전출입자의 기준소득통보파일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건표 조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조건표 조회
	재직 기간	재직기간 합 산	합산 신청/등록/신청서	합산신청 등록 및 신청서 조회/출력
			합산 납부방법 변경신청 등록신청서	합산납부방법 변경신청 등록 및 신청서 조회/ 출력
			합산 취소신청 등록/신청서	합산취소신청 등록 및 신청서 조회/출력
			합산 예측	합산신청 예상등록 후 재직기간 및 합산반납금 예측
			합산 반납금 체납자 출력	합산 반납금 체납자 출력
			승인내역서발급	합산 승인/재승인/변경/제외 내역 조회/ 출력
			합산신청 대상자 조회	합산신청 가능 대상자 및 경력 조회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징수 관리	재직 기간	임용전 군복무 기간산입	임용전 복무기간 신청등록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등록 및 신청서 출력
			임용전 복무기간 취소신청 등록/신청서	임용전 군복무기간 중 미납부 기간 취소 신청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결과 출력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결과 조회/출력
		소급통산	소급통산 신청등록신청서	소급통산신청 등록 및 신청서 출력
			소급통산 승인내역 통보서 출력	소급통산 승인내역 통보서 조회/출력
			소급통산 신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통산 신청화면
			소급통산 신청내역조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통산 신청내역 조회
		부담금 관리	보수예산 관리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조회/출력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조회/출력
	연도별 예산조회			재정추계 보수예산 조회/출력
	부담금 고지관리		납부서 출력	부담금 종류별 납부고지서 출력
			정년예정자 조회	정년예정자 조회/출력
	부담금 정산관리		정산표 출력	부담금 종류별 정산내역표 출력
			연도 정산내역	부담금 종류별 연도정산내역 출력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부담금 문서관리		부담금 문서내역	부담금 문서발송내역 조회
	특례적용자 관리	정산표/납부서 출력	특례적용 대상자의 정산내역표/고지서 출력	

【 급 여 】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퇴직(유족) 급여관리	급여안내	급여청구내역 조회 (기관 전체)	공단에 청구된 신규급여의 처리 단계별 진행상태 조회
		급여청구내역 조회 (개인별)	공단에 청구된 신규급여의 처리 단계별 진행상태 조회
		급여지급 실적조회	지급된 급여종류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내용을 청구자 개인별로 조회
		이체내역서 (공사화기관)	공단에서 공사화기관으로 이체한 내역을 조회
		명퇴자 감액지급 현황	명예퇴직자 퇴직후 형벌 등으로 감액지급 현황 조회
	청구관리	급여청구서 보완처리 목록	퇴직공무원의 급여 청구내용 확인 및 보완요청 사항 조회(퇴직발령장 등 첨부서류 확인)
퇴직소득세 관리	원천징수 영수증출력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일시금 또는 퇴직수당을 수령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명예퇴직 자료관리	법인사항 등록관리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등록을 위해 기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록

【 재해보상/부조급여 】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재해보상급여 신청	급여청구 및 조회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승인관련 청구서 등록, 조회, 출력
	경위조사서 관리	경위조사서 작성 및 조회	경위조사서 등록, 조회, 출력
	서비스안내	재해보상급여 안내	재해보상급여 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
	재심관리	재심신청 및 답변서 관리	재심신청, 답변서 관리, 재심신청내역 조회
	게시판	공지사항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관련 공지사항
	부조급여관리	부조급여심사	부조급여청구 등록, 조회, 출력 및 심사, 재심사
	사용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기관담당자 대상 사용자매뉴얼 영상
	마이페이지	보완요청 및 임시저장 내역	보완요청 내역, 임시저장 내역 조회
	급여청구내역조회	급여청구 및 조회	급여청구 및 조회

【 용 자 】

업무명	단위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용 자	대출총괄 관 리	대출총괄내역 조회	공무원에 대한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 및 신청내역 조회
		가능액 조회 및 용자추천서 발급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 대출가능액 조회 금융기관 알선대출 퇴직금예상액, 공단채무액 조회
		대출현황	개인별 공무원에 대한 대출사실 확인서 출력
		특례자상환 예정액내역	특례자에 대한 상환예정액 조회 및 납부서 출력
	대여학자금 관 리	인터넷대부	인터넷 대부 신청조회 대부회계 코드조회 학사정보 상이내역
		상환관리	상환고지대상자 조회, 출력, 변동처리 기능 상환금 수납예정일 등록 및 기관상환 납부서 출력 고지미납자에 대한 조회 및 출력 학생신상변동 등록 착오대부자 조회
		기본관리	개인 및 기관 상환연체료 산정 개인별 대출 및 상환내역 출력
		자료관리	대여학자금 대부자 명단
		부담금관리	총괄 부담금(상세) 부담금고지(상세) 부담금예산편성 부담금 반환
	연금대출 관 리	개인별내역	개인별총괄조회 예상조건표 대출신청 처리상황
		기관별내역	기관별 총괄조회 원천공제 조회 및 납부액 등록 대출상환내역

【 임대주택 】

업무명	세부 업무명	주요 업무 내용
임대주택	기관배정 임대주택 현황	기관별 배정 임대주택 목록 조회 신규, 퇴거, 재계약 신청현황 조회
	기관배정 신청	기관배정공고 조회 및 기관배정 신청
	기관배정결과 조회	기관배정공고 신청결과 조회
	신규입주자 선정관리	기관별 배정 임대주택 목록 조회 퇴거예정세대 목록 및 예비입주신청자 조회 입주자 선정처리
	퇴거신청내역 접수	퇴거신청내역 조회 및 접수처리 공단지부로 퇴거 신청내역 이관
	재계약신청 기관심사관리	재계약신청내역 조회 및 심사처리 공단지부로 재계약 신청내역 이관
	배정세대 공단반납 신청	기관 배정 임대주택 반납신청 및 결과조회
	신규 및 재계약 승인 조회	신규 및 재계약 입주신청 승인내역 조회
	퇴거 승인 조회	퇴거신청 승인내역 조회
	기 수혜자 조회	공단 주택 기 수혜 내역 조회



제5절 / 연금 업무 알림

연금업무 승인 및 결정사항을 기관 연금업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

【 초기화면 및 알림내용 】

● 초기 화면

● 킷 링크

- 퇴직급여 청구, 퇴직급여 보완사항, 과미납 내역, 합산반납금 대상자, 기여금 납부 종료자 및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등 연금담당자가 자주 찾는 메뉴 바로가기 링크

● 알림메시지 (총 10종)

- ① 조회기간을 입력하여 알림메시지를 조회합니다.
- ②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작업이 있는 경우 “바로가기”가 활성화되며 선택 시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③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미완료에서 완료 변경합니다.
- ④ 알림 메시지의 완료 또는 미완료를 구분하여 조회합니다.

구분	알림 내용
합산업무	홍길동님의 재직기간 합산 승인내역이 존재합니다.
기여금심사	000000월 기관별 개인과미납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	홍길동님의 공무상요양 결정 안내 등 5종
임대주택	홍길동님의 퇴거접수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2종
대여학자금	0000년 1월 학자금 납부 마감일입니다.
계	10종



제6절 / 연금업무담당자 등록 및 변경 절차

연금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며, 일반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NPKI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GPKI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연금담당자 신청 절차 】

- ①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② 로그인 후 연금담당자 화면 이동
- ③ 연금담당자 화면에서 연금담당자 신청 아이콘 클릭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omepage of the Public Pension Service Cente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공무원연금공단' (Public Pension Service Center), '로그인' (Login), '인증센터' (Authentication Center), '회원가입' (Sign Up), '보안센터' (Security Center), 'PC원격지원' (PC Remote Support), '서비스원장' (Service Manager), '전체메뉴' (Full Menu), and 'ENG'. Below this is a secondary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민원상담' (Citizen Consultation), '소통·참여' (Communication & Participation), '연금정보' (Pension Information), '알림소식' (Notice), '주요사업' (Main Projects), and '공단소개' (Introduction of the Center).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is ba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itle '연금담당자' (Pension Manager). Below the banner, there are two main sections: '내연금보기 (조회/신청)' (View My Pension (Inquiry/Apply)) and '종합재해보상 시스템' (Comprehensive Compensation System). The '내연금보기' section includes links for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Inquiry on Individual Unpaid Records by Institution) and '대출충결내역조회' (Inquiry on Loan Repayment Records). The '종합재해보상 시스템' section includes links for '소급기여대상자조회' (Inquiry on Retroactive Contribution Eligibles) and '퇴직예정자교육신청' (Application for Retirement-Intending Employee Education).

To the right of these sections is an illustration of three people celebrating. Further right is a vertical menu with links for '뉴스룸' (News Room), '연금생활자' (Pension Life), '현직공무원' (Current Civil Servant), '연금담당자' (Pension Manager), and '자주찾는 메뉴' (Frequently Used Menu). The '연금담당자' link is highlighted.

Below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grid of service icons including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Contribution Payment Completion Notice), '합산반납금 대상자조회' (Inquiry on Consolidated Repayment Eligibles), '제직정보 조회' (Inquiry on Disposition Information), '연금실무자 교육신청' (Application for Pension实务 Education), '재해보상금여청구 및 조회' (Application and Inquiry for Compensation), '신규입주자 선정관리' (New Resident Selection Management), '연금담당자 신청' (Pension Manager Application), '서식자료실' (Form and Material Room), '복지이용시설' (Welfare Utilization Facilities), and '재휴복지서비스' (Recreation Welfare Service).

At the bottom, there is a contact information section for '공무원연금 콜센터' (Public Pension Call Center) with the number '1588-4321' (hours: 9:00 AM - 6:00 PM), a '채팅상담' (Chat Consultation) section with hours '평일 9시~12시, 13시~18시 (주말·공휴일 휴무)' and a '채팅상담하러가기' (Go to Chat Consultation) button, and a '국민제안' (Citizen Proposal) section with a '국민제안' button, a '칭찬합니다' (Thank You) button, and a '불편·불만' (Inconvenience/Complaint) button.

④ 연금담당자 권한신청 화면에서 담당업무를 체크하고 추가입력사항 입력 (기관코드, 담당자교체 등)

연금담당자 권한신청 (관련 동영상 보기) 연금담당자 권한 신청 방법

** 아래는 연금업무담당자 입력 사항 부분입니다.

* 신청방법 ☒ 담당자 교체(권장) ☐ 신규 ☐ 담당업무 변경

* 담당업무(연금업무) ☐ 징수 ☐ 급여 ☐ 융자 ☐ 주택 ☐ 공상 ☐ 교육

* 담당업무(연금외 업무) ☐ 심의 ☐ 법률자문 ☐ 기간연장자문 ☐ 현장조사

※ 연금 업무와 연금외 업무는 함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업무별로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휴대전화 010-6471-0933 직장 전화 (필수)

* 기관코드 코드조회

※ 기관코드조회를 이용하여 기관코드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기관명

※ 기관코드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담당자교체 선택

※ 담당자 교체를 원하실 경우 선택 해 주십시오.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신규로 등록됩니다.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항목 소속기관명,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 동의 ☐ 미동의

· 선택항목 업무구분,기관코드,직장전화,담당업무,전임자인적사항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 ☐ 미동의

신청서 출력

* 서류제출방법 ☒ 스캔 파일 첨부(권장)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스캔 파일첨부 시 파일암호화(DRM) 해제 후 스캔 파일을 첨부해야 공단담당자가 빠른 승인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확인 취소

[작성방법]

- 신청방법이 담당자 교체인 경우는 담당업무를 모두 체크하고, 하단 담당자 교체 항목에서 반드시 전임자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이 신규인 경우는 담당업무를 모두 체크하고, 하단 담당자 교체 선택란은 그대로 둡니다.
- 신청방법이 담당업무 변경인 경우는 담당업무를 기존 업무와 추가된 업무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연금담당자의 경우, 담당업무(연금업무)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등의 경우, 담당업무(연금 외 업무)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⑤ 서류제출 방법

-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 날인 후 자료를 스캔하여 파일 저장·업로드 후
기본정보 확인 클릭

【 인증서 등록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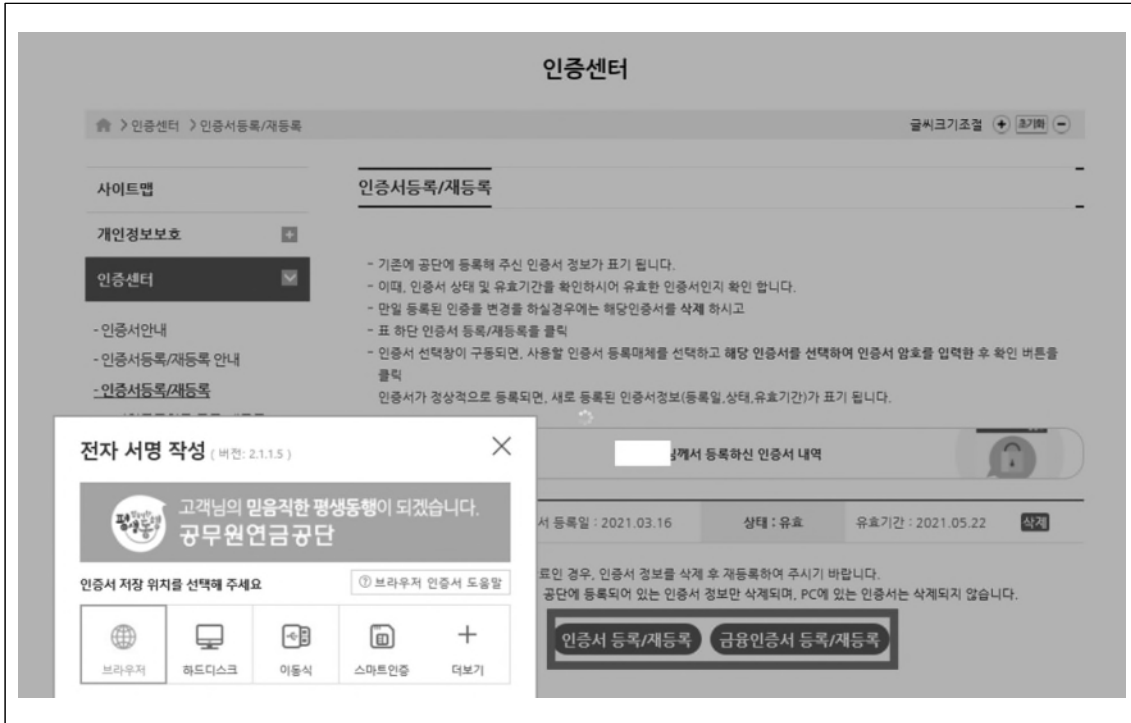
- ①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 ID로 로그인
- ② 로그인 후 인증센터 메뉴 클릭



③ 인증서등록/재등록 메뉴 클릭



- ④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는 삭제 처리 후 **인증서 등록/재등록** 버튼 클릭, 신규 및 재발급 받은 인증서의 암호 입력하여 등록



※ (참고) 인증서 정보 삭제 시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 정보만 삭제되며, PC에 있는 인증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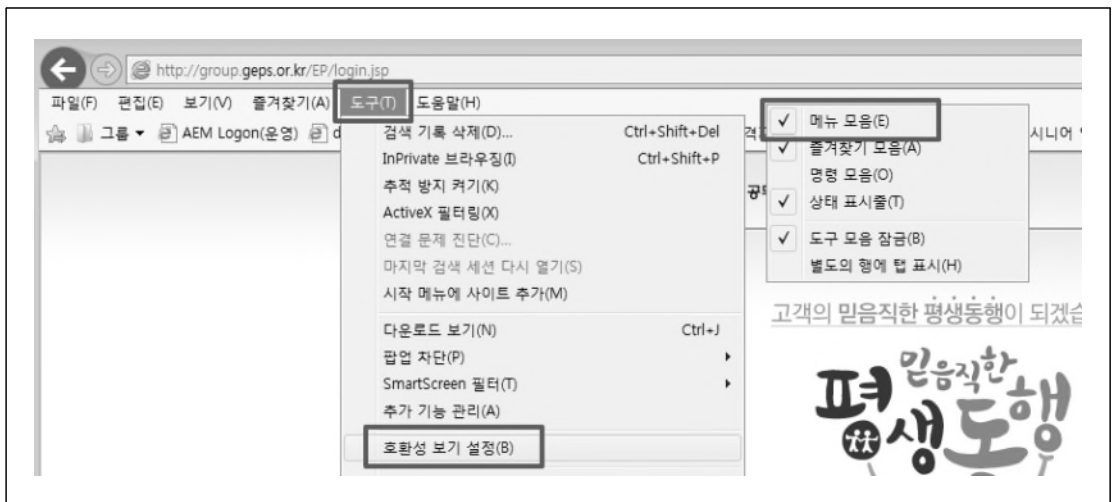
제7절 / 홈페이지 접속 오류 시 조치방법

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시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옵션 설정을 통해서 고객지원 및 연금지원, 그 외의 시설사업장 등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정 방법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IE 11 이상), 윈도우용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공단 홈페이지 및 연금지원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 설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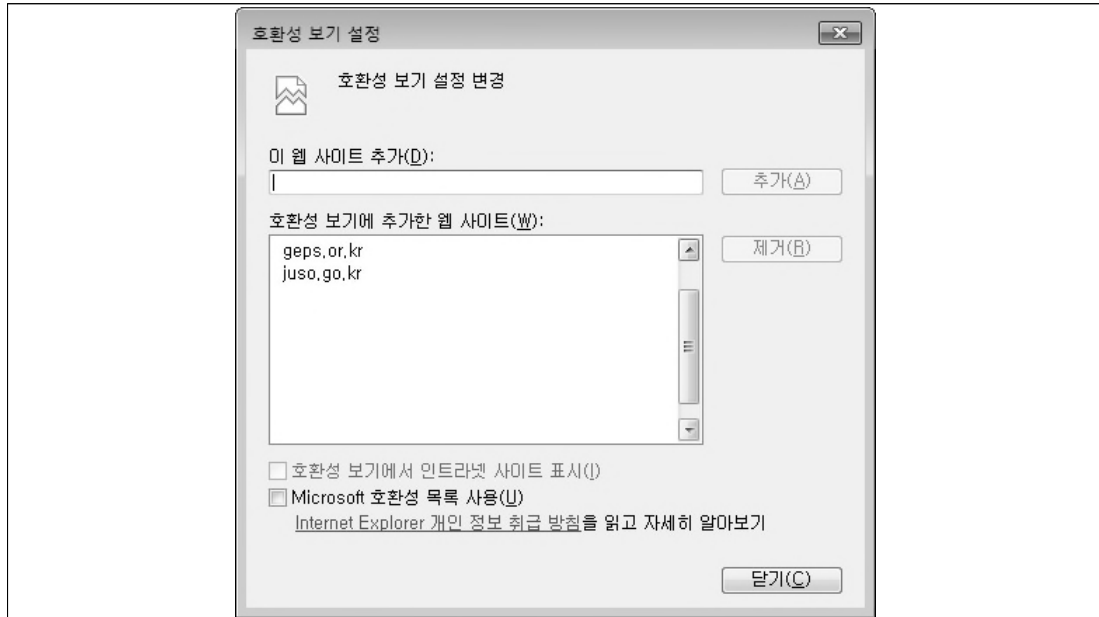
-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 상단 도구 메뉴가 안보일 경우 마우스 우클릭 >> 메뉴모음 체크



- ② 메뉴의 도구(T) >> 호환성 보기 설정(B) 선택하여 아래 2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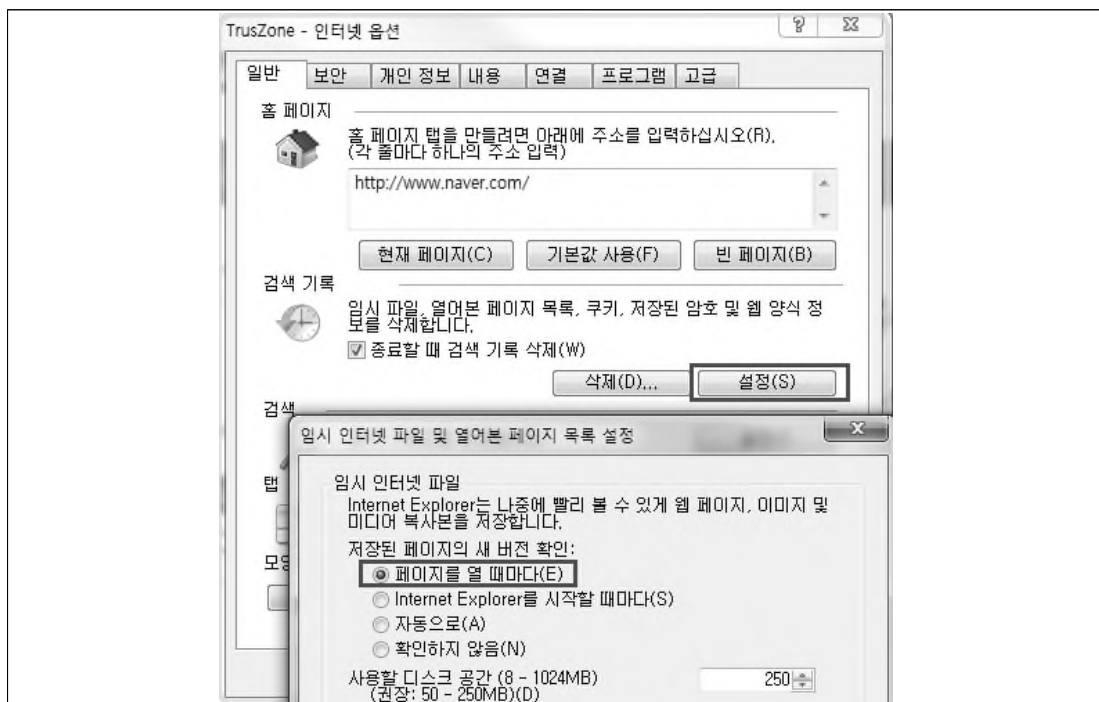
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juso.go.kr : 회원정보 수정 시 도로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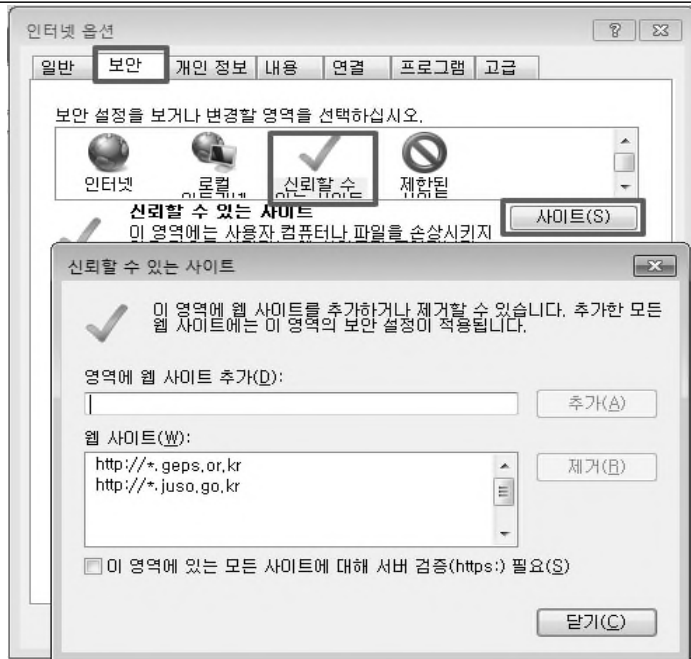


③ 메뉴의 도구(T) >> 인터넷 옵션(O) 선택하여 아래 설정

일반Tab - 검색기록의 설정 클릭 - 페이지를 열 때마다(E) 선택 후 확인 클릭



- *.juso.go.kr : 우편번호 검색 시 도로명주소 활용



-
- TruZone - 인터넷 옵션
- 일반 보안 **개인 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고급
- 설정**
- 인터넷 영역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 보통**
- 암호된 개인 정보 취급 방식이 없는 타사의 쿠키를 차단합니다.
 -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타사의 쿠키를 차단합니다.
 - 사용자의 암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타사의 쿠키를 제한합니다.
- 사이트(S) 가져오기(I) 고급(V) 기본값(D)
- 팝업 차단**
- 대부분의 팝업 창을 열리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설정(E)
- ☒ 팝업 차단 사용(B)
- InPrivate**
- ☐ InPrivate 필터링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안 함(P)
 - ☒ InPrivate 브라우징 시작 시 도구 모음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 안 함(T)
- 확인 취소 **적용(A)**



제8절 / PC원격지원시스템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상담사와의 컴퓨터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기본 설정 】

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PC원격지원 클릭



② remote.geps.or.kr 주소를 입력해서도 사용 가능

공무원연금공단 상담사가 알려주는 번호 클릭



③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④ 원격프로그램을 불러오고 저장 및 실행 선택 시 실행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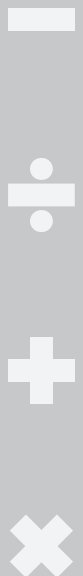
기관의 보안정책 및 개인 보안설정에 따라 몇 차례 추가 실행이 필요합니다.



제3장

공무원재직기간

제1절 재직기간의 정의 및 계산	61
제2절 재직기간의 합산	64
제3절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73
제4절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	77





제1절 / 재직기간의 정의 및 계산

1. 재직기간(법 제25조)

- 재직기간은 연금법상 제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 지급률을 결정하는 요소
- 기본 재직기간에 특례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6년(종전 33년)까지 인정
 - 법률 제13387호 개정(2016.1.1.시행)에 따라 법 개정 전(2015.12.31.)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단계적 연장(법률 제15523호, 2018. 3.20. 부칙 제24조)

2015년말 재직기간	21년 이상	17년 이상 21년 미만	15년 이상 17년 미만	15년 미만
재직기간 상한	33년	34년	35년	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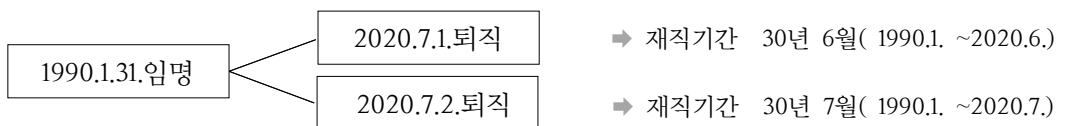
※ 기본 재직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연월수로 산정)

※ 특례기간 :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2. 계산방법(법 제2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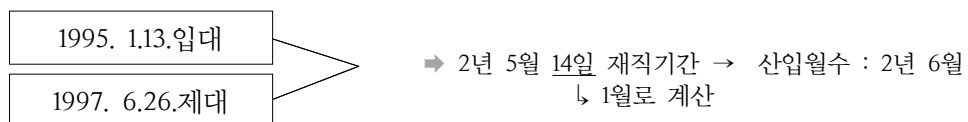
-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정

예시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여 1월 미만의 일은 1월로 계산함

예시



3.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의 계산방법(법 제25조제5항)

●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 기본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되 '91. 9.30.이전에 임용된 자는 기본 재직기간 외 특례기간(합산, 소급통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산정

● 재직기간의 감축 (법 제25조제5항)

- '91.10. 1.부터 발생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강등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의 1/2을 감축
- '91. 9.30.이전에 감축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기간은 감축하지 않음

● 감축하지 않는 휴직기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2011. 8. 5.이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001. 1. 1. 이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2010. 1. 1.이후)
•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2007. 1.19.이후)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감축기간의 산정방법

- 감축사유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여 1/2를 감축하고 감축기간의 1월 미만 잔여일수는 감축기간에서 제외

예시

2011. 3. 1. 일반휴직

2011.10. 1. 복직

→ 휴직기간 7월 → 감축기간 3월15일

↳ 감축기간 제외

●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법률 제15523호, 2018. 3.20. 부칙 제19조제1항)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2018. 9.21.)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시 시간제 전환 근무기간에 대한 감축 폐지(2018. 9.22. 퇴직자부터 적용, 2018. 9.21. 이전 퇴직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4. 퇴직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재임용된 경우(법 제3조제1항제3호)

-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재임용 전후 재직기간이 상호 연계(단, 급여를 수령하지 않아야 함)
(전출입 특례에 따라 처리)
 - ※ 퇴직한 날과 재임용된 날과의 사이의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 날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봄
- 전출입특례로 처리되어 전년도 1. 1.~12.31.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규정에 따라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임용결격·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이후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 해당기간동안 납부한 기여금 등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기간 중 특례가산 기간의 인정여부
 - 재직기간 합산, 소급 재직기간 통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적용받은 것이므로 산입(승인) 효력을 상실
 - ※ 임용결격·당연퇴직 해당여부는 퇴직급여 청구 시 공단에서 확인



제2절 / 재직기간의 합산

1. 개 요

-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
- ※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합산반납금 납부)하여야 함

2. 합산대상기간(법 제25조)

공무원 재임용 이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예외적용 :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예 : 장교복무)

3. 합산 비대상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임시직, 촉탁, 기한부 공무원 또는 수습행정원 기간 등
- 군복무 기간 중 무관후보생 기간, 탈영기간 등 군인연금법 적용 제외기간 및 상이연금기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75. 1. 1.)이전의 기간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에 소급통산기간으로 승인 받지 못한 기간

4. 합산 신청방법(법 제26조제1항)

- 공무원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퇴직일 이전 인터넷 신청 또는 합산신청서를 우편·팩스로 공단 발송해야 함 *우편은 퇴직일 전날 소인까지 유효)

5. 합산반납금 납부

- 합산반납금액(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2조)
 -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 반납이자 산정

이자 계산 기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
이자 계산방법	연단위 복리로 계산
적용 이자율	이자 계산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반납하지 아니하는 급여 :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퇴직수당
 - ※ '91.10. 1.이전 공무원 재임용자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반납
- 합산반납금의 납부방법(영 제21조제1항)
 - (1) 일시납부 :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
 - (2) 분할납부 :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납부 중 사망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 승인기간 인정)
 - ※ 합산반납금 납부횟수는 본인의 납부상황을 고려하여 납부방법(일시·분할) 선택
- 합산반납금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영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 일시반납액에 분할납부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한 금액
 - 분할납부횟수 : 60회 이내
- 분할 납부액 재산정(영 제22조제3항)
 -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
 - 합산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분할납부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p 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합산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산반납금 재산정
 - ※ 조정된 이자율과 차이가 2%p 이상 되는 경우 다시 조정

● **합산반납금 체납 시 연체이자 적용(영 제22조제4항)**

연체기간	체납기간(일 단위)으로 납부하는 날까지 이자 계산
연체이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6. 납부방법의 변경

● **사 유**

-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분할납부로 변경 또는 분할 납부 도중 잔여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 분할납부 도중 납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 제출)**

공무원	공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변경 신청서” 작성 * 합산승인기간, 기 납부방법, 납부방법 변경 등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변경통보서 발송 (기관, 공무원)

● **납부방법 : 공단에서 승인된 변경통보서에 따라 원천공제 또는 개별납부**

- *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변경통보서에 납부기간 및 납부 금액 명시

7. 합산승인의 제외(법 제26조제4항)

● **합산 제외 대상**

- 재직기간합산을 승인 받은 자가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
-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공단에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제외)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 제출)**

공무원	공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서” 작성 * 합산제외신청 구분, 제외 개월수 등 제외에 필요 사항기재 	재직기간합산제외통보서 발송 (기관, 공무원)

- * 합산 승인을 제외하면 제외한 기간만큼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다시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직 중에만 신청하여야 함

8.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

- 개 요
 - 퇴직한 후 단시일 내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급여 청구, 합산반납금 반납 등의 행정처리를 생략하고 바로 합산승인 신청
- 대 상 : 공무원 경력만 해당
 - ※ 사립학교 경력과 군인 경력은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이 불가하여, 해당기관에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합산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89.12.31. 이전 퇴직자에 한함)
- 합산반납금 :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반납금은 없음
 - ※ 다만, 퇴직 당시 소급급여금, 합산반납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미납금을 합산반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퇴직수당은 반납 대상급여가 아니므로 퇴직 즉시 바로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함(청구시효 5년)

9. 합산승인시 기준소득월액 등 현재가치화 방식(영 제10조)

- 개 요
 - 종전 경력의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소득 적용기간별로 재직여부에 따라 산정

적용기간 시점(5월) 기준	해당 적용기간 현재가치 환산방법
재직중인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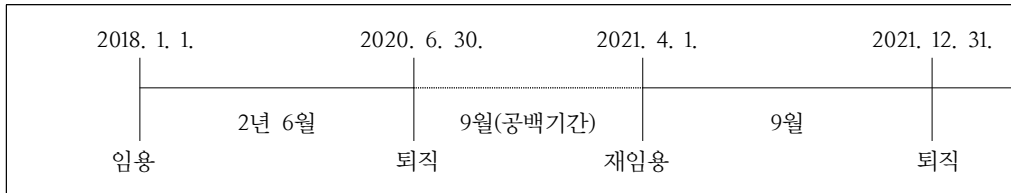
- 합산을 인정받은 시점(부칙 제3조)
 - 시행일 이전에 합산을 신청한 자는 합산신청일에 합산을 인정받은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에 합산을 신청후 일부제외하고 시행일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을 인정받은 것으로 봄
 - 시행일 이전에 합산을 신청한 자가 합산을 전부 제외하고 시행일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이후 합산을 인정받은 것으로 봄

예시

① 공백기간 현재가치 환산 방법 사례 (공무원보수인상률)

1. 기본 조건

- 2021. 4. 1. 재임용, 2021. 12. 31. 퇴직 (9월)
- 합산기간 2018. 1. 1. ~ 2020. 6. 30.(2년 6월)



<기준소득 현재화 적용 요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수인상율	2.6%	1.8%	2.8%	0.9%
물가변동률	1.9%	1.5%	0.4%	0.5%

2.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시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현재화

①

구분	기 간	기준소득 월액(A)	'18. 1. '18. 4.	'18. 5. '19. 4.	'19. 5. '20. 4.	'20. 5. '21. 4.	'21. 5. '21.12.	현재가 (B)
합산 기간	'18. 1.~'18. 4.	3,000,000	1,000	1,026	1,018	1,028	1,009	1,0834
	'18. 5.~'19. 4.	3,100,000		1,000	1,018	1,028	1,009	1,0559
	'19. 5.~'19.12.	3,200,000			1,000	1,028	1,009	1,0373
	'20. 1.~'20. 6.	3,300,000				1,000	1,009	1,0090
기본 기간	'21. 4.~'21. 4.	4,000,000					1,009	1,0090
	'21. 5.~'21.12.	4,036,000					1,000	1,0000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①기간) 시점('20.5월)에 재직 중('20.6월 퇴직)이므로

①기간에 보수인상률 적용

-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별 현재가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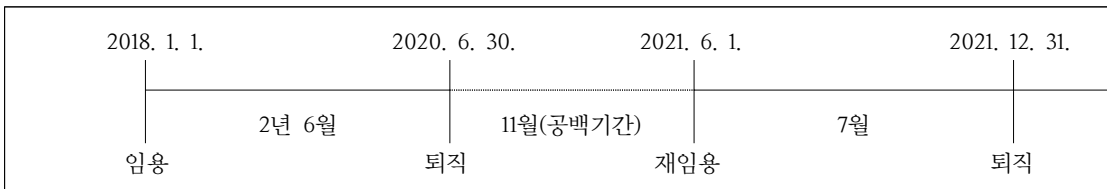
구분	기 간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액 (C=A×B)	적용월 (D)	현재가치 환산 (C×D)
합산 기간	'18. 1.~'18. 4.	3,250,130	4	13,000,520
	'18. 5.~'19. 4.	3,273,360	12	39,280,320
	'19. 5.~'19.12.	3,319,206	8	26,553,648
	'20. 1.~'20. 6.	3,329,700	6	19,978,200
기본 기간	'21. 4.~'21. 4.	4,036,000	1	4,036,000
	'21. 5.~'21.12.	4,036,000	8	32,288,000
합 계			39	135,136,688

- 현가 환산 합계를 적용월 합계로 나누어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출
(3,465,043 = 135,136,688 ÷ 39)

② 공백기간 현재가치 환산 방법 사례 (공무원보수인상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 기본 조건

- 2021. 6. 1. 재임용, 2021.12.31. 퇴직 (7월)
- 합산기간 2018. 1. 1. ~ 2020.6.30.(2년 6월)



<기준소득 현가화 적용 요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수인상률	2.6%	1.8%	2.8%	0.9%
물가변동률	1.9%	1.5%	0.4%	0.5%

2.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시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현가화

						①	②	
구분	기 간	기준소득 월액(A)	'18. 1. ~ '18. 4.	'18. 5. ~ '19. 4.	'19. 5. ~ '20. 4.	'20. 5. ~ '21. 4.	'21. 5. ~ '21.12.	현가율 (B)
합산 기간	'18. 1.~'18. 4.	3,000,000	1,000	1,026	1,018	1,028	1,005	1,0791
	'18. 5.~'19. 4.	3,100,000		1,000	1,018	1,028	1,005	1,0517
	'19. 5.~'19.12.	3,200,000			1,000	1,028	1,005	1,0331
	'20. 1.~'20. 6.	3,300,000				1,000	1,005	1,0050
기본 기간	'21. 6.~'21.12.	4,000,000					1,000	1,0000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①기간) 시점('20.5월)에 재직 중이므로('20.6월 퇴직)								
① 기간에 보수인상률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②기간) 시점('21.5월)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21.6월 재임용) ②기간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가화								
■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별 현가율 적용								

구분	기 간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액 (C=A×B)	적용월 (D)	현재가치 환산 (C×D)
합산 기간	'18. 1.~'18. 4.	3,237,245	4	12,948,980
	'18. 5.~'19. 4.	3,260,383	12	39,124,596
	'19. 5.~'19.12.	3,306,048	8	26,448,384
	'20. 1.~'20. 6.	3,316,500	6	19,899,000
기본 기간	'21. 6.~'21.12.	4,000,000	7	28,000,000
합 계			37	126,420,960

■ 현가 환산 합계를 적용월 합계로 나누어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출 (3,416,783= 126,420,960 ÷ 37)
--

10. 합산시 급여제한 적용 방법(영 제61조 제8항)

● 대 상

- 법 제26조제2항 연금인 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포함)를 반납하지 않고 합산한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관련지침:연금복지과-464)

● 합산기간의 감액 금액 산정

- 제한사유가 있는 합산기간과 제한사유가 없는 재임용기간에 대해 각각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 감액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산승인 받은 후 급여산정시 영 제61조제8항은 연금선택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급여 제한 합산기간에 대한 급여의 경우, 영 제61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감액비율을 연금지급률에 반영하여 산정

예시

예시

① 합산기간(20년)		② 재임용기간(2년)	
1기간(16년)	2기간(4년)	3기간(2년)	
1994.1.	2013.12.	2019.1.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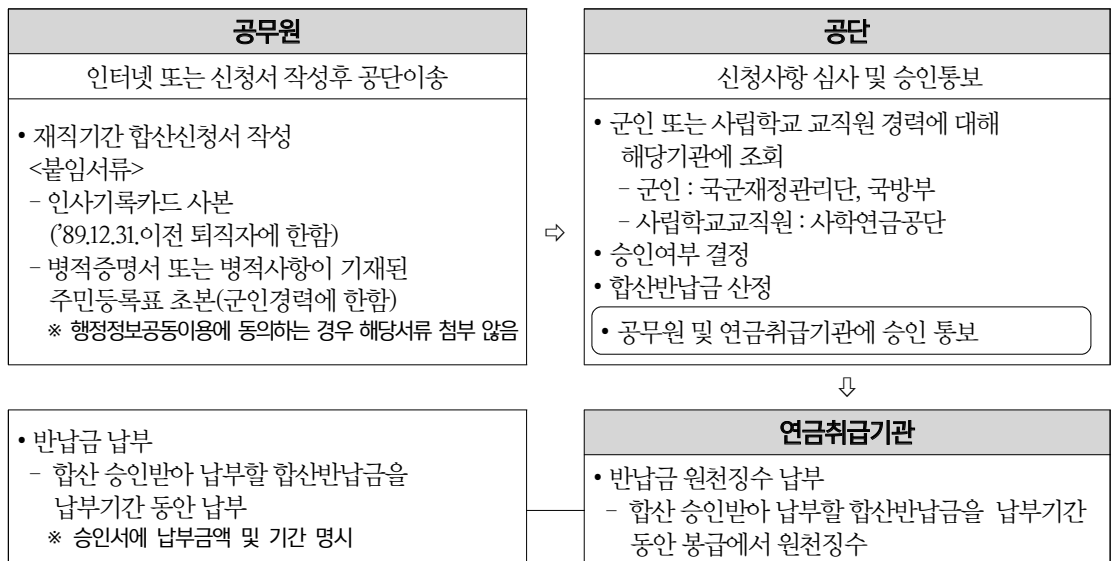
▶ 파면 (2분의1 감액)

- 연금액 : 200만원, 감액 : 100만원

① 합산기간(20년)	$\text{적용보수} \times \text{재직기간} \times (\text{연도별 연금지급률} \times \underline{50\%^*})$ * 영 제6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액비율
② 재임용기간(2년)	퇴직급여 산정

☞ ①을 산정 후 ②를 더하여 퇴직급여 산정

- 영 제61조제8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부터 적용

11. 합산 승인절차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승인사항 매월 연금취급기관에 통보
- 공무원 재임용 후 재직 중에만 합산신청 하여야 함
- 합산승인을 제외한 후에 다시 합산신청을 할 경우에도 재직 중에만 하여야 함
-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휴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로 간주 처리함
(만약,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 청구·지급 되었다면 재직기간 합산 대상임)
- 합산대상이 아닌 경력에 대하여 착오로 합산신청서에 의거 신청하면 합산신청이 안되므로 대상 경력을 재확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예1) 소급통산 대상 경력을 합산으로 신청할 경우 : 소급통산으로 신청토록 안내
예2) 합산 대상 경력을 소급통산으로 신청할 경우 : 합산으로 신청토록 안내



제3절 /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1. 개 요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과거(2018.09.21.이전기간)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20.)에 따라 2018. 9.21.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과거(2018.09.21.이전기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공무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단, '18. 9.21.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연금법 적용 전의 잡급직원 또는 전문직원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장기하사 이상의 군인 복무기간 포함) 및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의 잡급직원 또는 전문직원 재직기간에 대해 공무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게 하고, 소급하여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기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

2. 소급통산 대상기간

□ 시간선택제 공무원(법 부칙 제29조, 법률 제15523호, 2018. 3.20.)

- '18. 9.21. 현재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 시행 이전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

□ 잡급직원 또는 전문직원(법 부칙 제30조, 법률 제15523호, 2018. 3.20.)

- '48. 8.15. ~ '59.12.31. 사이의 공무원(장기하사 이상의 군인포함) 재직한 기간
- '75. 1. 1. ~ '80. 6.30. 사이의 잡급직원(지방잡급의 경우는 '76.1.1.~'80.6.30.)으로 재직한 기간
- '73.11.29. ~ '80. 6.30. 사이의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 단, 잡급직원과 전문직원 재직기간에 대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근거: 공무원연금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통보, 연혁 261-234: '81.5.23. 관보게재)

3. 소급통산 비대상기간

- 촉탁, 기한부 등 임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재직한 기간
- 군 복무기간 중 후보생 기간, 탈영기간 등 군인연금법 적용 제외기간
- 전 퇴직 시 소급통산을 받은 기간 (재직기간 합산대상임)
- **법시행('18.9.21.)이후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법 시행 이전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

예 시

사 례 1	<div> <div>'16.1.1. 임용</div> <div>A기간</div> <div>(법시행)'18.9.21.</div> <div>퇴직</div> </div>
사 례 2	<div> <div>'16.1.1. 임용</div> <div>C기간</div> <div>'17.12.25. 퇴직</div> <div>'18.1.1. 임용</div> <div>B기간</div> <div>(법시행)'18.9.21.</div> <div>퇴직</div> </div>
사 례 3	<div> <div>'16.1.1. 임용</div> <div>D기간</div> <div>'18.9.15. 퇴직</div> <div>'18.10.1. 임용</div> <div>(법시행)'18.9.21.</div> <div>퇴직</div> </div>
<p>→ (사례 1, 2) 법 부칙(제15523호, 2018. 3.20.)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산입 가능</p> <p>→ (사례 3) 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소급통산 산입 불가</p>	
사 례 4	<div> <div>'16.1.1. 임용</div> <div>D기간</div> <div>'17.12.25. 퇴직</div> <div>'18.1.1. 임용</div> <div>퇴직</div> <div>'19.10.1. 임용</div> <div>퇴직</div> <div>(법시행)'18.9.21.</div> </div>
<p>→ (사례 4) 법 시행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후 재임용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16.1.1.~'18.9.21.)에 대해 소급통산 신청가능</p> <p>↳ (법률자문 결과)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종전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소급통산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전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소급통산 가능</p>	

4. 신청방법 및 서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 재직 중에 ‘시간선택제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을 통해 담당자가 업무지원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인사발령장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 잡급직원 또는 전문직원

- 재직 중에 소급재직기간 통산 신청서를 소속기관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경력증명서(재직 중), 진급기록이 명시된 병적증명서(군경력에 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 미수령 확인서(잡급직 및 전문직 경력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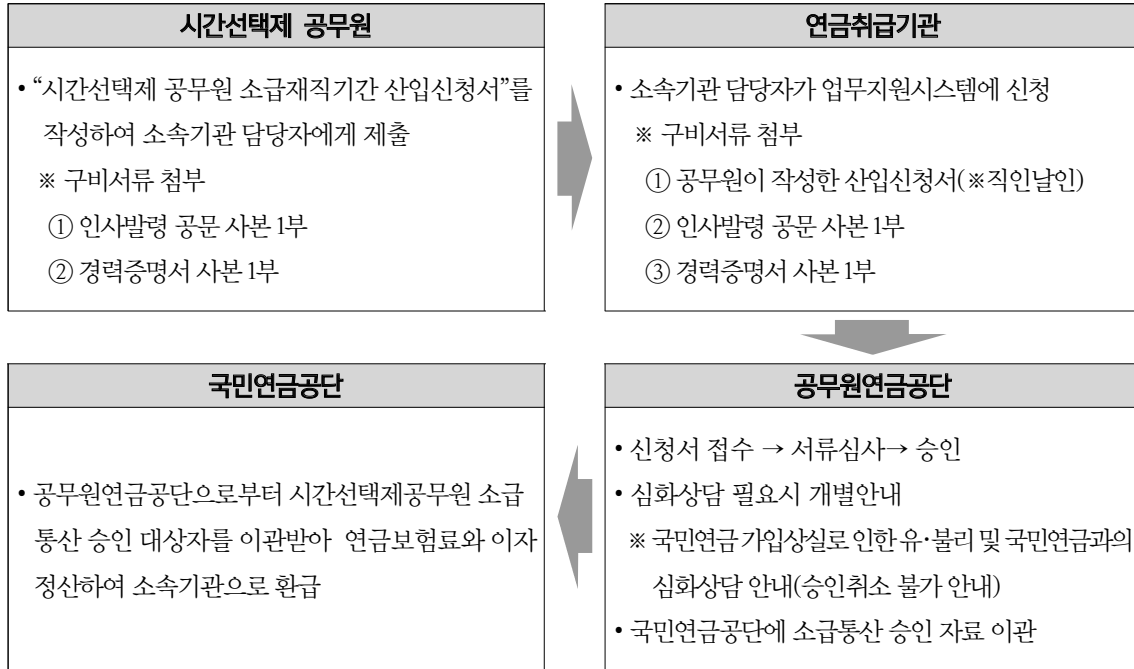
5. 소급기여금의 납부(법 부칙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법률 제15523호, 2018. 3.20.)

- 공단에서 지정한 납부기간 동안 당월분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매월 납부
-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때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등에서 공제하고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6.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소급통산 산입 취소여부

- 법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이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 법 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법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법 시행 전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함
- ※ 재직 중 소속기관을 통해 변경 가능(소속기관에서 공단으로 변경 문서 시행)

7. 시간선택제 소급통산 산입신청 시 참고사항





제4절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

1. 개 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1983년 1월부터 시행)

- ※ 2000.12.31.이전 재직자의 군복무기간은 당연산입대상, 2001.1.1.이후 임용자의 군복무기간은 임의산입 대상(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산입)

2. 신청방법

- 재직 중에 인터넷 신청 혹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
 - 인터넷 신청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 산입 신청 시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단,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첨부 제외)

-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승인 받은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1209(2019.5.15.)호 업무처리지침 및 서식 개선(안) 회신, 2019.6.20. 시행)
 - 군복무 산입 취소 기간에 대한 재승인 가능

3. 소급기여금의 납부

-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동안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매월 납부

(2000.12.31.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사병산입 처리)

2000.12.31. 당시 재직 중의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있을 경우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고, 공무원 임용월부터 산입처리일까지 미납된 소급기여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단, 소급기여금은 일시납부 가능하고,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 또는 퇴직유족급여 등에서 공제

4. 산입신청 시 참고사항

● 산입할 수 있는 군복무기간

복무구분			산입기간	비 고
현역병, 일반하사,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병적상 실역 복무기간	
단 기 사 병	'82.9.9. 이전 소집자	실역복무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	12월	• 시간제 근무(2,920시간) ⇒ 일수제 근무(365일) ⇒ 월수제 근무로 변천
		의가사(독자사유) 복무단축	6월	
	'82.9.10.~ '85.12.31. 소집자	실역복무기간이 14개월 이상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	14월	• 복무기간 연장 • 6월 이상 실역복무 중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단기 사병 소집 해제된 경우는 실제 복무한 기간이 산입됨 ※ '94.12.31 단기사병(방위병) 제도 폐지
		의가사(독자사유) 복무단축	6월	
	'86. 1. 1. 이후 소집자	실역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 또는 전역사유가 만기	18월	
		의가사(독자사유) 복무단축	6월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21월	<인정기간> •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2년(2011.2.26.이전 소집자) 2년 미만 복무자 : 실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21월(2011.2.27.이후 소집자) 21월 미만 복무자 : 실복무기간 •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18월(2020.6.2.이후 소집자) 18월 미만 복무자 : 실복무기간 <대상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익목적 근무 - 사회서비스 지원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상근예비역			병적상 실역 복무기간	• 1년간 입영 후 잔여기간 출·퇴근 복무

복무구분	산입기간	비 고
공중보건 의사	병적상 '92.5.31 이전 실역 복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1.1. 공중보건의 제도 시행일부터 '92.5.31. 까지 대상기간 • '92.6.1. 이후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한시직 공무원) • 계급 : 중위 또는 대위, 의무복무기간 3년 ※ 3년 초과 시 근무지이탈여부 확인 후 이탈기간이라면 제외, 연장 근무기간은 산입대상
자연계교원요원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교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6월 복무 후 2년6월간 교육직에 복무 • 계급 : 일병, 군번 : 23xxxxxx(8), 33xxxxxx(8)
특수전문요원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6월간 장교 또는 준사관 교육이수자 • 계급 : 소위, 군번은 4xxxxx(6) 계급 : 준위, 군번은 3xxxxx(6) (84~92년 말 시행)
교보제대자	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보유자로서 1년 복무 후 귀휴, 귀휴기간 6월 (귀휴기간이 없는 경우는 실무복무기간을 산입 '56 ~ '63년 사이 시행)
학보제대자	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신분으로서 1년6월 복무 후 귀휴, 귀휴기간 6월(귀휴기간이 없는 경우는 실복무기간만 산입 '56 ~ '63년 사이 시행)
<p>* 단기사병(구 병역법상 방위병)으로 6개월 미만 복무자 → 병역법상 군미필자로 간주되므로 비대상임, 다만 군필자이면서 복무단축 사유(교련교육, 공상 등)로 인해 6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 사병기간 인정.</p> <p>*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산입기간은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병역법시행령부칙 제6조(대통령령 제23305호, '11.11.23.일부개정) → 21월(21월 미만은 실복무기간)</p> <p>*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산입기간은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병역법시행령부칙 제6조(대통령령 제31300호, '20.12.29.일부개정) 2020년 6월 2일 이후 소집자의 경우 → 18월(21월 미만은 실복무기간)</p>		

● 산입할 수 없는 군 복무기간

산입기간	비 고
공무원 재직중 입대 휴직기간	• 기본재직기간에 포함됨
과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재직 중 기 산입한 기간 또는 입대휴직기간	• 재직기간 합산대상
실역미필 보충역	• 단기사병(방위) 소집이 면제된 기간으로 비대상 기간임
특례보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복무 대신 특정 분야에서 실무종사한 기간 • 과학기술원생 (3년) • 예술, 체육요원 • 경비합정 승선요원('89폐지, 승선 기간) • 승선근무예비역('07신설, 해운·수산업체 근무) • 기타 병역특례 심의위가 선발한 자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무관후보생기간	• 장교, 준사관 또는 장기부사관 임용을 위한 교육기간
R.N.C.T 훈련기간	• 교육대, 해양수산계 전문대의 학군부사관후보생 과정으로서 졸업 후 교직에 종사하거나 승선한 기간으로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님 (단, 졸업 후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은 사병 산입 대상)
병역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복무제외기간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본형에 산입된 미결 구금일수 포함) 다만, 가석방 중 또는 형의 집행정지 중의 일수는 제외 •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또는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에 의한 복무 제외기간(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동 제24조, 제25조의 규정 불산입 기간) • 의무경찰대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휴직·정직·영창 및 직위해제기간, 복무를 이탈한 기간 •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설치법) - 휴직·복무이탈 및 영창집행기간 • 경비교도(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 휴직·복무이탈 및 영창일수
<p>※ 참고사항</p> <p>◇계급이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등인 경우(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 재직기간 합산대상이며 하사인 경우에도 장·단기하사는 재직기간 합산대상임(일반하사 사병산입)</p> <p>◇역종이 예비역 및 실역 필보충역이 산입대상이며 실역미필 보충역, 특례보충역, 장교 등은 산입대상이 아님.</p>	

● 산입기간의 계산방법

- ①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월수에 의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

예시

입 대 : 1975. 1.10.

전 역 : 1977. 8.15.

➡ 복무기간 : 2년 7월 6일 ⇒ 산입기간 : 2년 8월

- ② 병역법에 의거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 일수는 전체 복무기간에서 제외

예시

- 입 대 : 1975. 1.10.
- 탈 영 : 1976.10. 1.
- 복 귀 : 1976.12. 6.
- 전 역 : 1977.10.11.

복무기간 : 2년 9월 2일
 공제기간 : 2월 5일 ('76.10. 1.~'76.12. 5.)
 실복무기간 : 2년 6월 27일
 ➡ 산입기간 : 2년 7월

- ③ '82. 4. 1. 이전 일반하사 및 병으로 근무하다가 예비군자원관리요원(예비군중대장) 양성과 정인 예비간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소위로(군번 '4'번으로 시작) 임관과 동시에 전역된 사람의 후보생기간은 사병 산입대상기간에 해당됨

예시

- 입대(병 또는 일반하사) : 1973. 9. 8.
- 예비간부후보생 : 1976. 3.22.
- 소위임관 및 전역 : 1976. 5.15.

사병산입기간 : 2년 9월
 ('73. 9. 8. ~ '76. 5.15.)

- ④ '69 ~ '74년 사이 시간제 단기사병복무자 중 공무원 재직기간과 야간 단기사병 복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기간은 제외되며, 기간계산은 비례방식에 의해 산입기간을 산정

예시

- 공무원임용 : 1971. 1. 1.
 - 시간제단기사병 복무기간 : '69.10. 1. ~ '72. 9.30.(36월)
 - 공무원임용 전 단기사병 복무 기간 : '69.10. 1. ~ '70.12.31.(15월)
- ※ 중복기간 : '71. 1. 1. ~ '72. 9.30.(21월)
 비례계산 : 36월 : 12월 = 15월 : X (단기사병 만기 소집해제의 경우 12개월 산입)
 → 산입기간 : 5월 (소수점 이하는 절상)

⑤ 사회복지부요원으로 2011. 2.27. 이후 소집자중 만기근무자는 21개월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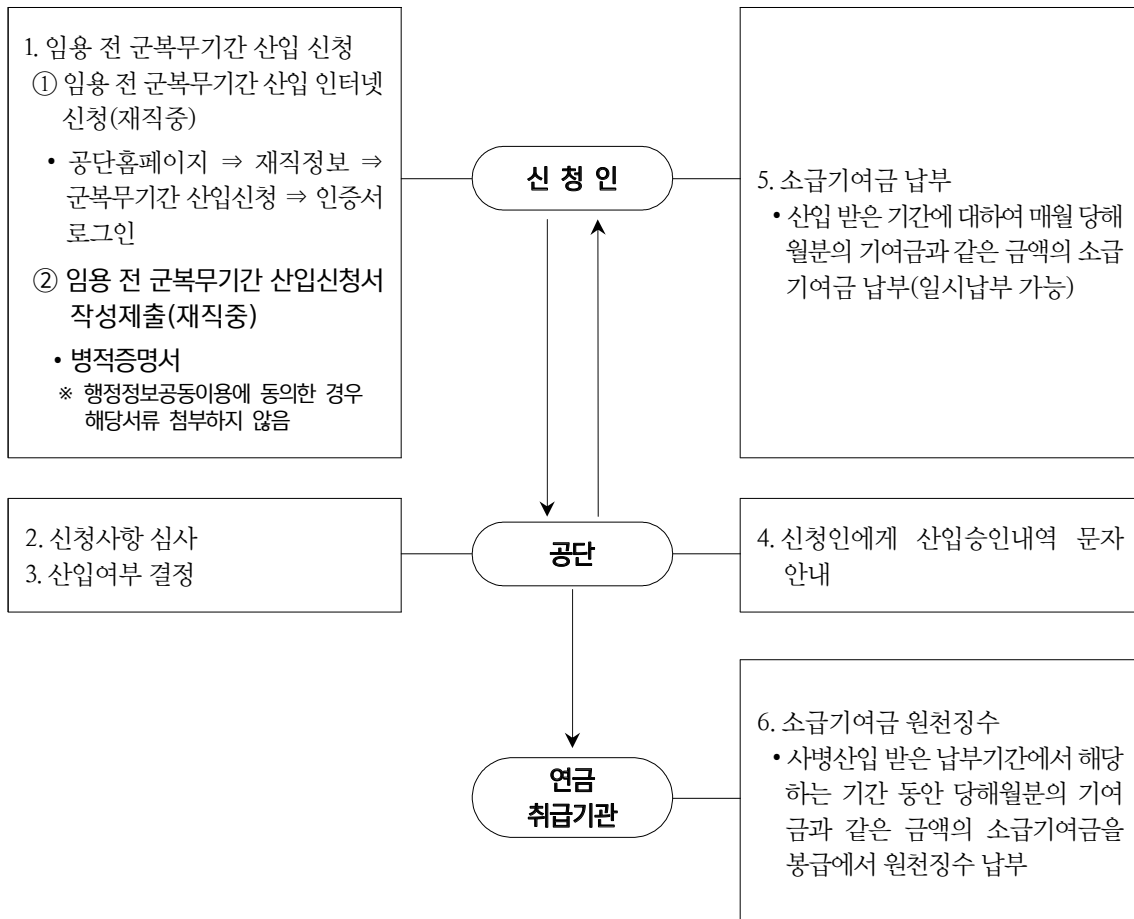
예시

입 대 : 2011. 2.28.

전 역 : 2013.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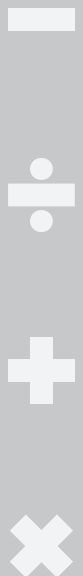
➡ 복무기간 : 2년 ⇒ 산입기간 : 1년 9월

5. 산입신청 시 참고사항



제4장 징수관리

제1절 기 여 금	85
제2절 부 담 금	119





제1절 / 기 여 금

1. 기여금의 정의(법 제3조제1항제8호)

기여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장해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징수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
- 납부기간 : 재직기간 36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
- 기여금 징수의무자
 - 기여금 징수의무자는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예산지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됨

2. 기여금의 종류

종 류		내 용	기여금액
기 여 금	일 반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소 급	• 소급통산 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기여금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 소급기여금은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합산반납금		•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 받아 납부하는 반납금	퇴직당시의 급여액 + 이자

- 연도별 기여금 징수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인상

2010	2011	2012~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3%	6.7%	7%	8.0%	8.25%	8.5%	8.75%	9%

3. 기준소득월액(영 제4조, 제5조, 제8조)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전년도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으로 공무원 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1+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01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기준소득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전년도 소득 중 과세소득 금액

기준소득(과세소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전년도 소득 - 비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에서 공무원 8개보수*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보수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 - 8개수당 연간지급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수당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수당 : 전년도(1. 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 전년도에 지급받는 소득 중 전년도의 재직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소득은 제외

【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산정되는 급여 】

최종적용기준소득월액	단기급여 : 사망조위금(공무원 본인사망) 장기급여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급여(장해연금에서 승계된 유족연금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포함)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퇴직연금, 조직퇴직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퇴직유족연금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재난부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직계존비속)

02 기준소득월액 평균수당 산정

- 적용기준 : 공무원의 종류 및 계급·직급별로 적용
- 대상급여 :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평균액
- 산정방법 :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지급액을 수당별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연도말 총인원으로 나눈 금액

03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신규 임용자 (영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휴직자	영 제7조	【법 시행일(2010.1.1.) 이후 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당시 공무원이 적용받던 기준소득월액 • 매년 5월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영 부칙 제9조제3항	【법 시행일(2010.1.1.) 이전부터 휴직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 매년 5월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04 이 법 시행(2010.1.1.) 전 파면·해임 취소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 이 법 시행(2010.1.1.) 전 파면 또는 해임되어 이 법 시행 후 복직되어 전년도 기준소득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경우
- 법 시행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매년 5월 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05 이 법 시행(2010.1.1.) 전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영 제7조)

- 전년도(매년 1. 1.부터 12.31.까지) 소득업무 종사기간에 시간제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 법 시행(2010.1.1.)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매년 5월 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4.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영 제26조)

- 공무원 전체(전년도 1. 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공무원 전체(전년도 1. 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한 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만원 단위 절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인사혁신처장이 4월 30일까지 고시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산정
 - ※ 기여금 징수 및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산정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봉급월액 증가 후 해당연도 퇴직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된 후 해당연도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을 제외함)의 사유가 발생한 때
 - ① 봉급월액 증가액을 증가월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식: 급여의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승진 등에 따른 변동 후의 봉급월액에서 변동 전의 봉급월액 차액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월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대상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급여

- ② 봉급월액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용
 - 대상급여: 퇴직수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6.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 전년도 기준소득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신규자, 휴직자, 복직자, 시간제 전환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은 소득 종사기간이 1. 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하여 영 제5조(본인의 기준소득에 의한 산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적용

1. 기준소득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기관)

□ **제출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전년도 중 소득이 있는 기간 전체)

※ 공무원인사급여시스템 운영기관을 달리하여 전출이나 퇴직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기관에서 각각 제출

□ **자료 구성**

- 전년도 기준소득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초과근무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항목별 연간 지급액

□ **작성 방법**

- 전년도(1. 1.~12.31.)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의 연지급 합계액 (이하 “기준소득” 이라 한다)
- 퇴직·전출·전입 등으로 연금취급기관이 변동된 경우에도 해당 연금취급기관에서 기준소득자료 제출
- ※ 공단에서 중복 및 누락여부 확인

□ **전년도 기준소득자료 등의 제출 방법**

- 연금취급기관장이 매년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영 제9조)
- 자료제출 방법(상세내역)

소득 자료 전송 (2종)	<p>○ 업로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자료 및 세부자료 각각 해당하는 메뉴에서 기준소득자료 전송 - 파일추가 버튼 클릭 업로드 진행 ※ 반드시 총괄자료 업로드 후 세부자료 업로드해야 함 <p>○ 업로드 파일명 부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자료 파일명: 기관코드 9자리.txt - 세부자료 파일명: bse 소득년도 4자리-기관코드 6자리.txt ※ 공단 홈페이지-연금담당자 승인 후 연금지원시스템 이용 가능함
----------------------------------	--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화면] 수정



1 2 업로드

소득
자료
전송
(2
종)

[기준소득 세부자료 전송화면] 수정



1 2 업로드

○ 메뉴위치

- 기준소득 총괄자료
 - 징수관리 → 기준소득관리 → 기준소득자료전송 → 기준소득 총괄자료 전송(연금취급기관용)
- 기준소득 세부자료
 - 징수관리 → 기준소득관리 → 기준소득자료전송 → 기준소득 세부자료 전송(연금취급기관용)

※ 소득자료 누락자가 있어, 누락자 소득자료를 추가로 전송할 경우에는 '추가 전송' 선택

□ 기준소득월액 결정 세부업무절차

연금 취급 기관	기준 소득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급받은 보수(수당포함) 중 과세소득	(1)
		① 성과연봉 ② 성과상여금 ③ 상여금 ④ 직무성과금 ⑤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⑥ 연가보상비	(2)



공 단	기준소득(1) - 평균대상보수 연간지급액(2)	
	+	
	연도 말 공무원의 직종·급별 평균액	① 성과연봉 ② 성과상여금 ③ 상여금 ④ 직무성과금 ⑤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⑥ 연가보상비
	=	
	기준소득연액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월액 통보(기여금 포함)	



연금 취급 기관	<p>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율 = 기여금(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p> <p>기여금등 신분변동사항은 매월통보</p>
----------------	--

◇ 전년도 기준소득 자료 제출 Lay-out

※ 총괄소득자료 Lay-out : 216Byte

기 관 코 드	일 련 번 호	임 용 일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기여금기호	근 무 월 수
X (12)	9 (5)	9 (8)	9 (13)	X (20)	X (5)	9 (2)
12	17	25	38	58	63	65

기준소득	성 과 상 여 금		직 무 성 과 금		상 여 금		성 과 연 봉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9 (9)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74	75	83	84	92	93	101	102	110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111	119	120	128	129	137	138	146

보수지급 구 분	소득개시일 (귀속시작)	소득종료일 (귀속종료)	시간제 근무기간			견책, 감봉 여부			금 여 (원천징수 영수증3번)	상 여 (원천징수 영수증14번) 지 급 액
			대 상	시작일	종료일	장 계 (코드)	시작일	종료일		
X (2)	X (8)	X (8)	X (1)	X (8)	X (8)	X (2)	X (8)	X (8)	9 (9)	9 (8)
148	156	164	165	173	181	183	191	199	208	216

○ 총괄소득자료 Lay-out 예시

기 관 코 드	일련번호	임 용 일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기여금기호	근무월수
100335000000	00001	19850101	1111111234567	홍길동	2A625	12

기 준 소 득	성 과 상 여 금		직 무 성 과 금		상 여 금		성 과 연 봉	
	지 대 급 상	지 급 액	지 대 급 상	지 급 액	지 대 급 상	지 급 액	지 대 급 상	지 급 액
042300000	Y	01000000	Y	00000000	Y	00000000	Y	00000000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액
Y	02400000	Y	00050000	Y	00100000	Y	01000000

보수지급 구 분	소득개시일 (귀속시작)	소득종료일 (귀속종료)	시간제 근무기간			감봉 또는 견책 여부			금 여 (원천징수 영수증3번)	상 여 (원천징수 영수증14번)
			대 상	시작일	종료일	감봉 견책 (코드)	시작일	종료일		
01	20210101	20211231	N	00000000	00000000	00	00000000	00000000	042300000	03150000

기관 코드	주민등록 번호	성명	보수 코드	과세 여부	월별 소득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X(12)	9(13)	X(20)	X(10)	9(1)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X(12)	9(13)	X(20)	X(10)	9(1)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여부 : 1. 과세 2. 비과세

※ 세부소득자료 Lay-out : 164Byte

○ 세부소득자료 Lay-out 예시

기관코드	주민등록 번호	성명	보수 코드	과세 여부	월별 소득내역				
					1월	2월	3~10월	11월	12월
100335000000	1111111234567	홍길동	본봉	1	010000000	01000000	01000000....	01000000	010000000
100335000000	1111111234567	홍길동	성과 상여금	1	000000000	030000000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						

○ 소득자료 구성 내역

<보수지급내역>

봉 급		38,255,000	공 무 원 보 수 관 계 법 령 등 에 의 한 소 득	과세 소득	⇒	<div>기준소득 51,335,000</div>
정근수당		1,200,000				
명절휴가비		1,800,000				
가족수당		720,000				
정액급식비		360,000				
직급보조비		1,200,000				
평 균 대 상 보 수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2,800,000				
	직무성과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2,950,000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2,050,000					
가족수당(6세 이하)		240,000	비과세 소 득	⇒	<div>기준소득 ×</div>	
정액급식비		1,200,000				
... ...						
대민활동비		600,000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의하지 않은 소득	⇒	<div>기준소득 ×</div>	
보충수업비		4,000,000				

<소득자료 작성 내역>

기준소득 (A)	성 과 급 여(B)				초과근무수당(C)			연 가 보상비 (D)
	성과 연봉	성 과 상여금	상여금	직 무 성과금	시간외 수 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51,335,000	0	2,800,000	0	0	2,950,000	0	0	2,050,000

* 기준소득(A)은 (B), (C), (D)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기준소득 중에서 성과급여(B), 초과근무수당(C), 연가보상비(D)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기준소득자료 Lay-out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기	관 코 드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정받은 연금취급기관코드(“-”은 제외)	
일	련 번 호	● 연금취급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예: 00001, 00002, 00003 등)	
임	용 일 자	● 공무원 임용연월일(예: 20080101)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숫자로 『-』입력 제외)	
성	명	● 공무원의 성명(공백 없이 작성)	
기 여 금 기 호		● 소득년도말 기준 기여금기호(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	
근	무 월 수	● 전년도 중 연금취급기관에서 근무한 월수	
기	준 소 득	● 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간 지급된 보수 중 과세소득 ※ 2015.1.1.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에 따라 기준소득에 포함	
성 상 여 금	과 금	대 상	● 성과상여금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성과상여금
직 성 과 금	무 금	대 상	● 직무성과금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직무성과금
상 여 금		대 상	● 상여금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상여금
성 연	과 봉	대 상	● 성과연봉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성과연봉
초 과 근 무 수 당	시간외 근무 수당	대 상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 근무 수당	대 상	●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	대 상	●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휴일근무수당

구 분		작 성 방 법
연 가 보 상 비	대 상	● 연가보상비 지급여부(지급 Y, 미지급 N)
	금 액	● 공무원에게 연간 지급된 연가보상비
보 수 지 급 구 분		● 2020.12.31.기준 공무원의 보수지급 방법(호봉제 : 01, 연봉제 : 02)
소 득 개 시 일		● 2020년 연금취급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시작일(예 : 20200101)
소 득 종 료 일		● 2020년 연금취급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종료일(예 : 20201231)
시 간 제 근무기간	대 상	● 2020년 시간제 공무원 경력이 있는지 여부(있음 Y, 없음 N)
	시 작 일	● 2020년 시간제 공무원 시작일(예 : 20200101)
	종 료 일	● 2020년 시간제 공무원 종료일(예 : 20200630)
감 봉 견책여부	감 봉 견 책 (코 드)	● 2019년 ~ 2020년도 중 감봉 또는 견책이 있는 경우 신분코드
	시 작 일	● 감봉 또는 견책 시작일
	종 료 일	● 징계코드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
급 여 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3번 항목
상 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4번 항목(공무원수당체계 상여수당)

2. 기준소득월액 등 통보(공단)

□ 기관 기준소득월액 확정자료 발체작업

- ① 개인별 결정된 기준소득월액(기여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등) 등의 자료를 연금업무 지원시스템으로 다운로드
- ②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각 연금취급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시스템에 업로드
(*봉급 작업 시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여금 원천징수)

□ 기준소득월액 자료 다운로드 방법 그림수정

공단홈페이지 → 연금담당자화면바로가기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연금업무알림 → 기준소득월액 파일 내려받기 (일반,전출입자) → 파일조회 → 파일정보 선택 → 다운로드(text 파일)



※ 급여마감일 기준으로 전출입 되어 기준소득월액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전출입자 File생성 → 해당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엔터 → 대상자 선택 → 오른쪽상단의 Text 또는 엑셀 파일 다운

※ Text 파일은 급여시스템에 추가 반영 시 사용하며, 엑셀은 개별입력 및 개인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 확인 시 사용

■ Lay-out : 176Byte(공단 ⇒ 연금취급기관)

기관 코드	일련 번호	기준소득월액 적용구분	주민등록 번 호	성명	근무월수	기여금 기 호	보수지급 구 분
X (12)	9 (5)	9 (2)	X (13)	X (20)	9 (2)	X (5)	X (2)

기 준 소득월액	기여금	기준소득월액 적용시작월	기준소득월액 적용종료월	기준소득월액 상 한 금 액	공백	기준소득
9 (8)	X (8)	X (6)	X (6)	9 (8)	9 (4)	9 (9)

평균대상보수 차감금액(연간 지급액)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 가 보 상 비	계
9 (8)	9 (8)	9 (8)	9 (9)

가산금액(직종·직급 평균액)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 가 보 상 비	계
9 (8)	9 (8)	9 (8)	9 (9)

◇ Lay-out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기 관 코 드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정받은 연금취급기관코드(“-” 제외)
일 련 번 호	● 소속기관에 통보되는 인원 일련번호(예 : 00001, 00002, 00003 등)
기 준 소 득 월 액 적 용 구 분	● 기준소득월액 적용 대상자 구분 - “01” : 본인의 전년도 기준소득과 평균대상보수 평균액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적용자 - “02”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자 - “03” :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적용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입력 제외)
성 명	● 공무원의 성명(공백 없이 작성)
근 무 월 수	● 전년도 중 연금취급기관에서 근무한 월수 ※ 월 초일(매월 1일)부터 근무한 경우만 근무월수에 포함
기 여 금 기 호	● 매년말 공무원의 종류·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재 분류한 기여금기호 5자리 (근무연수 제외)
기 준 소 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간 보수지급액 중 과세소득금액
보 수 지 급 구 분	● 연도말 기준 공무원의 보수지급 방법(호봉제 : 01, 연봉제 : 02)
기 준 소 득 월 액	● 기여금 징수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표시
기 여 금	● 기준소득월액에 기여금 징수율에 의해 공무원이 납부하는 금액 - 2016.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0% - 2017.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 2018.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5% - 2019.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 2020.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9.0%
기 준 소 득 월 액 적 용 개 시 월	●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작월 - 기여금 등 납부적용 시작월(예 : 202105)
기 준 소 득 월 액 적 용 종 료 월	● 기준소득월액 적용 종료월 - 기여금 등 납부적용 종료월(예 : 202204)
기 준 소 득 월 액 상 한 금 액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여금 징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징수
공 백	● 『0000』으로 입력
차 감 금 액	● 평균대상보수별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평균액 반영 대상자의 공무원이 연간 지급 받은 보수(기준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초과근무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평 균 대 상 보 수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 평 균 액)	● 평균대상보수별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로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에 가산하는 금액) -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초과근무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7. 기여금의 징수

1 징수기간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전월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징수
- 보수지급일 이후에 임명되어 그 달의 기여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수지급 시에 임명 월의 기여금도 같이 징수(징수시점의 기여금액 기준)

* 2000.12.이전 법령에서는 보수지급일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달의 기여금은 보수(봉급)지급 시 공제하지 않았으나(2000.12.기준 시행령 제62조제3항) 2001. 1. 1부터는 이를 개정하여 퇴직 월 또는 사망 월의 기여금도 보수지급 시 공제

2 기여금의 징수방법

01 징수방법

- 일반기여금·소급기여금 및 합산반납금 분할납부금은 매월 보수지급 시에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
- 합산반납금 일시납부액은 합산 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보수지급 시까지 공무원으로부터 납부 받아야 함
 - ※ 보수지급일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

02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징수(법률 제15523호, 2018. 3. 20. 부칙 제34조)

- '09.12.31.이전 강임·전직·보직변경·재임용(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감액되기 전의 직급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가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 본인이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승인을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에 따라 감액된 달부터 이 법 시행(2010. 1. 1.) 전달까지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 '09.12.31.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산정
 - ※ 기여금 납부 면제자가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재직 중에 종래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

예시

2007. 9. 1.		2008. 1. 1.		2009. 1. 1.		2020. 6. 15.	
학 장 (7A0S3Z)		교수33호 (7A033Z)		교수근가1호 (7A0K1Z)		교수근가2호 (7A0K2Z)	
'07년도 - 학 장 보 수 월 액 : 4,633,425원 - 교수 33호봉 보수월액 : 3,931,641원				'20. 6월 - 기준소득월액 : 6,300,000원 - 기 여 금 : 567,000원			
종래보수월액 신청							

○ 종래 보수월액 기여금액 및 미납기여금 산정

기 간	종 래			현 행			미납기여금액 (비례계상)
	기여금기호	보수월액	기여금액	기여금기호	보수월액	기여금액	
'07. 9. ~ '07.12.	7A0S3Z	4,633,425	393,840	7A033Z	3,931,641	334,180	59,660 (85,890)
'08. 1. ~ '08.12.	-	4,716,826	400,930	7A0K1Z	4,057,308	344,870	56,060 (79,280)
'09. 1. ~ '09.12.	-	4,716,826	400,930	7A0K2Z	4,113,966	349,680	51,250 (72,470)

* 종래보수월액 : 전년도 보수월액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승인시 정산할 금액 : 미납기여금액 × $\frac{\text{승인시 기준소득월액적용 기여금}}{\text{해당연도 종래기여금액}}$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 상 율	6.0%	15.5%	5.4%	5.4%	2.4%	3.2%	1.6%	1.8%	0%	5.1%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 상 율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 승인된 종래의 보수월액은 매년마다('09.12.31.까지)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 증가시키며 '09. 12월까지 기여금을 납부
 - 종전기간(1기간)에 대한 급여산정은 종래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를 산정(장기급여에 한하여 적용)
-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신청절차(영 제21974호, 2010. 1. 1. 제22조)
 - 기관을 경유하여 종래보수월액적용신청서를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

- 종래보수월액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 환산
 - 현재가치 환산방법

이 법 시행일(2010.1.1.) 전날이 속하는 달의 종래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 종래보수월액 : '09.12.31.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종래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 미납금을 산정
 - 미납금 산정대상 기간 : 종래보수월액 사유발생일로부터 이 법 시행 전달(2009.12월)까지
 - 감액 전 보수월액을 2009.12.까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

감액 전 보수월액(4,633,425) × '08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1.8%) × '09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0.0%) = 법 시행 전달('09.12.31.)의 종래보수월액(4,716,826)

- 퇴직수당에는 종래보수월액을 적용하지 않음
 - '09.12.31.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퇴직수당을 산정
 - ※ '91.10.1.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종래의 보수월액을 적용

03 전출의 경우 기여금 징수(법 제69조, 영 제64조제2항)

-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입한 경우 기여금은 급여를 지급받은 기관의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

예시

-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 월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 월의 기여금 징수
-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 월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 전입기관에서 전출 월의 기여금 징수

04 퇴직일 또는 그 다음날에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영 제64조제1항)

-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퇴직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경우 기여금의 징수는 전출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다만,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출입 특례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 합산대상임

05 전년도 소득종사기간에 시간제 전환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결정(영 제5조)

- 전년도 소득 종사기간에 시간제 전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내역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 않고 시간전환제 시작 당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징수

예시

- 2021년도 기준소득 : 38,000,000 (수당 등 지급액 없는 것으로 가정)
 - 시간제근무공무원 기간 : 2021년 6월 ~ 12월
- 2021년 5월 적용기준소득월액 : 3,500,000
- 2022년 5월부터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 ⇒ 2021년 기준소득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 않고 2021년 6월의 기준소득월액(3,500,000)에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2022년 5월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여 적용함

06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자의 기여금 납부(영 제65조)

-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당해 월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동 휴직기간의 미납월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따로 징수
- 보수(수당제외)가 일부라도 지급되는 휴직자 : 기여금 원천징수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기여금을 매월 납부 할 수 있음
 - 이 영 시행 당시 휴직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기여금을 납부 할 수 있고, 이전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미납분은 종전규정과 같음
 - 납부의사 표시는 당월기여금(소급기여금 납부중인 경우 소급기여금 납부포함) 납부로 같음

- 병역복무휴직 및 보수미지급 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을 휴직 중에 납부하려면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음
- 복직 후 매월 소급기여금으로 납부 중이라도 잔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음

예시

• 일반휴직(보수미지급) : 2018. 1. 1. • 복직 : 2019.12. 5.

- 2018년 1월부터 2019.11월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음
- 복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 납부(2020년 1월 ~ 2021년 11월)
 - ※ 매월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다가 2021년 1월달에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액
 $2021년\ 1월\ 기여금 \times 잔여\ 소급기여금\ 납부월수(11월) = 일시납부액$

- 보수미지급 휴직에 대한 복직코드는 “48”을 사용하고, 보수지급 휴직에 대한 복직 코드는 “40”을 사용

예시

• 일반휴직(보수미지급) : 2018. 3. 25. • 복직 : 2020. 3. 1.

-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미납으로 처리 하지 않음
-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 납부(2020년 4월 ~ 2022년 2월)
 - ※ 2020년 3월에 3. 1일자로 복직신고서 3월 일반기여금을 납부하고 2020년 4월부터 납부기간동안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징수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대휴직 소급기여금 납부
 - 재직기간 합산신청 후 승인받은 바에 의하여 합산반납금을 납부
 $\{퇴직급여액(퇴직수당 포함)+이자\}$
 - ※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합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에 합산신청 한 것으로 간주 합산반납금을 계산하여 당해급여에서 일시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함

예시

- 2018. 7. 25. 입대휴직, 2018. 11. 1. 장교로 임관되어 2021. 7. 31. 전역한 후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 2021. 8. 10. 복직한 경우
 - 재직기간 합산대상기간 : 2018. 11. ~ 2021. 7. (2년 9월)
 -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산반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후 소급기여금 납부기간 : 2021. 9. ~ 2021. 11.(3월, 임관전 기간)

07 미납 기여금의 징수 등(영 제 66조)

- 과·미납이 발생하였을 때 기여금 징수
 - 과·미납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과납 또는 미납 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과납 또는 미납이 발생한 달과 과·미납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기간의 산정 : 기여금의 과미납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자계산을 하며 과납의 경우에는 과납액에 대해 정산·반환처리를 한 날, 미납의 경우에는 급여 원천공제를 한 날 또는 미납금을 개별 납부하여 공단 계좌에 입금된 날까지로 한다.

예시

* 2021년 정기예금금리 금리 2.5% 가정 시,
 ○ 2021. 1.20. 과·미납금 100,000원을
 2021. 5.20. 징수 또는 환급할 경우 ⇒ 740원($100,000 \times 2.5\% \times 109 / 365$) 이자 발생
 - 기산일 : 2021. 2. 1 (2021. 2. 1. ~ 2021. 5.20. : 109일)
 - 징수 또는 환급해야할 총 금액 : 100,000(과·미납금)+740(이자)=100,740원

【 미납금 발생 사례 】

- 보수지급일 이후 신규로 임용됨에 따른 임용 월 일반기여금 미납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미납기여금, 보수미지급, 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납부기간 착오에 의한 소급기여금 미납

08 파면·해임 복직자의 기여금 징수

- 공무원이 파면·해임이 취소되어 복직되었을 때 파면·해임 후부터 취소 복직 시까지는 파면·해임시의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기여금액을 일시에 납부
- 이 법 시행일(2010.1.1.) 이전에 파면 또는 해임되었거나 파면·해임이 취소 복직된 경우에는 2009. 12. 31일 현재의 공무원의 종류·직급·계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8. 기여금의 납부

1 기여금의 납부(영 제63조)

-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기여금·반납금 등을 징수한 때
 - 3일(은행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수납기관(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
 -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기여금 등 납부자료를 공단의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2 기여금 등 납부내역 제출방법

- 적정한 퇴직·유족급여의 지급과 정당한 기여금의 징수 확인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의 규정에 의해 기여금 등 납부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
- 제출방법
 - ①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기여금 등 납부내역 자료제출
 - ② 『인사급여』 프로그램에 의한 기여금 납부내역 자료 제출

§ 본청에서 대형컴퓨터로 그 산하연금취급기관까지의 급여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또는 인사·급여시스템을 통하여 연금자료를 생성하는 기관)에서 공단에 기여금 등 납부내역을 매월 통보할 때 전산매체(공단 표준 Lay-out형식)로 제출하는 것

<신분변동사항 및 기여금 납부내역 통보 Lay-out> : 262Byte (자료구분: B)

기관코드	심사년월	자료구분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기여금기호
X (12)	X (6)	X (1)	9 (5)	X (20)	X (13)	X (5)
12	18	19	24	44	57	62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X (2)	X (8)	X (5)	X (2)	X (8)	X (5)	X (2)
64	72	77	79	87	92	94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X (8)	X (5)	X (2)	X (8)	X (5)	X (2)	X (8)
102	107	109	117	122	124	132

근속기호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일반과·미납정리	소급과·미납정리
X (1)	S9(9)	S9(9)	S9(9)	S9(9)	S9(9)
133	142	151	160	169	178

계약직계약기간		시간제주당 근무시간	기관부서 코드	회계구분 코드	근무(학교) 부서명	대여학자금 상환금액
시작일	종료일					
X (8)	X (8)	X (2)	X (6)	9(2)	X (50)	X (8)
186	194	196	202	204	254	262

■ Lay-out 예시(신분변동 2건인 경우)

기관코드	심사년월	자료구분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기여금기호
100335000000	202110	B	00001	홍길동	1111111234567	2A625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21	20211001	2A625	04	20211001	“공백”	“공백”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근속기호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일반과·미납정리	소급과·미납정리
0	000200500	000200500	015876100	000100000	000100000

계약직계약기간		시간제주당 근무시간	기관부서 코드	회계구분 코드	근무(학교) 부서명	대여학자금 상환금액
시작일	종료일					
20200101	20211231	30	0	11	강동초등학교	000400000

◆ 기여금 납부내역 자료 및 신분변동자료 Lay-out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기 관 코 드	● 연금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금취급기관코드
심 사 연 월	● 심사연월 입력(예 : 202111)
자 료 구 분	● “B”
일 련 번 호	● 연금취급기관에서 부여한 순번(예 : 00001, 00002, 00003)
성 명	● 공무원연금법 적용자의 성명 입력(공백 없이 작성)
주 민 번 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없이 입력)
기 여 금 기 호	● 보수코드 5자리 입력(근무연수는 제외)
변 동 부 호	● 공무원 신분변동 코드 입력(예 : 정기승급 “04”) 5times
변 동 일	● 공무원 신분변동 연월일 입력(예 : 20211001)
근 속 기 호	●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일 반 기 여 금	●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금액 - 2016.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0% - 2017.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 2018.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5% - 2019.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 2020.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9.0%
소 급 기 여 금	● 소급통산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기여금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휴직 등으로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합 산 반 납 금	● 과거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아 납부하는 반납금
일 반 과 · 미납정리	● 일반기여금의 과·미납을 정산한 금액
소 급 과 · 미납정리	● 소급기여금의 과·미납을 정산한 금액
계 약 직 계 약 기 간	●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시작일, 종료일)을 표기(예 : 20210101, 20211231) -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 재계약(등급조정 등)인 경우 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
시간제주근무수당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기 관 부 서 코 드	● 해당기관의 부서코드
회 계 구 분 코 드	● 공단에서 지정한 회계구분코드(예 : 일반회계 11)
기 관 (학 교) 부 서 코 드 명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부서코드명 또는 학교명
대여학자금상환금액	●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공단으로 상환납입 할 금액

◆ 신분변동코드

공 무 원 신 분 변 동 코 드					
순번	코드	신분변동내용	순번	코드	신분변동내용
1	04	정기승급	25	48	복직(보수미지급휴직)
2	11	신규	26	50	휴직 : 보수 미지급, 감축대상
3	12	전입	27	51	휴직 : 보수 지급, 감축대상
4	13	직종전환	28	54	휴직 : 보수 지급 감축 비대상
5	16	보직변경(고위공무원 직무등급 변경, 교수·조교·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교장·교감·교사 직위변동 등)	29	55	휴직 : 보수 미지급 감축 비대상
			30	61	명예퇴직
			31	62	정년퇴직·연령도달(청원경찰)
			32	63	파면
6	17	재임용(재임용, 전직, 재계약)	33	64	해임
7	21	승진	34	66	일반퇴직
8	23	호봉재확정	35	70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항인 경우 일반퇴직
9	25	파견(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10	26	파견종료(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36	74	사망
11	27	시간제 근무시작	37	75	입대휴직
12	28	시간제 근무해제	38	77	임용결격
13	30	직위해제	39	79	해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14	31	정직1월			
15	32	정직2월	40	81	감봉4월
16	33	정직3월	41	82	감봉5월
17	37	견책	42	83	감봉6월
18	38	강등	43	85	파견(공무원보수·수당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파견)
19	39	강임			
20	40	복직(보수지급 휴직)	44	86	파견종료(신분코드 “85”파견종료)
21	41	입대휴직 복직	45	94	정직4월
22	43	직위해제 복귀, 징계종료	46	95	정직5월
23	44	징계 및 직위해제 취소	47	96	정직6월
24	46	복직(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또는 계급 구분표(시행령 제4조제2항)

★ 기여금기호는 5자리로 구성, 호봉제 적용자의 넷째 다섯째자리는 해당 공무원의 호봉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정무직 공무원	101	감사원장		연봉제
	105	국무총리		
	106	부총리		
	107	국무위원(장관급)		
	108	차관급		
	113	국회사무총장		
	114	입법차장, 사무차장		
	115	헌재사무처장		
	119	대법원장비서실장		
	120	선관위사무총장		
	121	선관위사무차장		
	129	헌재사무차장		
	131	통상교섭본부장		
	132	국정원 기조실장 봉급제		
	133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134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장		
	135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장		
	141	외교안보연구원원장 등		
	151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5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상임위원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특정직 공무원	Y12	지방해양안전심판관		연봉제
	Y16	국회수석전문위원		
	Y27	국회교섭단체1급상당		
	Y28	국회교섭단체2급상당		
	Y18	국회교섭단체3급상당		
	Y23	국회교섭단체4급상당		
	Y17	국회의원보좌관(4급상당)21봉		단일호봉
	Y26	국회의원비서(5급상당)24호봉		
	Y24	국회의원비서(6급상당)11호봉		
	Y25	국회의원비서(7급상당)9호봉		
	Y29	국회의원비서(8급상당)8호봉		
	Y30	국회의원비서(9급상당)7호봉		
	Y22	특별·광역시선관위상임위원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직무성과급적 공무원	A11	일반직고공단 “가”등급		연봉제
	A12	일반직고공단 “나”등급		
	A21	별정직고공단 “가”등급		
	A22	별정직고공단 “나”등급		
	A31	외무직고공단 “가”등급		
	A32	외무직고공단 “나”등급		
	A41	임기제고공단 “가”등급		
	A42	임기제고공단 “나”등급		
	A51	연구직고공단 “가”등급		
	A52	연구직고공단 “나”등급		
	A61	지도직고공단 “가”등급		
	A62	지도직고공단 “나”등급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일반직 공무원	B11	일반직1급연봉제		
	B12	일반직2급연봉제		
	B13	일반직3급연봉제		
	B14	일반직4급연봉제		
	B15	일반직5급연봉제	Q15	
	2A1	일반직1급		
	2A2	일반직2급		
	2A3	일반직3급		
	2A4	일반직4급		
	2A5	일반직5급	2Q5	연봉/호봉제
	2A6	일반직6급	2Q6	
	2A7	일반직7급	2Q7	
	2A8	일반직8급	2Q8	
	2A9	일반직9급	2Q9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공안직 공무원	601	공안1급		
	602	공안2급		
	603	공안3급(부이사관)		
	604	공안4급(서기관)		
	605	공안5급(사무관)	6Q5	
	606	공안6급(교감)	6Q6	
	607	공안7급(교위)	6Q7	
	608	공안8급(교사)	6Q8	
	609	공안9급(교도)	6Q9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별정직 공무원	B21	별정직1급연봉제		
	B22	별정직2급연봉제		
	B23	별정직3급연봉제		
	B24	별정직4급연봉제		
	B25	별정직5급연봉제		연봉/호봉제
	2B1	별정직1급		
	2B2	별정직2급		
	2B3	별정직3급		
	2B4	별정직4급		
	2B5	별정직5급		
	2B6	별정직6급		
	2B7	별정직7급		
	2B8	별정직8급		
	2B9	별정직9급		
	2B0	사법연수생		
법관	801	일반법관(1~17호봉)		
	8A1	대법원장		
	8A2	대법관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대학·전문대학 교원	7A000	연봉제 교수 (2011년 임용부터)		
	7A1	(호봉제) 총장, 교수		
	7A2	조교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초·중·고 교원	7B1	장학관		
	7B2	장학사		
	7B3	교육연구관		
	7B4	교육연구사		
	7C1	교장(유치원원장)		
	7C2	교감(원감)		
	7C3	교사		
우정직 공무원	T01	우정직1급		
	T02	우정직2급		
	T03	우정직3급		
	T04	우정직4급		
	T05	우정직5급	TQ5	
	T06	우정직6급	TQ6	
	T07	우정직7급	TQ7	
	T08	우정직8급	TQ8	
	T09	우정직9급	TQ9	
외무직 공무원	B3900	외무9등급(1)		
	B3800	외무8등급(2)		
	B3700	외무7등급(3)		
	F0600	외무6등급(4)		
	F0500	외무5등급(5)		연봉/호봉제
	F04	외무4등급(6)		
	F03	외무3등급(7)		
	F02	외무2등급(8)		
	F01	외무1등급(9)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소방 공무원	RS0	소방총감(차관급)		
	R01	소방정감(1급상당)		
	R02	소방감(2급상당)		
	R03	소방준감(3급상당)		
	R04	소방정(4급상당, 소방서장)		
	R05	소방령(5급상당)		연봉/호봉제
	R06	소방경(6급상당 3년이상)		
	R07	소방위(6급상당)		
	R08	소방장(7급상당)		
	R09	소방교(8급상당)		
	R10	소방사(9급상당)		
경찰 공무원	5S0	치안총감(차관급)		
	501	치안정감(1급관리관 상당)		
	502	치안감(2급이사관 상당)		
	503	경무관(3급부이사관 상당)		
	504	총경(4급상당, 경찰서장, 서울)		
	505	경정(5급상당)		연봉/호봉제
	506	경감(6급상당 갑)		
	507	경위(6급상당 을)		
	508	경사(7급상당)		
	509	경장(8급상당)		
	510	순경(9급상당)		
헌법재판소	C01	헌법재판소장		
	C02	헌법재판소재판관		
	C03	헌법연구관·연구관보		
검사	E01	검찰총장		
	E02	일반검사(1~17호봉)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기타직 공무원	G0100	기타직(차관급보수)		연봉제
	G0111	기타직 (가급보수)		
	G0112	기타직 (나급보수)		
	G0113	기타직 (다급보수)		
	G0114	기타직 (라급보수)		
	G0115	기타직 (마급보수)		
	G0116	기타직 (바급보수)		
	G0117	기타직 (사급보수)		
	G0118	기타직 (아급보수)		
	G0119	기타직 (자급보수)		
	G0123	기타직 (3급상당)		
	G0124	기타직 (4급상당)		
	G0130	기타직 (기금요원)		
	G02	기타직 연봉제		
	G03	기타직 호봉제		단일호봉
지도관 및 지도사	K01	지도관(32호봉)		연봉/호봉제
	K02	지도사(36호봉)		
연구관 및 연구사	901	연구관(32호봉)	9Q1	연봉/호봉제
	902	연구사(36호봉)	9Q2	
공중수의사	J01	대위기준(수의사)		
	J02	중위기준(수의사)		
공익법무관	L08	중위기준(공익법무관)		
공중보건직	M01	대위기준(공중보건)		
	M02	중위기준(공중보건)		
징병전담	N01	대위기준(징병전담)		
	N02	중위기준(징병전담)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일반 군무원	V21	일반군무원1급		연봉제
	V22	일반군무원2급		
	V23	일반군무원3급		
	V24	일반군무원4급		
	V25	일반군무원5급	Q25	연봉/호봉제
	V26	일반군무원6급	Q26	
	V27	일반군무원7급	Q27	
	V28	일반군무원8급	Q28	
	V29	일반군무원9급	Q29	
전문 군무경력관	VB1	전문군무경력관가군(40호봉)	VQ1	연봉/호봉제
	VB2	전문군무경력관나군(38호봉)	VQ2	
	VB3	전문군무경력관다군(38호봉)	VQ3	
전문 경력관	SB1	전문경력관가군(40호봉)	QB1	연봉/호봉제
	SB2	전문경력관나군(38호봉)	QB2	
	SB3	전문경력관 다군(38호봉)	QB3	
전문관	SC1	수석전문관(4급상당)		
	SC2	전문관(5급상당)		연봉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원	P01	청원경찰		
	P02	청원산림보호직원		
임기제 (국가공무원)	SA1	전문_가급(5급,사무관)	QA1	
	SA2	전문_나급(6급,주사)	QA2	
	SA3	전문_다급(7급,주사보)	QA3	
	SA4	전문_라급(8급,서기)	QA4	
	SA5	전문_마급(9급,서기보)	QA5	

공무원 종류	2010년 이후		시간선택제공무원		비 고
	기여금 기 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 기 호	한시 임기제	
임기제 (국가공무원)	S01	일반1급상당(개방형직위)			
	S02	일반2급상당(개방형직위)			
	S03	일반3급상당(개방형직위)			
	S04	일반4급상당(개방형직위)	QS4		
	S05	일반5급상당(개방형직위)	QS5	QH5	
	S06	일반6급상당(개방형직위)	QS6	QH6	
	S07	일반7급상당(개방형직위)	QS7	QH7	
	S08	일반8급상당(개방형직위)	QS8	QH8	
	S09	일반9급상당(개방형직위)	QS9	QH9	
	S10	일반10급상당(개방형직위)			
임기제 (지방공무원)	SA1	일반5급상당/시간선택제 가급			
	SA2	일반6급상당/시간선택제 나급			
	SA3	일반7급상당/시간선택제 다급			
	SA4	일반8급상당/시간선택제 라급			
	SA5	일반9급상당/시간선택제 마급			
	S01	개방형직1급상당 전문_가급(1급상당)			
	S02	개방형직위2급상당 전문_가급(2급상당)			
	S03	개방형직위3급상당 전문_가급(3급상당)			
	S04	개방형직위4급상당 전문_가급(4급상당)	QS4	QH4	
	S05	개방형직위_5급상당 전문_나급(5급상당)	QS5	QH5	
	S06	개방형직위_6급	QS6	QH6	



제2절 / 부 담 금

1. 부담금 개요

1 부담금의 정의(법 제3조제1항제9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9조)

-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2 부담금의 종류

종 류	내 용
연금부담금	연금급여(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 전 금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을 부담하는 금액
퇴직수당부담금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성격)
재해보상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조급여 지급비용은 제외)

【급여종류별 부담재원】

급여 종류	부담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연금부담금 + 보전금 + 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무상장해급여 : 비공무상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수당 	퇴직수당 부 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 •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간병급여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제외)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상 부 담 금

2. 부담금별 실무처리 요령

1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법 제71조제1항)

- ◇ 연금부담금이란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 ◇ 보전금이라 함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01 부담회계(법 제66조제1항, 영 제67조제3항 단서, 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

구 분	연금부담금	보전금
국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일반회계는 인사혁신처에서 부담 (국방부 등 3개 기관은 별도 납부) • 기타 기관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부담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국가직 전환 이전과 동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02 부담대상(법 제3조제1항제1호, 영 제2조)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의 보수예산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도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사법연수원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80.7.1일 이후), 청원산림보호직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한시적인 위원회는 제외)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예, 지자체 교향악단 등)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03

부담금액(법 제71조제1항 및 단서, 영 제67조제1항·제2항·제3항)

- 연금부담금 :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

【 연도별 연금부담금 부담률 】

연 도	부담률	연 도	부담률
'10. 1. ~ '10. 12.	6.3%	'17. 1. ~ '17. 12.	8.25%
'11. 1. ~ '11. 12.	6.7%	'18. 1. ~ '18. 12.	8.50%
'12. 1. ~ '15. 12.	7.0%	'19. 1. ~ '19. 12.	8.75%
'16. 1. ~ '16. 12.	8.0%	'20. 1. ~	9.00%

※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악단단원운동 부등보상금(연금법 적용자) 등

- 제외대상 : 명예퇴직수당, 정무직인건비(선거직), 업무추진비, 실무수습 인건비 등

- 보전금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

【 보전금 산정방법 】

- 매 회계연도 보전금 산정 : ① ± ②

① 당해년도 보전금 예상액 :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 - (기여금+연금부담금)

② 전전년도 보전금 정산액 :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 - (기여금+연금부담금+보전금)

주)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

- 부담률(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보전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 보수예산
- 회계별 보전금 부담액 : 소관회계별 보수예산 × 부담률

【 연도별 보전금 부담률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부담률	4.167%	4.091%	2.186%	1.635%	3.076%

- 공무원보수관계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사법연수원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공익수의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04

예산서 제출 및 부담금 산정 통보 등(영 제67조제6항 ~ 제9항)

● 예산서 제출 및 시기

①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	→ 당초 세출예산서 제출	1월
②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확정된 때	→ 추경 세출예산서 제출	연중
③ 회계년도 결산 확정 후	→ 세출예산의 결산서 제출	7월

- 공단은 부담기관에서 제출한 보수예산서(당초 및 추경예산서)를 검토한 후 부담금의 증감액을 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기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납부
 -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말까지 가감하여 납부
- 예산결산상 예비비사용,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 보수예산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액을 가감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

세부 산출내역 없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의 보수예산 산정기준(지침)

- 증감 세출예산에 지정 세출예산의 보수예산 산정 점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예산으로 한다.

05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납부(법 제71조제2항, 영 제69조)

납부시기 및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부담금을 연 4기로 나누어 납부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분 기 별 고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고지비율(지침) - 1/4분기, 3/4분기 : 35% - 2/4분기, 4/4분기 : 15%
납부방법	① 공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분기 고지금액을 통보 ②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납부서 등 출력 후 수납은행에 납부 ※ 출력물 : 부담금별 납부서 및 정산내역표

06 부담금의 정산납부(법 제71조제3항·제6항, 영 제 67조제8항)

- 부담금의 산정은 매 분기마다 그 초일의 보수예산을 기준
- 보수예산 변동 및 과·미납 부담금 정산 방법

· 전분기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	다음 기의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확정으로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	⇒	다음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정산하여 납부
·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	⇒	당해 기말(회계연도 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납부

※ 연도 마지막 기에 보수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부담금 납부절차

- (부담기관) 공단에 보수예산 변동자료 제출 → (공단) 부담금 산정 후 납부 통보

07 납부지연시의 이자가산 등(법 제71조제7항, 영 제 67조제10항, 지침)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 이자율 :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 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

※ 이자 계산방법 : 미납원금 × 이자율 × 미납일수 / 365

※ 연도별 이자율 : 2019년 2.55%, 2020년 2.0%, 2021년 1.25%

회계 연도말의 과납 또는 미납 부담금에 대한 이자 적용(지침)

- 과납의 경우 : 익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이자 산정
- 미납의 경우 : 익년도 1월 1일부터 연금부담금 등 납부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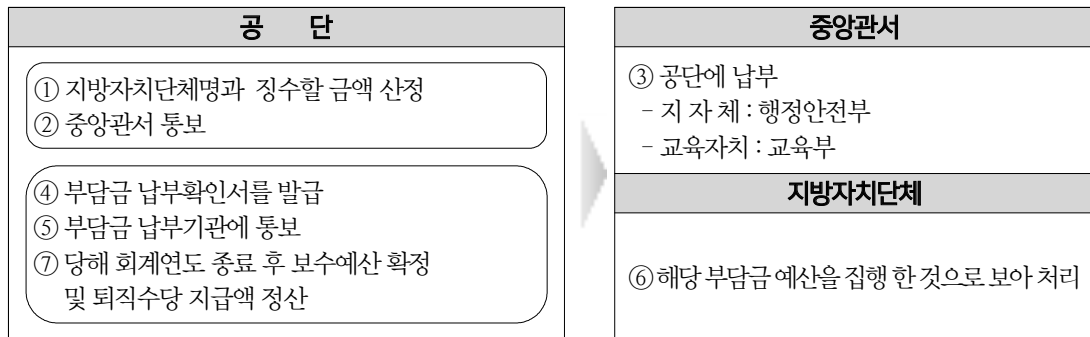
08 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복직등에관한부담금징수(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 노조해직자 특별법에 따른 급여지급 부담금은 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납부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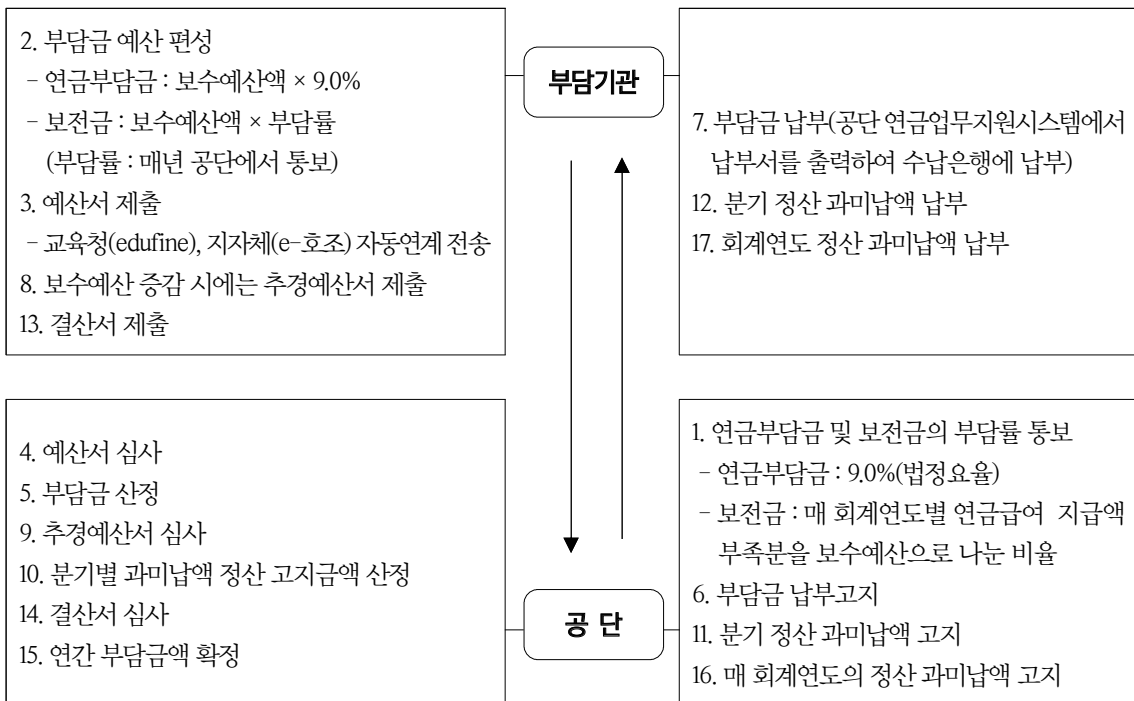
교부세 등에서의 부담금 징수(법 제71조제4항·제5항, 영 제70조)

-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징수절차



10

업무처리 절차



2 퇴직수당부담금(법 제73조제1항)

◇ 퇴직수당부담금이란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전액 사용자가 부담)

01 부담회계(영 제68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
- 국가 일반회계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납부,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연금부담금과 동일)

02 퇴직수당부담금의 예산의 편성(영 제68조제1항 및 제2항)

- 공단은 보수예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통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

【 퇴직수당부담금 및 개산비용 부담률 산정방법(예시) 】

구 분	산 출 방 법
① 전체기관 퇴직수당 지급액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 : 최근(3년) 평균 퇴직인원 × 최근년도 1인당 평균단가 • 일반 : 최근(3년) 평균 퇴직인원 × 최근년도 1인당 평균단가 • 정년 : 예산편성 해당연도의 정년퇴직자 퇴직수당액 × 보수인상률(예산편성 해당연도)
② 기관별 점유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최근 3년간 퇴직수당 평균액 ÷ 전체기관 최근 3년간 퇴직수당 평균액 = 기관 점유비
③ 기관별 부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퇴직수당지급액 × ②기관 점유비
④ 기관별 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기관 부담금액 ÷ 기관 추정보수예산액

※ 부담기관별 추정보수예산 산정

국가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다음 연도 국가공무원 보수예산 산정
지방자치단체	• 전년도 당초보수예산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산정

03 퇴직수당부담금 분기 고지금액 산정

해당분기 소요예산액 산출	① 연간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에 대한 분기 고지비율 적용금액 - 당초보수예산 × 부담률 × 분기고지비율(1·3분기 35%, 2·4분기 15%) ② 당분기 정년퇴직자 퇴직수당 지급 예정액
분기부담액	①, ② 금액 중 많은 금액 (전분기 과납금액이 ①②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이 없음)

※ 퇴직수당부담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인사혁신처 '18.9.21.시행)

현 행	변 경(단서조항 추가)
· 정년퇴직자 지급 예정액과 예산에 의한 분기부담액 중 큰 금액으로 고지	·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으로 고지하여 과납 또는 미납이 예상되는 경우 실 소요액을 재 추정한 금액으로 고지할 수 있음

04 퇴직수당부담금의 납부시기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납부 규정 준용

05 퇴직수당부담금의 정산(법 제73조제2항)

- 해당분기의 퇴직수당부담금의 납부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
- 당해 회계연도의 납부금액이 퇴직 수당 실지급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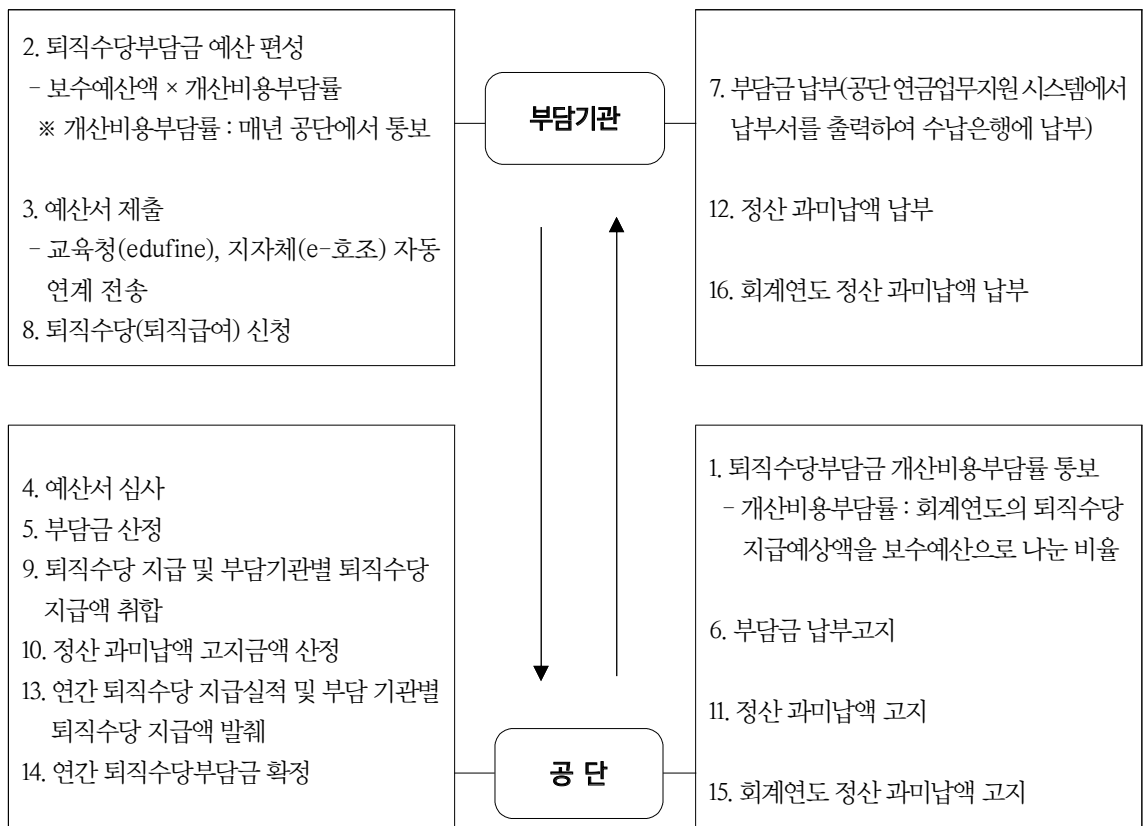
《해당연도 기관별 퇴직수당부담금 정산방법》

- 퇴직수당 실지급액에서 부담금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 (퇴직수당 실 지급액 - (부담금 납입액 ± 전년도 과미납 이월액) = 정산 금액)

06 납입지연시의 이자 가산 등(법 제73조제2항, 영 제68조제4항)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 내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회계연도의 납부금액이 퇴직수당 실지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 이자율 :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 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
※ 이자 계산방법 및 이자율 적용은 연금부담금과 동일

07 업무처리 절차



3 재해보상부담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

-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하였을 때와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

01 부담회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 그 밖의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 2005. 1. 1. 철도청 공사화로 인한 철도사업 특별회계 폐지(인사혁신처 일반회계로 통합)

02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제3항)

- 재해보상부담금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관 회계별 해당 연도 총 급여 소요예상액을 소관 회계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을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
 ※ 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방법》

- 회계별 재해보상부담금 부담액 : 회계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 총액 × 부담률
- 부담률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
 : 회계별 해당 연도 총 급여 소요예상액 ÷ 회계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 총액
- 회계별 해당 연도 총 급여 소요예상액 산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당해연도 급여 지급예상액 : 전년도 급여 지급실적에 공무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의료수가인상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
 - ② 전전년도 재해보상부담금 정산액 : 전전년도 급여가 부담금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한 금액
 - ③ 요양급여비용 지급 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 ④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 ⑤ 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 연도별 부담률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사혁신처	0.401%	0.392%	0.465%	0.463%	0.391%
정보통신	0.585%	0.582%	0.628%	0.750%	0.791%
지방자치	0.139%	0.170%	0.192%	0.191%	0.166%
지방교육	0.067%	0.069%	0.080%	0.066%	0.064%

03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 연금부담금 등 납부 규정 준용

- 납부시기 : 연간 총 부담금을 4기로 나누어 납부(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담금은 2002년부터 공단에 납부
- 납 부 액 :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재해보상부담금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납부방법, 과·미납시의 처리 및 교부세 등에서 징수 : 연금부담금과 동일

04 재해보상부담금의 정산 : 연금부담금 등 납부 규정 준용

- 부담금의 산정은 매 기마다 그 초일의 보수예산(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확정 또는 예비비의 사용으로 보수예산이 증감된 때에는 다음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정산하여 납부
- 보수예산 증감이 아닌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도 다음 기의 부담금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 납부
- 또한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말(회계연도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납부

05 납부지연시의 이자 가산 등 : 연금부담금 등 납부 규정 준용

-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 이자율 :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 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이자를 가산)
※ 이자 계산방법 : 미납원금 × 이자율 × 미납일수 / 365
※ 연도별 이자율 : 2019년 2.55%, 2020년 2.0%, 2021년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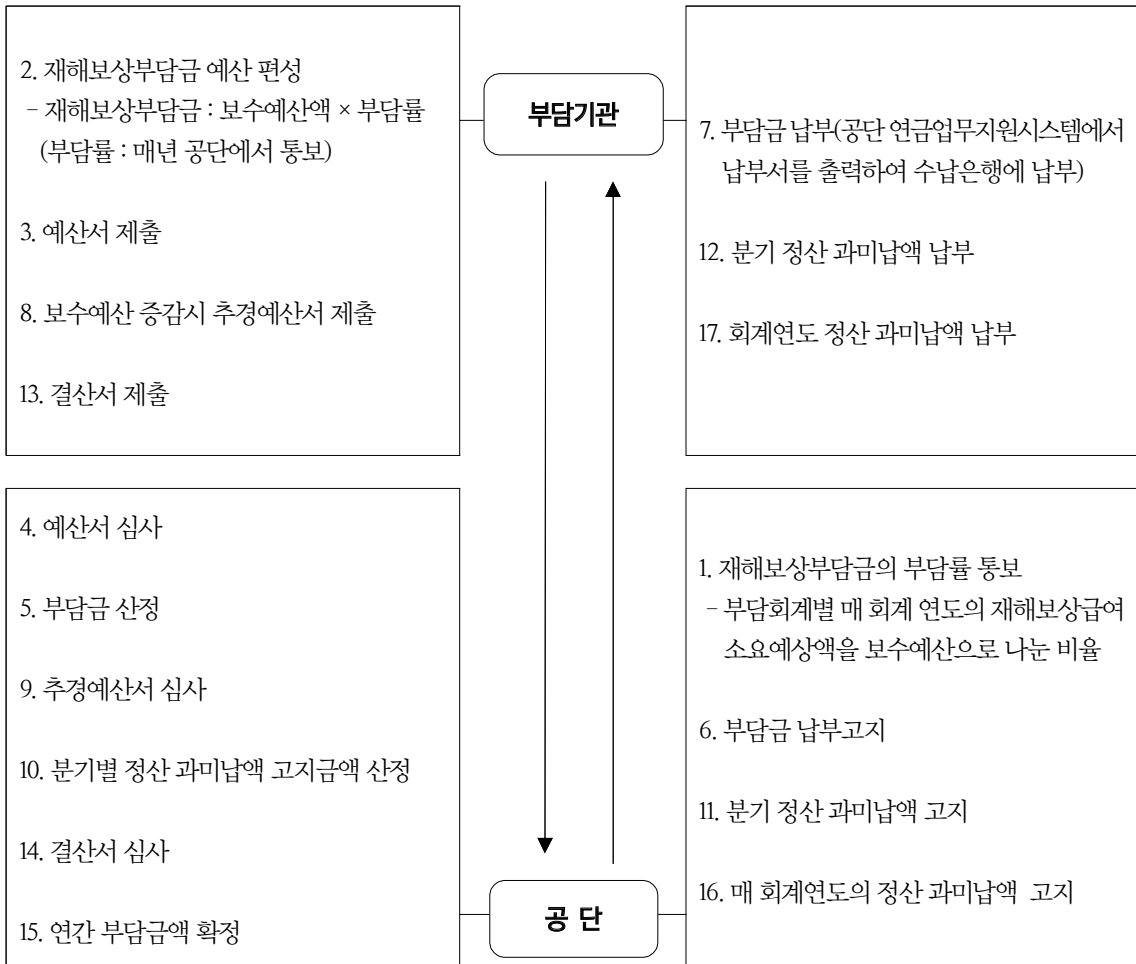
06

잉여금 등의 처리(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

잉여금 발생	차차년도 부담금 산정시 반영하여 부담률 인하조정
부족금 발생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고, 차차년도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여 부담률 인상 조정

07

업무처리 절차



4 공무원연금법 특례가입자의 부담금 징수

01 징수근거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및 업무처리 지침
- 국가철도공단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및 업무처리 지침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부칙 제7조 및 업무처리 지침
- 인천대학교 :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및 업무처리 지침

02 적용대상 : 연계적용을 받는 특례가입자

대상 기관	시행일	적용 기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005.1월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까지
도로교통공단	2011.1월	
인천대학교	2013.2월	특례가입 시점부터 20년간

03 적용부담금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 연금부담금, 보전금
- 인천대학교 :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04 부담금액

구 분	부담금액
연금부담금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소급통산, 사병기간, 휴직기간)
보전금	•연금부담금 총액 ÷ 연금부담률 = 보수예산 •보수예산 × 보전율 = 부담액
퇴직수당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액(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
재해보상부담금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적용

3. 부담금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사용매뉴얼

1 업무별 시스템 사용내용

단위업무		세부업무명	업무내용
부담금 관리	고지 및 정산 관리	① 납부서 출력	•매분기 부담금별 납부서 출력
		② 정산내역표 출력	•부담금별 정산내역표 출력
		③ 퇴직수당 지급실적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보수예산 관리	①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보수예산 세부산출내역 조회
		②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보수예산 과별산출금액 조회
		③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연간 부담액 및 추정금액 조회
	부담물 관리	① 연도별 부담물 조회	•연도별 부담금 부담물 조회
	정년예정자	① 정년예정자 조회	•정년예정자 퇴직수당 지급액 조회

2 고지 및 정산관리

01 납부서 출력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고지 및 정산 관리 → 납부서 출력



연금업무지원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정수관리

급여관리

융자사업

임대주택

서식/매뉴얼

통계정보요청

연금교육

나의매뉴/전체매뉴

원격지원

로그아웃

16:57 초

로그인인정

퇴직급여 청구 (기관전제)

건

퇴직급여보완 미확인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

기여금납부 총로연내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

홈페이지

재해보상

교육영상

▶ 납부서 출력

▶ 관련 동영상

▶ 피연인내

▶ 도움말

🔍 즐겨찾기

🔒 비밀번호 잠금

• 연도

2021

• 분기

1분기

• 부담금구분

전제

기관코드

🔍 조회

🖨 출력

📄 저장

≡ 열 추가

≡ 열 삭제

▶ 부담금 납부예정현황

	연도	분기	기관코드	기관명	부담금구분	고지금액(A)	납부금액(B)	미납금액(A-B)	납부예정일자	납부예정금액(C)
<input type="checkbox"/>	2021	1분기	304430		연금부담금	47,938,382,100		47,938,382,100	2021/01/31	47,938,382,100
<input type="checkbox"/>	2021	1분기	304430		보전금	16,384,273,850		16,384,273,850	2021/01/31	16,384,273,850
<input type="checkbox"/>	2021	1분기	304430		퇴직수당부담금	30,846,388,030		30,846,388,030	2021/01/31	30,846,388,030
<input type="checkbox"/>	2021	1분기	304430		재해보상부담금	340,895,100		340,895,100	2021/01/31	340,895,100

☞ 부담금별 납부예정일자, 금액 확인(수정가능) 후 저장 ➡ 체크박스 체크 ➡ 출력

☞ 추가납부가 필요할 경우, 행추가 하여 납부금액 분할 입력하여 출력 가능

【 부담금 납부방법 】

<p>1. 기관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p> <p>- 국민, 농협, 우리, 하나</p> <p>2. 은행창구 방문 납부 (5개은행)</p> <p>· 국 민: 0153063 거래(수납화면)</p> <p>· 기 업: 001-000230-01-020</p> <p>· 농 협: 화면 14번 업무구분 5201</p> <p>· 우체국: 온라인 4301 거래</p> <p>· 신 한: 통합단말 수납화면 7225</p> <p>※ 자금코드 입력에 유의</p> <p>- 연금부담금 : 02</p> <p>- 보 전 금 : 21</p> <p>- 퇴직수당부담금 : 06</p> <p>- 재해보상부담금 : 04</p>	<p>3. CMS거래 은행(8개 은행)</p> <p>- 광주, 부산, 전북, 대구, 하나, 경남, 우리, 제주</p> <p>※ CMS 코드(8자리) = 연금 부담금(02) + 기관코드(6자리) 보 전 금(21) + 기관코드(6자리) 퇴직수당부담금(06) + 기관코드(6자리) 재해보상부담금(04) + 기관코드(6자리)</p> <p>※ 부담금별 코드 구분하여 입력</p> <p>※ 예금주 확인요망 “공무원연금공단”</p> <p>· 광주: 210-107-330270</p> <p>· 부산: 103-01-004917-3</p> <p>· 전북: 401-13-0336412</p> <p>· 대구: 243-12-010408</p> <p>· 하나: 81-910006-21505</p> <p>· 경남: 572-07-0037029</p> <p>· 우리: 101-05-023540</p> <p>· 제주: 49-01-020294</p>
---	---

※ 납부서 출력 후 부담금 납입 시 주의사항

- 가상계좌 이외의 방법으로 입금 시 각 항목별 코드 확인
☞ 연금부담금(02), 보전금(21), 퇴직수당부담금(06), 재해보상부담금(04)
- 각 부담금 별로 입금
☞ 각 코드별 혹은 각 부담금 별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하나의 코드에 다 넣는 경우 등) 미입금 처리되어, 해당 부담금은 미납으로 관리되어 이자가 발생될 수 있음
(착오처리 예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의 납부서상 계좌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부담금 납부계좌 또는 02코드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 부담금 납부서(각 부담금별로 출력) 】

연금부담금 납부서 (02)				연금부담금 납부서 (02)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명				기관명														
2021년도 1분기 연금부담금				2021년도 1분기 연금부담금														
고지액	전 분 기	0		고지액	전 분 기	0												
	당 분 기	2,505,848,800			당 분 기	2,505,848,800												
	계	2,505,848,800				계	2,505,848,800											
납부액	2,505,848,800 원			납부액	2,505,848,800 원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2021년 01월 31일				위 금액을 납부합니다 2021년 01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납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납인														
< 기관입금전용계좌 >				< 기관입금전용계좌 >														
국민은행		8255-90-12-		국민은행		8255-90-12-												
농협은행		790-0636-8786-		농협은행		790-0636-8786-												
우리은행		023-7555-5461-		우리은행		023-7555-5461-												
하나은행		175-926081-		하나은행		175-926081-												
제주은행		4990-1000-		제주은행		4990-1000-												
[수 납 은 행 보 관 용]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기관보관용]														
연금부담금 납부방법 안내																		
<input type="checkbox"/> 부담금 납부방법 - 기관입금전용계좌, 은행 방문, CMS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창구방문 납부은행(자금코드 02)														
1. 기관입금전용계좌 납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납부서에 기재된 기관입금전용계좌로 입금처리 ○ 예금주: 기관명 ※ 타행가능: 타행입금 처리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국 민 : 0153063 거래(수납화면) 기 업 : 001-000230-01-020 농 협 : 화면 14번 업무구분 5201 우 체 국 : 온라인 4301 거래 신 한 : 통합단말 수납화면 7225														
2. 은행창구 방문 납부(57) - 국민, 기업, 농협, 우체국, 신한 ※ 타행입금 불가 ※ 은행창구 납부는 당행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CMS거래 은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광주 210-107-330270</td> <td rowspan="2">주1) CMS 코드(8자리) 02+기관코드(6자리)</td> </tr> <tr> <td>부산 103-01-004917-3</td> </tr> <tr> <td>전북 401-13-0336412</td> <td rowspan="5">주2) 내역별 금액입력요망 주3) 예금주 확인요망 "공무원연금공단"</td> </tr> <tr> <td>대구 243-12-010408</td> </tr> <tr> <td>하나 581-910006-21505</td> </tr> <tr> <td>경남 572-07-0037029</td> </tr> <tr> <td>제주 49-01-020294</td> </tr> <tr> <td>우리 101-05-023540</td> <td></td> </tr> </table>				광주 210-107-330270	주1) CMS 코드(8자리) 02+기관코드(6자리)	부산 103-01-004917-3	전북 401-13-0336412	주2) 내역별 금액입력요망 주3) 예금주 확인요망 "공무원연금공단"	대구 243-12-010408	하나 581-910006-21505	경남 572-07-0037029	제주 49-01-020294	우리 101-05-023540	
광주 210-107-330270	주1) CMS 코드(8자리) 02+기관코드(6자리)																	
부산 103-01-004917-3																		
전북 401-13-0336412	주2) 내역별 금액입력요망 주3) 예금주 확인요망 "공무원연금공단"																	
대구 243-12-010408																		
하나 581-910006-21505																		
경남 572-07-0037029																		
제주 49-01-020294																		
우리 101-05-023540																		
3. CMS거래 은행(77) - 광주, 부산, 전북, 대구, 하나, 경남, 제주 ※ 타행입금 불가 ※ CMS 납부방법 CMS코드(8자리): 02 + 기관코드(6자리)				<input type="checkbox"/> 납부문의(☎): 064) 802-2273, 2287, 2286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02 정산내역표 출력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고지 및 정산 관리 → 정산내역표 → (출력)

영수증! 연금업무지원 징수관리 급여관리 융자사업 재해보상/부조급여 서식메뉴얼 통계정보요청 연금교육 나의메뉴/전체메뉴

검색지점 1752 초 로그아웃 로그인

회직급여정구 (기금전제) 2 건 회직급여보은 미확인 1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

출력하기

정산표 출력

연도 2018 분기 4분기 부담금구분 전체 출력구분 기관 회계구분 기관코드

출력

☞ 부담금별 고지금액 및 수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2017년도 연금부담금 정산내역표

기관코드

기관명

회계명

고지(정산)일

2017.10.01

1. 연금부담금 정산(고지) 내역

(단위: 원)

분기	구분	일자	② 분기부담금	전년도과미납	전년도미지	계	전분기과미납	전분기미지	정산고지액	수납금액	과미납액
2017.1	분기고지	01.10	1,018,825,550	0	0	1,018,825,550	0	0	1,018,825,550	1,006,382,800	▲ 12,433,750
	수납정산	01.20		0	0		0	0			
	분기정산	03.31	1,018,825,550	0	0	1,018,825,550	0	0	1,018,825,550	1,006,382,800	▲ 12,433,750
2017.2	분기고지	04.11	436,638,950	0	0	436,638,950	▲ 12,433,750	0	448,073,700		0
	수납정산	04.24		0	0		0	0		448,073,700	0
	분기정산	06.30	436,638,950	0	0	436,638,950	▲ 12,433,750	0	448,073,700	448,073,700	0
2017.3	분기고지	07.11	1,018,825,550	0	0	1,018,825,550	0	0	1,018,825,550		0
	수납정산	07.17		0	0		0	0		1,018,825,550	0
	분기정산	09.30	1,018,825,550	0	0	1,018,825,550	0	0	1,018,825,550	1,018,825,550	0
2017.4	전년도과미납	10.16		▲ 291,000	▲ 270	291,270	0	0			▲ 291,270
	예산변동	07.24	90,907,000	0	0	90,907,000	0	0			0
	분기고지	10.16	436,638,950	0	0	527,838,220	0	0	527,838,220		0
	수납정산	10.27		0	0		0	0		527,838,220	0
	분기정산	12.31	527,546,950	▲ 291,000	▲ 270	527,838,220	0	0	527,838,220	527,838,220	0
	연도정산	12.31	3,008,874,000	▲ 291,270	0	3,010,165,270	0	0	3,010,165,270	3,002,131,270	▲ 8,034,000

2. 보수예산 변동내역

구분	당초예산	(1)회 수정	(2)회 수정	(3)회 수정	(4)회 수정	(5)회 수정	결산	계	부담률(%)
예산확정일	2017-02-21	2017-07-24	2018-07-30	2018-07-30			2018-07-31		
보수예산액	35,254,937,000	1,101,905,000	96,950,000	420,000			0	36,453,322,000	8.250 %
전제	2,910,933,000	90,907,000	7,999,000	35,000			0	3,009,874,000	

※ 납부지연시의 미지기간 :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간(4/4분기의 경우 연말)까지 정산(회계연도)은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년도보다 1월1일 현재 전액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미지 기간

☞ ① 분기별(일자별) 생성되는 내용설명

• 분기고지	분기에 고지해야 하는 금액 반영
• 수납정산	부담기관에서 입금하는 일자별 수납액 반영
• 분기정산	고지금액에 대한 수납처리 정산으로 과·미납액 및 이자 반영

• 전년도과미납	전년도 결산자료를 심사하여 반영한 과·미납 및 이자 반영
• 예산변동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결과 반영
• 연도결산	해당연도 결산자료 반영(결산확정시점은 익년도 7~8월경)

☞ ② 분기별 생성되는 금액 내용

• 분기부담금	분기별 부담금액(1·3분기 : 35%, 2·4분기 : 15%) 반영
• 전년도과미납 및 이자	전년도과미납액과 과미납액의 이자금액 반영
• 계	분기부담금 ± 전년도과미납, 전년도이자 반영
• 전분기과미납 및 이자	전분기과미납액과 과미납액의 이자금액 반영
• 정산고지액	분기부담금에 전년도·전분기 과미납액 및 이자 금액 반영
• 수납금액	부담금 입금액 반영
• 과미납액	정산고지액과 수납금액의 정산차액 반영

☞ ③ 보수예산 변동내역

• 예산확정일	보수예산 심사 확정일 반영
• 보수예산액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 보수예산 심사확정 금액 반영
• 전체	부담금을 반영(보수예산×부담률)
• 당초예산	당초 세출예산서 심사확정 금액 반영
• (1)~(5)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심사확정 금액 반영
• 결산	세출예산의 결산 심사확정 금액 반영
• 계	연간 보수예산 심사확정액과 부담금액 반영

2018년도 퇴직수당부담금 정산내역표

기관코드	기관명		회계명		고지(정산)일		2018.10.01				
1. 퇴직수당부담금 정산(고지) 내역											
분기	구분	일자	분기부담금	전년도과미납	전년도이자	계	전분기과미납	전분기이자	정산고지액	수납금액	과미납액
2018.1	전년도과미납	01.11		▲ 221,255,250	0	221,255,250	0	0			▲ 221,255,250
	분기고지	01.11	501,412,100	0	0	722,667,350	0	0	722,667,350		0
	수납결산	01.17					0	0		722,667,350	0
	분기결산	03.31	300,481,760	▲ 221,255,250	0	530,747,010	0	0	530,747,010	722,667,350	191,820,340
2018.2	분기고지	04.11	223,780,650	0	0	223,780,650	191,820,340	0	31,860,310		0
	수납결산	04.30		0	0		0	0		31,860,310	0
	분기결산	06.30	322,770,480	0	0	322,770,480	191,820,340	0	130,850,150	31,860,310	▲ 99,009,040
2018.3	분기고지	07.11	522,154,090	0	0	522,154,090	▲ 99,009,040	0	621,144,090		0
	수납결산	07.25		0	0		0	0		621,144,090	0
	분기결산	09.30	417,911,240	0	0	417,911,240	▲ 99,009,040	0	516,901,000	621,144,090	104,243,610

② 보수예산 및 부담내역

보수예산	퇴직수당 부담비율(%)	퇴직수당부담금 산정액	확정 부담금
38,198,839,000	3.9279	1,500,412,000	

※ 납부지연시의 이자가산 : 미납된 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4/4분기)의 경우는 연말(까지) 정산(퇴직수당은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 하되,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연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액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이자 가산

☞ ① 과미납액 : 퇴직수당부담금은 분기정산으로 매분기 과미납액 발생

☞ ② 보수예산 및 부담내역 : 보수예산 × 퇴직수당 부담비율(%) = 퇴직수당부담금산정액

☞ (회계연도종료) 당해연도 퇴직수당 지급 확정액 = 확정부담금

03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고지 및 정산 관리 →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 ① 지급실적 조회 ② 연도로 확인하고 싶은 기간설정 후 조회

☞ 퇴직수당 지급변동에 의해 실시간 변동금액이 조회됨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고지 및 정산 관리 → 퇴직수당 지급실적 **확정** 조회

☞ ① 지급실적 확정조회 ② 분기별로 ③ 기관별 또는 개인별 조회

● 퇴직수당 지급실적 확정조회 → 기관별

● 퇴직수당 지급실적 확정조회 → 기관별

연금업무지원

정수관리

급여관리

유자사업

재해보상/부조급여

임대주택

서식/매뉴얼

통계정보요청

연금교육

나의메뉴/전체메뉴

원격지원

로그아웃

17:56 초

로그인연장

퇴직급여청구 (기관전체)

1 건

퇴직급여보완 미확인

0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

급여급납부 종료안내

★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

통과여지 바로가기

●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화면인쇄

도움말

즐거찾기

화면닫기

지급실적 조회

지급실적 확정조회

연도

2018

분기

3분기

조회구분

기관

1 구분

2 기관별

3 개인별

지부

회계구분

기관코드

조회

엑셀

1 퇴직수당 지급실적 기관별 내역

NO	연도	분기	기관코드	기관명	지급액	확정일자	확정사원번호
1	2018	3			299,097,260	2018/10/12	
					2 지급액	299,097,260	

총 1건

1

20건씩 보기

지급실적 확정조회 ① 기관별 ② 지급액 확인

④ 지급실적 확정금액이 퇴직수당부담금 분기정산시 분기부담금 금액임.

- 퇴직수당 지급실적 확정조회 → 개인별

● 퇴직수당 지급실적 확정조회 → 개인별

● 연금업무지침

나의메뉴/전체메뉴

접수관리급여관리유자사업재해보상/부조급여임대주택사식/매뉴얼통계정보요청연금교육

원클릭가입
17:53 초 로그인연장

퇴직급여정구
(기관원제)
1 건

퇴직급여보환
미확인
0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

홈페이지
바꾸시기

◎ 퇴직수당 지급실적 조회

화면인쇄 도움말 찾아보기 회원탈퇴

지급실적 조회

지급실적 확정조회

* 연도 2018

* 조회구분 기관

* 지부

* 분기 3분기

* 구분 ☐ 기관별

☒ 개인별

* 회계구분

* 기관코드

조회
엑셀

❶ 퇴직수당 지급실적 개인별 내역

기	회급 기관코드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여금기호	수당기간	수당액	확적일자	지급일자	회적사유
1			위	.*****	SA100	04년 01월	2,198,630		2018/09/20	일반회적
2			차	.*****	2G624Z	33년 00월	78,021,540		2018/07/09	정년회적
3			김	.*****	2G622Z	32년 10월	74,723,960		2018/07/02	정년회적
4				.*****	2G621Z	31년 01월	71,015,820		2018/07/02	정년회적
5			엄	.*****	2G730Z	33년 00월	72,285,890		2018/07/09	정년회적
6			김	.*****	2B606	03년 04월	851,420		2018/07/19	일반회적

<

❷ 수당액 합계

299,097,260

>

총 6건
[<] [1] [>] [▶]
20건씩 보기 ▼

☞ 지급실적 확정조회 ① 개인별로 ② 지급액 확인

☞ 개인별 지급은 ③ 퇴직사유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3 보수 예산관리

01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확인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보수예산 관리 →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 (출력)

● 연금업무지침 징수관리 급여관리 용자사업 재해보상/부조급여 임대주택 사서/매뉴얼 통계정보요청 연금교육 나의메뉴/전체메뉴

17:21 초 로그인 1 건 퇴직급여보관 미확인 0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소금기여금 대상자 조회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총액조회 매출가

◎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 연도: 2018 * 기관코드: [검색]

1 예산구분: 당초보수예산
2 회계구분: 전체

[출력]

ReportViewer - Internet Explorer
https://www.geps.or.kr/pns/webquare/gepsPopup.jsp?page=/pns/psul/page/mainPopup&xmlPath=/pns/psul/page/comm/ReportVi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KR]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당초)

기관코드: □ 기관명: □ 예산구분: 당초보수예산 (단위: 원)

구분	세항	세출목	당초산출내역	원예산액	수정산출내역	수정예산액	증감액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기보급 10101	○ 명예퇴직수당 50,000,000원*4명	200,000,000		0	200,000,000
		성과상여금 30302	○ 성과상여금	0		0	
		성과상여금 30302	-6월 이하(482명) 1,516,713,000원	1,516,713,000		1,516,713,000	
		성과상여금 30302	-정원경감(25명) 72,737,000	72,737,000		72,737,000	
세부별 소계	인력운영비		1,789,450,000		1,589,450,000	200,000,000	
세목별 소계	행정운영경비(행정지원과)		1,789,450,000		1,589,450,000	200,000,000	
국민연금 유정 지방공동경비부 운영	국민연금 유정 지방공동경비부 운영	국민연금 유정 지방공동경비부 운영	○ 특수선수단 인건비 279,100,000	279,100,000		0	279,100,000

☞ 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예산 세부산출내역을 출력하여 확인

☞ ① 예산구분 : 당초, 추정, 결산보수예산 구분

☞ ②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 ③ 보수예산 심사내역서 세부내용

• 세항	세출 '목'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세출예산내역
• 세출목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항목
• 당초산출내역	기관에서 예산편성의 세부내역
• 원예산액	기관에서 예산편성의 확정 금액
• 수정산출내역	기관 예산편성내역을 부담금 보수예산으로 심사사항
• 수정예산액	부담금 보수예산 심사금액 반영
• 증감액	원예산액에서 수정예산액으로 증감액 반영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확인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보수예산관리 →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 (출력)

연공임무지침 | **정수관리** | **급여관리** | **유사사업** | **재해보상/부조급여** | **임대주택** | **서식·매뉴얼** | **통계정보요청** | **연금교육**

나의메뉴/전체메뉴

원격지원 | **로그아웃**

1727 초 | 로그인완료

**퇴직금여청구
(기관연제)**
1 건

**퇴직금여보한
미확인**
0 건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

**거액급납부
통류내내**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

**소급가액금
대상자 조회**
★

**환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

**통합조회
비밀하기**

③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① 예산구분 달초보수예산 * 기관코드 [검색]

[출력] [인쇄]

ReportViewer - Internet Explorer

https://www.geps.or.kr/pns/websquare/gepsPopup.jsp?page=/pns/wsui/page/mainPopup&xmPath=/pns/wsui/page/comm/Rep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KR]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출력일시 : 2018-11-07 09:47:06 (단위 : 원)

PAGE : 1 / 2

기관코드	세항명	기관명	예산구분	당초보수예산
②	세항명	보수 예산 내역		
	경목명 (세부명)	③ 보수 (10101)	기타적보수 (10102)	직급보수비 (20402)
				성과장여금 (30302)
				약단차월 운동부등보상금 (30111)
				합 계
	일반회계	0	0	0
	행정운영경비(행정지원과)	0	0	1,589,450
	일반운영비	0	0	0
	일반회계	0	0	0
	관민체육 육성	0	0	0
	지방운동경기투 운영	0	0	0
	일반회계	0	0	0
	관민체육 육성	0	0	0
	지방운동경기투 운영 지원	0	0	0
	일반회계	0	360,878	0
	행정운영경비(보건사업과)	0	0	0
	일반운영비	0	0	0
	일반회계	0	0	0
	합계	0	0	1,589,450
	합계	0	360,878	1,950,328

☞ 세목별 보수예산 총괄내역 확인

 ① 예산구분 : 당초, 추경, 결산보수예산 구분

☞ ② ③ 보수예산 총괄내역서

• 세항별(정책명)	세출 ‘목’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세출예산내역
• 보수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의 세항별 합계
• 기타직보수	기타직공무원 인건비의 세항별 합계
• 직급보조비	공무원의 직책 수행비의 세항별 합계
• 성과상여금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세항별 합계
• 악단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악단단원 및 운동부 등의 인건비의 세항별 합계
• 합계	보수예산내역의 세항별 합계

03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확인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보수예산관리 →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 (조회)

연공이! ● 연금업무지원 징수관리 급여관리 응자사업 재해보상/부조급여 서식매뉴얼 통계정보요청 연금교육 나의메뉴/전체메뉴

환적지점 17:51 초 로그인연장 2 권 1 권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 조회연도 2018 * 기관코드

Q 조회 출력

●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추정예산	당초예산	예산변동분					결산	연간액
			1차	2차	3차	4차	5차		
① 일반회계	36,472,559	37,032,064	217,440	0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322,235	0	0	0	0	0	0	0
수정개선통발회계	0	627,100	0	0	0	0	0	0	0
② 보수예산 계	36,472,559	37,981,399	217,440	0	0	0	0	0	0
연금부담금(8.5%)	3,100,168	3,228,419	18,482	0	0	0	0	0	0
보전금(4.091%)	1,492,092	1,553,819	8,895	0	0	0	0	0	0
퇴직수당부담금(3.9279%)	1,432,606	1,491,871	8,541	0	0	0	0	0	0
재해보상부담금(0.17%)	62,003	64,568	370	0	0	0	0	0	0
③ 부담금 계	6,086,869	6,338,677	36,288	0	0	0	0	0	0

연간 부담금 부담액과 예산 변동내역 확인

① 보수예산 변동내역서 세부내용

• 추정예산	전년도당초예산 ×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금액
• 당초예산	당초 세출예산 심사확정 반영
• 예산변동분	추가경정, 결산 세출예산 심사확정 반영
• 연간액	당초예산 + 예산변동분의 합계

② 보수예산 계 : 구분(회계별) 보수예산의 합계액 반영

③ 부담금 계 :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합계액 반영

4 부담률 관리

01 연도별 부담률 조회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부담률 관리 → 연도별 부담률 조회

1 연도설정 후 조회

✓ 추정보수예산

전년도당초보수예산 × 공무원보수인상율

※ 부담기관 예산 확정될 경우 당초보수예산으로 변경되어 고지

5 정년퇴직예정자

01 정년퇴직예정자 조회방법

- 징수관리 → 부담금관리 → 정년예정자 → 정년예정자 조회

1 분기별 2 예상수당액 확인

※ 정년퇴직예정자 예상수당액은 퇴직수당부담금 분기 고지금액 산정 시 사용됨.

제5장 급여관리

제1절 급여통칙	145
제2절 퇴직급여	161
제3절 유족급여	221
제4절 퇴직수당	228
제5절 급여의 제한	231
제6절 행정구제 제도	233
제7절 연금 및 퇴직과세제도	236
제8절 비공무상 장애급여	257





제1절 / 급여통칙

1. 급여의 종류

1 급여성격에 따라 구분

-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기타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을 지급
 - ※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한 재해보상급여, 재해 발생에 대한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

01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

- 퇴직급여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퇴직수당

02 비공무상 장애급여

- 비공무상 장애급여 : 비공무상 장애연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구분>

- ◇ 재해보상급여
 -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장애급여(장애연금, 장애일시금), 재해유족 급여(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청구시효 등에 따른 구분 : 급여 청구시효는 단기급여 3년, 장기급여 5년으로 구분

01 장기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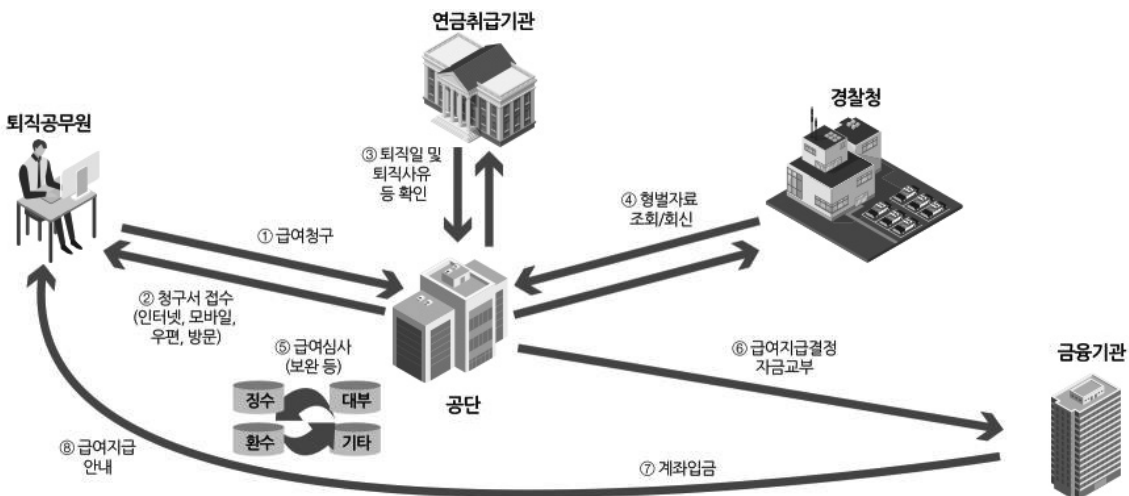
- 퇴직급여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비공무상 장애급여 : 비공무상 장애연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 퇴직수당
-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기급여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재해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02 단기급여(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는 없음)

-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단기급여
요양급여, 재할급여(재할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급여의 청구 및 지급

1 급여청구 및 지급절차(법 제29조, 영 제29조)



2 급여지급 : 퇴직일자 이후에 계좌 입금

3 급여지급기관(영 제29조제1항)

- 공단으로부터 급여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채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 급여수급자가 급여청구서에 본인이 급여수령을 원하는 급여 지급기관을 기재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당해 급여 지급기관에서 급여를 수령

〈급여지급기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중국공상은행, 산림조합, 농·수협의 전국 단위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국내 증권사 위탁계좌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4 퇴직급여의 사전청구

- 정년(명예)퇴직자의 경우 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교육직은 2개월 전)에 급여를 사전 청구 할 수 있음
단, 퇴직예정일 적용시점이 일반직은 6월, 12월이며, 교육직은 2월, 8월만 해당함
- 이 경우 퇴직발령장 대신 인사권자(소속기관장)가 확인한 명예퇴직예정증명원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자료를 첨부(정년퇴직자는 미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그 외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급여청구

3. 급여 산정기초인 기준소득월액

1 최종적용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산정되는 급여

01 대상급여

단기급여	사망조위금(본인사망)
장기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장애급여(장애연금에서 승계된 장애유족연금 및 비공무상 장애급여 포함),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재직 중 사망 시의 퇴직유족연금은 법 시행 이후('10. 1. 1.)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재난부조금,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은 전체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산정

02 급여 산정기초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적용기준 소득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법 제30조제1항)

※ 예시) 2021. 7. 5.에 퇴직 → 2021. 7월, 2021. 1. 1. 퇴직 → 2020.12월

-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된 경우의 퇴직급여산정 방법

- 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이 금액에 변동 후의 봉급월액에서 변동전의 봉급월액 차액의 봉급월액 증가한 월수를 비례 계산한 금액을 급여산정의 기초로 산정

【적용급여】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급여

- ②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변동 후의 봉급월액에서 변동 전의 봉급월액 차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의 기초로 한다.

【적용급여】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수당

〈퇴직급여(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 제외) 산정예시〉

'20. 1. 1.	'20. 7. 20	'20. 12. 31.
기준소득월액 3,500,000	승진 (6급 → 5급) 승진전·후 봉급월액 1,700,000 → 1,850,000	퇴직(퇴직일시금) [3,500,000+(150,000×6÷12)] →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3,575,000

⇒ 직급변동 당시 승진 전·후 직급의 2020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월액 기준

〈퇴직수당 산정예시〉

'20. 1. 1.	'20. 7. 20	'20. 12. 31.
기준소득월액 3,500,000	승진 (6급 → 5급) 승진전·후 봉급월액 1,700,000 → 1,850,000	퇴직(퇴직수당) [3,500,000+(1,850,000-1,700,000)] →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3,650,000

⇒ 직급변동 당시 승진 전·후 직급의 2020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월액 기준

※ 단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는 당해연도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에 의한 봉급월액 변동 차액을 반영하지 않음

◆ 계약직 공무원 월 봉급 상당액 인상률(종전 영 제3조의3의 제2호)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월봉급 상당액인상률	27.59%	11.65%	5.5%	5.50%	2.4%	27.61%	1.525%	1.80%	0.0%

◆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연봉월액 중 월 봉급월액 상당액 비율(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4조)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정무직· 1~4급상당 일반계약직		55%	55%	53%	53%	66%	66%	66%	66%
전문계약직		60%	58%	58%	58%	70%	70%	70%	70%

2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산정되는 급여

01 대상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의 퇴직유족연금

02 급여 산정기초

-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까지 적용기간별(매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연령에 도달하는 달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환산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법 제3조제1항제5호, 영 제10조)
-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연금지급률 1.0%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를 적용
 - 1% 미만의 지급률과 30년 초과 시에는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 2010년 이후 기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행률을 곱하여 조정(영 부칙 제10조제10항, 제29181호, 2018. 9. 18.)
-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영 제5조제4항)
- 기준소득월액 등 현재가치 환산 시 재임용 전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률 별도 적용(영 제10조, 제31537호, 2021. 3. 16.)

(1)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법

예) 2020년 12월말에 퇴직한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2009년 이전 5년, 2010년~2015년 6년, 2016년 이후 기간 5년)

①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연 도	2010. 1.~2010. 4.	2010. 5.~2011. 4.	2011. 5.~2012. 4.	2012. 5.~2013. 4.	2013. 5.~2014. 4.	2014. 5.~2015. 4.
직급·호봉	6급20호봉	6급21호봉	6급22호봉	6급23호봉	6급24호봉	5급23호봉
기준소득월액	2,650,000	2,700,000	2,800,000	2,900,000	3,000,000	3,200,000
공무원보수인상율	-	-	2%	3%	3%	3%
연 도	2015. 5.~2016. 4.	2016. 5.~2017. 4.	2017. 5.~2018. 4.	2018. 5.~2019. 4.	2019. 5.~2020. 4.	2020. 5.~2020.12.
직급·호봉	5급24호봉	5급25호봉	5급26호봉	5급27호봉	5급28호봉	5급29호봉
기준소득월액	3,300,000	3,400,000	3,550,000	3,700,000	3,800,000	3,900,000
공무원보수인상율	3%	3%	3%	3%	3%	3%

②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구 분	2010.1.~2010.4.	2010.5.~2011.4.	2011.5.~2012.4.	2012.5.~2013.4.	2013.5.~2014.4.	2014.5.~2015.4.	2015.5.~2016.4.	2016.5.~2017.4.	2017.5.~2018.4.	2018.5.~2019.4.	2019.5.~2020.4.	2020.5.~2020.12.
2010. 1.~2010. 4.	2,650,000	-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2010. 5.~2011. 4.	2,700,000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2011. 5.~2012. 4.	2,8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2012. 5.~2013. 4.	2,9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2013. 5.~2014. 4.	3,0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2014. 5.~2015. 4.	3,2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2015. 5.~2016. 4.	3,300,000							1.03	1.03	1.03	1.03	1.03
2016. 5.~2017. 4.	3,400,000								1.03	1.03	1.03	1.03
2017. 5.~2018. 4.	3,550,000									1.03	1.03	1.03
2018. 5.~2019. 4.	3,700,000										1.03	1.03
2019. 5.~2019.12.	3,800,000											1.03
2020. 1.~2020.12.	3,900,000											-

③ 기준소득월액 산정액 산출

구 분	현재가치 환산금액	월 수	합 계	비고
2010. 1.~2010. 4.	3,526,802	4	14,107,208	④ 평균기준소득월액 498,872,532÷132월 = 3,779,337원
2010. 5.~2011. 4.	3,593,345	12	43,120,140	
2011. 5.~2012. 4.	3,653,365	12	43,840,380	
2012. 5.~2013. 4.	3,673,633	12	44,083,596	
2013. 5.~2014. 4.	3,689,622	12	44,275,464	
2014. 5.~2015. 4.	3,820,967	12	45,851,604	⑤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적용 3,779,337×87.03% = 3,289,157원 (시행령 부칙 제10조)
2015. 5.~2016. 4.	3,825,604	12	45,907,248	
2016. 5.~2017. 4.	3,826,730	12	45,920,760	
2017. 5.~2018. 4.	3,879,181	12	46,550,172	
2018. 5.~2019. 4.	3,925,330	12	47,103,960	
2019. 5.~2019.12.	3,914,000	8	31,312,000	
2020. 1.~2020.12.	3,900,000	12	46,800,000	
합 계		132	498,872,532	
평균기준소득월액			3,779,337	

(2)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법

① 종전기간 ('09.12.31.) 보수월액

기간	보수월액	직급·호봉	공무원평균 보수인상율
2005. 1. ~ 2005.12.	1,350,000	6급15호봉	2.4%
2006. 1. ~ 2006.12.	1,400,000	6급16호봉	3.2%
2007. 1. ~ 2007.12.	1,470,000	6급17호봉	1.6%
2008. 1. ~ 2008.12.	1,550,000	6급18호봉	1.8%
2009. 1. ~ 2009.12.	1,600,000	6급19호봉	0.0%

② 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간	보수월액	현가화	현가보수월액	월수	평균보수월액
2007. 1. ~ 2007.12.	1,470,000	×1.018×1.0	1,496,460	12	17,957,520
2008. 1. ~ 2008.12.	1,550,000	×1.0	1,550,000	12	18,600,000
2009. 1. ~ 2009.12.	1,600,000		1,600,000	12	19,200,000
				36	55,757,520

– 3년평균보수월액 : 1,548,820원 (55,757,520 ÷ 36월)

③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적용 (부칙 영 제10조)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적용 (a)	<p>○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적용 : 2,205,585원</p> $1,548,820 \times \frac{5,390,000 \text{ (2020.12.31. 적용되는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3,785,000 \text{ (2008년 및 20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합한 금액의 평균금액)}}$
공무원보수 인상률 ('10.1.~'20.12.) (b)	<p>○ 공무원보수인상률('10.1.~'20.12.) : 2,061,275원</p> $1,548,820 \times 1.0 \times 1.02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times 1.03$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변동률(a)과 공무원보수인상률(b)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

03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급여산정 대상기간

- '10. 1. 1. 이후의 기준소득월액(법 제3조제1항제5호)
- '10. 1. 1. 이후에 재임용되어 합산기간 중 '10. 1. 1. 이후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 '10. 1월 이후 합산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하여 전기간을 평균한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법 시행 이후 합산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 다만, 2021. 3.16. 이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이하 '공백기간'이라 함)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영 제10조, 제31537호, 2021. 3. 16.)

※ 2021. 3.16. 시행령 개정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영 부칙 제3조, 제31537호 2021.3.16.)
 이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합산신청서를 시행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합산을 신청한 사람은 합산 신청일에 합산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21.3.16.)

2021. 3.16. 시행령 개정 전 합산승인기간에 대한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① 기본조건

- 2016. 5. 1. 임용되어 2021.10.31. 퇴직(5년 6월)
- 공무원경력 14년 6월(2000. 7. 1. ~ 2014.12.31.)을 합산
 - 종전기간(1기간) : 9년 6월(합산기간)
 - 이후기간(2·3기간) : 10년 6월(기본기간 5년 6월, 합산기간 5년)

② 2010년 이후 평균기준소득월액

<기본재직기간>

연 도	2016. 5. ~ 2017. 4.	2017. 5. ~ 2018. 4.	2018. 5. ~ 2019. 4.	2019. 5. ~ 2020. 4.	2020. 5. ~ 2021. 4.	2021. 5. ~ 2022. 4.
직급·호봉	교사 28	교사 29	교사 30	교사 31	교사 32	교사 33
기준소득월액	4,500,000	4,600,000	4,700,000	4,800,000	5,000,000	5,100,000
공무원보수인상률	3%	3%	3%	3%	3%	3%

<합산기간>

연 도	2010. 1. ~ 2010. 4.	2010. 5. ~ 2011. 4.	2011. 5. ~ 2012. 4.	2012. 5. ~ 2013. 4.	2013. 5. ~ 2014. 4.	2014. 5. ~ 2015. 4.
직급·호봉	8급 12호봉	7급 12호봉	7급 13호봉	7급 14호봉	7급 15호봉	7급 16호봉
기준소득월액	2,8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공무원보수인상률	0%	0%	2%	2%	3%	3%

※ 공무원보수인상률(예시) : 2016년(3%), 2017년(3%), 2018년(3%), 2019년(3%), 2020년(3%), 2021년(3%)

③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구분	기 간	기준 소득월액	'10. 1. '10. 4.	'10. 5. '11. 4.	'11. 5. '12. 4.	'12. 5. '13. 4.	'13. 5. '14. 4.	'14. 5. '15. 4.	'15. 5. '16. 4.	'16. 5. '17. 4.	'17. 5. '18. 4.	'18. 5. '19. 4.	'19. 5. '20. 4.	'20. 5. '21. 4.	'21. 5. '22. 4.
합 산 기 간	'10. 1.~'10. 4.	2,800,000	1.0	1.0	1.02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 5.~'11. 4.	3,100,000		1.0	1.02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1. 5.~'12. 4.	3,200,000				1.02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2. 5.~'13. 4.	3,3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3. 5.~'13.12.	3,4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4. 1.~'14.12.	3,500,000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기 본 기 간	'16. 5.~'17. 4.	4,500,000									1.03	1.03	1.03	1.03	1.03
	'17. 5.~'18. 4.	4,600,000										1.03	1.03	1.03	1.03
	'18. 5.~'19. 4.	4,700,000											1.03	1.03	1.03
	'19. 5.~'20. 4.	4,800,000												1.03	1.03
	'20. 5.~'20.12.	5,000,000													1.03
	'21. 1.~'21.10.	5,100,000													-

- 기준소득월액 산정액 산출(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 인상률로 현가)

구 분	기 간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환산액	적용월	현재가치 환산 합계
합산기간	'10. 1.~'10. 4.	3,800,960	4	15,203,840
	'10. 5.~'11. 4.	4,208,206	12	50,498,472
	'11. 5.~'12. 4.	4,258,779	12	51,105,348
	'12. 5.~'13. 4.	4,305,751	12	51,669,012
	'13. 5.~'13.12.	4,307,018	8	34,456,144
	'14. 1.~'14.12.	4,304,558	12	51,654,696
기본기간	'16. 5.~'17. 4.	5,216,733	12	62,600,796
	'17. 5.~'18. 4.	5,177,340	12	62,128,080
	'18. 5.~'19. 4.	5,135,816	12	61,629,792
	'19. 5.~'20. 4.	5,092,320	12	61,107,840
	'20. 5.~'20.12.	5,150,000	8	41,200,000
	'21. 1.~'21.10.	5,100,000	10	51,000,000
합 계			126	594,254,020

→ 평균기준소득월액 : 4,716,301 (594,254,020÷126)

- ④ 이행을 적용(영 제29181호, 2018. 9. 18. 부칙 제10조제10항)
- 종전기간(1기간) 9년 6월, 법 시행 이후기간(2·3기간) 10년 6월인 경우
 - 종전기간(1기간) 9년 이상~10년 미만, 이후기간(2·3기간) 10년 초과 11년 이하 : 89.79%
- ⑤ 2010년 이후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4,234,766원(4,716,301×89.79%)

2021. 3.16. 시행령 개정 이후 합산승인기간에 대한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영 제0조, 제31537호, 2021. 3. 16.)

< 적용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가치 환산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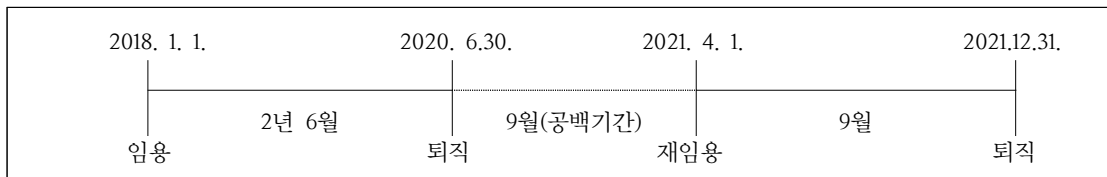
적용기간 시점(5월) 기준	해당 적용기간 현재가치 환산 방법
재직 중인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
재직 중이 아닌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예시

Ⅰ 공백기간 현재가치 환산 방법 사례 (공무원보수인상률)

1. 기본 조건

- 2021. 4. 1. 재임용, 2021.12.31. 퇴직 (9월)
- 합산기간 2018. 1. 1. ~ 2020.6.30.(2년 6월)



<기준소득 현재화 적용 요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수인상률	2.6%	1.8%	2.8%	0.9%
물가변동률	1.9%	1.5%	0.4%	0.5%

2.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시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현가화

구분	기 간	기준소득 월액(A)	'18. 1. ~ '18. 4.	'18. 5. ~ '19. 4.	'19. 5. ~ '20. 4.	'20. 5. ~ '21. 4. ①	'21. 5. ~ '21.12.	현가율 (B)
합산 기간	'18. 1.~'18. 4.	3,000,000	1,000	1,026	1,018	1,028	1,009	1.0834
	'18. 5.~'19. 4.	3,100,000		1,000	1,018	1,028	1,009	1.0559
	'19. 5.~'19.12.	3,200,000			1,000	1,028	1,009	1.0373
	'20. 1.~'20.06.	3,300,000				1,000	1,009	1.0090
기본 기간	'21. 4.~'21. 4.	4,000,000					1,009	1.0090
	'21. 5.~'21.12.	4,036,000					1,000	1.0000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①기간) 시점('20.5월)에 재직 중('20.6월 퇴직)이므로 ①기간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현가화

-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별 현가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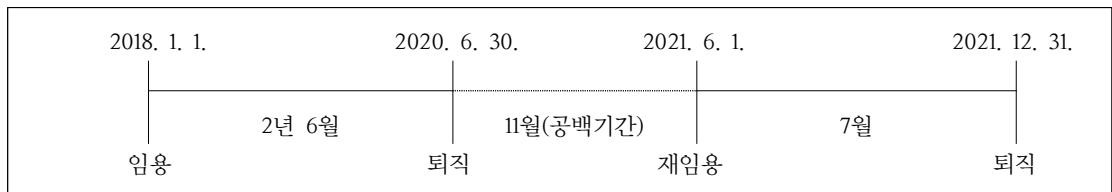
구분	기 간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액 (C=A×B)	적용월 (D)	현재가치 환산 (C×D)
합산 기간	'18. 1.~'18. 4.	3,250,130	4	13,000,520
	'18. 5.~'19. 4.	3,273,360	12	39,280,320
	'19. 5.~'19.12.	3,319,206	8	26,553,648
	'20. 1.~'20. 6.	3,329,700	6	19,978,200
기본 기간	'21. 4.~'21. 4.	4,036,000	1	4,036,000
	'21. 5.~'21.12.	4,036,000	8	32,288,000
합 계			39	135,136,688

- 현가 환산 합계를 적용월 합계로 나누어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출
(3,465,043 = 135,136,688 ÷ 39)

② 공백기간 현재가치 환산 방법 사례 (공무원보수인상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 기본 조건

- 2021. 6. 1. 재임용, 2021. 12. 31. 퇴직 (7월)
- 합산기간 2018. 1. 1. ~ 2020. 6. 30.(2년 6월)



<기준소득 현가화 적용 요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수인상률	2.6%	1.8%	2.8%	0.9%
물가변동률	1.9%	1.5%	0.4%	0.5%

2.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시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현가화

구분	기 간	기준소득 월액(A)	'18. 1. ~'18. 4.	'18. 5. ~'19. 4.	'19. 5. ~'20. 4.	'20. 5. ~'21. 4. ①	'21. 5. ~'21.12. ②	현가율 (B)
합산 기간	'18. 1.~'18. 4.	3,000,000	1,000	1,026	1,018	1,028	1,005	1,0791
	'18. 5.~'19. 4.	3,100,000		1,000	1,018	1,028	1,005	1,0517
	'19. 5.~'19.12.	3,200,000			1,000	1,028	1,005	1,0331
	'20. 1.~'20. 6.	3,300,000				1,000	1,005	1,0050
기본 기간	'21. 6.~'21.12.	4,000,000					1,000	1,0000

-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①기간) 시점('20.5월)에 재직 중이므로('20.6월 퇴직) ①기간에
보수인상률을,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위 표 ②기간) 시점('21.5월)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21.6월 재임용) ②기간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가화

-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별 현가율 적용

구분	기 간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액 (C=A×B)	적용월 (D)	현재가치 환산 (C×D)
합산 기간	'18. 1.~'18. 4.	3,237,245	4	12,948,980
	'18. 5.~'19. 4.	3,260,383	12	39,124,599
	'19. 5.~'19.12.	3,306,048	8	26,448,384
	'20. 1.~'20. 6.	3,316,500	6	19,899,000
기본 기간	'21. 6.~'21.12.	4,000,000	7	28,000,000
합 계			37	126,420,963

- 합계를 적용월 합계로 나누어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출
(3,416,783= 126,420,963 ÷ 37)

3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소득재분배

01 소득재분배(법 부칙 제13조제2항,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 퇴직前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곱하여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 2016년 이후 기간 매년 연금지급률 1.0%부분에 대해서 소득재분배를 반영하고, 1.0%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지급률은 소득재분배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재직기간 30년초과(30년 1월)시점부터는 소득재분배를 반영하지 않고,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구간별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 퇴직前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본인의 수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의 비율 (b)값 / (a)값 비율		적용 비율(%)
0.3 미만	(하위 소득자)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중위 소득자)	100
1.1 이상 1.2 미만	(상위 소득자)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02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 ① 퇴직 3년 전부터 전년도까지의 연도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매년 4월 25일까지 고시되는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말함)
- ②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퇴직 전년도까지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방법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연도 말	소비자물가변동율			현가금액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3년전	2년전	전년도		
5,100,000	2017.12.		1.015	1.004	5,197,206	5,246,028
5,220,000	2018.12.			1.004	5,240,880	
5,300,000	2019.12.				5,300,000	
합 계					15,738,086	

※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해당연도 말 통계청 발표 지수임.

공무원의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① 기본조건

- 2004. 7. 1. 임용되어 2020. 6.30.에 퇴직
-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a값) : 5,246,028
-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4,350,000
- 재직기간 : 종전기간(Ⅰ기간) 5년 6월, 이후기간(Ⅱ·Ⅲ기간) 9년 6월

②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균기준소득과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조정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a값) : 5,246,028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b값) : 4,350,000

평균기준 소득월액 (b)	÷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평균기준 소득월액(a)	=	(a)값 대비 (b)값 비율	⇨	적용비율 (%) ◎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d = b × c)
4,350,000		5,246,028		0.82		112.5	4,893,750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적용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181호, 2018. 9. 18. 부칙 제10조제10항 참조)
종전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이후기간 10년 초과 11년 이하에 해당하는 87.03%를 적용

4 연금지급률 인하

-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매년도별로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78%에서 2035년까지 1.7%로 인하
- 연금지급률 1.0%부분만 소득재분배를 반영, 나머지 지급률은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16년	1.878	'23년	1.76	'30년	1.72
'17년	1.856	'24년	1.75	'31년	1.716
'18년	1.834	25년	1.74	'32년	1.712
'19년	1.812	'26년	1.736	'33년	1.708
'20년	1.79	'27년	1.732	'34년	1.704
'21년	1.78	'28년	1.728	'35년~	1.7
'22년	1.77	'29년	1.724		

* 향후 5년간('20년까지) 매년 0.022%, 추가 5년간('25년까지) 매년 0.01%, 추가 10년간('35년까지) 매년 0.004% 인하

연금지급률 적용 방법

<기본조건>

- 2004. 7. 1. 임용되어 2020. 6.30.에 퇴직
-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4,893,750원
-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350,000원

<2016~2020년 재직기간 1년에 대한 연금액 지급률 적용>

	기준소득월액	지급률	재직기간	비 고
2016	개인소득분 4,350,000	0.878%	1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893,750	1.0%	1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2017	개인소득분 4,350,000	0.856%	1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893,750	1.0%	1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2018	개인소득분 4,350,000	0.834%	1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893,750	1.0%	1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2019	개인소득분 4,350,000	0.812%	1년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893,750	1.0%	1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2020	개인소득분 4,350,000	0.792%	6월/12월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893,750	1.0%	6월/12월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5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급여 지급

- 법 부칙 제12조(제9905호, 2009.12.31.)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2010. 1. 1.) 전에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 승인받은 보수월액을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이 법 시행 전일까지로 조정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날(2009.12.31.)까지 승인된 종래보수월액을 종전기간(1기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
- ※ 퇴직수당의 경우 '91.10. 1.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종래의 보수월액을 적용



제2절 / 퇴직급여

1. 급여의 종류

1 급여성격에 따라 구분

- 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종 류	지 급 요 건	적용보수		
		종전기간 (1기간)	이후기간	
			(2기간)	(3기간)
퇴 직 연 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2000.12.31. 이전은 최종 보수월액	평균기준 소득월액	개인 및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소득월액
조 기 퇴 직 연 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2000.12.31. 이전은 최종 보수월액	평균기준 소득월액	개인 및 소득 재분배 평균 기준소득월액
퇴 직 연 금 공 제 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최종보수월액 또는 종래보수월액 현가액 ※ 연금은 위의 퇴직연금과 같음	최종기준소득월액 ※ 연금은 위의 퇴직연금과 같음	
퇴 직 연 금 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연금에 같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최종보수월액 또는 종래보수월액 현가액	최종기준소득월액	
퇴 직 일시금	공무원이 1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최종보수월액 또는 종래보수월액 현가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1기간 : 2009.12.31.까지 재직한 기간을 말함(2009년말 이전기간을 합산한 기간 포함)

▶ 2기간 : 2010. 1. 1.~2015.12.31.까지 재직한 기간을 말함(이 기간을 합산한 기간 포함)

▶ 3기간 : 2016. 1. 1. 이후 재직한 기간을 말함

2 퇴직급여 계산식

구 분	종전기간	이후기간	
	1기간 (2009.12.31.이전)	2기간 ('10. 1. 1.~'15.12.31.)	3기간 ('16. 1. 1.~)
퇴 직 연 금	《 20년 미만 》 평균보수월액 현재액 × 재직연수 × 2.5/100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연수 ×1.9%	(개인 평균기준 소득월액×이행률)× 매년 재직연수× 매년 지급률
	《 20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현재액 × 50/100)+ (평균보수월액 현재액 × 20년 초과 재직연수 × 2/100)		(소득재분배 평균기준 소득 월액×이행률)× 매년 재직연수× 매년 지급률
조 기 퇴 직 연 금	퇴직연금의 95%~75% ※ 미도래자의 경우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		
퇴 직 연 금 공 제 일 시 금	{(보수월액 현재액×공제총재직연수× 150/100)+(보수월액 현재액× 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 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공제총재직연수×공제총재직연수 ×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퇴 직 연 금 일 시 금	{(보수월액 현재액×총재직연수× 150/100)+(보수월액 현재액× 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 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퇴 직 일 시 금	5년 미만		
	(보수월액 현재액×총재직연수× 120/100)×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 ×78/100)×2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975/1,000)×3기간/총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보수월액 현재액×총재직연수× 150/100) + (보수월액 현재액× 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 65/10,000)}×이후기간/총재직기간	

※ 퇴직연금액 산정시 총재직기간은 법 부칙(제15523호, 2018. 9. 21. 시행) 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재직기간상한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2. 급여산정 방법

1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법 부칙 제15조,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 1. 1.)

-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의 급여산정 특례조항 신설(2016. 1. 1. 이후 임용자)

(개정) 2010년 이후 기간의 급여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급여액에 같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지급

◆ 재직기간 5년 미만자의 지급률 조정

- 2015.12.31.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78/100
- 2016. 1. 1.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1,000
 - ※ 2010년 이후기간의 급여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급여액에 같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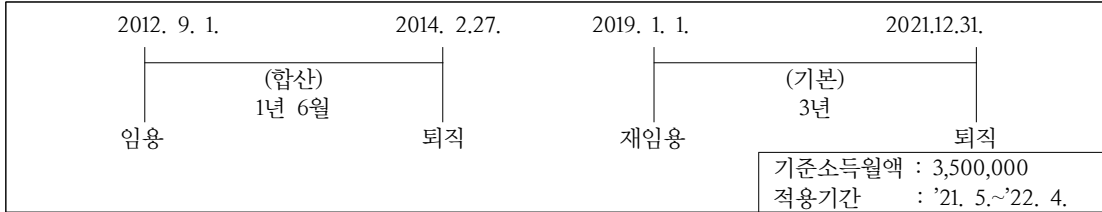
《구간별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근거 기준》

- 2010년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2009.12.31.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2010. 1. 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2010. 1. 1. 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009.12.31.이전 재직기간이 있고, 2010. 1. 1. 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일시금을 포함한다) 및 퇴직수당은 비례 계산(법률 제9905호, 시행일 2010. 1. 1.)
- 2009.12.31.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산정은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종전법(1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총재직기간 중 종전기간(1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 2010. 1. 1.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산정은 급여사유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재직기간에 대하여 법 제43조제5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총 재직기간 중 법률 제9905호 시행일(2010. 1. 1.)이후의 재직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법

◎ 2010. 1. 1. 이후 기간만 있는 경우의 일시금산정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 퇴직일시금 : 14,33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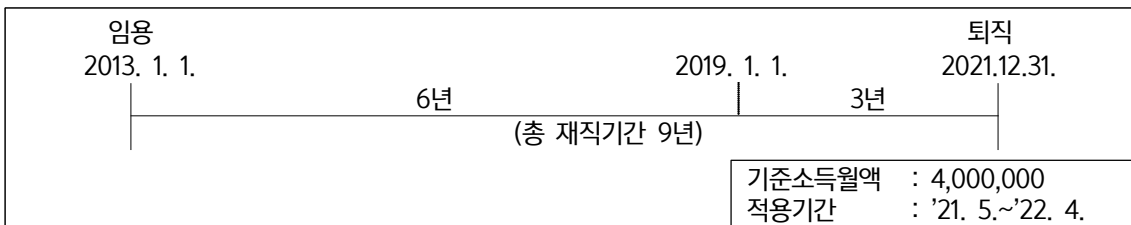
$$① 3,500,000 \times 1\text{년 } 6\text{월} \times 78/100 = 4,095,000$$

$$② 3,500,000 \times 3\text{년} \times 975/1,000 = 10,237,500$$

※ 2016. 1. 1. 시행된 개정법에는 5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법을 준용. 다만, 이 법 시행전('15.12.31)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퇴직수당 : 682,500 (3,500,000 × 3년 × 650/10,000)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 퇴직일시금 : 36,036,000원

$$① \text{ 계산식 :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975/1000 +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5\text{년 초과 재직연수} \times 65/10000)$$

$$② \text{ 산 정 : } (4,000,000 \times 9\text{년} \times 975/1000) + (4,000,000 \times 9\text{년} \times 4\text{년} \times 65/10,000) \\ = 36,036,000\text{원}$$

▶ 퇴직수당 : 8,190,000원 (4,000,000 × 9년 × 2,275/10,000)

◎ 2009.12.31.이전, 2010. 1. 1.이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일시금 산정

1. 2009.12.31.이전기간에 대한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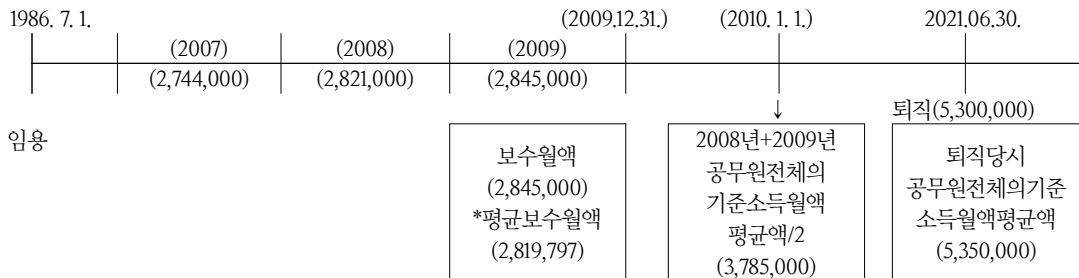
종전기간(1기간)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 제9905호 시행 전날('09.12.31.)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

- ① '09.12.31.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 + 20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
- ② '09.12.31.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매년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 현재가치로 환산
→ ①·② 방법으로 계산 후 큰 금액을 적용

(사례1) 3구간에 재직한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산정

(1) 기본조건

- 1기간('09.12.31.이전기간) 23년 6월 / 2기간(2010년~2015년) 6년 / 3기간(2016년 이후) 3년 6월



〈공무원보수인상률〉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상률	1.8%	0%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2) 종전기간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법 1 (평균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방법 2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 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4,021,334 $- 2,845,000 \times 5,350,000 / 3,785,000$	• 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3,878,767 $- 2,845,000 \times 1.0 \times 1.051 \times 1.035 \times 1.028 \times 1.017 \times 1.038 \times 1.03 \times 1.035 \times 1.026 \times 1.018 \times 1.028 \times 1.009$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08·'09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합의 평균액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퇴직년도까지)

1) '16. 5월 이후 퇴직자부터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으로 산식 변경

$$: 3,785,000 = \{3,770,000(3,700,000+70,000)+3,800,000(3,730,000+70,000)\}/2$$

(3) 급여 계산

▶ 퇴직(연금)일시금 : 226,467,350원

1기간 ('09.12.31.이전기간)	2·3기간 ('10. 1. 1.이후기간)
$\{(4,021,334 \times 33\text{년} \times 150/100) + (4,021,334 \times 33\text{년} \times 28\text{년}/100)\} \times (23\text{년}6\text{월}/33\text{년})$ $= 168,212,401$	$\{(5,300,000 \times 33\text{년} \times 975/1,000) + (5,300,000 \times 33\text{년} \times 28\text{년} \times 65/10,000)\} \times (9\text{년}6\text{월}/33\text{년})$ $= 58,254,949$

▶ 퇴직수당 : 76,337,308원

1기간 ('09.12.31.이전기간)	2·3기간 ('10. 1. 1.이후기간)
$(4,021,334 \times 33\text{년} \times 60\%) \times 23\text{년}6\text{월}/33\text{년}$ $= 56,700,809$	$(5,300,000 \times 33\text{년} \times 3,900/10,000) \times 9\text{년}6\text{월}/33\text{년} = 19,636,499$

<참고 : 연도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소득년도> 적용기간	<2008년> '10. 1. ~'10. 4.	<2009년> '10. 5. ~'11. 4.	<2010년> '11. 5. ~'12. 4.	<2011년> '12. 5. ~'13. 4.	<2012년> '13. 5. ~'14. 4.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3,700,000 (3,770,000)	3,730,000 (3,800,000)	3,950,000 (4,020,000)	4,150,000 (4,230,000)	4,350,000 (4,430,000)
	평균액 3,715,000 (평균액 3,785,000)				
<소득년도> 적용기간	<2013년> '14. 5. ~'15. 4.	<2014년> '15. 5. ~'16. 4.	<2015년> '16. 5. ~'17. 4.	<2016년> '17. 5. ~'18. 4.	<2017년> '18. 5. ~'19. 4.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4,470,000 (4,550,000)	4,670,000 (4,760,000)	4,910,000	5,100,000	5,220,000
<소득년도> 적용기간	<2018년> '19. 5. ~'20. 4.	<2019년> '20. 5. ~'21. 4.	<2020년> '21. 5. ~'22. 4.	※ 1~4월 재직 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9항에 의거 전년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에 보수인상률을 곱한 개 산액으로 적용 ('21.1~4월 재직 중 퇴 직자 적용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개산액 5,438,510원)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5,300,000	5,390,000	5,350,000		

(사례2) 2013. 7. 1.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기간을 합산 받고 2021. 2.28. 퇴직한 경우

(1) 기본조건

■ 기본기간 : 2013. 7. 1.~2021. 2.28. (7년 8월) ■ 합산기간 : 1996. 1. 1.~2009.12.31. (14년)			
1996. 1. 1.	2009.12.31.	2013. 7. 1.	2021. 2.28.
임용	(합산) 14년	재임용	(기본) 7년 8월
	퇴직 '09년말보수월액 (2,500,000)	기준소득월액 (4,600,000)	퇴직 기준소득월액 (5,000,000)

(2) 종전기간(1기간)의 퇴직당시 보수월액을 재임용 후 최종 퇴직당시 현재가치로 환산

<제1방법>

① 재임용일이 속한 연도까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500,000원	0%	5.1%	3.5%	2.8%	$2,500,000 \times 1.051 \times 1.035 \times 1.028$ $= 2,795,607\text{원}$

② ①의 보수월액을 재임용일까지 현재가치 환산한 금액에 퇴직당시의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곱하고 재임용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 나눈 금액

▶ 종전기간 보수월액 현재가치 : $2,795,607 \times 5,438,510 \div 4,430,000 = 3,432,039\text{원}$

* $5,390,000 \times 1.009$ (2021년 보수인상률 적용)=5,438,510

<제2방법>

① 종전기간 전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의하여 최종 퇴직당시 (2021.2.)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00,000원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 $2,500,000 \times 1.0 \times 1.051 \times 1.035 \times 1.028 \times 1.017 \times 1.038 \times 1.03 \times 1.035 \times 1.026 \times 1.018 \times 1.028 \times 1.009 = 3,408,407\text{원}$

<적용 보수월액> : 제1방법과 제2방법 중 보수월액이 큰 금액을 적용

(3) 급여 계산

구분	1기간 ('09.12.31.이전기간)	2·3기간 ('10. 1. 1.이후기간)	계
퇴직연금 일시금	$\{(3,432,039 \times 21\text{년}8\text{월} \times 150/100) +$ $(3,432,039 \times 21\text{년}8\text{월} \times 16\text{년}8\text{월}/100)\}$ $\times (14\text{년}/21\text{년}8\text{월}) = 80,080,912$	$\{(5,000,000 \times 21\text{년}8\text{월} \times 975/1,000) +$ $(5,000,000 \times 21\text{년}8\text{월} \times 16\text{년}8\text{월}$ $\times 65/10,000)\} \times (7\text{년}8\text{월}/21\text{년}8\text{월})$ $= 41,527,778$	121,608,680
퇴직수당	-	$(5,000,000 \times 7\text{년}8\text{월} \times 2,275/10,000)$ $= 8,720,833$	8,720,830

2 퇴직연금

01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10년 이상자

02 연금지급률 적용

구간별	연금지급률																																																
2009.12.31. 이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기간 20년 까지는 평균보수월액의 재직기간 1년당 2.5%• 20년 초과기간 매1년당 2%※ 1년 미만의 매 1월은 1/12년으로 계산																																																
2010. 1. 1.~ 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 1년당 1.9%																																																
2016. 1. 1. 이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 1년당 1.7%(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table><tr><th>연도</th><th>지급률(%)</th><th>연도</th><th>지급률(%)</th><th>연도</th><th>지급률(%)</th></tr><tr><td>'16년</td><td>1.878</td><td>'23년</td><td>1.76</td><td>'30년</td><td>1.72</td></tr><tr><td>'17년</td><td>1.856</td><td>'24년</td><td>1.75</td><td>'31년</td><td>1.716</td></tr><tr><td>'18년</td><td>1.834</td><td>'25년</td><td>1.74</td><td>'32년</td><td>1.712</td></tr><tr><td>'19년</td><td>1.812</td><td>'26년</td><td>1.736</td><td>'33년</td><td>1.708</td></tr><tr><td>'20년</td><td>1.79</td><td>'27년</td><td>1.732</td><td>'34년</td><td>1.704</td></tr><tr><td>'21년</td><td>1.78</td><td>'28년</td><td>1.728</td><td>'35년~</td><td>1.7</td></tr><tr><td>'22년</td><td>1.77</td><td>'29년</td><td>1.724</td><td>-</td><td>-</td></tr></table>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16년	1.878	'23년	1.76	'30년	1.72	'17년	1.856	'24년	1.75	'31년	1.716	'18년	1.834	'25년	1.74	'32년	1.712	'19년	1.812	'26년	1.736	'33년	1.708	'20년	1.79	'27년	1.732	'34년	1.704	'21년	1.78	'28년	1.728	'35년~	1.7	'22년	1.77	'29년	1.724	-	-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연도	지급률(%)																																											
	'16년	1.878	'23년	1.76	'30년	1.72																																											
	'17년	1.856	'24년	1.75	'31년	1.716																																											
	'18년	1.834	'25년	1.74	'32년	1.712																																											
	'19년	1.812	'26년	1.736	'33년	1.708																																											
	'20년	1.79	'27년	1.732	'34년	1.704																																											
	'21년	1.78	'28년	1.728	'35년~	1.7																																											
	'22년	1.77	'29년	1.7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지급률 1.0%부분에서는 소득재분배 적용																																																

03 퇴직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현재가치 환산

- 퇴직 3년 전에서 전년도까지 연도의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퇴직 전년도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연도말	소비자물가변동률			현재금액	3년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3년전	2년전	전년 도		
5,220,000	2018.12	0	1.004	1.005	5,267,084	5,327,861
5,300,000	2019.12	0	0	1.005	5,326,500	
5,390,000	2020.12	0	0	0	5,390,000	
합 계					15,983,584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도 5월 기준,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해당 연도 말 소비자물가지수임

<예시> 1기간(2009.12.31.이전 기간)과 2기간(2010. 1. 1.이후 기간) 있는 경우의 연금 산정

(1) 기본조건

- 1기간(2009.12.31.이전 기간) 23년 6월 / 2기간(2010. 1. 1.이후 기간) 6년
3기간(2016. 1. 1.이후 기간) 3년 6월
- 적용

1986. 7. 1.임용		2009.12.31.			2010. 1. 1.	2021. 2.28. 퇴직
	2007	2008	2009			
	2,744,000	2,821,000	2,845,000			
3년간 평균보수월액 (2,819,797)				'08년 '09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3,785,000)	퇴직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438,510)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상률	1.8%	0%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2) 1 기간(2009.12.31.이전) 평균보수월액 산정

- ① 2009년 이전 3년간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 2,819,797 (101,512,704 ÷ 36월)

구 분	보수월액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월수	계
		2008년	2009년		
2007	2,744,000	1.018	1.0	12	33,520,704
2008	2,821,000	-	1.0	12	33,852,000
2009	2,845,000	-	-	12	34,140,000
합 계				36	101,512,704

- ②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큰 금액 적용

방법 1(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방법 2(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4,051,649 - 2,819,797 × 5,438,510 ÷ 3,7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3,844,406 - 2,819,797 × 1.0 × 1.051 × 1.035 × 1.028 × 1.017 × 1.038 × 1.03 × 1.035 × 1.026 × 1.018 × 1.028 × 1.009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퇴직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8·'09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합의 평균액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퇴직년도까지)

- ③ 적용 평균보수월액 : 4,051,649원

(3) 2·3기간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① 개인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기 간	기준소득 월 액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퇴직연도)											월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10. 1.~2010. 4.	4,300,000	×1.0×1.051×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											4	23,240,674
2010. 5.~2011. 4.	4,400,000	×1.051×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											12	71,343,465
2011. 5.~2012. 4.	4,550,000	×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											12	70,195,671
2012. 5.~2013. 4.	4,700,000	×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											12	70,057,676
2013. 5.~2014. 4.	4,850,000	×1.017×1.038×1.03×1.035×1.026×1.018×1.028											12	70,324,573
2014. 5.~2015. 4.	5,000,000	×1.038×1.03×1.035×1.026×1.018×1.028											12	71,287,680
2015. 5.~2016. 4.	5,200,000	×1.03×1.035×1.026×1.018×1.028											12	71,425,036
2016. 5.~2017. 4.	5,350,000	×1.035×1.026×1.018×1.028											12	71,345,010
2017. 5.~2018. 4.	5,500,000	×1.026×1.018×1.028											12	70,865,058
2018. 5.~2019. 4.	5,700,000	×1.018×1.028											12	71,580,873
2019. 5.~2020. 4.	6,000,000	×1.028											12	74,016,000
2020. 5.~2020.12.	6,500,000	×1.00											8	52,000,000
2021. 1.~2021. 2.	6,558,500	×1.00											2	13,117,000
합 계												134	800,798,716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5,976,109	

②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 5,976,109 × 72.0% { 23년 6월(종전기간) ↔ 9년 6월(이후기간) }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적용은 영 제29181호 부칙 제10조제10항 참조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선택 20년)의 이행률 적용

: 5,976,109 × 87.39% {14년 3월(1기간) ↔ 5년 9월(2·3기간)}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 안분계산(1·2·3 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

· 1기간: 20년 × (23년 6월 / 33년)	= 14년 3월
· 2기간: 20년 × (6년 / 33년)	= 3년 8월
· 3기간: 20년 × (3년 6월 / 33년)	= 2년 1월

③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302,798원(퇴직연금공제일시금 : 5,222,521원)

(4)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① 2020년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246,028원

② 소득재분배에 따른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평균기준 소득월액 (b)	÷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평균기준 소득월액(a)	=	(a)값 대비 (b)값 비율	⇨	적용비율 (%) (c)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d = b × c)
5,976,109		5,327,861		1.12		95.45	5,704,196

③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 5,704,196×72.0%(23년 6월(1기간) ↔ 9년 6월(2·3년))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선택 20년)의 이행률 적용

: 5,704,196 × 87.39% {14년 3월(1기간) ↔ 5년 9월(2·3기간)}

④ 소득재분배 적용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107,021원(퇴직연금공제일시금 : 4,984,896원)

(5) 퇴직급여 산정

구 분			1기간 ('09.12.31.이전기간)	2·3기간('10. 1. 1.이후기간)		계
퇴직연금 매년연납	① 법	1기간	(4,051,649×50/100)+(4,051,649×3년6월×2/100)=2,309,439	-		2,309,439
		2기간	-	4,302,798×6년×1.9%=490,518		490,518
		3기간	-	개 인 소 득	4,302,798×6/12년×0.878%=18,889	18,889
				소 득 재분배	4,107,021×6/12년×1%=20,535	20,535
				30년초과 개인소득	4,302,798×6/12년×1.878%=40,403 ※ 2016.7월부터 30년 초과시점	40,403
				30년초과 개인소득	4,302,798×1년×1.856%=79,859	79,859
				30년초과 개인소득	4,302,798×1년×1.834%=78,913	78,913
				30년초과 개인소득	4,302,798×6/12년×1.812%=38,983	38,983
		합 계				
	② 영	1기간	위와 같음	-		2,309,439
		2기간	-	위와 같음		490,518
		3기간	2기간과 같은 지급율로 산정	4,302,798×3년6월×1.9% = 286,136		286,136
		합 계				
※ ①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이 ②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②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퇴직연금매년연납제외시금	퇴직연금 (20년)	1기간	4,051,649×14년3월×2.5%=1,443,399	-		1,443,399
		2기간		5,222,521×3년8월×1.9%=363,385		363,385
		3기간	-	개 인 소 득	5,222,521×6/12년×0.878%=22,926	22,926
				소 득 재분배	4,984,896×6/12년×1%=24,924	24,924
				30년초과 개인소득	5,222,521×6/12년×1.878%=49,039 2016.7월 30년 초과시점	49,039
				30년초과 개인소득	5,222,521×1년×1.856%=96,929	96,929
				30년초과 개인소득	5,222,521×1/12년×1.834%=7,981	7,981
		합 계				
	공제일시금 (13년)	{(4,095,296×13년×150/100)+(4,095,296×13년×13년/100)}×(9년3월/13년)=61,746,825	{(6,558,500×13년×975/1,000)+(6,558,500×13년×13년×65/10,000)}×(3년9월/13년)=26,057,740		87,804,565	
	퇴직수당	(4,095,296×33년×60%)×23년6월/33년=55,323,027	(6,558,500×33년×3,900/10,000)×9년6월/33년=24,299,242		79,622,269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행을 반영금액임

<예시2> 1기간(2009.12.31.이전 기간)과 2기간(2010. 1. 1.이후 기간) 있는 경우의 연금 산정

(1) 기본조건

- 1기간(2009.12.31.이전 기간) 23년 6월 / 2기간(2010. 1. 1.이후 기간) 6년
3기간(2016. 1. 1.이후 기간) 3년 6월
- 적용

1986. 7. 1.임용	2009.12.31.			2010. 1. 1.	2021 6.30. 퇴직
2007	2008	2009			
2,744,000	2,821,000	2,845,000			
3년간 평균보수월액 (2,819,797)			'08년 '09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3,785,000)	퇴직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50,000)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상률	1.8%	0%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2) 1 기간(2009.12.31.이전) 평균보수월액 산정

① 2009년 이전 3년간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 2,819,797 (101,512,704 ÷ 36월)

구 분	보수월액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월수	계
		2008년	2009년		
2007	2,744,000	1.018	1.0	12	33,520,704
2008	2,821,000	-	1.0	12	33,852,000
2009	2,845,000	-	-	12	34,140,000
합 계				36	101,512,704

②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큰 금액 적용

방법 1(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방법 2(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3,985,710 - 2,819,797 × 5,350,000 ÷ 3,7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환산 : 3,844,406 - 2,819,797 × 1.0 × 1.051 × 1.035 × 1.028 × 1.017 × 1.038 × 1.03 × 1.035 × 1.026 × 1.018 × 1.028 × 1.009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퇴직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8·'09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합의 평균액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퇴직년도까지)

③ 적용 평균보수월액 : 3,985,710원

(3) 2·3기간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① 개인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기 간	기준소득 월 액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퇴직연도)												월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10. 1.~2010. 4.	4,300,000	×1.0×1.051×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1.009												4	23,449,840
2010. 5.~2011. 4.	4,400,000	×1.051×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1.009												12	71,985,564
2011. 5.~2012. 4.	4,550,000	×1.035×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1.009												12	70,827,420
2012. 5.~2013. 4.	4,700,000	×1.028×1.017×1.038×1.03×1.035×1.026×1.018×1.028×1.009												12	70,688,292
2013. 5.~2014. 4.	4,850,000	×1.017×1.038×1.03×1.035×1.026×1.018×1.028×1.009												12	70,957,488
2014. 5.~2015. 4.	5,000,000	×1.038×1.03×1.035×1.026×1.018×1.028×1.009												12	71,929,260
2015. 5.~2016. 4.	5,200,000	×1.03×1.035×1.026×1.018×1.028×1.009												12	72,067,848
2016. 5.~2017. 4.	5,350,000	×1.035×1.026×1.018×1.028×1.009												12	71,987,112
2017. 5.~2018. 4.	5,500,000	×1.026×1.018×1.028×1.009												12	71,502,840
2018. 5.~2019. 4.	5,700,000	×1.018×1.028×1.009												12	72,225,096
2019. 5.~2020. 4.	6,000,000	×1.028×1.009												12	74,682,144
2020. 5.~2020.12.	6,500,000	×1.009												8	52,468,000
2021. 1.~2021. 6.	6,558,500	×1.00												6	39,351,000
합 계													138	834,121,904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6,044,361	

②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을 적용

: 6,044,361 × 72.0% { 23년 6월(중전기간) ↔ 9년 6월(이후기간) }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적용은 영 제29181호 부칙 제10조제10항 참조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선택 20년)의 이행을 적용

: 6,044,361 × 87.39% {14년 3월(1기간) ↔ 5년 9월(2·3기간)}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 안분계산(1·2·3 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

• 1기간 : 20년 × (23년 6월 / 33년)	= 14년 3월
• 2기간 : 20년 × (6년 / 33년)	= 3년 8월
• 3기간 : 20년 × (3년 6월 / 33년)	= 2년 1월

③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351,939원(퇴직연금공제일시금 : 5,282,167원)

(4)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① 2020년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246,028원

② 소득재분배에 따른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평균기준 소득월액 (b)	÷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평균기준 소득월액(a)	=	(a)값 대비 (b)값 비율	⇔	적용비율 (%) (c)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d = b × c)
6,044,361		5,327,861		1.13		95.46	5,769,947

③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을 적용 : 5,769,947×72.0%(23년 6월(1기간) ↔ 9년 6월(2·3년))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선택 20년)의 이행을 적용

: 5,769,947 × 87.39% {14년 3월(1기간) ↔ 5년 9월(2·3기간)}

④ 소득재분배 적용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154,361원(퇴직연금공제일시금 : 5,042,356원)

(5) 퇴직급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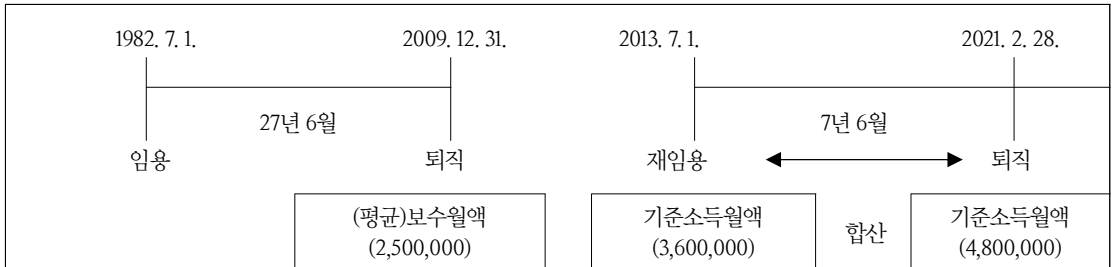
구 분			1기간 ('09.12.31.이전기간)	2·3기간('10. 1. 1.이후기간)		계
퇴직연금비 퇴직연금비	① 법	1기간	(3,985,710×50/100)+(3,985,710 ×3년6월×2/100)=2,271,854	-		2,271,854
		2기간	-	4,351,939×6년×1.9%=496,121		496,121
		3기간	-	개 소 득	4,351,939×6/12년×0.878%=19,105	19,105
				소 득 재분배	4,154,361×6/12년×1%=20,771	20,771
				30년초과 개인소득	4,351,939×6/12년×1.878%=40,864 ※ 2016.7월부터 30년 초과시점	40,864
				30년초과 개인소득	4,351,939×1년×1.856%=80,771	80,771
				30년초과 개인소득	4,351,939×1년×1.834%=79,814	79,814
				30년초과 개인소득	4,351,939×6/12년×1.812%=39,428	39,428
		합 계				
	② 영	1기간	위와 같음	-		2,271,854
		2기간	-	위와 같음		496,121
		3기간	2기간과 같은 지급율로 산정	4,351,939×3년6월×1.9% = 289,403		289,403
		합 계				
※ ①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이 ②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②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퇴직연금비 퇴직연금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행을 반영금액임

〈예시 3〉 2013. 7. 1.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기간을 합산 받고 2021. 2. 28. 퇴직한 경우

(1) 기본조건

- 2013. 7. 1. 임용, 2021. 2. 28. 퇴직
- 합산기간 1982. 7. 1.~2009.12.31.(27년 6월)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상률	1.8%	0%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재임용 당시(2013. 7월) : 4,430,000원	퇴직 당시(2021. 2월) : 5,438,510원)
-------------------------------	-------------------------------

(2) 1기간('09.12.31.이전) 평균보수월액 산정(합산기간)

① 1기간의 전 퇴직당시 평균보수월액을 최종 퇴직당시로 현재가치 환산

<제1방법>						<제2방법>					
· '09년이전 평균보수월액을 재임용일이 속한 년도까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한 후						· '09년이전 평균보수월액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하여 최종 퇴직당시(2021. 2.)로 현재가치 환산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500,000	0%	5.1%	3.5%	2.8%		2,500,000	0%	5.1%	3.5%	2.8%	1.7%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8%	3.0%	3.5%	2.6%	1.8%
							2020년	2021년			
							2.8%	0.9%	-	-	-
$\Rightarrow 2,500,000 \times 1.051 \times 1.035 \times 1.028$ $= 2,795,607\text{원}$						$\Rightarrow 2,500,000 \times 1.0 \times 1.051 \times 1.035 \times 1.028 \times 1.017$ $\times 1.038 \times 1.03 \times 1.035 \times 1.026 \times 1.018 \times 1.028 \times 1.009$ $= 3,408,407$					
· 다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변동률로 현재가치로 환산 $\Rightarrow 2,795,607 \times 5,438,510 \div 4,430,000$ $= 3,432,039$											

② 평균보수월액 : 3,432,039원 (제1방법과 제2방법 중 큰 금액 적용)

(3) 2·3기간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① 개인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기 간	기준소득 월액	공무원보수인상률							현재금액	월	계
		(’14)	(’15)	(’16)	(’17)	(’18)	(’19)	(’20)			
2013. 7.~2014. 4.	3,600,000	×1.017×1.038×1.03×1.035×1.026×1.018×1.028							4,349,972	10	43,499,720
2014. 5.~2015. 4.	3,700,000	×1.038×1.03×1.035×1.026×1.018×1.028							4,396,072	12	52,752,864
2015. 5.~2016. 4.	3,850,000	×1.03×1.035×1.026×1.018×1.028							4,406,832	12	52,881,984
2016. 5.~2017. 4.	4,000,000	×1.035×1.026×1.018×1.028							4,445,171	12	53,342,052
2017. 5.~2018. 4.	4,150,000	×1.026×1.018×1.028							4,455,909	12	53,470,908
2018. 5.~2019. 4.	4,300,000	×1.018×1.028							4,499,967	12	53,999,604
2019. 5.~2020. 4.	4,500,000	×1.028							4,626,000	12	55,512,000
2020. 5.~2020.12.	4,800,000	×1.0							4,800,000	8	38,400,000
2021. 1.~2021. 2.	4,843,200	×1.0							4,843,200	2	9,686,400
합 계									92	413,545,532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4,495,060	

②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 4,495,060 × 69.91%{ 27년6월(종전기간) ↔ 5년6월(이후기간) } = 3,142,496

(4)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① 2021년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27,861원

② 소득재분배에 따른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평균기준 소득월액 (b)	÷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a)	=	(a)값 대비 (b)값 비율	⇔	적용비율 (%) (c)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d = b × c)
4,495,060		5,327,861		0.84		112.5	5,056,942

③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 5,056,942 × 69.91% [(27년6월(1기간) ↔ 5년6월(2·3기간))] = 3,535,308

④ 소득재분배 적용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3,535,308원

(5) 퇴직급여 산정

구 분		종전기간('09.12.31.) 1기간		법 시행 후 기간('10. 1. 1.) 2·3기간		계	
퇴 직 연 금	① 법	1기간	(3,432,039×50/100)+(3,432,039 ×7년6월×2/100)=2,230,824	-		2,230,824	
		2기간	-	3,142,496×2년6월×1.9%=149,268		149,268	
		3기간	-	30년초과 개인소득	3,142,496×1년×1.878%=59,016	59,016	
					3,142,496×1년×1.856%=58,324	58,324	
					3,142,496×1년×1.834%=57,633	57,633	
		소 계					174,973
	합 계					2,555,065	
	② 령	1기간	위와 같음		-		2,230,824
		2기간	-		위와 같음		149,268
		3기간	-		3,142,496×3년×1.9%=179,122		179,122
합 계					2,559,214		
※ ①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이 ②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 ②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 ①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이 ②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 ②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예시 4〉 2015. 7. 1. 임용되어 합산기간 안에 2009년 이전, 2010년 이후 기간이 포함된 경우

(1) 기본조건

- 2015. 7. 1. 임용, 2021. 2. 28. 퇴직
- 합산기간 2005. 1. 1.~2013. 6. 30.(8년 6월)

2005. 1. 1.	'10. 1. 1.(법개정)	2013. 6. 30.	2015. 7. 1.	'16. 1. 1.(법개정)	2021. 2. 28.
5년	3년6월		사병산입기간(2016년산입) 2년 기본재직기간 5년8월		총기간 16년 2월
임용		퇴직	재임용		퇴직
'09년말 보수월액 : 2,100,000 '09년말 평균보수월액 : 1,900,000 전 퇴직시 현가보수월액 : 2,458,950* 전 퇴직시 현가평균보수월액 : 2,224,764** 2013년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 4,100,000			기준소득월액 (4,300,000)	합산	기준소득월액 (4,800,000)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상률	1.8%	0%	0%	5.1%	3.5%	2.8%	1.7%	3.8%	3.0%	3.5%	2.6%	1.8%	2.8%	0.9%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소득년도> 적용기간	<2008년 소득> '10. 1.~4.	<2009년 소득> '10. 5.~'11. 4.	<2010년 소득> '11. 5.~'12. 4.	<2011년 소득> '12. 5.~'13. 4.	<2012년 소득> '13. 5.~'14. 4.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3,700,000 (3,770,000)	3,750,000 (3,800,000)	3,950,000 (4,020,000)	4,150,000 (4,230,000)	4,350,000 (4,430,000)
	평균액 3,715,000 (평균액 3,785,000)				
<소득년도> 적용기간	<2013년 소득> '14. 5.~'15. 4.	<2014년 소득> '15. 5.~'16. 4.	<2015년 소득> '16. 5.~'17. 4.	<2016년 소득> '17. 5.~'18. 4.	<2017년 소득> '18. 5.~'19. 4.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4,470,000 (4,550,000)	4,670,000 (4,760,000)	4,910,000	5,100,000	5,220,000
<소득년도> 적용기간	<2018년 소득> '19. 5.~'20. 4.	<2019년 소득> '20. 5.~'21. 4.	<2020년 소득> '21. 5.~'22. 4.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6.5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5,300,000	5,390,000	5,350,000		

※ 1~4월 재직 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9항에 의거 전년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보수인상률을 곱한 개산액으로 적용 ('21.1~4월 재직 중 퇴직자 적용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개산액 5,438,510원)

(2) 2009년말 보수(평균)월액 산정

- ① 합산기간 중 '09년말 보수(평균)월액을 종전 퇴직당시('13. 6.30.)로 현재가치

〔보수월액〕 : 2,458,950

* '09년말 보수월액(2,100,000)×퇴직당시('13년 6월)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4,350,000)
/ 2008년 및 20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합한 금액의 평균금액(3,715,000)

〔평균보수월액〕 : 2,224,764

** '09년말 평균보수월액(1,900,000)×퇴직당시('13년 6월)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4,350,000) / 2008년 및 20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합한 금액의 평균금액(3,715,000)

② ①번의 보수월액 현가액(종전 퇴직당시)을 최종 퇴직당시(2021. 2.28.)로 현재가치 환산

<제1방법>	<제2방법>																
<p>① 2009.12.31.보수월액을 퇴직당시(2013. 6.)로 현가한 보수(평균)월액을 재임용 시점(2015)까지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현가</p> <p>➡ (보수) $2,458,950 \times 1.017 \times 1.038 = 2,595,780$</p> <p>➡ (평균) $2,224,764 \times 1.017 \times 1.038 = 2,348,563$</p> <p>② ①의 보수월액을 「퇴직당시(2021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재임용 당시(2015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당시로 현재가치 환산</p> <p>➡ (보수) $2,595,780 \times 5,438,510 \div 4,760,000 = 2,965,793$</p> <p>➡ (평균) $2,348,563 \times 5,438,510 \div 4,760,000 = 2,683,336$</p>	<p>• 2009.12.31.보수월액을 퇴직당시(2013. 6.30)로 현가한 보수(평균)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최종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현재가치로 환산</p>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공무원보수인상률></p> <table><tr><th>2014년</th><th>2015년</th><th>2016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r><tr><td>1.7%</td><td>3.8%</td><td>3.0%</td><td>3.5%</td><td>2.6%</td><td>1.8%</td><td>2.8%</td><td>0.9%</td></tr></table> <p>➡ (보수) $2,458,950 \times 1.017 \times 1.038 \times 1.03 \times 1.035 \times 1.026 \times 1.018 \times 1.028 \times 1.009 = 2,997,953\text{원}$</p> <p>➡ (평균) $2,224,764 \times 1.017 \times 1.038 \times 1.03 \times 1.035 \times 1.026 \times 1.018 \times 1.028 \times 1.009 = 2,712,434\text{원}$</p>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7%	3.8%	3.0%	3.5%	2.6%	1.8%	2.8%	0.9%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7%	3.8%	3.0%	3.5%	2.6%	1.8%	2.8%	0.9%										

③ 보수(평균)월액 : (보수월액) 2,971,213원 / (평균보수월액) 2,688,240원
(제1방법과 제2방법 중 큰 금액 적용)

(3) 2·3기간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① 개인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구분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현가금액	월	계
합산	2010. 1. ~ 2010. 4.	3,500,000	1.051	1.035	1.028	1.017	1.038	1.030	1.035	1.026	1.018	1.028	4,729,207	4	18,916,828
합산	2010. 5. ~ 2011. 4.	3,650,000	1.051	1.035	1.028	1.017	1.038	1.030	1.035	1.026	1.018	1.028	4,931,886	12	59,182,632
합산	2011. 5. ~ 2012. 4.	3,800,000		1.035	1.028	1.017	1.038	1.030	1.035	1.026	1.018	1.028	4,885,411	12	58,624,932
합산	2012. 5. ~ 2013. 4.	3,950,000			1.028	1.017	1.038	1.030	1.035	1.026	1.018	1.028	4,906,527	12	58,878,324
합산	2013. 5. ~ 2013. 6.	4,100,000				1.017	1.038	1.030	1.035	1.026	1.018	1.028	4,954,136	2	9,908,272
현재	2015. 7. ~ 2016. 4.	4,300,000						1.030	1.035	1.026	1.018	1.028	4,921,915	10	49,219,150
현재	2016. 5. ~ 2017. 4.	4,450,000							1.035	1.026	1.018	1.028	4,945,253	12	59,343,036
현재	2017. 5. ~ 2018. 4.	4,650,000								1.026	1.018	1.028	4,992,765	12	59,913,180
현재	2018. 5. ~ 2019. 4.	4,800,000									1.018	1.028	5,023,219	12	60,278,628
현재	2019. 5. ~ 2020. 4.	4,950,000										1.028	5,088,600	12	61,063,200
현재	2020. 5. ~ 2020.12	5,150,000										1.0	5,150,000	8	41,200,000
현재	2021. 1. ~ 2021. 2.	5,196,350										1.0	5,196,350	2	10,392,700
합 계 (평균기준소득월액 : $546,920,882 \div 110\text{개월} = 4,972,008$)														110	546,920,882

- ②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4,972,008 \times 87.88\%(1\text{기간 } 5\text{년} \leftrightarrow 2\cdot3\text{기간 } 11\text{년 } 2\text{월}) = 4,369,400$$

- ③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369,400원

(4)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

- ① 2021년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27,861원

- ② 소득재분배에 따른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평균기준 소득월액 (b)	÷	퇴직전 3년간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a)	×	(a)값 대비 (b)값 비율	적용비율(%) (c)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기준소득월액 (d = b × c)
4,972,008		5,327,861		0.93	105.56	5,248,451

- ③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이행률 적용

$$: 5,248,451 \times 87.88\%(1\text{기간 } 5\text{년} \leftrightarrow 2\cdot3\text{기간 } 11\text{년 } 2\text{월}) = 4,612,338$$

- ④ 소득재분배 적용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 4,612,338원

(5) 퇴직급여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구 분	종전기간('09.12.31.)1기간	법시행 이후 기간('10. 1. 1.) 2·3기간	계
퇴직연금 일시금	{(2,971,213×15년2월×150/100) +(2,971,213×15년2월×11년2월/100)}× 5년/15년2월=23,943,025	{(5,196,350×15년2월×975/1,000)+ (5,196,350×15년2월×11년2월/6510,000)}× 11년2월/15년2월=60,786,967	84,729,992
퇴직수당	-	5,196,350×4년8월×650/10,000 =1,576,226	1,576,226

- 퇴직연금

구 분		종전기간('09.12.31.)1기간	법시행 이후 기간('10. 1. 1.) 2·3기간		계
퇴직연금	1기간	2,688,240×5년×2.5%=336,030			336,030
	2기간	-	4,369,400×(6/12)년×1.9%=41,509		41,509
	3기간	-	개인소득	4,369,400×3년×0.878%=115,089	115,089
			소득재분배	4,612,338×3년×1%=138,370	138,370
			개인소득	4,369,400×1년×0.856%=37,402	37,402
			소득재분배	4,612,338×1년×1%=46,123	46,123
			개인소득	4,369,400×1년×0.834%=36,440	36,440
			소득재분배	4,612,338×1년×1%=46,123	46,123
			개인소득	4,369,400×1년×0.812%=35,479	35,479
			소득재분배	4,612,338×1년×1%=46,123	46,123
			개인소득	4,369,400×1년×0.79%=34,518	34,518
			소득재분배	4,612,338×1년×1%=46,123	46,123
			개인소득	4,369,400×(2/12)년×0.78%=5,680	5,680
			소득재분배	4,612,338×(2/12)년×1%=7,687	7,687
			소 계		595,157
	합 계				972,696
	1기간	위와 같음	-		336,030
2기간	-	위와 같음		41,509	
3기간	-	4,369,400×7년2월×1.9%=594,966		594,966	
합 계				972,505	
※ ①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이 ②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 ②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3 연금지급개시연령

01 지급대상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

02 연금지급 개시연령 적용기준(법 제43조제1항)

1. 65세가 되었을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 (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 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 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라 함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퇴직 또는 근무상한 기준일과는 달리 당해 퇴직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말함.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계급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제외 → 65세부터 퇴직연금 개시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 한 때

※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를 인사혁신처로부터 확인받아 첨부하여야 함

5.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

※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장애상태가 된 때에는 그 때(급여 사유발생 다음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장애등급 7급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애등급으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03

1996. 1. 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법률15523호, 2018.9.21.시행, 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2항)

● 적용대상

- ① 이 법 시행 당시(2016. 1. 1.)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 적용기준

- ①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21년	60세	'27~'29년	63세
'22~'23년	61세	'30~'32년	64세
'24~'26년	62세	'33년~	65세

- ② 다만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21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7~'29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
'22~'23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때	'30~'32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4년 경과한 때
'24~'26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	'33년~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때

예시

- 1) 1999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1년 12월 31일, 25년(기본기간 23년,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1년 12월 15일 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0세(2022년 1월) : 2016~2021년 퇴직자는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적용
- 2) 1998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1년 12월 31일 24년(기본기간 21년,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명예퇴직(1971년 5월 15일생, 퇴직 당시 연령 50세)하는 경우
→ 60세(2031년 5월) : 2016~2021년 퇴직자는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인 60세 적용
- 3) 1998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12월 31일 27년(기본기간 25년,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명예퇴직(1968년 5월 15일생, 퇴직 당시 연령 54세)하는 경우
→ 61세(2029년 5월) : 2022~2023년 퇴직자는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인 61세 적용

04

1995.12.3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법률15523호.2018.9.21.시행. 법 부칙 제11조제4항)

● 적용대상

2001. 1. 1.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

● 적용기준

- ① 2000.12.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 ②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별도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제6328호, 2000.12.30. 부칙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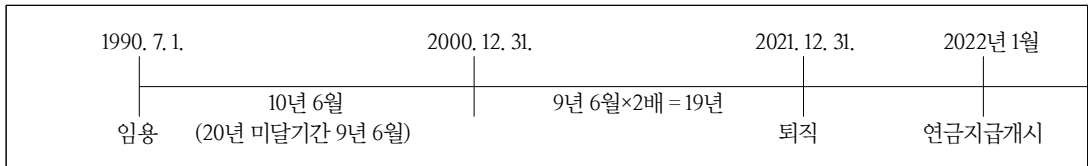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01년부터 2002년	50세	2003년부터 2004년	51세
2005년부터 2006년	52세	2007년부터 2008년	53세
2009년부터 2010년	54세	2011년부터 2012년	55세
2013년부터 2014년	56세	2015년부터 2016년	57세
2017년부터 2018년	58세	2019년부터 2020년	59세
2021년부터	60세	-	-

- ③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④ 기타 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법률 6328호, 개정법률 제46조제1항2호~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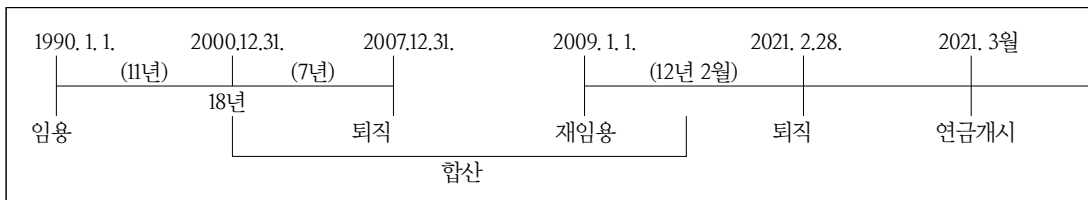
- i.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 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 ii.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 iii.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예시

- 1) 2000년12월31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은
→ 퇴직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법률 6328호, 2000.12.30. 부칙 제10조제1항)
- 2) 2000년12월31일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6월인 자가 2021년 12월31일 퇴직하였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은?
(1962년 6월15일생, 퇴직당시 연령 59세)



- 2021년12월3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2000년말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기간의 2배를 근무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퇴직한 다음달(2022년1월)부터 연금지급개시(법률 6328호, 2000.12.30. 부칙 제10조제3항)
- 2019년 1월 2일~2019년12월 1일 사이에 퇴직할 경우에는 법률 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에 따른 2019년~2020년 퇴직자의 연도별지급개시연령 59세를 적용받아 2021년 6월(59세)부터 연금지급개시(법률 6328호, 2000.12.31. 부칙 제10조제2항)
- 2019년 5월30일 명예퇴직을 하고 조기퇴직연금을 신청(미달연수 1년초과 2년 이내)한 경우에는 2019년 6월부터 퇴직연금상당액의 90%로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3) 2009. 1. 1.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의 공무원경력(18년)을 합산 받고 재직기간이 30년 2월인 자가 2021년 2월28일 퇴직하였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은?
(1963년 6월15일생, 퇴직당시 연령 57세)



- 2001년 이후에 1995.12.31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 재직기간을 합산 받았으므로 이 기간 중에 2000년말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11년이 되므로 20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9년
- 따라서 합산기간 중 2001년 이후 재직기간 7년(2001년 1월~2007년12월)과 재임용 기간 12년 2월을 더한 기간이 19년 2월이 되어 2000년말 기준 20년에 미달하는 기간인 9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2021년 3월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법률 6328호, 2000.12.30. 부칙 제10조제3항)

4 조기퇴직연금(법 제4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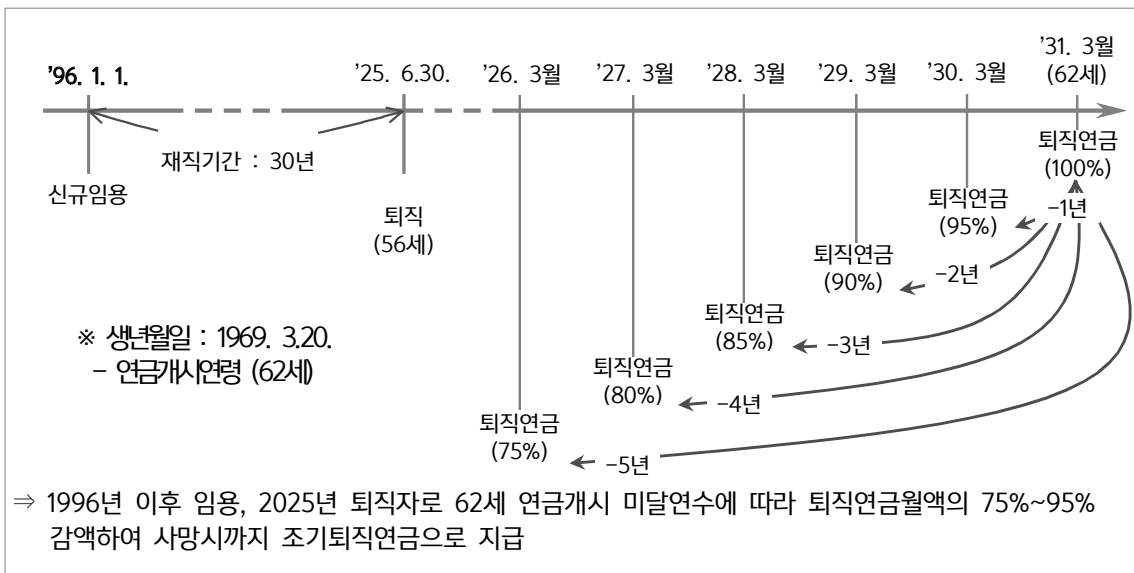
01 요건

- 연금지급개시 전에 미리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연수에 따라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65세 또는 정년·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 등 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에 미치지 못하는 연수가 5년 이내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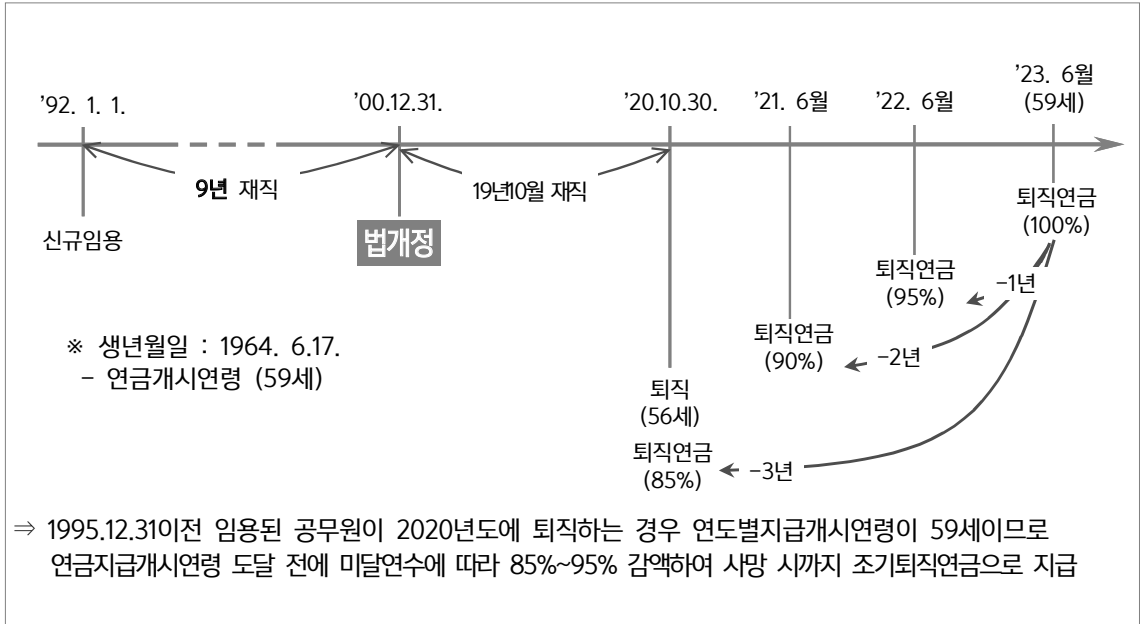
02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미달연수	지급률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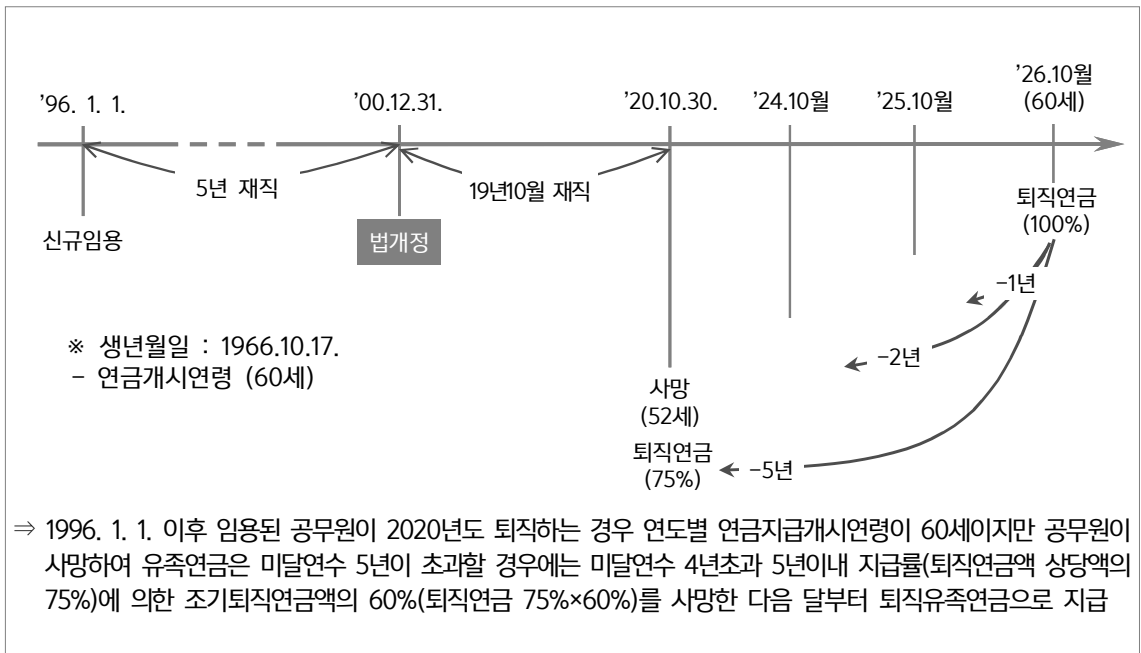
예시 1 56세에 명예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2세인 경우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예시 2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도달 전에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예시 3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지급



5 분할급여

01 청구요건(법 제45조, 제49조, 법률 제15523호, 2018. 3.20. 부칙 제4조)

1. 분할연금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포함)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인 2016. 1. 1. 이후 이혼한 배우자
- ※ 분할연금(일시금) 혼인기간 산정 업무처리지침 변경(연금복지과-1475, 2020.8.28.)
- 분할연금 청구요건(제45조제1항)

청구요건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수급권자가) 1) 65세가 되었을 것
청구시기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연금지급기간	요건이 충족한 다음 달부터 사망 월까지 지급

- 분할연금 청구 및 지급연령 (법률 제15523호, 2018. 3.20. 부칙 제4조제2항)
 -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연도	'16~'21	'22~'23	'24~'26	'27~'29	'30~'32	'33년 이후
분할연금 청구 및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2. 분할일시금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포함)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인 2016. 1. 1. 이후 이혼한 배우자로 2018. 9.21 이후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경우에 한함
- 분할일시금 청구요건(제49조 및 시행령 제45조의1 부칙 제4조 및 제5조)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

02

분할급여 신청구

(법 제48조, 제49조,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2817, 2018.10.18.))

- 법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일시금을 미리 청구 가능
- 분할급여 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함
- 신청구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단,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취소 가능
- 신청구 등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된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분할비율 조정은 불가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 제외)

03

분할급여액 산정

(법 제45조제2항, 제46조,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1322, 2015.12.27.))

- 총재직기간 : 기본기간(기여금납부기간을 초과한 기간 포함), 합산기간, 소급통산,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중 혼인기간 포함
- 혼인기간 : 총 재직기간 중 혼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산정하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제외 함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 2018.9.21. 이후 이혼하는 자 부터 적용되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분할급여 산정 혼인기간에서 제외
- 분할급여액 산정 :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균등분할

$$\text{분할급여액} = (\text{퇴직급여액} \times \frac{\text{혼인기간}}{\text{총 재직기간}}) \times \frac{1}{2}$$

(분할연금액 산정 예시)

가정조건	→	분할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 혼인기간 20년(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300만원 $\times \frac{10\text{년}}{30\text{년}} \times \frac{1}{2} = 50\text{만원}$

- 재산분할에 의해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 분할급여는 혼인기간에 따라 균등분할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해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급여를 산정
- 판결문 또는 이혼조서 결정내용에 분할연금·분할일시금의 분할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가정조건		분할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 혼인기간 20년(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10년) · 재산분할판결 : 연금의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분할판결산정 : 150만원 * (산식) 300만원 $\times \frac{1}{2}$ (연금의 50%)

※ 혼인기간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이 50만원($300\text{만원} \times \frac{10\text{년}}{30\text{년}} \times \frac{1}{2}$)이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150만원을 지급

04 분할연금과 퇴직연금의 조정·제한 등(법 제47조, 제49조)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사망 등)·정지(전액정지, 일부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음. 다만, 법 제65조에 해당하는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도 감액하고, 퇴직일시금 등에 대한 분할일시금도 감액함
-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4조의 퇴직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분할연금수급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을 합산하여 지급
- 또한 분할연금수급권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지급
-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을 지급
- 분할연금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한 경우(부부공무원)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할일시금도 이에 해당됨

05 분할일시금 등 지급시 미납금의 공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2817, 2018.10.18.))

- 분할일시금의 지급시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이 있을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등에서 공제후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일시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혼 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미납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예 시 〉

- 퇴직연금일시금액 1억원, 분할비율 : 6 : 4 (공무원 : 배우자) , 대여학자금 미납액 : 2,000만원
→ 분할대상 금액 : 8,000만원(1억원 - 2,000만원)
→ 공무원 4,800만원($8,000\text{만원} \times 6/10$), 배우자 3,200만원($8,000\text{만원} \times 4/10$) 수령

06 분할급여 청구시효(법 제45조제3항,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1332, 2015.12.27.))

- 분할연금청구는 법 제45조제1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게 충족되는 조건일자를 기준으로 시효기산

가장 늦게 충족한 요건	청구시효 기산일
배우자와 이혼	이혼일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	퇴직연금 지급개시월의 말일
60세('33년 65세) 도달	60세('33년 65세) 도달일

- 분할일시금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

6 연금의 지급기간·금액 및 지급시기

01 연금의 지급기간(법 제34조제1항)

-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다만,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이 경우 그 달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
- ※ 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장애상태가 된 때부터 연금지급

02 연금의 조정(법 제35조)

-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매년 조정)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 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법률 13387호, 2015. 6.22. 법 부칙 제5조)

연금인 급여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결한다.

사 례

- 2018년도 연금월액이 2,200,000원이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1.5% 상승한 경우 2019년도 연금월액은?
 ⇒ 산출액 : 2018년 연금액 2,200,000원 = 2019년 연금액 2,200,000원
 (2016~2020년 까지 동일)
- 매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5%라고 가정할 경우 2021년도 연금월액은?
 ⇒ 산출액 : 2,200,000원 × (1.015) = 2,233,000원

03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의 발생 및 소멸에 따른 지급정지기간(법 제34조제2항)

-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분의 지급을 정지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함

04 연금지급일(영 제31조)

-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 가능

7 이민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 청산지급(법 제36조, 영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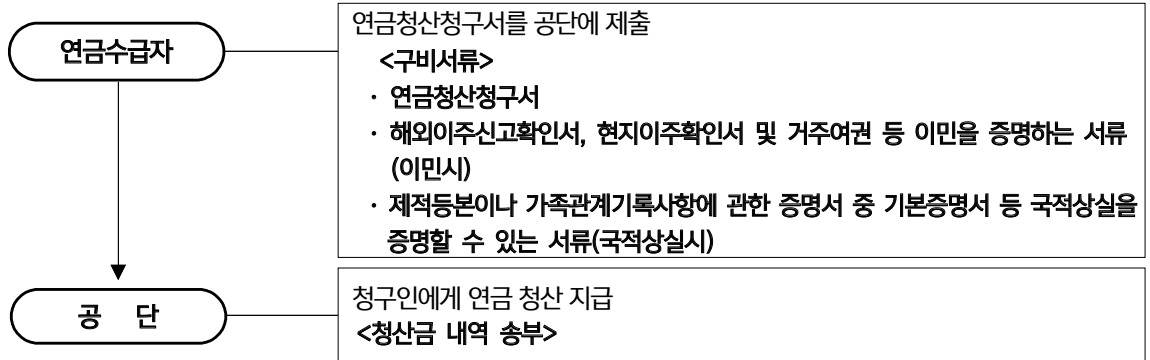
01 지급요건

-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 또는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이를 일시에 청산 지급 가능

02 청산지급액

- 해외 이민의 경우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 또는 국적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03 연금의 청산 청구절차



8 연금의 지급정지

01 전액정지(법 제50조제1항, 법 제61조제1항, 영 제46조, 영 제47조제1항)

- 대상자 :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포함),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 ※ 장해연금 수급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액정지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일정소득(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동안 해당연금의 전액을 정지
 - ※ 재임용, 재퇴직신고 (영 제47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

※ 10일 이내에 재임용·재퇴직 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예시 1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직한 경우 연금정지액 산정

○ 가정조건

- '21년 연금월액 : 2,500,000원
- 연간 총급여액 : 12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후 월소득 8,737,500원)
- 월 정지액 : 2,500,000원(전액정지대상)
- ☞ 소득월액이 '20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 5,390,000원 \times 1.6 = 8,624,000원) 이상으로 연금 전액정지

○ 정지액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산정항목	산식	금액
○ 총급여액		120,000,000
- 근로소득공제	$\bullet 14,750,000 + (20,000,000 \times 2\%)$	15,150,000
○ 근로소득금액	$\bullet 120,000,000 - 15,150,000$	104,850,000
- 소득월액산정	$\bullet 104,850,000 \div 12\text{월}$	8,737,500
○ 정지액 산정	$\bullet 8,737,500 > 8,624,000$ 이므로 전액정지	2,500,000

[참고자료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예시 2 선출직으로 취임 후 재당선된 경우 연금정지액 산정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기 : 2014. 7. 1. ~ 2018. 6. 30.)에 취임 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기 : 2018. 7. 1. ~ 2022. 6. 30.)에 재당선

○ 제6회 임기종료일(6.30.)과 제7회 임기 시작일(7. 1.)이 속하는 달이 달라 재임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하나,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 연금 전액정지

○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재당선된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당선된 경우에도 선출직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 연금 전액정지

※ 국회의원 임기는 종료일(5.29.)과 시작일(5.30.)이 같은 달이므로 재당선시 계속 연금 전액정지

02

일부정지(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61조제1항, 영 제47조제2항 내지 제7항)

- **대상자** :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포함),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 ※ 장해연금 수급자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부정지**
- **정지기간** :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
- **일부정지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2016. 1. 1.부터 포함)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예시2 참고

- **1주택자** :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 거주하는 자가주택도 포함,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

○ **2주택 이상** : 월세 과세

- 부부가 각 1채씩 주택 소유시 이를 합산하여 2주택으로 판정
- 2018년까지는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
 -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중 선택 가능
 - ※ 2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2019년 이후에도 비과세

○ **3주택 이상** : 월세 과세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2018년까지는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 전세인 경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전환 과세
 -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 ※ 간주임대료율 (정기예금이자율 (2019.12.31.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일반적인 경우	$(3\text{주택이상 보증금}-3\text{억}) \times 60\% \times (1/365 \text{ or } 1/366) \times 2.1\% (\text{정기예금이자율}) - \text{금융수익}$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text{보증금}-3\text{억}) \times 60\% \times (1/365 \text{ or } 1/366) \times 2.1\% (\text{정기예금이자율})$

- 전용면적 40m²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전세보증금) 산정에서 2021.12.31.까지 제외

○ **해당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2014. 1. 1. ~ 2018.12.31. : 비과세
- 2019. 1. 1. ~ : 분리과세(14%)

● 일부정지금액의 산정

-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소득월액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수로 나눈 금액

* 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

*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정지금액 산정

초과소득월액	월 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예 시 1 2021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 있을 경우 연금정지액 산정

○ 조건

- 연금월액 : 2,500,000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0,000원)
- 월 정지액 : 628,500원 (연간정지액 7,542,000원)

○ 정지액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산 정 항 목	산 식	금 액
○ 총급여액		60,000,000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15,000,000 × 5%)	12,750,000
○ 근로소득금액	• 60,000,000 - 12,750,000	47,250,000
- 소득월액	• 47,250,000 ÷ 12월	3,937,500
○ 초과소득월액	• 3,937,500 - 2,390,000	1,547,500
○ 일부정지액	• 600,000 + (47,500 × 60%)	628,500

[참고자료 1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제1항)]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예시 2 2021년도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정지액 산정

- A 기관 : 종사월수 12개월('21. 1. 1. ~ 12.31.), 월 100만원 (연간 12,000,000원)
- B 기관 : 종사월수 7개월('21. 6. 1. ~ 12.31.), 월 560만원 (연간 39,200,000원)

- 정지대상 기간 : 2021. 1. 1 ~ 12.31.
-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
 - ※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정지대상 **총급여액** : 51,200,000원(=12,000,000원+39,200,000원)
- 일부정지액 : 월 290,330원(연 3,483,960원)
 - 당해연도 소득의 합에 전체 종사월수(1.1.~12.31.)를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 산정

<일부정지액 세부 산정표>

(단위 : 원)

산정항목	산식	금액
○ 총급여액		51,200,000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6,200,000 × 5%)	12,310,000
○ 근로소득금액	• 51,200,000 - 12,310,000	38,890,000
- 소득월액	• 38,890,000 ÷ 12월	3,240,833
○ 초과소득월액	• 3,240,833 - 2,390,000	850,833
○ 일부정지액	• 150,000 + (350,833 × 40%)	290,330

예시 3 2021년도 부동산임대소득 (상가임대, 장부기재) 신고예시

- 연금월액 : 2,500,000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0,000원)
- 월임대료 : 1,500,000원 (연간 18,000,000원, 필요경비 : 7,468,800원 가정)
- 임대보증금 : 500,000,000원 (간주임대료 (5억-3억) × 60% × 2.1% = 2,520,000)
- 월 정지액 : 0원

(단위 : 원)

구분	산식	금액
총수입금액 ①	간주임대료 2,520,000 + 연간임대료 18,000,000 ※ 간주임대료에서 보증금운용 금융수익은 차감	20,520,000
필요경비 ②	장부상 경비	7,468,800
사업소득금액①-②	총수입금액 20,520,000 - 필요경비 7,468,800	13,051,200

<정지액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산정항목	산식	금액
○ 사업소득금액	• 13,051,200 (만원미만 절사)	13,050,000
- 소득월액	• 13,050,000 ÷ 12월	1,087,500
○ 초과소득월액	• 1,087,500 - 2,390,000	△1,302,500
○ 일부정지액		0

예 시 4 2021년도 부동산임대소득 (2주택자의 경우) 신고예시

- 연금월액 : 2,500,000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0,000원)
- 월임대료 : 3,000,000원 (연간 36,000,000원, 필요경비 : 1,000,000원 가정)
- 월 정지액 : 160,660원 (연간정지액 1,927,920원)

(단위 : 원)

구 분	산 식	금 액
총수입금액 ①	연간임대료 36,000,000	36,000,000
필요경비 ②	장부상 경비	1,000,000
사업소득금액 ①-②	총수입금액 36,000,000원 - 필요경비 1,000,000원	35,000,000

<정지액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산 정 항 목	산 식	금 액
○ 사업소득금액	• 35,000,000 (만원미만 절사)	35,000,000
- 소득월액	• 35,000,000 ÷ 12월	2,916,666
○ 초과소득월액	• 2,916,666 - 2,390,000	526,666
○ 일부정지액	• 150,000 + (26,666 × 40%)	160,660

[참고자료 1 : 정지액산정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항)]

초과소득월액	월 정지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예 시 5 2021년도 부동산임대소득 (3주택 소유 주택임대, 미기장 추계신고) 예시

- 연금월액 : 2,500,000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90,000원)
- 월임대료 : 5,000,000원 (연간 60,000,000원)
- 임대보증금 : 5억원 (간주임대료 : (5억-3억)×60%×365×2.1%×1/365 = 2,520,000)
- 월 정지액 : 995,660원 (연간정지액 11,947,920원)

(단위 : 원)

구 분	산 식	금 액
총수입금액 ①	간주임대료 2,520,000 + 연간임대료 60,000,000	62,520,000
필요경비 ②	총수입금액 62,520,000 × 13.1%(일반주택임대(701102)의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는 각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산정	8,190,120
사업소득금액 ①-②	총수입금액 62,520,000 - 필요경비 8,190,120	54,329,880

<정지액의 산정방법>

(단위 : 원)

산 정 항 목	산 식	금 액
○ 사업소득금액	• 54,329,880 (만원미만 절사)	54,320,000
- 소득월액	• 54,320,000 ÷ 12월	4,526,666
○ 초과소득월액	• 4,526,666 - 2,390,000	2,136,666
○ 일부정지액	• 900,000 + (136,666 × 70%)	995,660

[참고자료 1 : 정지액산정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항)]

초과소득월액	월 정지액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예 시 6 2021년도 이연성과급이 존재할 경우 연금정지액 산정

- A 기관 : 종사월수 7개월('21. 1. 1. ~ 7.31.), 월 100만원 (연간 7,000,000원)
- B 기관 (이전 재직기관) 이연성과급 3,000만원 수령 ('21. 8. 2. ~ 8. 2.)

- 정지대상 기간 : 2021. 1. 1 ~ 7.31.
- 이연성과급으로 1년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 정지액 발생
- 이연성과급이 지급된 8월은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지월수에 반영하지 아니함
- 정지대상 총급여액 : 37,000,000원(=7,000,000원+30,000,000원)
- 일부정지액 : 월 304,000원(연 2,128,000원)
- 당해연도 소득의 합에 전체 종사월수(1.1.~8.31.)를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 산정

<일부정지액 세부 산정표>

(단위 : 원)

산 정 항 목	산 식	금 액
○ 총급여액		37,000,000
- 근로소득공제	• 7,500,000 + (22,000,000 × 15%)	10,800,000
○ 근로소득금액	• 37,000,000 - 10,800,000	26,200,000
- 소득월액	• 26,200,000 ÷ 8월	3,275,000
○ 초과소득월액	• 3,275,000 - 2,390,000	885,000
○ 일부정지액	• 150,000 + (385,000 × 40%)	304,000

03

일부정지 운영절차

구분	상세 설명
우선정지 (영 제47조제3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예상소득을 토대로 연금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소득 : 최근 국세청 사업소득, 본인신고소득,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등
정지액 조정 (영 제47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연금지급 정지액을 조정
정산 (영 제47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의 실제소득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국세청을 통해 다음연도 10월경에 확인하여 정확한 정지액을 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산정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 (영 제47조제5항, 제6항) (법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정지액보다 우선정지액이 많을 경우에는 환급하고 적을 경우에는 연금에서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 급 : 일괄지급 (1월 연금지급시) · 추가공제 : 연금월액의 50% 범위 내에서 정산차액 완납 시까지 매월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월액의 5%~ 20%, 5%단위 선택 가능 -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월액의 10%~ 50%, 10%단위 선택 가능 ※ 우선정지액과 정산차액 등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액의 최고 50%까지만 공제 가능, 우선정지가 연금액의 50% 인 경우 정산차액은 공제되지 못하고 누적관리됨

<2021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건표(정산정지액)>

2021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건표 (정산정지액)

[전년도 평균연금금액 2,390,000원]

월급여 (①/12)	총급여(①)	근로소득공제(②)	근로소득금액 (③=①-②) (사업소득금액)	일부장자 적용소득(④) (③의 만원미만 비율 금액)	소득월액 (⑤=④/12)	평균연금월액 (⑥)	초과소득월액 (⑦=⑥-⑤)	정산정지액
3,327,500	39,930,000	11,239,500	28,690,500	28,690,000	2,390,833	2,390,000	833	249
3,333,333	40,000,000	11,250,000	28,750,000	28,750,000	2,395,833	2,390,000	5,833	1,749
3,583,333	43,000,000	11,700,000	31,300,000	31,300,000	2,608,333	2,390,000	218,333	65,499
3,750,000	45,000,000	12,000,000	33,000,000	33,000,000	2,750,000	2,390,000	360,000	108,00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35,850,000	2,987,500	2,390,000	597,500	189,000
4,166,667	50,000,000	12,250,000	37,750,000	37,750,000	3,145,833	2,390,000	755,833	252,333
4,416,667	53,000,000	12,400,000	40,600,000	40,600,000	3,383,333	2,390,000	993,333	347,333
4,583,333	55,000,000	12,500,000	42,500,000	42,500,000	3,541,666	2,390,000	1,151,666	425,833
4,833,333	58,000,000	12,650,000	45,350,000	45,350,000	3,779,166	2,390,000	1,389,166	544,583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7,250,000	3,937,500	2,390,000	1,547,500	628,500
5,416,667	65,000,000	13,000,000	52,000,000	52,000,000	4,333,333	2,390,000	1,943,333	865,999
5,833,333	70,000,000	13,250,000	56,750,000	56,750,000	4,729,166	2,390,000	2,339,166	1,137,416
6,083,333	73,000,000	13,400,000	59,600,000	59,600,000	4,966,666	2,390,000	2,576,666	1,303,666
6,250,000	75,000,000	13,500,000	61,500,000	61,500,000	5,125,000	2,390,000	2,735,000	1,414,500
6,666,667	80,000,000	13,750,000	66,250,000	66,250,000	5,520,833	2,390,000	3,130,833	1,691,583
7,083,333	85,000,000	14,000,000	71,000,000	71,000,000	5,916,666	2,390,000	3,526,666	1,968,666
7,500,000	90,000,000	14,250,000	75,750,000	75,750,000	6,312,500	2,390,000	3,922,500	2,245,750
7,916,667	95,000,000	14,500,000	80,500,000	80,500,000	6,708,333	2,390,000	4,318,333	2,522,833
8,166,667	98,000,000	14,650,000	83,350,000	83,350,000	6,945,833	2,390,000	4,555,833	2,689,083
8,333,333	100,000,000	14,750,000	85,250,000	85,250,000	7,104,166	2,390,000	4,714,166	2,799,916
8,750,000	105,000,000	14,850,000	90,150,000	90,150,000	7,512,500	2,390,000	5,122,500	3,085,75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93,090,000	7,757,500	2,390,000	5,367,500	3,257,250
9,166,667	110,000,000	14,950,000	95,050,000	95,050,000	7,920,833	2,390,000	5,530,833	3,371,583
9,885,000	118,620,000	15,122,400	103,497,600	103,490,000	8,624,166	2,390,000	6,234,166	3,863,916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104,850,000	8,737,500	2,390,000	6,347,500	3,943,250
10,833,333	130,000,000	15,350,000	114,650,000	114,650,000	9,554,166	2,390,000	7,164,166	4,514,916

* 위 조건표의 연금지급정지액은 소득금액에 12개월 통산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 연금지급정지액은 연금회원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라서 산정된 연금지급정지액(월)이 본인 연금월액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지급정지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출연·출연·출연하여 소득월액이 전액 공무원기초소득월액 평균액(5,390,000원)의 1.6배(8,624,000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정지

3. 급여의 환수

1 환수사유

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

0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

예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0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

예시

급여액 산정착오 등으로 급여가 과오지급된 경우

2 환수금액(영 제34조)

- 이미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금액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함

이자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자 계산기간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금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환수비용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연체이자 계산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체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3 환수금의 납부기한 및 강제징수(법 제37조제2항, 영 제34조)

- 납부기한 :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납부 기한 내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환수금의 분할납부(영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

01 요건

- 환수금의 납부 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분할납부할 수 있음
 - ※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

02 분할납부 기간

- 환수금액에 따라 다음의 횟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환수금 납부 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매월 분할하여 납부가능

-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회
-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0회
- ◆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이상 경우에는 60회

03 분할납부 이자 및 분할 납부액

-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을 적용 산정
-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
 - ※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분할이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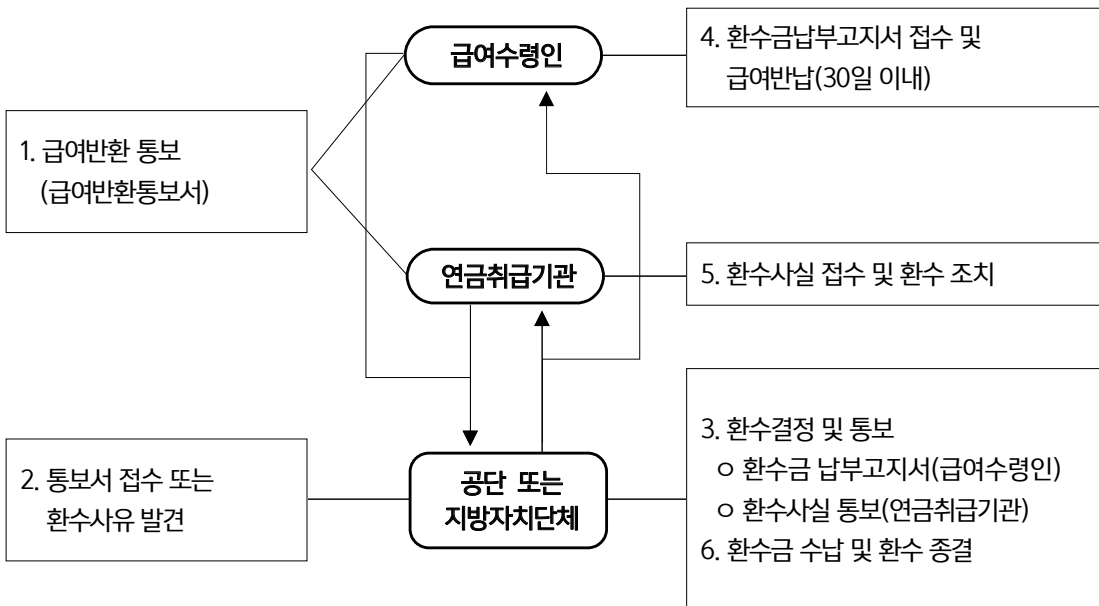
04 분할납부의 취소

-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음

05 분할납부금 산정방법

산정	분할납부금	원리금 균등상환의 분할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L = \frac{Ar(1+r/12)^n}{(1+r/12)-1}$ (L: 분할납부금, A: 분할원금, r: 이자율, n: 분할납부횟수) ※ 분할원금 : 분할납부 승인일 현재 미납된 환수원금 및 연체이자 등 미납원리금 합계액
	분할이자	잔여 분할원금에 분할납부 이자율을 곱하여 12로 나누어 산출(원 미만 절사)
납부	분할원금	각 회차의 분할납부금에서 분할이자를 차감한 금액 ※ 최종 회차의 분할원금은 최종 회차의 미납 분할원금으로 함
	연체이자	연체된 납부회차의 분할원금 중 환수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산출
	분할납부일	분할납부 승인 통보일(문서발송일) 기준 30일 후를 분할납부일로 하되, 신청서에 납부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일로 함

06 급여환수 절차



5 환수금의 결손처분(법 제37조제3항, 영 제35조)

-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환수금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음

- ◆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은 경우
- ◆ 환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 채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채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결손처분 한 이후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환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납처분 불가능

4. 급여수급권 및 급여환수권 등의 시효

1 급여수급권의 시효(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

-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는 없음)
 -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단기급여
요양급여, 재할급여(재할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공단의 급여환수권 등의 시효(법 제88조제3항 내지 제5항)

- 기여금·환수금·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3 시효기산일(영 제93조)

01 심사청구 및 소송에 의한 경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인용결정 및 소송에 승소한 경우 그에 관련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

02 급여액의 일부가 지급 중지된 경우

-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 지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중지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

5.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법 제39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 이 경우 연금인 급여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상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6.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1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법 제41조제1항, 영 제36조)

01 조정 내용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

02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

-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 1. 1.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월수를 곱한 금액)

-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03 연금취급기관장의 조사확인 의무

-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

2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법 제42조, 영 제37조)

01 조정 내용

-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 수급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02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

- 신고의무 : 당해 급여수급자 및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신고
- 조 사
 -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가해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

3 타 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과의 조정(법 제41조제2항)

01 조정 내용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는 '96. 1. 1.부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18.9.21.부터 이법에 의한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퇴직유족연금을 감하여 지급

02 감액되는 금액

- 당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

7. 퇴직급여 지급의 특례사항

1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01 청구요건(법 제52조제1항, 영 제49조제1항)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방불명된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등 업무 처리기준(연금운영실-2352, 2017.8.10.)
 - 청구권 발생기준 : 행방불명일(또는 거주불명일) + 1년 경과시 청구권 발생
 - ※ 청구권 소멸시효 : 행방불명일(또는 거주불명일) + 1년 + 5년(청구시효)
 - ※ 행방불명 미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신고 필요

해외 거주자	해외 여행자(국내 거주자)
재외공관 장의 확인서	현행과 동일(시·군·구청장의 확인서)

- 유족승계 기준일 : 상속인(유족)이 연금을 받을권리(행방불명일 + 1년 후)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도래)한 때의 다음 달부터 감액 지급

행방불명일이 4년이 속한 달까지	행방불명일이 4년이 속한 달의 익월
100%	60%

※ 안행부 지침 (연금복지과-2099 2014.6.27.), 사내변호사('16.12.29), 외부자문('17. 6.23.)

02 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한 경우(법 제52조제2항)

-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
- 연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03 행방불명자의 사망사실 확인 시(법 제52조제3항)

-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중에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
-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공무원이 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 가산이자 :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영 제49조제2항)

04 행방불명자의 생존사실 확인 시(법 제52조제4항, 영 제49조제3항)

-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60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급여액의 차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차액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함.

※ 가산이자 :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영 제49조제2항)

※ 행방불명된 자의 사망일 및 생존사실 확인일은

- 사망일은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사망일로 기재된 날
 - ※ 『기본증명서』상 실종자에 대한 사망여부는 “실종신고일”, “실종만료일”, “실종선고심판확정일”, “사망신고일” 중 “실종만료일”로 사망 간주
- 생존사실 확인일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재등록된 날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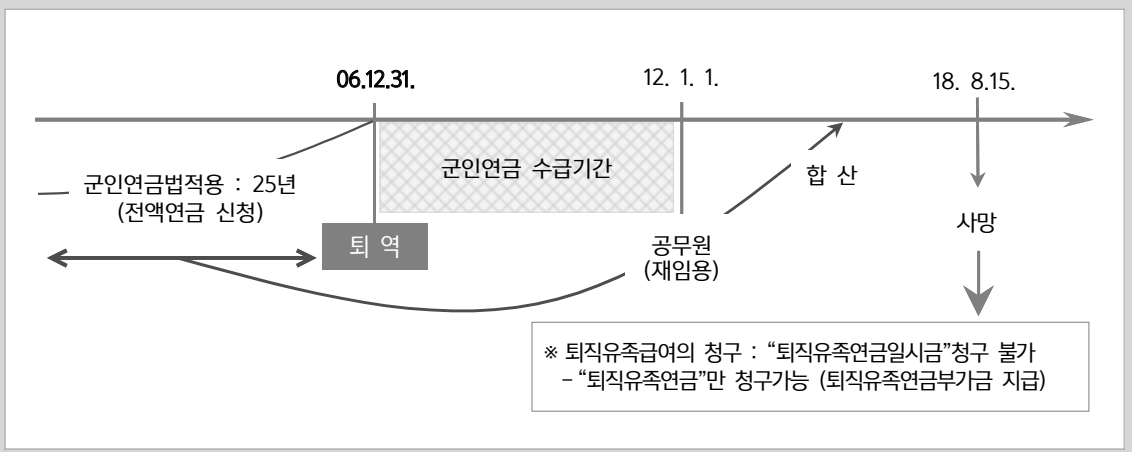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법 제52조제5항)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57조의 규정을 준용

2 연금수급권자 재직기간 합산 후 재·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 포함)만을 받을 수 있고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받을 수 없다(법 제40조제2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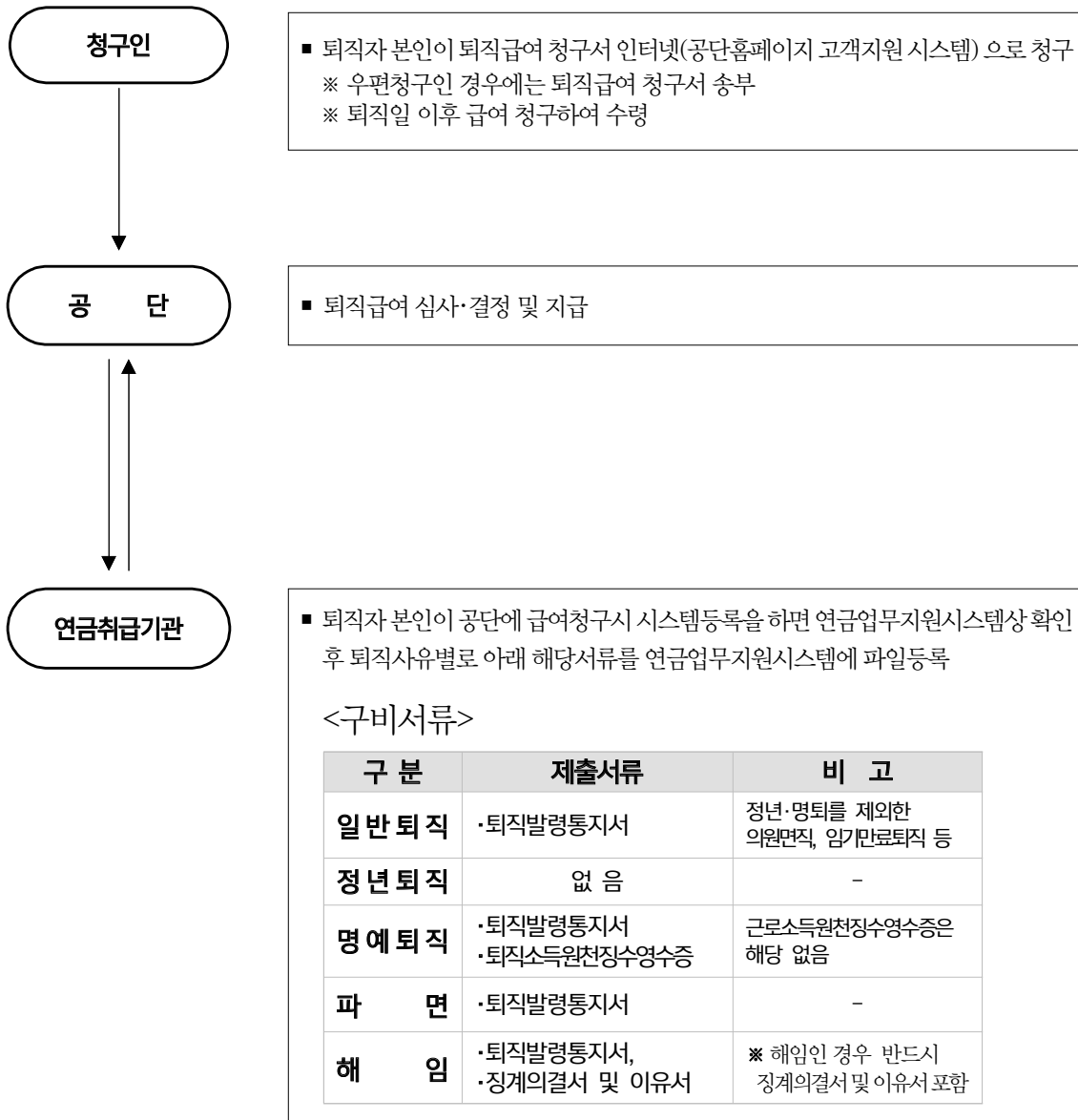
3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영 제42조제1항)

-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그 급여액이 합산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재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합산반납금+이자+재임용기간 급여액)을 지급

8. 퇴직급여 청구절차

1 청구절차

01 청구요건(영 제41조)



2 퇴직급여 종류의 변경 청구

01 퇴직연금 수급 중 일시금으로 또는 일시금 수급 후 연금으로 급여종류 변경 불가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 퇴직연금 수급 중 일시금으로의 전환 또는 일시금 수급 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02 급여의 종류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영 제48조제1항)

-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지급일을 말함)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 주의: 30일 이내 변경신청서와 반납금액(이자포함)이 완료되어야 함

03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이자 산정(영 제48조제2항)

- 급여종류를 변경할 경우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 이때 급여 반환금액은 급여수령액(퇴직수당 제외)에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납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을 위한 첨부할 서류

0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영 제39조제1항)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이후 5년 경과 시

퇴직연금을 지급

- 연금취급기관장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사실확인서』에 그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직발령장, 정원 및 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퇴직사실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02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의 정도 확인(영 제40조)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퇴직급여청구서』에 해당 공무원이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여야 함
- 공단은 해당 공무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상태(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

03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 첨부

- 직제정원 개폐퇴직, 장애상태 퇴직,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등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변경되는 경우에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를 급여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함

4

퇴직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 서식(2),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과 명예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제2호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송부(공무원 퇴직 및 연금소득 과세부분 참조)
- 공무원퇴직시 퇴직급여청구를 본인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발령장 등을 퇴직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파일등록 필요

- 공무원이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퇴직급여 청구 시점에 수사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를 제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형벌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형사재판 계류 또는 확정시 : 판결문(직무관련이 없는 과실여부 등 판단필요) 및 형사재판계류증명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부

< 감사원의 연금취급기관 지적사례 >

1. 공무원의 범죄 수사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처리 하고 퇴직급여를 전액 청구한 경우
 <사례>
 연금취급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수사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리 후 퇴직급여 청구서상에 수사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청구
 <처분요구사항>
 범죄 혐의자의 의원면직 및 퇴직급여 청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2. 관계 기관 간 협조미비로 인한 급여전액 청구
 <사례>
 소속기관에서 수사 진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 연금취급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감사부서에서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연금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청구
 <처분요구사항>
 형벌자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 협조체제 확립 등 퇴직급여 청구 업무에 철저
3. 퇴직급여 청구 후 사후관리 미흡
 <사례>
 퇴직급여 청구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형벌사항 등을 통보받고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단이 과다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하지 못함
 <처분요구사항>
 과다지급된 퇴직급여를 적정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퇴직자의 범죄사실 통보업무에 철저

<형벌로 인한 공무원임용 및 당연퇴직 등이> 공무원연금급여에 미치는 영향

I. 관련근거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는 경우 형 확정일 후 5년간 공무원 임용 및 취업할 수 없음 (단,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 및 대학교수, 부교수, 강사 등은 임용제한에서 제외됨)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당연퇴직』사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제5호 제외)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제한(법 제65조, 영 제61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최고 1/2제한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은 때
 - ※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급여제한)
 - 징계 등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때

구 분	퇴직급여 (일시금 및 연금)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 미만	재직기간 5년 이상	
금고이상의 형 또는 파면	1/4 제한	1/2 제한	1/2 제한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	1/8 제한	1/4 제한	1/4 제한

※ 벌금형은 급여제한 하지 않음

II. 형벌사항과 공무원연금과의 관계

1. 공무원 임용결격 발생 사례

【형벌사항 : 징역 1년】

구분	내 용		
사례	1975. 1. 10.	1977. 1. 1.	2018. 12. 31.
	징역 1년 형 확정	공무원 임용	정년퇴직

-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1973.3.31. 이전 임용자는 3년)이 경과한 후 공무원임용 가능
 - 공무원 임용가능 시점 : 1981. 1.10.이후(미결구금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계산해야 함)
 - ※ 미결구금일수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형법 제57조),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형사소송법 제482조)
- 임용가능시점 이전에 임용되어 퇴직시 임용결격사항이 확인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형벌사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분	내 용		
사례	1980. 1. 10.	1984. 1. 1.	2016. 12. 3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원 임용	정년퇴직

- 금고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고 2년(1973.3.31. 이전 임용자는 1년)이 경과하여야 공무원 임용 가능
 - 공무원 임용가능 시점 : 1984. 1.10.이후
- 임용가능시점 이전에 임용되어 퇴직시 임용결격사항이 확인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후 공무원임용】

구분	내 용		
사례	1980. 12. 10. 파면	1983. 1. 1. 공무원 임용	2016. 12. 31. 명예퇴직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을 받은 때로부터 5년(해임은 3년)이 경과한 후 공무원 임용가능
 - 공무원 임용가능 시점 ·파면 : 1985.12.10.
 _·해임 : 1983.12.10.
 - ※ 1973. 3.31. 이전에는 파면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임용 가능
 - ※ 해임자는 1981. 5.31. 이후부터 임용결격 규정 신설
- 임용가능시점 이전에 임용되어 퇴직시 임용결격사항이 확인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형벌사항 : 징역 1년 선고유예】

구분	내 용		
사례	1990. 12. 10. 징역1년 선고유예	1992. 1. 1. 공무원 임용	2016. 12. 31. 명예퇴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공무원임용 가능
 - 공무원 임용가능 시점 : 1992.12.10.
- 임용가능시점 이전에 임용되어 퇴직시 임용결격사항이 확인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2. 공무원 당연퇴직 지연 처리에 따른 급여 부지급 사례

【형벌사항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소속기관에서 형 확정일에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않아 퇴직시 형벌 확인된 경우

구분	내 용		
사례	1990. 12. 29.	2013. 5. 3.	2019. 6. 30.
	공무원 임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연퇴직	정년퇴직 (퇴직급여 청구)

-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 발령 처리(공무원 당연퇴직 시점 : 2013. 5. 3.)
- 퇴직급여 청구권은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된 2013. 5. 3.부터 소멸시효 진행(퇴직 급여 청구 기한 : 2018. 5. 3.)
- 퇴직급여 신청 당시까지 당연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 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당연퇴직일 이후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형벌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분	내 용		
사례	1980. 1. 1	2005. 12. 31	2018. 12. 31
	공무원 임용	벌금 200만원 확정	명예퇴직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취임 할 수 없음(공무원 당연퇴직 시점 : 2005.12.31.)
- 당연퇴직 시점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 후 정년퇴직 시 형벌로 인한 당연퇴직사항이 5년경과 후 확인된 경우 당연퇴직시점 이전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 급여는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음
- 당연퇴직 일 이후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기여금 반환

3. 재직 중의 형벌사유에 의한 급여 제한 사례

【형벌사항 : 징역 1년】

구분	내 용	
사례	1980. 1. 10.	2018. 12. 31.
	공무원 임용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당연퇴직처리)

-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 발령 처리(공무원 당연퇴직 시점 : 2018.12.31.)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연금)와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최고 1/2 제한하여 지급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제한)

4. 재직 중의 형벌사유에 의한 급여 유보 사례

【형벌사항 : 재판 중】

구분	내 용			
사례	2017. 12. 31.	2018. 1. 5.	2018. 5. 25.	2018. 5. 25.이후
	(급여청구-재판 중)	급여지급	형확정(벌금형)	잔여급여 청구

- 재판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유보
 - 퇴직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제한지급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직무와 관련여부가 상관없이 급여제한)
 - * 단, 2010.3.22. 이후 발생한 뇌물,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선고유예확정 시 당연퇴직 (정년·명예퇴직 사전청구자의 경우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생)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이상	1/2지급	1/2지급
재직기간 5년미만	3/4지급	1/2지급

- 잔여급여 청구가능 시점 : 2018. 5.25. 이후
- 유보한 급여는 금고미만의 형확정 후 잔여급여청구서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에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이자산정기간 : 기 퇴직급여지급한 날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5.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발생한 과실범 사례

【형벌사항 : 금고 1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구분	내 용		
	2018. 6. 15.	2018. 7. 19.	2021. 1. 8.
사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당연퇴직	급여 1/2 제한	행정소송 패소(제한처분 취소)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제한
 - 과실범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급여 제한하지 않음
 -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음
- 급여지급 제한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됨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수행 방법에 대한 판단 비교	
1심	◦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구체적 내용(복귀 방법)에 대하여는 재량이 컸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기만 하다가 과실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심	◦ 차량 운전 과정에서 재량이 있다고 해서, 복귀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그 업무 수행상 재량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없음
비교	1심 : 명령 구체적이지만, 복귀 방법은 공무원 재량이 크다고 판단 2심 : 명령 구체적이므로, 복귀 방법은 공무원 재량이 크지 않다고 판단

-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발생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여 급여제한 처분 취소 판결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퇴직급여 지급 관련 사항

I.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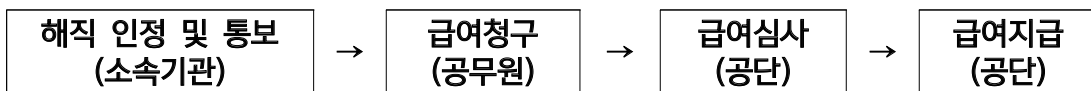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II. 퇴직급여 지급

□ 지급 대상(특별법 제13조)

구 분	대 상
유형 1	파면된 해직공무원 중 특별법 시행일 기준 정년을 도과한 자
유형 2	해직공무원 중 복직되어 해직기간을 합산한 이후 퇴직한 자

□ 지급 절차(특별법 제10조)



□ 청구 방법(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구 분	청구 방법
유형 1	* 특별법 별지 제8호서식의 특례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유형 2	복직되어 퇴직한 이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

* 파면에 의해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정년 도과자는 별도의 청구 없이 2021.4월분 연금부터 감액하지 않은 퇴직연금 전액 지급

□ 퇴직급여 지급(특별법 제13조)

[유형 1 - 정년 도과자]

- 파면으로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감액 받은 경우 감액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파면으로 퇴직연금을 감액 받은 경우 2021.4월부터 감액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지급

[유형 2 - 복직되어 해직기간을 합산한 재퇴직자](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재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되, 종전 해직 사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직경력기간을 산입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급여 지급



제3절 /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종류 및 산정방법(법 제54조, 제55조)

● 종류 및 지급요건

종 류	지급요건	산출방식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
퇴직유족연금 부 가 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퇴직연금일시금의 1/4
퇴직유족연금 특 별 부 가 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 퇴직연금일시금액×1/4 ×(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퇴직유족연금 일 시 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하여 퇴직유족연금 수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법과 동일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 산정방법과 동일

※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의 60%(2015.12.31.이전 사망자는 70%)를 퇴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함(유족이 급여종류 변경불가)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1 대 상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의 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다.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 1996.1.1. 이전에 퇴직한 연금생활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 녀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제1급~제7급인 자녀 ※ 퇴직 이후에 출생·입양한 자녀는 제외, 퇴직 당시의 태아는 포함
부 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제1급~제7급인 경우로서 19세 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자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21. 6. 23 이후]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제1급~제7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상태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영 제3조, [별표1])

대상자	인정 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일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 자녀, 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녀 : 만19세 이상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유족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사실상 부양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로 확인되면 이 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함(2008. 1. 1. 이후 사망인 경우만 인정)

3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법 제31조, 제32조, 제57조제2항)

-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 급여를 받을 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후순위의 유족은 유족연금에 있어서 선순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
- 배우자 (퇴직 후에 혼인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내지 1003조 >

1.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임(제1000조제1항)
 -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임
2.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임(제1000조제2항)
 -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3.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우선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제1003조)
 - 자녀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며(이 경우 자녀가 친자녀일 경우 배우자는 친권자로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단독 청구인이 된다.)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는 동순위임

유족 우선순위 보기

유 족	유족급여수급권자
19세 미만의 자, 배우자 및 부모가 있는 경우	자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나, 자가 미성년이므로 배우자인 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가 수급자가 됨.
19세 이상의 자,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됨.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 중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급자가 되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됨.
19세 미만의 자 및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가 선순위이나 미성년이므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로서 자의 조부모 중 1인이 법정후견인이 되어 미성년자의 유족연금청구
19세미만의 자만 있는 경우	자는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유족연금청구

배우자가 후처인 경우

유 족	유 족 급 여 수 급 권 자
19세 미만의 전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처 자녀의 지분은 그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한 후 각각 분할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면 된다. ※ 이혼한 전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으로 자동 친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2013. 7. 1.민법 개정)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을 확인하여 해당자가 청구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전처 자녀가 없고 후처의 친생자가 있는 경우	후처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어 친생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일괄 청구한다.
19세 미만의 자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후처)와 부모는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자의 지분을 분할 청구하되 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표자가 청구한다.

4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영 제27조)

-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공동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등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각각 첨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가 불필요한 경우 >

- 유족이 각각 자기지분에 대하여 분할 청구할 때
- 미성년자인 친생자 지분을 친권자(부 또는 모)가 청구할 때

※ 공무원 본인 사망시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유족이 급여의 종류를 달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 총액은 균분하여 지급된다.

3.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법 제33조, 영 제28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

급 여 명	지 급 액
연금인 급여	원급여액의 3년분 \times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div 36]
기타 급여	원 급여액의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은 원급여액의 1/2

-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가능
 ※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2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 및 사용범위

수급권자	사용범위
사망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 분묘, 제기, 기념비 등의 마련 - 기념사업 등 비용 -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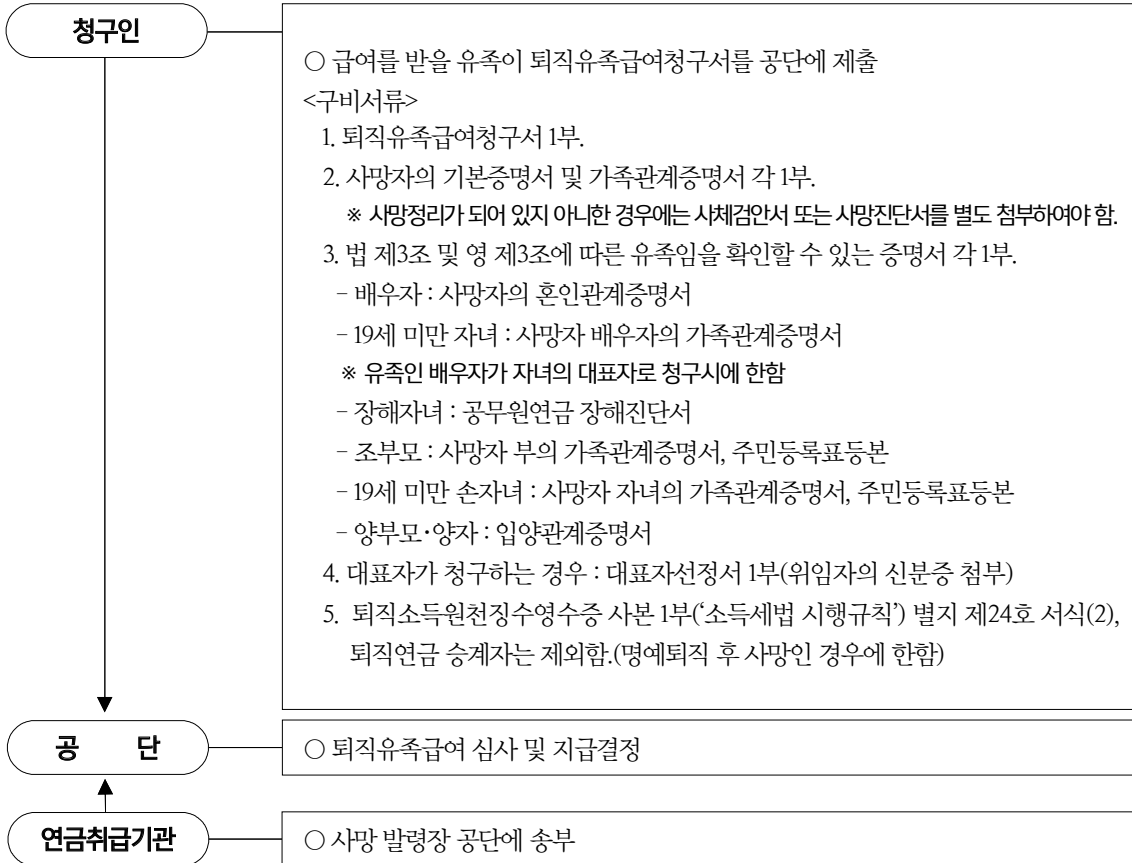
- ※ 사망한 공무원의 추후 행하여 지는 각종 종교의식(예; 영가천도제, 사십구제, 영혼혼례비용 등) 및 제사비용 등은 불인정(연금복지팀-79, 2006. 7.12.)

- 청구절차 등(시행규칙 제2조)
 - 퇴직연금특례 급여청구서에 당해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을 마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4.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급여지급(법 제56조, 영 제52조)

-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 동 급여 청구 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5.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보상금 제외)의 청구절차(영 제51조)



6.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및 이전

1 수급권의 상실사유 및 그 증명(법 제57조제1항, 영 제53조)



2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의 경우 수급권의 이전(법 제57조제2항)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 우선순위인 같은 순위자가 모두 수급권이 상실되어야 다음 순위에게 수급권이 이전됨. 예를 들면 공무원 사망 시 모/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미성년자녀가 같은 순위로 우선순위가 되고 모친은 다음 순위가 됨.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배우자가 단독수급하게 되며, 배우자도 수급권이 상실되면 그 때 다음 순위인 모친에게 이전됨

3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신청(영 제52조)

- 이전 신청 요건 :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거나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이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①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 ② 구비서류

-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족대표자 선정서)
- 행방불명 사실 또는 수급권 상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4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영 제53조)

- 퇴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다음의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동거하는 친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재혼하였거나 친족관계 종료로 인한 때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본인,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장해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상태가 해소된 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제4절 / 퇴직수당

1 지급요건(법 제62조)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91. 10. 1. 시행)

2 지급액 결정

01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재직년수별 지급비율
- ※ 종전기간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 대신 “보수월액(현가)” 적용

02 재직기간

- 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 감축기간(일반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을 차감하여 산정
- ※ 감축하지 않는 휴직기간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 참조

03 지급비율(영 제58조)

(2010년 법개정 이후)

재직기간	지 급 비 율	
	총 전 기 간(1기간) 2009.12.31 이전기간	이 후 기 간(2·3기간) 2010. 1. 1 이후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 / 100	650 / 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5 / 100	2,275 / 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 100	2,925 / 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 100	3,250 / 10,000
20년 이상	60 / 100	3,900 / 10,000

예시 1

- 2010. 1. 1. 임용된 공무원이 2021. 6.30.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 산정

<기준소득월액 3,500,000원, 재직기간 11년6개월의 경우>

$$3,500,000 \times 11년 6월(11.5) \times \frac{2,925}{10,000} = 11,773,125$$

예시 2

- 1995. 1. 1. 임용된 공무원이 2021. 6.30.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 산정(재직기간 26년6월)

· 퇴직당시 현가 보수월액 2,500,000원, 현가 기준소득월액 4,000,000

종전기간(1기간) 퇴직수당 산정	법시행이후기간(2·3기간) 퇴직수당 산정
$2,500,000 \times (26 + \frac{6}{12}) \times 60\% \times 180 / 318$ $= 22,500,000$	$4,000,000 \times (26 + \frac{6}{12}) \times 3,900 / 10,000 \times 138 / 318$ $= 17,940,000$
퇴직수당 지급액 : 22,500,000 + 17,940,000 = 40,440,000	

3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5523호, 2018.3.20. 부칙 제19조)

01 가산금 지급 대상

- 법 시행('91.10. 1.) 당시 재직 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금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 '91.10. 1. 이후 임용자가 합산, 사병산입, 소급통산 승인받은 경우 이 기간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02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산정

- 법 시행일인 2018. 9.2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 시행일 이후 퇴직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법에 의한다.

4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자의 퇴직수당 지급

-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합산(반납)이 되지 않으므로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대해 급여 미수령 합산 신청을 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수령

01 적용대상

- 공무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로 급여미수령 합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02 신청방법

- 퇴직수당 청구와 재직기간 미수령합산을 같은 시기에 공단에 신청한다.

< 유의사항 >

퇴직수당은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다만 법 시행당시('91.10.1.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종래의 보수월액이 적용되며 2009.12.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산정시에만 적용한다.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자의 퇴직수당 지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여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함

※ 단, 기여금미납액, 대부잔액 등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공단에 완납 후 연계신청



제5절 / 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사유 및 제한 금액(법 제63조·제64조·제65조, 영 제59조·제60조·제61조)

제 한 사 유	제 한 금 액									
1.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 액									
2. 중과실 등 ◦ 고의로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해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원급여액의 1/2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3. 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때	원급여액의 1/2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형벌 등 ◦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직무와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자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table><tr><td></td><td>형벌·파면 등</td><td>금품수수 등 해임</td></tr><tr><td>퇴직급여</td><td>·5년 이상 : 1/2 ·5년 미만 : 1/4</td><td>·5년 이상 : 1/4 ·5년 미만 : 1/8</td></tr><tr><td>퇴직수당</td><td>1/2</td><td>1/4</td></tr></table> ◦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가산 지급(기여금 반환)		형벌·파면 등	금품수수 등 해임	퇴직급여	·5년 이상 : 1/2 ·5년 미만 : 1/4	·5년 이상 : 1/4 ·5년 미만 : 1/8	퇴직수당	1/2	1/4
	형벌·파면 등	금품수수 등 해임								
퇴직급여	·5년 이상 : 1/2 ·5년 미만 : 1/4	·5년 이상 : 1/4 ·5년 미만 : 1/8								
퇴직수당	1/2	1/4								

2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유보

01 대 상(영 제61조제4항)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 관련 여부에 불구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으로 인하여
-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02 유보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퇴직일시금의 1/4을 지급 유보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1/2을 지급 유보
- 퇴직수당 : 1/2을 지급 유보

03 잔여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청구(영 제61조 제5항)

- 청구사유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이 유보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여금을 청구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
|--|

※ '96. 1. 1.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이 유보된 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유보된 잔여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

- 청구서류
 - 잔여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
 - 불기소처분 :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 결정서
 - 금고 미만의 형, 선고유예 :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제6절 / 행정구제 제도

1.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의 의의(법 제87조제1항)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원적 성격의 제도이며, 동 결정은 원 처분을 구속하여 소송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함

※ 급여에 관한 결정이란 :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제급여의 승인신청, 지급청구 등에 대하여 불승인, 부지급 또는 제한지급 처분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심사청구 기간(법 제87조제2항)

-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90일 또는 180일 중 먼저 경과하는 기간을 청구 제척기간으로 적용)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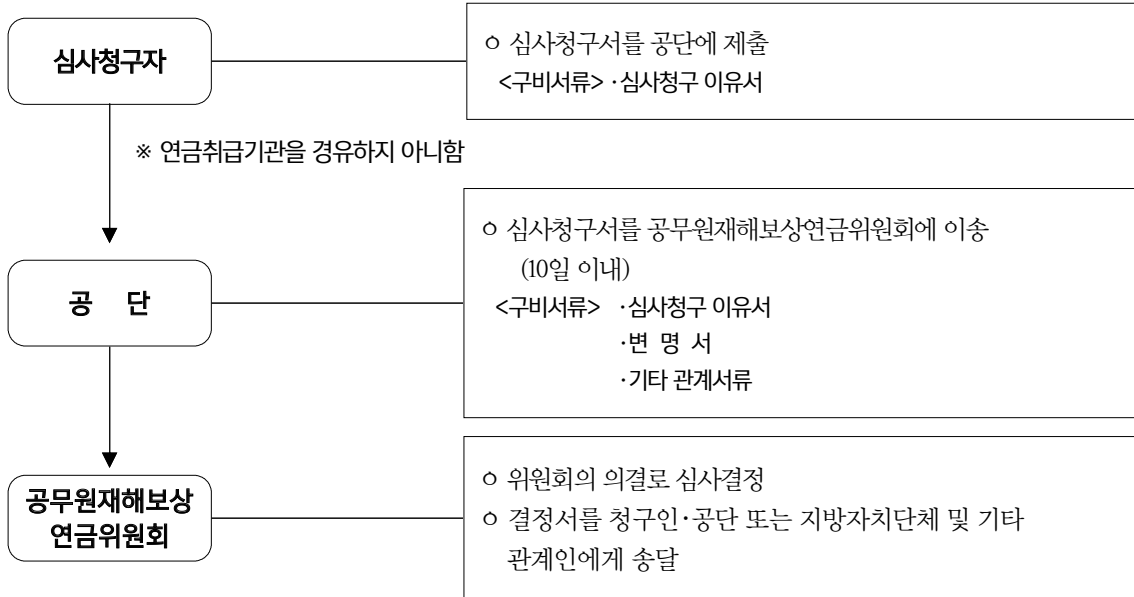
※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됨

※ 기간계산(법 제89조) : 급여, 심사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편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행정심판 청구 배제(법 제87조제3항)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청구로만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4 심사청구 절차(영 제92조)



2.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행정처분 등)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심사청구 제도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속한다.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은 행정청에 포함되므로,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 따라서 공단이 행하는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2 행정소송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제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 제3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된다(제3심제)
- 따라서 공단(이사장)이 행하는 급여 결정 등의 각종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단의 처분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위원회의 결정서 등의 송달일(수령일)을 의미함.

4 행정소송 절차안내

기관명	업무안내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심사청구절차, 행정소송절차, 연금관련 판례 안내 등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사례, 법률서식안내 등
대법원(www.scourt.go.kr)	각종검색(사건, 판례, 법령), 소송절차(알기 쉬운 소송) 안내 등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	법률구조·무료법률상담안내, 사건별 변호사 검색 등



제7절 / 연금 및 퇴직과세제도

1. 개 요

1 과세근거 :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

-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
 - ①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부한 일반·소급기여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부칙 <법률 제6292호, 2000.12.29.> 제9조)
 - ※ 소급기여금의 소득공제는 기여금 납부연도 기준임. 단, 임용전 병역복무나 휴직기간의 연도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름

기 간	2000.12.31. 이전	2001. 1. 1.~12.31.	2002. 1. 1. 이후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없음	소급기여금 납부액의 50%	소급기여금 납부액의 100%

- ※ 합산납부금은 연금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② 퇴직일시금 등과 퇴직연금의 일정비율 ('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 납입월수)에 대해 과세(소득세법 제20조의3)
 - ※ 단, 공무원연금법상 2001.12.31. 이전 기여금 납부 면제자가 2002년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2 과세대상 소득

01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 연금취급기관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포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02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 ※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 단기급여(사망조의금 등),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2. 퇴직소득

1 과세근거

<일반 퇴직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 2002년(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2002년 이후 재임용된 재직기간 합산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 재임용 이후의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총액이 과세대상 소득임

※ 2002년 이후에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이 과세기준일임

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퇴직소득과세산정방식



01 과세대상퇴직소득 산출

-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 과세기준일 이후의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02 근속연수 공제(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별로 1차 공제
 - ※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1년으로 본다)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 단, 합산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적용

□ 근속연수공제

구분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03

퇴직소득과세표준액(소득세법 제14조제6항)

- 과세대상 퇴직소득액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 됨
-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연분연승법에 따라 해당근속연수로 나눈값에 12를 곱한 12배수법을 적용하여 환산소득을 산출하고,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함.

□ 환산급여 차등공제(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환산급여	차등공제
800만원 이하	100%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04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 환산과세표준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 차등 적용(6~42%)

□ 세율표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 초과	3,760만원+1.5억원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 단, 2019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연도별로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이 비율계산 되고, 2020년이 되면 개정된 규정만 적용.

- 종전규정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 16년 이후에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연도별 특례계산(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2852호, 2014.12.23.>제25조)

퇴직연도	연도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80%+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20%
2017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60%+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40%
2018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40%+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60%
2019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20%+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100%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계산방법 : 전통적인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연분연승법

전체 과표 → 연분된 과표 → 1년간 산출세액 → 연승된 산출세액

(*) 과세표준 계산 시 40% 비례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적용

[사 례] 퇴직일시금 등 4억5천만원(과세대상 3억8,250만원), 근속기간 20년(1999. 1. 1. ~ 2018.12.31.)

※ 과세대상퇴직급여는 2002년 이후 기여금납부월수 204개월/총 기여금납부월수 240개월로 계산됨

※ 명예퇴직수당은 전액과세대상금액임

[1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 217,500,000

일단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데, 2012년까지는 총 퇴직금에서 무조건 40%를 공제하고 20년 근속에 대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20년 근속하면 근속연수공제는 1,200만원임. 따라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항 목	금 액	내 용
퇴직급여	382,500,000	수령한 퇴직금 ※ 공적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분만 과세
(-) 퇴직소득공제	(-) 153,000,000	퇴직금의 40% 정률공제 ※ '11년~'15년까지 적용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 공제표에 따라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17,500,000	

[2단계] 연분된 과세표준 : 10,875,000

1단계에서 계산된 217,500,000원은 20년 근무분에 대한 과세대상퇴직소득임

따라서 여기에 곧장 소득세율을 곱할 수가 없음. (소득세율은 1년분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해야 하기 때문)

217,500,000원을 20년으로 나누어 $217,500,000 / 20 = 10,875,000$ 이 1년분 과세표준임.

[3단계] 1년분 산출세액 : 652,500

10,875,000원은 6%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10,875,000 \times 6\% = 652,500$ 원임

그런데 652,500원은 1년분 퇴직소득세임

[4단계] 연승된(20년분) 산출세액 : 13,050,000

3단계에서 계산된 1년분 652,500원 퇴직소득세에 20년을 곱하면 총 퇴직소득세가 나옴

 $652,500 \times 20 = 13,050,000$ 원

※ 우리나라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을 연분연승이라 부르는 이유는 일단 20년분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준 후(연분) 1년분 세금을 계산한 후,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20년분 총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임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		
1년	300,000	-
5년	500,000	1,500,000
10년	800,000	4,000,000
20년	1,200,000	12,000,000

<세율표>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일반세율표를 적용하는것보다, 누진공제액 적용이 계산이 간편함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계산방법 : 연분연승법, 5배수 환산법

- 2012.12.31. 까지 기간 : 전통적 방식으로 1년분 산출세액 계산
- 2013. 1. 1. 부터 기간 : 1년간 산출세액 계산 시 $\times 5$, $\div 5$ 적용

[사 례] 과세대상 퇴직금 3억8,250만원, 근속기간 20년(1999. 1. 1.~2018.12.31.)

[1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 단계 내용은 바로 전에 설명드린 연분연승법과 동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3,000,000의 과세표준이 나옴

항 목	금 액	내 용
퇴직급여	382,500,000	수령한 퇴직금 ※ 공적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분만 과세
(-) 퇴직소득공제	(-) 153,000,000	퇴직금의 40% 정률공제 ※ '11년~'15년까지 적용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 공제표에 따라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17,500,000	

[2단계] 연분된 과세표준

이 단계도 바로 전 연분연승법과 동일함. $217,500,000 / 20년 = 10,875,000원$

바로 1년분 과세표준임.

[3단계] 1년분 산출세액

이 단계부터 2013년 이전 내용과 달라짐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과 그 이후기간을 구분

즉, 2012.12.31.까지 근속기간과 2013. 1. 1.부터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

- 2012.12.31.까지 1년분 산출세액 : $10,875,000 \times 6\% = 652,500$

- 2013. 1. 1.부터 1년분 산출세액 : $[10,875,000 \times 5배 \times 24\% - 5,220,000] \div 5 = 1,566,000$

1년분 산출세액 계산방식을 잘 보면 2013. 1. 1. 이후 기간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갑자기 5배를 곱함. 세법의 규정임. 이렇게 5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53,250,000원($10,875,000 \times 5$)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6% \Rightarrow 24%로 급격히 증가함. 그런 다음 아무 이유없이 5를 곱했기 때문에 다시 5로 나누어 줌 이렇게 계산하면 2012년까지는 1년분 퇴직소득세가 652,500원이지만 2013년부터는 1년분 퇴직소득세가 1,566,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됨

[4단계] 연승된 산출세액

이제 근속기간 20년에 대한 총 산출세액, 즉 연승된 산출세액을 계산

퇴직자의 근속기간이 1999. 1. 1. ~ 2018.12.31.이기 때문에 이 근속기간을 2013. 1. 1.기준으로 나눈 뒤 거기에 1년분 세금을 곱함

근속기간	연승된 산출세액
2012년 12월 31일 이전	$652,500 \times 14년 = 9,135,000원$
2013년 1월 1일 이후	$1,566,000 \times 6년 = 9,396,000원$
총 산출세액	18,531,000원

그럼 총 퇴직소득세가 18,531,000원이 나옴

3억8,250만원 퇴직금 대비 18,531,000원이면 대략 그 부담률이 4.8% 정도 됨

이렇듯 고액소득자인 경우 2015년까지 퇴직했을 경우 그 부담률이 상당히 낮음

▶ 2016년 1월 1일 부터 변경된 계산방법: 연분연승법, 12배수환산법

- 1년간 산출세액 계산 시 $\times 12$, $\div 12$ 적용
- 퇴직소득정률공제(40%)폐지, 환산소득금액에 따라 35%~100% 차등 공제

이번에 개정된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2014. 12월에 개정되었지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그 적용은 2016. 1. 1 이후 지급되는 퇴직금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과세대상 퇴직금 3억8,250만원, 근속기간 20년(1999. 1. 1.~2018.12.31.)

[1단계] 퇴직소득 과세대상

항 목	금 액	내 용
퇴직급여	382,500,000	수령한 퇴직금 ※ 공적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분만 과세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 공제표에 따라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370,500,000	

2016년부터는 수령하는 퇴직금 3억8,250만원에서 일단 근속연수공제만 차감

20년 근속하면 근속연수공제가 1,2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럼 과세표준이 370,500,000원이 됨

[2단계] 연분된 과세대상

다음은 1년분 과세대상을 계산합니다. 370,500,000원은 20년분이기 때문에 20으로 나누면

$370,500,000 / 20 = 18,525,000$ 원임

[3단계] 환산 과세표준

다음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데 개정 된 세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 목	금 액	환산급여	차등공제
연분된 과세대상	18,525,000	800만원 이하	100%
배수 적용	$\times 12$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환산급여	222,300,000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
차등공제	(-) 116,735,000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환산 과세표준	105,565,000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연분된 과세대상 18,525,000원에 일단 12를 곱함(이를 환산급여라고 함). 12를 곱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기 위함임

2015년 까지 퇴직에 대해서는 $\times 5$, $\div 5$ 를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times 12$, $\div 12$ 를 적용함

다음으로 퇴직소득정률공제 40%를 적용했으나, 이제는 환산급여차등공제를 함. 환산급여가 18,525,000원이므로, 빨간 박스 친 부분인 3억 원 이하에 해당함

공식에 넣으면 $[61,170,000 + (222,300,000 - 100,000,000) \times 45\%] = 116,735,000$ 원이 되며, 정리하면 환산 과세표준은 105,565,000원이 됨

[4단계] 1년분 산출세액

환산 과세표준이 105,565,000원이기 때문에 세율 35% 구간에 누진공제가 14,900,000원이 되며, 계산된 환산 산출세액 22,047,780원은 $\times 12$ 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12로 나누어야 함.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05,565,000 \times 35\% - 14,900,000] / 12 = 1,837,312$ 원이 됨

[5단계] 총 산출세액

좀 전의 1,837,312원은 1년분 산출세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야 합니다.

$1,837,312 \text{원} \times 20 \text{년} = 36,746,250 \text{원}$

▶ 퇴직연도별 세액 특례계산(2016~2019)

기획재정부가 2014년 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세법이 개정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 이후 퇴직부터 개정된 계산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여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 특례규정을 둔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사 례] 과세대상 퇴직금 3억8,250만원, 근속기간 20년(1999. 1. 1.~2018.12.31.)

(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해 보면 총 퇴직소득세는 18,531,000원이 나옴

자세한 계산방법은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계산방법’을 참고

(2)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

개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36,746,240원이 나옴

자세한 계산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계산방법’을 참고

(3) 총 퇴직소득세

근속기간 1999. 1. 1. ~ 2018.12.31. (20년) 퇴직금 3억8,250만원	
종전규정	개정규정
18,531,000원	36,746,250원
× 40%	× 60%
= 7,412,400원	= 22,047,750원
+	
29,460,150원	

즉, 3억8,250만원 퇴직금 수령 시 부담률은 7.7%가 됩니다.(29,460,150 / 3억8,250만원)

다만,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이 가중비율이 2019년으로 끝나서 2020년이 되면 개정된 규정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퇴직소득 세액계산(2002~2020)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명예퇴직수당)		최종(종단 지급 일시금)		정 산					
	(13) 근무처명				공무원연금공단							
	(14) 사업자등록번호				220-85-00935							
	(15) 퇴직급여		-		382,500,000		382,500,000					
	(16) 비과세 퇴직급여		-		-		-					
	(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		-		382,500,000		382,500,000					
근속 연수	구 분		(18)입사일	(19)기산일	(20)퇴사일	(21)지급일	(22)근속월수	(23)제외월수	(24)가산월수	(25)증복월수	(26)근속연수	
	종간지급 근속연수						0	0	0		0	
	최종 근속연수			1999-01-01	2018-12-31		240	0	0		20	
	정산 근속연수			1999-01-01	2018-12-31		240	0	0	0	20	
	안분	2012.12.31.이전		1999-01-01	2012-12-31		168	0	0		14	
		2013. 1. 1. 이후		2013-01-01	2018-12-31		72	0	0		6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 산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2016 이후)					
			중간지급	최종분		정 산						
과세 표준 계산	(34)퇴직소득(17)			-	382,500,000		382,500,000		(27)퇴직소득(17)		382,500,000	
	(35)퇴직소득정률공제				153,000,000		153,000,000		(28)근속연수공제		12,000,000	
	(36)근속연수공제				12,000,000		12,000,000		(29)환산과세표준(39×5배)		222,300,000	
	(37) 퇴직소득과세표준 (34-35-36)				217,500,000		217,500,000		(30) 환산급여별공제		116,735,000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31) 퇴직소득과세표준(29-30)			105,565,000	
세액 계산	(38)세율공제(37×각근속연수×정산공제율)			152,250,000		65,250,000	217,500,000		(32) 환산산출세액 (31 × 세율)			22,047,750
	(39)연말균과세표준(36/각근속연수)			10,875,000		10,875,000	10,875,000		(33) 산출세액 (32×정산근속연수/12배)			36,746,250
	(40)환산과세표준(39×5배)					54,375,000	54,375,000					
	(41)환산산출세액(40×세율)					7,830,000	7,830,000					
	(42)연말균산출세액 (12이전 (39)×세율, 13이후 (41)/5배)			652,500		1,566,000	2,218,500					
	(43)산출세액(42×각 근속연수)			9,135,000		9,396,000	18,531,000					
최종세액계산			(44)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8					
			(45)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33×퇴직연도별비율) + [(43×(100% - 퇴직연도별비율)]				29,460,150					
			(4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47) 신고대상세액(45 - 46)				29,460,150					
납부 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53) 신고대상세액(47)		29,460,150		2,946,015		-		32,406,165			
	(54) 이연퇴직소득세(51)		-		-		-		-			
	(55) 자감원천징수세액(53-54)		29,460,150		2,946,010		-		32,406,160			

■ 기타 참고사항

①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엑셀 파일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급여관리 → 퇴직소득세 관리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출력(우측 상단 버튼)

3 퇴직소득세액 정산(합산과세)

01 합산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48조)

- 원천징수의무자(공단, 연금취급기관)가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 시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2개 이상(퇴직일시금, 명예퇴직수당 등)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합산하여 과세

02 합산과세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연금취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 공단에 퇴직급여 청구할 경우>

- 연금취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공단에 퇴직급여 신청시 반드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
- 공단에서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지급 시 명예퇴직수당을 합산과세

<공단에 퇴직급여 청구 후 연금취급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할 경우>

- 퇴직급여 청구 시 “정년(명예)퇴직예정 증명서”를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취급기관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송부하거나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안내
※ 퇴직급여청구서에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입하지 않음.
- 연금취급기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공단 퇴직급여와 합산과세

<연금취급기관에서 합산 과세시 명예퇴직수당 및 원천징수사항 착오 통보할 경우>

- 명예퇴직수당이 증가할 경우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 퇴직소득과 증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 하여 소득세 차액을 원천징수한 후 퇴직소득 합산과세 수정신고
- 명예퇴직수당이 증가할 경우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단 퇴직소득과 증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 하여 소득세 차액을 원천징수한 후 퇴직소득 합산과세 수정신고

<합산과세 시 근속연수 적용>

-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공제액 및 산출세액 산정 시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을 적용
- 단, 2002년 이후 재임용되어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 재직기간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4호)

4 과세이연

● 과세이연 제도

- 사용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소득 과세시점을 일정기간까지 미뤄주는 것을 “과세이연제도”라 함.

● 과세이연 계좌

- 근로자 개인은 개인퇴직연금(IRP)을 개설 및 가입하여 퇴직일시금 등을 이체 또는 입금시키는 경우와 이직하는 회사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개인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과세이연계좌”라 함.

● 개인퇴직계좌(IRP)의 특징

- ① 중간정산 또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관리계좌임.
- ②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 가능
- ③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음.
- ④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인출시점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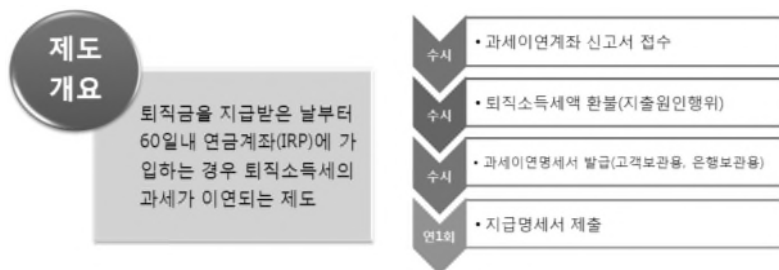
● 과세이연 요건

* 60일 이내의 기간 요건

-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할 것

※ 과세이연대상 퇴직급여액의 판단

- 퇴직급여 전액이 개인퇴직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나,
- 전체 퇴직급여 중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되지 않은 퇴직급여액의 비율만큼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함(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0. 3. 13.>

(2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div>거주구분</div> <div>거주자1 / 비거주자2</div> <div>내·외국인</div> <div>내국인1 / 외국인9</div> <div>종교관련종사자 여부</div> <div>여 1 / 무 2</div> <div>거주지국</div> <div>거주지국코드</div> <div>징수회무자 구분</div> <div>사업장1/공직연금사업자3</div>						
징수회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임원 여부 []여 []무							
	⑨ 주소									
	⑩ 환원금어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거주연도		무한정지	⑫ 퇴직사유	[]정년퇴직 []정년퇴직 []임원퇴직 []중간정년 []자발적 퇴직 기타						
퇴직금어형	근무처구분	중간지급통	회중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근속연수	구분	⑱ 입사일	⑲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대월수	㉔ 기산월수	㉕ 종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회중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내용		금액							
	⑳ 퇴직소득(㉑)									
	㉒ 근속연수공제									
	㉓ 환산급여 [(㉑-㉒) × 12매 / 정산근속연수]									
	㉔ 환산급여별공제									
	㉕ 퇴직소득과세표준(㉑-㉔)									
퇴직소득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㉖ 환산상출세액(㉑ × 세율)									
	㉗ 퇴직소득 산출세액(㉑ × 정산근속연수/12매)									
	㉘ 세액공제									
	㉙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㉚ 신고대상세액(㉖-㉘-㉙)									
이연징수세액	연금계좌와 임금형세		⑳ 퇴직급여(㉑)		㉛ 이연 퇴직소득세 (㉑ × ㉜ / ㉕)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㉜ 제과입금금액					
	㉝ 합계									
과부납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㉞ 신고대상세액(㉑)									
	㉛ 이연퇴직소득세(㉛)									
	㉞ 과부납부세액(㉛-㉞)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회무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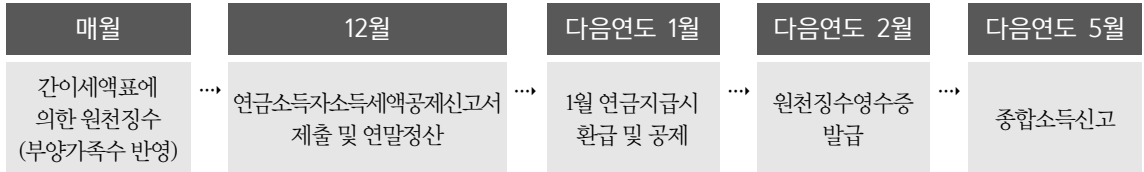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과세 흐름도 】



1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산정

- 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액 산정과 마찬가지로 공적 연금과세가 시행된 2002. 1. 1.(과세기준일)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액만 해당
 -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총 기여금 납부월수
 - ※ 2002년 이후 재임용자가 합산반납금을 납부하고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자가 과세기준일
 - ※ 연금수급자가 재직기간 합산(연금합산) 후 다시 퇴직할 경우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는 「재임용전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재임용일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 공적연계연금승인자 중 연계반납금을 반납한 경우(공무원 재직기간 전체를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완납한 경우), 이에 따른 재직기간은 과세제외기간에 해당

2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공단)는 당해 연금액의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이하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후 연금지급(소득세법 제43조의2)

<당월 연금소득세 계산 예시>

① 과세대상 연금월액 산정 : 872,727원

과세대상 연금월액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연금월액

÷

총 기여금 납부월수

※ 과세대상연금월액 872,727=240만원×144개월÷396개월

② 원천징수 세액 산정 : 월 3,890원(연 46,680원)

(소득세 : 월 3,540원, 지방소득세 : 월 350원)

※ 배우자 1명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7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는 과세대상연금액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

(단위 : 명, 원)

과세대상 연금월액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1	2	3	4
865,000~870,000	10,800	3,300	0	0
870,000~875,000	11,040	3,540	0	0
875,000~880,000	11,280	3,780	0	0

-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당월 원천징수세액에 반영되지 않음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 경로우대(최대3명) 공제로만 계산됨)

3 연금소득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4)

01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 및 시기

- 공단은 다음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당해 연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에서 퇴직연금 소득공제 및 퇴직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기본·추가)를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표준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에 당해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하여 가감 정산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 소득세법 제86조(소득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 비거주자(해외수급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및 표준세액공제 반영안됨

02 원천징수용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 퇴직급여 신청 시 또는 당해연도 중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퇴직연금수급자는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최초연도 연금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
 - ※ 2019년 행안부와 행망연계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동의하면 본인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행망사이트에서 개별 조회 가능)
-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퇴직연금수급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③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03 연말정산 업무처리방법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연금수급자로부터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소득공제신고서 접수 및 심사가 마감됨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절차】

$$\boxed{\text{과세표준}} \times \boxed{\text{세율}} = \boxed{\text{산출세액}} - \boxed{\text{세액공제}} - \boxed{\text{기납부세액}} = \boxed{\text{실제납부해야할 세액}}$$

※ 과세표준 =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소득 연말정산액 산정절차 (예시)

과 세 대 상 연 금 액	10,472,720	*10월 미만 버림
연 금 소 득 공 제	▲5,594,544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연 금 소 득 금 액	4,878,176	
기 본 공 제		
본 인	▲1,500,000	
배 우 자	▲1,500,000	
과 세 표 준 액	1,878,176	
산 출 세 액	112,690	과세표준×6%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14년 신설
결 정 소 득 세	42,690	연말정산결과 납부할세액
결 정 지 방 소 득 세	4,260	소득세의 10%
기 납 부 소 득 세	▲76,560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
기 납 부 지 방 소 득 세	▲7,560	
실 제 납 부 해 야 할 세 액	-37,170	1월연금 지급시 환급

04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 공제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가 있음

<연금소득공제 한도 : 900만원, 소득세법 제47조의2>

- 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 중 과세대상 연금액 단계별로 연금소득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과세대상 연금액	공 제 액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350만 원 초과	350만 원+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490만 원+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 인적공제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표준세액공제)가 있다.
(소득세법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59조의2(자녀세액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퇴직연금수급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 퇴직연금수급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 ※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퇴직연금수급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1인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연도 연금소득에서 공제한다.

● 공제요건

공 제 구 분		요 건	공제금액
기본 공제	본인공제	•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소득세법50①3).
- ※ 가족의 범위에 자녀의 배우자(사위 혹은 며느리)는 적용하지 않음.(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적용됨)
- ※ 당해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됨.
- ※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독자적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형편상의 별거를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및 자녀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됨.

※ 소득금액 요건

-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총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연간 소득금액요건 판정기준 : ①+②+③+④+⑤+⑥+⑦ ≤ 100만원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① 이자·배당소득금액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금융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③ 사업소득금액	총 수입금액(임대료 수입액 등) - 필요경비
④ 기타소득금액	총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⑤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⑥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총액
⑦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2010. 1. 1.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소득세법19①9)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공제대상 범위

구 분	추가공제대상	공제금액
①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자	1인당 100만원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1인당 200만원
③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1인당 50만원
④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가능	1인당 100만원

※ 과세연도 연말정산 신고(12.31.)시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제외

3. 세액공제

구 분	추가공제대상	공제금액
①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안됨. 장애자녀는 만20세 이상도 가능 ※ 아동수당을 받는 6세미만 자녀는 제외('19. 1. 1. 이후)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6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당해연도 출산·입양자가 있을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③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연 7만원을 공제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의 대응 개념이므로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제적용	7만원

05

과세소득표준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됨

06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 연금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 차등 적용(6~42%)
- 연금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

□ 세율표

과세표준액	적 용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07

원천징수세액 정산

- 산출세액이 산정되면 표준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연금지급 시 연금 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면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산정된다. 이 차감원천징수세액은 다음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 지급 시 정산

08

분할연금 과세기준

- (과세여부) 분할연금도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임
- (과세방법) 분할연금에 대한 개별과세
- (과세기간) 분할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이 과세기간임
※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회신 통보(소득세제과-236, 2017.5.15.)
- 분할연금 산정방식 : 분할연금액 × 재직 시 혼인기간 중 '02년 이후 기여금납부월수/ 재직 시 혼인기간 중 총기여금납부월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 3. 20.>

관 리 번 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③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연금지급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 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⑯ 종합소득 과세표준(⑮-⑰)			
⑮ 연금소득공제				⑰ 산출세액			
				세액 감면			
				⑱ 「소득세법」			
				⑲ 「조세특례제한법」			
⑰ 연금소득금액(⑮-⑮)				⑳ 감면세액 계			
종합 소득 공제	기본 공제	㉑ 본인					
		㉒ 배우자					
		㉓ 부양가족(명)					
	추가 공제	㉔ 경로우대(명)					
		㉕ 장애인(명)					
		㉖ 부녀자					
		㉗ 한부모					
㉘ 소득공제 계							
세 액 명 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㉙ 결정세액						계
	㉚ 기납부세액						
	㉛ 차감징수세액						
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㉛ 차감징수세액이 소득 부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 기타사항

- ① 본인공제(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는 기본 적용함(단, 비거주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미반영)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

- ②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음(근로소득 공제 대상임)
- ③ 연금수급자가 자녀 혹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민원 관련
- 기본공제 대상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함.
단,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연령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다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소득이 높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급여가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 ④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대상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함.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종합소득신고 기간(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음.
- ⑤ 이전에 신고한 소득·세액공제자 내역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 작년과 동일하게 공제 적용
- ※ 법적근거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⑥ 본인이 자녀 혹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여부가 Y/N으로 표시됨
 - 「고객지원시스템(내연금 알아보기) 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대상여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 과세기준은 해당연도 국세청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매년 확인 필요

5. 종합소득신고

과세대상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함(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위의 소득이 2개 이상이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임 예) 당해연도 연금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음연도년 5월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종합소득신고의 예외

-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연금소득(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일용직

-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구분됨.
- ※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중에서 특정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임
- ※ 사적연금이 분리과세한도(1,2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록)

관리번호		
------	--	--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소득·세액 공제명세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 후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8절 / 비공무상 장애급여

1. 비공무상 장애급여

01 의의

-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2016. 1. 1. 시행)

02 특징

- 비공무상 장애연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병급 불가하고, 퇴직일시금과는 병급가능하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음
- 2016. 1. 1. 이후 발생한 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퇴직한 경우만 해당
- 공무상장애급여와 달리 연금부담금으로 비공무상 장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 비공무상 장애급여는 “연금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

2. 비공무상 장애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및 지급액(법 제59조, 제60조)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비공무상 장애연금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제1급~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26%
		제3급~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22.75%
		제5급~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9.5%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3. 장애등급의 정도 구분(영 제54조)

- 공무상 장애급여와 동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3, 별표4 준용)

4. 청구 절차(영 제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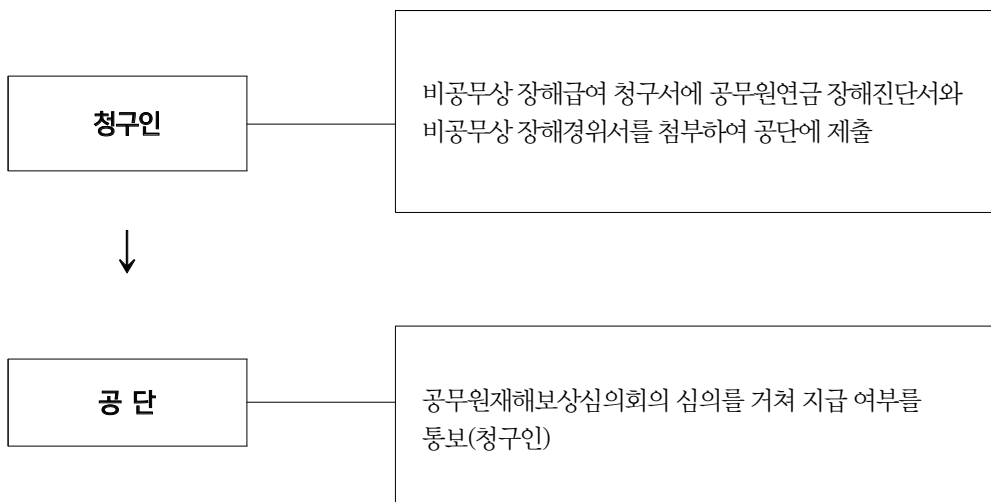
01 청구권 발생

-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

02 청구서류 제출

- 비공무상 장애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연금 장애진단서 및 비공무상 장애경위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직접 공단(지부)에 제출한다.

03 청구절차



5. 공제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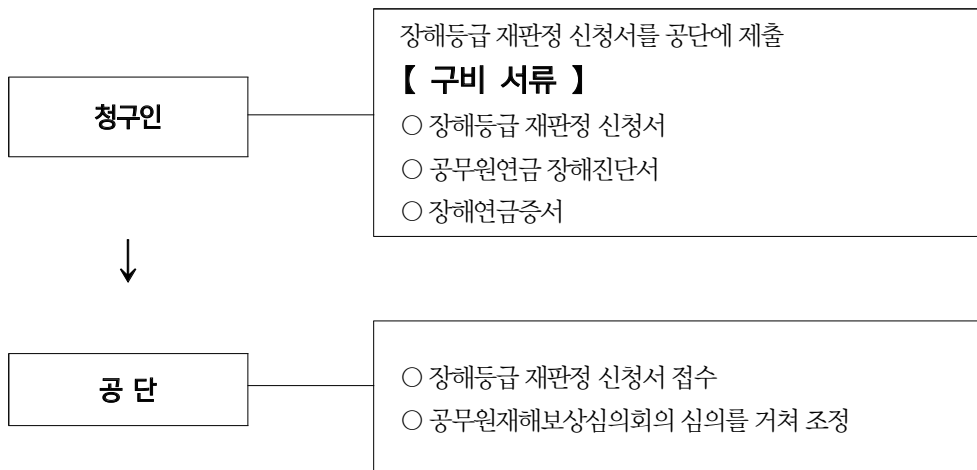
- 장해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뒤편 “구상권 행사” 참조)

6.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법 제60조, 영 제56조)

01 등급의 개정 및 수급권 소멸

- 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장해상태(1~14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02 장해등급의 조정 또는 개정



03 비공무상 장해급여 신청(청구) 서식안내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7. 비공무상 장애급여 청구서 작성 요령

01 경위조사서 유형별 작성방법

질병(내과질환)의 경우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히 논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상병 당일의 경위 : 상병일의 상병계기, 상병 후 증상 등 상병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여 작성 후 날인
 - 당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원인 : 평소 건강상태 및 해당질병 발생(악화)일자를 명확히 표시

(앞 쪽)

비공무상 장애 경위서 (예시)

				처리기간	14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	일 자	진 단 명		
	초진: ○○병원	○○	2018. 1. 2.	협심증 등		
	최종: ●●병원	○○	2018. 3. 1.	협심증 등		
장애발생 경위	발생일	2018. 1. 2.	발생장소	자택		
	경 위	18년 1월 1일 08:00경 등산을 다녀와서 본인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 가슴통증을 느껴 당일 오후 병원에 입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판명되어 입원 수술 후 퇴원하여 약물치료 중에 있음.				
제3자 가해	가해자 (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 처	
	가해자 (법인)	상호			연락 처	
		주소				
	합의 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사고로 인한 경우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히 논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고 당일의 경위 : 사고 일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가해자 유무 : 사고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 가해자 있는 경우 기술(합의여부 기재 등)

(앞 쪽)

비공무상 장애 경위조사서 (예시)

				처리 기간	14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	일 자	진 단 명		
	초진: ○○병원	○○	2018. 1. 2.	우측 다리 절단		
	최종: ●●병원	○○	2018. 3. 1.	우측 다리 절단		
장애발생 경위	발생일	2018. 1. 2.	발생장소	○○동 △△사거리 횡단보도		
	경 위	18년 1월 1일 15:00경 등산을 가기 위해 ○○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우측 다리가 절단됨.				
제3자 가해	가해자 (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가해자 (법인)	상호	○○자동차보험회사			
		주소			연락처	
	합의 사항	합의금 5천만원 수령(2018. 3. 1.)				
<p>「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p> <p>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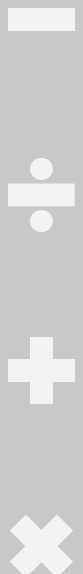
8. 구비서류의 제출

- 구비서류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 서식)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p>1.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부</p> <p>○ 장해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p> <p>○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p> <p>2. 장해경위서 1부</p> <p>3.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최초발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p> <p>4. 장해부위에 따른 제출서류</p> <p>○ 척추 및 뇌질환 장해: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MRI CD” 및 “영상 판독지”</p> <p>○ 관절운동 장해: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p>
추가서류	질병의 경우	<p>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부(내과질환에 한함)</p> <p>○ 건강진단을 받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 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p>
	사고의 경우	<p>1. 교통사고</p> <p>-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p> <p>1) 상대(타승)차량의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p> <p>2) 합의금액이 표시된 합의서 사본</p> <p>3)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p> <p>- 가해차량이 없는 경우: 본인타승차량의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p> <p>2. 폭행사고</p> <p>-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고소장, 형사판결문 등 가해자의 인적 사항 및 가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헌행범인체포서 사건송치서)</p> <p>* 합의한 경우 합의서 사본(공탁금 수령 시 공탁금수령확인서)</p>

제6장 재해보상급여

제1절 재해보상급여	265
제2절 부조급여	311
제3절 기준소득월액 최고 최저 보상기준	333





제1절 / 재해보상급여

1. 제도의 성격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2. 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승인받은 공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25조에 따른 금액
재활 급여	재활 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 또는 공무상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고시금액 범위 내 실제 드는 비용
	심리 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고시금액 범위 내 실제 드는 비용
장해 급여	장해연금		공무상부상·질병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	5년분의 장해연금액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종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준용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금액 내 실제 드는 비용
재해 유족 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액의 60%
	순직 유족 급여	순직 유족연금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8%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가산)
		순직 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가산)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수행 60배)

3. 급여 등의 업무처리절차

구 분	업무처리 절차
공무상 요양 승인(추가상병 포함)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결정) ※ 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요양기간 연장, 요양급여비용,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청구인 → 공단(결정, 산정·지급)
재요양,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인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결정)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결정) → 공단(지급)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국가직 → 공단 해당 지부(결정, 산정·지급) ※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지방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결정, 산정·지급) 교육직 →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결정, 산정·지급)

4. 급여의 결정 및 인정범위

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관련 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관련 사항
 -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 관련 사항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
 - 재요양에 관한 사항
 -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 해당 여부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 유족(손)자녀의 장해상태(1급~7급)에의 해당 여부
 - 요양종결 여부
 - 장해등급 결정 및 개정 등
 -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등

2)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구 분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공 무 상 부 상	<p>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p> <p>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p> <p>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안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p> <p>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p> <p>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p>
공 무 상 질 병	<p>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p> <p>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p> <p>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p> <p>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p> <p>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p> <p>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p> <p>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p> <p>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p> <p>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p>

공무상 질 병	<p>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p> <p>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 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p> <p>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환</p> <p>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p> <p>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p>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p>
공무상 부 상 또는 질 병	<p>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p> <p>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p> <p>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p> <p>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p>
자해행위	<p>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p> <p>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p> <p>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p> <p>다.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	가.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 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
-----------------------------	--

3)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구 분	내 용
	공무와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부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가.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공무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라.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마. 정상적인 출장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바.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사.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질 병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자해행위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만, 시행령 제5조의 사유에 해당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4) 급여 제한사유 및 금액(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제45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12조)

구 분	내 용	급여 감액
고 의 (사망의 경우)	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재해유족급여 전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구 분	내 용	급여 금액
고의 또는 중과실	<p>가.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p> <p>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 하거나 사망한 경우</p> <p>다.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라.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원급여액의 1/2</p> <p>-장해급여</p> <p>-순직유족급여</p> <p>-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p>
진 단 불 응	<p>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경우</p>	<p>원급여액의 1/2</p> <p>-요양급여</p> <p>-장해급여</p> <p>-순직유족급여</p>
양 육 책 임 불이행	<p>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p>	<p>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p>

5. 급여의 청구 및 처리절차

1)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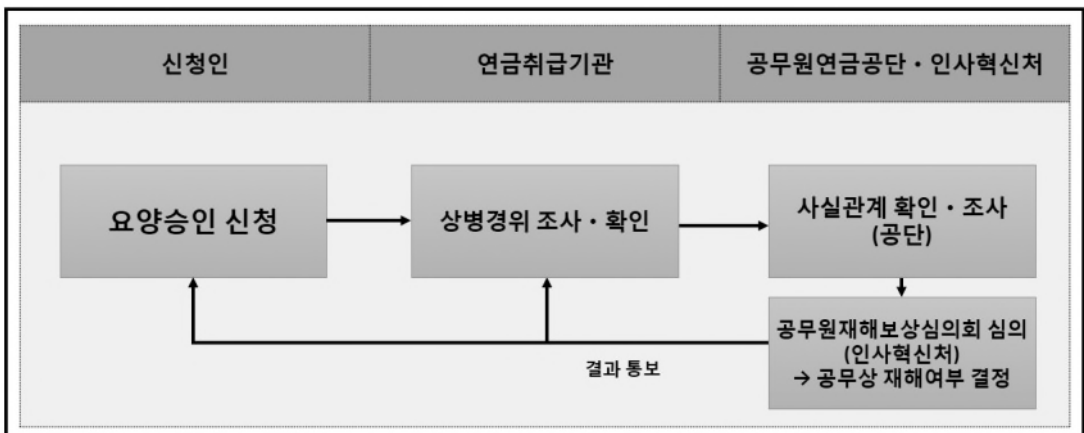
(1) 승인신청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치료)을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절차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취급기관장은 상병경위를 조사·확인하여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이송한다.
- 공무원 등이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 공단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 서류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다.

【 업무처리절차 】



(3) 구비서류

● 구비서류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1. 진단서 원본(상병분류기호 기재) 1부 - 정확한 상병 부위, 확정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진단서 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초진 의무기록지 사본 1부 3. 상병경위조사서 1부(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작성)	신청인 기 관																												
질병의 경우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부(내과질환에 한함) - 건강진단을 받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 2.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발병전 6개월 분) 사본 1부(감염성 질병 제외) - 수당 지급내역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내역(지문인식기록지 등) 3. 해당 질병에 따라 제출하여야할 서류 ○ 영상 CD (판독지 포함) - 무릎 및 어깨 등 : MRI(*없을 시 CT), 관절내시경 사진, X-ray, 초음파 등 - 척추 및 뇌질환 : MRI(*없을 시 CT) ○ 심장 및 신장 : 심장초음파검사결과지, 신장기능검사결과지 ○ 치과질환 : 파노라마 사진, 경과기록지(향후 진료소견 포함) ○ 이명 : 순음청력검사(3회), 이음향 방사검사, 이명도검사 결과지 ○ 난청 : 순음청력검사(3회), 이음향 방사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 정신과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비밀번호 해제하여 제출), 심리검사결과지, 정신과치료내역(의무기록지 등)	신청인 또는 기 관 기관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사고유형별 제출서류																													
추가서류		<table><tr><th>구 분</th><th>직무수행</th><th>출퇴근 중</th><th>출장 중</th><th>행사 중</th><th>당직근무</th><th>교육훈련</th></tr><tr><td>일반사고</td><td></td><td>①</td><td></td><td>④</td><td></td><td></td></tr><tr><td>교통사고</td><td>②③⑥⑦</td><td>①③⑥⑦</td><td>②③⑥⑦</td><td>②③④⑥⑦ ⑦</td><td>②③⑥⑦</td><td>②③⑥⑦</td></tr><tr><td>폭행사고</td><td>⑤⑦</td><td>①⑤⑦</td><td>②⑤⑦</td><td>④⑤⑦</td><td>⑤⑦</td><td>⑤⑥⑦</td></tr></table>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①		④			교통사고	②③⑥⑦	①③⑥⑦	②③⑥⑦	②③④⑥⑦ ⑦	②③⑥⑦	②③⑥⑦	폭행사고	⑤⑦	①⑤⑦	②⑤⑦	④⑤⑦	⑤⑦	⑤⑥⑦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①		④																									
교통사고	②③⑥⑦	①③⑥⑦	②③⑥⑦	②③④⑥⑦ ⑦	②③⑥⑦	②③⑥⑦																									
폭행사고	⑤⑦	①⑤⑦	②⑤⑦	④⑤⑦	⑤⑦	⑤⑥⑦																									
사고의 경우		【 해당 서류명 】																													
		<table><tr><th>번호</th><th>서 류 명</th><th>번호</th><th>서 류 명</th></tr><tr><td>①</td><td>출·퇴근 경로도</td><td>⑤</td><td>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公所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td></tr><tr><td>②</td><td>이동경로도</td><td>⑥</td><td>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td></tr><tr><td>③</td><td>교통사고사실확인원</td><td>⑦</td><td>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td></tr><tr><td>④</td><td>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td><td></td><td></td></tr></table> <p>※ 상기 유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서류 제출 ※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서, 보건일지, 구급활동일지, 방학 중 교육활동일지,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등 공무원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⑦ 합의서 사본의 경우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보험합의시 합의서 및 산출내역서)</p>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⑤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公所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②	이동경로도	⑥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③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⑦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④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신청인 또는 기 관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⑤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公所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②	이동경로도	⑥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③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⑦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④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2)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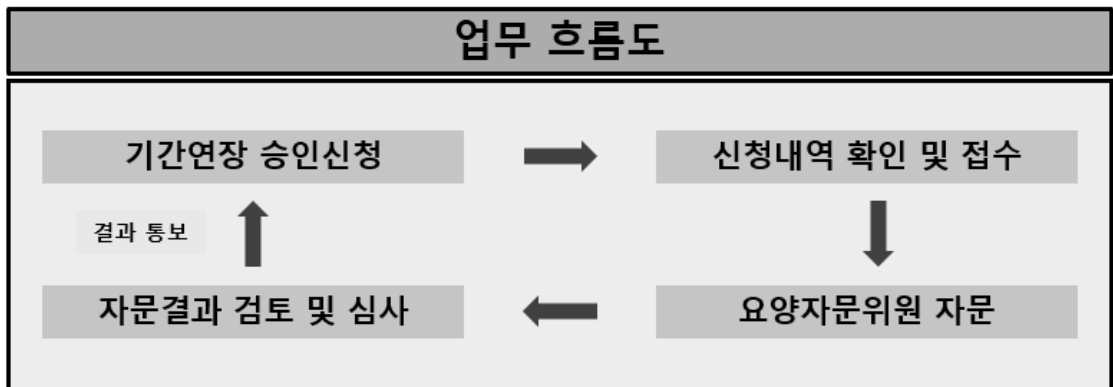
(1) 기간연장

-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3년 범위에서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연장하고, 3년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요양기간을 연장승인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정신의학과 상병의 경우, 의무기록지 필요

(2) 신청 및 처리절차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한다.

【 업무처리절차 】



(2) 구비서류

-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답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공단 지정양식)
 - 향후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 ※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

3)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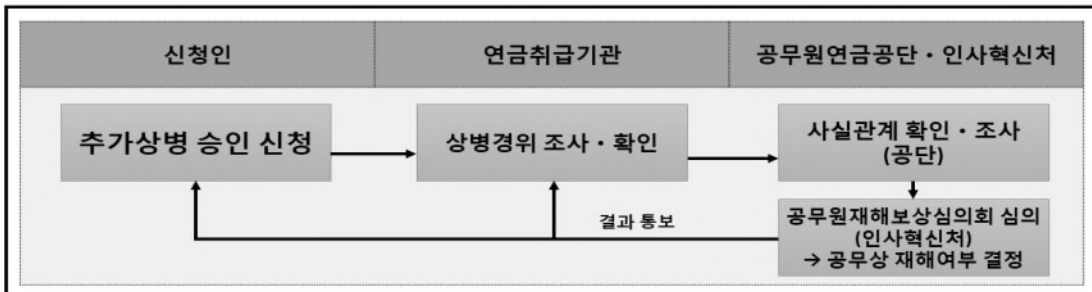
(1) 추가상병

-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이다.
- 최초 승인당시에 누락된 상병(병명)이나,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또는 기 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에 대해 추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 및 처리절차

-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취급기관장은 추가상병경위를 조사·확인하여 <추가상병 경위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이송하며, 공무원 등이 추가상병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 후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절차 】



(3) 구비서류

추가상병 신청사유	구비서류
· 추가상병 승인신청	- 진단서 및 기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 누락상병 및 누락치료기간 승인신청	- 진단서 및 기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누락상병) - 진단서 또는 입원·외래일수(진료)확인서(누락치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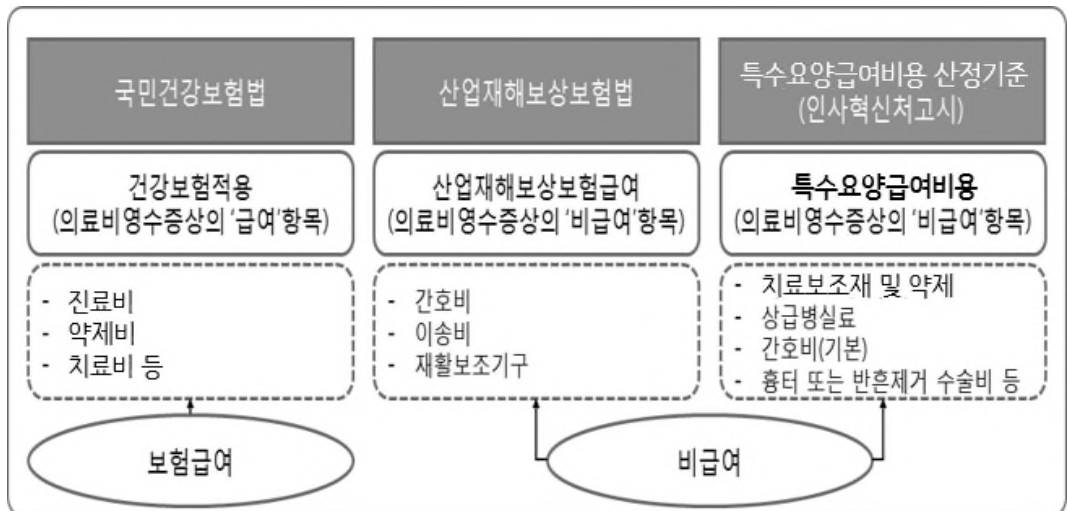
4) 요양급여비용 청구

(1) 지급요건

- 공무원상 요양(기간연장,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을 한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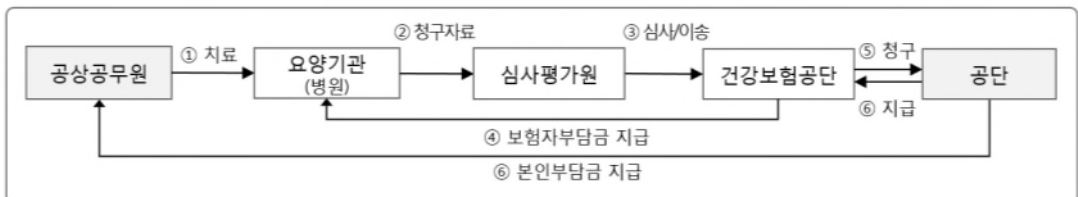
(2) 급여체계

-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급여비용」 및 건강보험 비급여 중 「산업재해보상급여비용」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3) 청구 및 처리절차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공무원이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중 건강보험 수가(영수증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동 환급 (4~5개월 소요)



-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선택진료+선택진료 이외) : 공무원이 요양기관(병·의원)에 납부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치료비 등에 대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청구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에 의거 산정 지급



(4)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부터 3년(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결정일 이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매 요양일로부터 3년내 청구 시 지급)

(5)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세부지급대상 및 범위와 추가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의 경우: 처방전 또는 조제내역서)
- 항목별 세부지급대상 및 범위와 추가 구비서류

항 목	지급대상 및 범위	추가구비서류	비 고
초음파/MRI	·초음파: 공무상 요양기간 중 총 10회 이내 인정	초음파 및 MRI 결과 기록지	입원기간 중 최대 5회 이내 인정
	·MRI: 공무상 요양기간 중 총 5회 이내 인정		승인 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1회 인정
진단서 발급수수료	·공무상요양(연장)승인신청 ·간병비 및 특수요양비 청구 시 추가요청에 의한 진단서 (소견서) 발급받은 경우		매1회 최대3만원 이내 (병원 발급수수료 기준)
복사수수료	·X-ray 필름복사수수료 ·CD 복사 수수료 ·DVD 복사 수수료(2018. 1. 1. 이후) ·진료기록부 복사 수수료(2018. 1. 1. 이후)		매당 5,000원 개당 10,000원 개당 20,000원 30,000원 이내

항 목	지급대상 및 범위	추가구비서류	비 고
선택진료비 (특진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 - 공무상 승인상병으로 입원요양한 기간 - 최초 승인상병이 입원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 최초 선택진료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원요양 후 통원시의 선택진료비는 부지급 ※선택진료비 폐지 (2018. 1. 1. 이후 진료분)
부대경비	·입원요양기간에 대하여 입원1일당 1만원 지급		퇴원일 제외
한방약제 및 한방물리 치료비	· 한약첩약 및 탕전료, 왕뜸, 추나요법, 약침술 ※ 항목별 지급대상 : 공단 홈페이지 참조	한약처방 확인서 (공단 지정양식)	한방물리요법 (저주파, 중추파치료 포함) ※ 2014. 1. 1.부터 적용
일반수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수가 및 적용범위 이내에서 지급
간호비	·상병 상태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 3등급, 기본간호로 구분하여 지급	·간호비장구용소견서 (공단 지정양식) ·간호기록지 사본 ·간병료 영수증 ·전문간병인의 자격증사본	·중환자실, 회복실 입원 기간은 비대상 ·국가보장비와 중복 지급 불가
성형수술비	·화상으로 인한 반흔제거 수술비(횡수제한 폐지) ·흉터 또는 반흔으로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cm당 100,000원 이내 지급)	·화상: 의사 소견서 ·성형수술: 성형수술 부위(수술 전·후)를 촬영한 사진 담당의사소견서	·상처크기 기재 ※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은 부지급
화상 및 열상 등 치료재· 치료보조재 및 약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 재료 ·화상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		·요양기관에서 구매 사용한 것에 한함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제인 경우 약국 약제비 인정

항 목	지급대상 및 범위	추가구비서류	비 고
상급병실료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매 입원 시 7일 이내 인정 ※ 2014. 1. 1. 이후 1인실 인정	· 상급병실이용 확인서 (병원발행)	※ 상급병실료 2019. 7. 1. 이후 진료분 부터 전액 본인 부담
	· 뇌혈중 제거술, 기관 절개 상태, 체표면적 15% 이상 화상환자 등 특수요양급여비용 고시 기준에 해당되어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 연속된 25일 이내 인정 · 화상치료 및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상급병실이용 확인서 (병원발행) · 상병상태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이송비	· 재해현장으로부터 요양기관까지의 이송, 주치 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비용	· 관련 영수증 등 · 이송비 청구내역서 (공단 지정양식) · 선박·항공기의 1등급, 택시·자가용 이용 시에 담당의사 소견서	
치과보철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의한 보철만 지급 - 총 2회 인정,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인정	· 진료비 영수증 · 보철종류, 보철치아 개수 등이 기재된 담당의사 소견서	환부(결손치)를 위한 보철 지급 불가
재활보조 기구	· 재활보조기구 구입의 경우 ※ 지급대상 재활보조기구 <공단 홈페이지 요양급여비용 참조>	· 영수증 or 거래명세서 ※ 보조기 명칭 및 산재분류코드 기재	· 국가보장비와 중복 지급불가 · 대여 받은 경우는 지급불가 ※ 단, 월체임 임대 가능

5) 공무상 재요양 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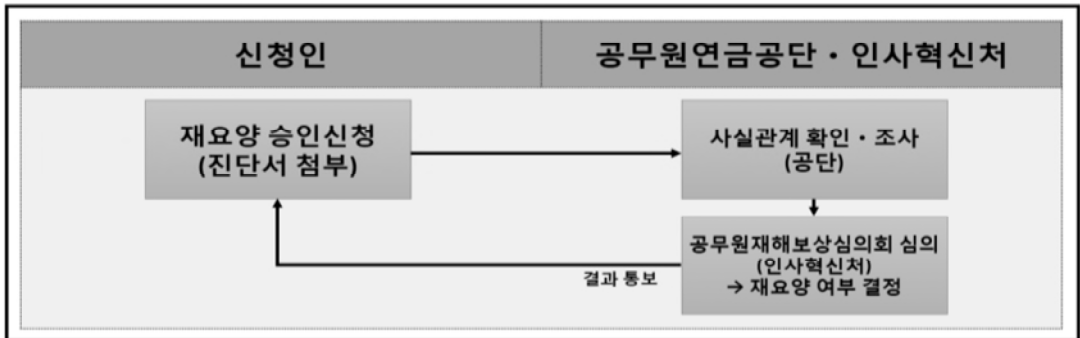
(1) 개념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요양을 시작하는 제도이다.

(2) 청구 및 처리절차

- 재요양 승인신청은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사본(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에 직접 신청한다.

【 업무처리절차 】



(3) 재요양 대상

- 공무상 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11.11. 5.)전에 만료된 자
- 장해연금수급자(장해일시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 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편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주의사항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 11. 5.) 이후임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승인 후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정지**
-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 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는 불인정

6) 재할급여 청구

(1) 재할급여 정의(2018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 신설)

<p>재할운동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할운동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p>심리상담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2) 지급요건 및 지급 절차

◀ 재할운동비 ▶

- 청구대상자
 -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할운동을 하였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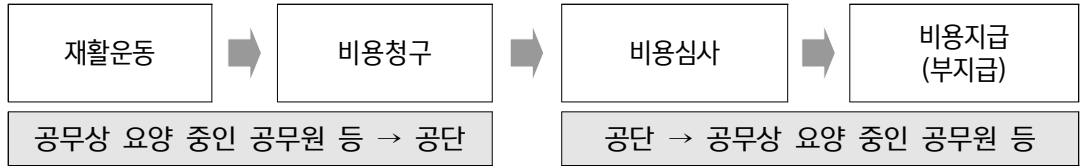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애
2. 척추의 변형, 기능장애 또는 신경장애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애(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행령 제40조 별표3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 재할운동기관 인정 기준
 -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청구절차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청구 → 공단이 심사 후 지급



●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재활동동비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재활동동 출석확인서(공단 지정양식)
- 재활동동 비용납부 영수증
- 재활동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청구 시 또는 재활동동기관 변경 시에만 제출)
- 의사소견서(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필수, 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

● 지급기준 및 심사

- 재활동동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월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재활동동 출석률에 따라 구분 지급
 - 출석률 50% 이상 : 지급액 = 소요된 비용(월 10만 원 이내 실비)
 - 출석률 50% 미만 : 지급액 = 소요된 비용 × 출석률(월 10만 원 이내 실비)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후 합의 시 합의금을 공제

◀ 심리상담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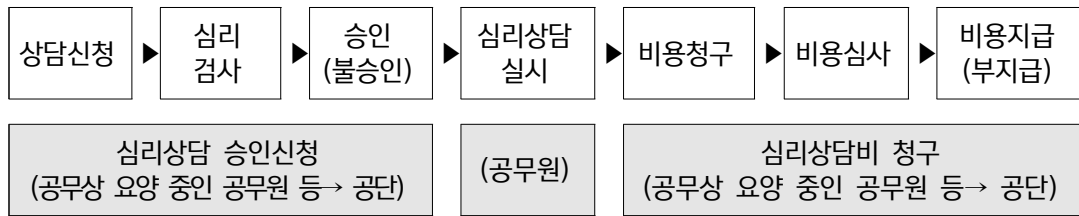
● 청구대상자

-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공무원

● 심리상담기관 인정 기준

-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심리상담비 청구절차 및 지급기준



● 심리상담 승인신청

-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공단에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심리상담승인은 1회만 가능

● 승인신청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공단 지정양식)
- 다차원심리검사지(L형)(공단 지정양식)
- 의무기록 사본(공단에서 요청시 제출)

● 심리상담 승인 기준 및 절차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 공단이 심사 후 승인 여부 안내
- 공무상 요양 승인 시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차원심리검사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자문 진행

● 심리상담 실시

- 심리상담기관으로 인정(사업자등록)되는 기관에서만 상담 하여야 함
- 심리상담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봄

● 심리상담비 청구

-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 공단이 심사 후 지급

● 심리상담비 청구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심리상담비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출석확인(공단 지정양식)
-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청구 시 또는 기관 변경 시에만 제출)
- 상담사 자격증 사본(최초 청구 시 또는 상담사 변경 시에만 제출)
- 합의서(합의금 기재 필수, 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

- 심리상담비 지급 기준

- 심리상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후 합의 시 합의금을 공제

(3) 재할급여 청구 시효

- 재할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 2018. 9. 21. 이후 실시한 재할운동, 심리상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7) 장해급여 청구

(1)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경우	장해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와 병급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5년분의 장해연금(1회만 지급) ※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와 병급

※ 장해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퇴직한 날의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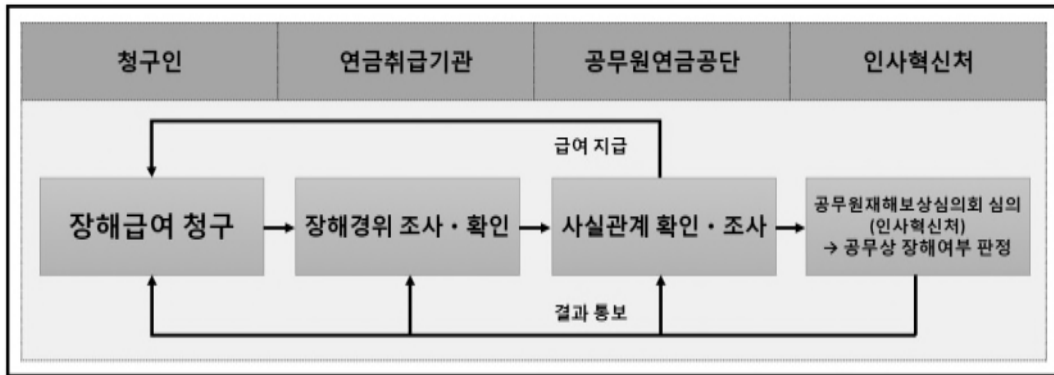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급비율	52%	48.75%	45.50%	42.25%	39%	35.75%	32.50%

장해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0%	16.25%	13%	9.75%

(2) 청구절차

-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연금 지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지급기관장은 장해경위를 조사·확인하여 <장해경위 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이송한다.

【 업무처리절차 】



(3) 청구시효

- 퇴직 후 장해가 확정된 때 : 장해확정일부터 5년
- 장해확정 후 퇴직한 때 : 퇴직일부터 5년

(4) 구비서류

- 공무원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구 분		작성 및 발행방법	비 고
청구인	장해급여 청구서	공단 지정양식	민원상답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공단 지정양식	민원상답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 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영상물 CD(MRI, CT, X-ray 등)		장해진단을 위한 영상촬영물
소속기관	장해경위조사서	공단 지정양식	조사자·확인자 및 연금지급기관장 날인

● 공무원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

구 분		작성 및 발행방법	비 고
청구인	장해급여 청구서	공단 지정양식	민원상답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공단 지정양식	민원상답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해당자에 한함)	
	영상물 CD(MRI, CT, X-ray 등)		장해진단을 위한 영상촬영물
	의무기록지 사본	최초로 내원한 병원	원본대조필 및 병원장 직인날인
소 속 기 관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발병 전 2회분	근골격계 질환, 정신과 질환 제외
	장해경위조사서	공단 지정양식	조사자·확인자 및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3)」 참조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을 제출

(5) 공제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장해연금수급자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보훈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장해연금에서 보훈보상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

예시) ① 장해연금 수령 전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 장해연금 개시월부터 보훈보상금 공제 / 장해 12급, 국가유공자 7급
- 장해연금 930,060원 - 보훈보상금 496,000원 = 장해연금 실지금액 434,060원

예시) ② 장해연금 수급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훈보상금을 수급 할 경우

- 장해연금 개시월부터 보훈보상금을 소급 공제 / 장해 9급, 국가유공자 6급 3항

장해연금 개시월 202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 2020년 7월

- 장해연금 2,354,570원 - 당월 보훈보상금 930,000원 - 소급분 1,424,570원 = 장해연금 실지금액 0원

※ 약 5개월 간 보훈보상금 소급분이 공제되며 6개월 이후부터 당월 보훈보상금만 공제하고 지급

- 제3자의 가해행위(교통사고, 폭행 등)로 인해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2021년 보훈보상금 공제 내역 】

○ 국가유공자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 이 자	1급1항~6급2항	1,140,000	1,180,000	1,239,000	1,282,000	1,346,000	1,386,000
	6급3항	764,000	791,000	831,000	860,000	903,000	930,000
	7급	397,000	417,000	438,000	453,000	482,000	496,000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1,140,000	1,180,000	1,239,000	1,282,000	1,346,000	1,386,000
	배우자, 부모, 자녀 (상이 6급)	397,000	417,000	438,000	453,000	482,000	496,000

○ 보훈보상 대상자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 이 자	기본연금액 (상이1급~6급2항)	798,000	826,000	867,000	897,000	943,000	971,000
	기본연금액 (6급3항)	535,000	554,000	582,000	602,000	633,000	651,000
	기본연금액 (7급)	278,000	292,000	307,000	317,000	338,000	348,000
유족	사망, 1~5급유족	798,000	826,000	867,000	897,000	943,000	971,000
	6급유족	278,000	292,000	307,000	317,000	338,000	348,000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단위 : 원)

대 상 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2021년	1,010,000	745,000	489,000
	2020년	981,000	723,000	475,000
	2019년	934,000	689,000	452,000

○ 부양가족수당 및 고령수당(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13063호, 2020.11.19.)

(단위 : 원)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2021.1.1. 이후 사망자부터 공제)	
	배우자	부 모
100,000	149,000	97,000

8) 간병급여 청구

(1) 간병급여 정의(2018년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 신설)

-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4조)

(2)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 청구대상자(간병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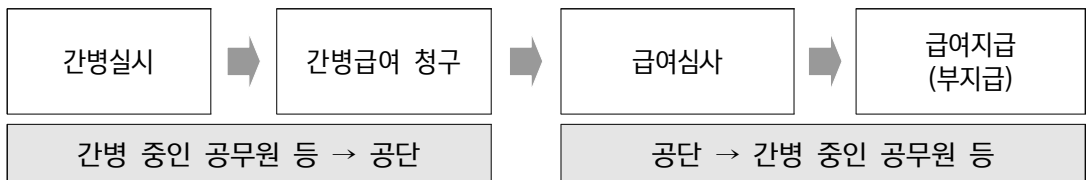
-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으로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애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 받은 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별표 5>

구 분	지급요건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애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청구 절차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청구 → 공단이 심사 후 지급



● 간병급여 청구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간병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공단 지정양식)
 - ※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 최초 청구 시에만 제출
-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비용 영수증 등 관련 서류
 - ※ 의료기관, 유료요양시설 입소 또는 기타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고 간병비용을 지불한 경우 제출
- 전문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 ※ 전문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전문간병인으로 인정 받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단 지정양식)
 - ※ 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합의서(합의금 기재 필수, 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
- 지급기준 및 심사
- 간병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
 - ※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재검토 및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1일당)>

적용기간	간병인 유형	상시간병	수시간병
2018.9.21. ~ 2020.12.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0호)	전문·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2021.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0호는 2017.7.28. 시행되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18.9.21.부터 적용

-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을 지급
 - 간병비용이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무료요양소 이용 등으로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

- 가족간병인 및 기타간병인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 (가족간병인이나 전문간병인 자격증 미소지) 간병인에 대하여 근로소득 자료를 조회 후 근로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가족간병인 지급기준 적용하여 지급
 - ※ 근로소득 존재 시 현장조사 실시
 - (가족간병인이며 전문간병인 자격증 소지) 전문간병인 지급기준 적용하여 지급하되 가족관계증명서와 전문간병인 자격증을 징구하여 확인
 - (기타간병인)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기타간병인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시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 확인 및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합의금(개호비)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합의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2항)
 - 합의금(손해배상액_개호비)은 일할 계산하여 공제

<합의금(개호비) 일할 계산 방법>

- 개호기간이 명시된 경우 : 개호 기간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
- 개호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사고일로부터 사고당시 통계청 생명표상 기대 여명까지를 개호기간으로 하여 일할 계산

(예시)

- 제3자 가해사고 발생일: 2001.4.16.
- 사고당시 청구인 만 54세
- 손해배상산정액(개호비) 6,000만원 수령
- 사고일 기준 청구인 기대여명 22.8년
 - 개호기간 산정(일 단위로 계산된 기대여명): $365\text{일} \times 22.8\text{년} + 5\text{일(윤년)} = 8,327\text{일}$
 - 개호비 일할 계산: $6,000\text{만원} / 8,327\text{일} = 7,205.476\text{...원}$

- 국가보훈처의 간호수당이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등을 지급 받은 경우 그 지급 받은 금액은 공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5항)
 - 국가보훈처 간호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

< 공제업무처리 예시>

예시1) 국가보훈처 간호수당 230만원 수령자가 상시간병급여 결정 받은 경우

→ 간호수당 일할 계산 금액(230만원/30일=76,666...원)이 상시간병급여 일 지급액 41,170원을 초과하여 간병급여 미지급

예시2) 국가보훈처 간호수당 70만원 수령자가 상시간병급여 결정 받은 경우

→ 상시간병급여 일 지급액 41,170원에서 간호수당 일할 계산 금액(70만원/30일=23,333...원) 공제 후 535,100원 지급

- 간병급여 지급기간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
- 간병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고 필요

(3) 간병급여 청구 시효

- 간병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 2018. 9. 21. 이후 실시한 간병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9) 장해유족연금 청구

(1) 장해유족연금 개요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2) 유족의 범위

구 분	내 용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자 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부 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간주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3) 지급액

- 장해연금액의 60%

※ 장해유족연금수급자도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수령시 장해유족연금에서 공제

(4) 처리절차

-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직접 청구

(5)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5년

《장해유족연금 청구관련 구비서류》

- 구비서류(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장해유족연금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등

10) 순직유족급여 청구

(1)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구 분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순직유족연금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times (38\% + \text{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하거나, 50% 미만일 경우 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대신 순직유족연금 선택이 가능(병급 불가)
-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순직유족연금 선택자도 요건 성립 시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은 지급
- 순직유족연금은 종전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일('11. 11. 5.) 이후 사유 발생자부터 적용(이전의 경우 순직유족보상금만 지급)

【 순직유족급여 산식 】

- 사유발생(‘사망당시’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당시’) 기준 지급산식

구 분	사유 발생	지급 산식
순직유족보상금	1973.~2009.12.31.	· 본인 보수월액 × 36배
	2010.1.1.~2018.3.19.	· 본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2018.3.20. (재해보상법 시행)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배
순직유족연금	2011.11.5.~2018.3.19.	·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 × 26% · 20년 이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 × 32.5%
	2018.3.20. (재해보상법 시행)	· 본인 기준소득월액 × (38%+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 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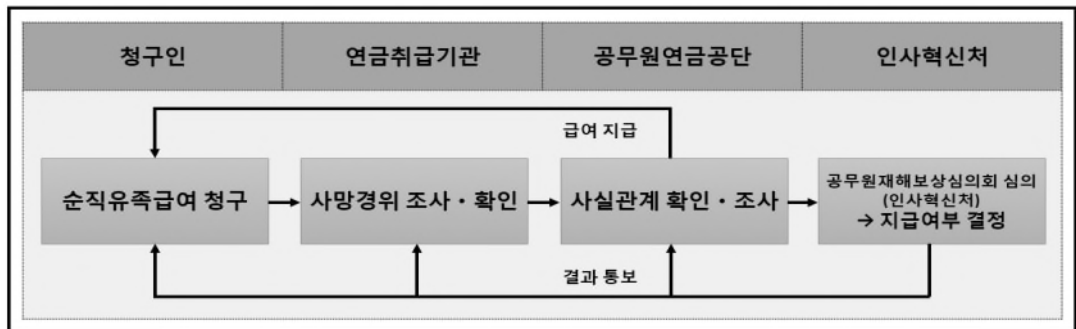
【 급여사유 발생과 기준소득월액 】

급여사유 발생	적용 기준소득월액
재직 중 사망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퇴직 후 사망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청구절차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하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이송한다.

【 업무처리절차 】



(3)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5년

(4) 구비서류

- 구비서류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공통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부검을 한 경우 부검감정서 1부 별도제출) 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1부. 3.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사망자의 배우자·부·모·19세미만자녀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 조부모 : 사망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19세미만 손자녀 : 사망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추가첨부 ※ 유족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작성제출 (서식: 공단 홈페이지 게재) 4.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합니다.	청구인
	5. 사망경위조사서 1부. (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작성)	기관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질병의 경우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부.(내과질환에 한함) - 건강진단을 받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 2.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발병전 6개월 분) 사본 1부(감염성 질병 제외) - 수당 지급내역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내역(지문인식기록지 등) 3. 자살 및 정신과질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비밀보호 해제하여 출력)					기관																										
추가 서류		□ 사고유형별 제출서류					청구인 또는 기관																										
		<table><tr><th>구 분</th><th>직무수행</th><th>출퇴근 중</th><th>출장 중</th><th>행사 중</th><th>당직근무</th><th>교육훈련</th></tr><tr><td>일반사고</td><td>④</td><td>①</td><td>③</td><td>⑥</td><td>④</td><td>⑨③</td></tr><tr><td>교통사고</td><td>②④⑤⑧⑩</td><td>①⑤⑧⑩</td><td>②③⑤⑧⑩</td><td>②⑤⑥⑧⑩</td><td>②④⑤⑧⑩</td><td>②⑤⑧⑨⑩</td></tr><tr><td>폭행사고</td><td>④⑦⑩</td><td>①⑦⑩</td><td>②③⑦⑩</td><td>⑥⑦⑩</td><td>④⑩</td><td>⑦⑨⑩</td></tr></table>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⑨③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⑩	①⑦⑩	②③⑦⑩	⑥⑦⑩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⑨③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⑩	①⑦⑩	②③⑦⑩	⑥⑦⑩	④⑩	⑦⑨⑩																											
사고의 경우		[해당 서류명]																															
		<table><tr><th>번호</th><th>서 류 명</th><th>번호</th><th>서 류 명</th></tr><tr><td>①</td><td>출 · 퇴근 경로도</td><td>⑥</td><td>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td></tr><tr><td>②</td><td>이동경로도</td><td>⑦</td><td>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td></tr><tr><td>③</td><td>출장명령부 사본</td><td>⑧</td><td>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td></tr><tr><td>④</td><td>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td><td>⑨</td><td>교육 · 훈련 관련공문 사본</td></tr><tr><td>⑤</td><td>교통사고사실확인원</td><td>⑩</td><td>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td></tr></table> <p>※ 상기 유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서류 제출 ※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서, 보건일지, 구급활동일지, 방학 중 교육활동일지, 교통카드이용 내역서 등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⑩ 합의서 사본의 경우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보험합의시 합의서 및 산출내역서)</p>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 · 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	⑨	교육 · 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 · 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	⑨	교육 · 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5) 급여상호 간의 조정

- 순직유족급여수령자에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장해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유족급여를 부지급 또는 공제 지급한다.

급여종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지급방법
순직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부지급 또는 공제지급

※ 장해급여를 수급한 경우 2018.9.20. 이전 사망자에 대하여는 순직유족보상금에서 기수령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함 (2018.9.21. 이후 사망자는 미공제)

(6) 공제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양가족수당 및 고령수당 수령 시, 매월 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다만, 고령수당 공제의 경우 2021.1.1. 사망자부터 적용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음
- 제3자의 가해행위(교통사고, 폭행 등)로 인해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일실수익액에 한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 순직유족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일실수익액에 한함)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7) 감액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6항)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 포함) 해당 유족연금액의 1/2를 제한하고 지급한다. (단,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

11)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1) 지급요건

-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2) 인정범위

- 범인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감염병의 확산 방지, 산불 진화, 국외에서 입은 위해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급여종류 및 지급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사망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당시) 기준소득월액 × (43% + 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 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하거나, 50%미만일 경우 그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중 사망 : 60배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산식 】

- 사유발생(‘사망당시’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당시’) 기준 지급산식

구 분	사유 발생	지급 산식
위험직무 순직유족 보 상 금	2006.~2009.12.31.	· 공무원 전체 의 보수월액 평균액 × 60배
	2010.1.1.~2018.3.19.	· 공무원 전체 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4.2배
	2018.3.20. (재해보상법 시행)	· 공무원 전체 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5배
위험직무 순직유족 연 금	2006.~2009.12.31.	· 20년 미만 : 본인 보수월액 × 55% · 20년 이상 : 본인 보수월액 × 65%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65%
	2010.1.1.~2018.3.19.	·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 × 35.75% · 20년 이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 × 42.25%
	2018.3.20. (재해보상법 시행)	· 본인 기준소득월액 × (43%+유족 1명당 5% 가산) - 유족 1명당 5% 가산금액의 합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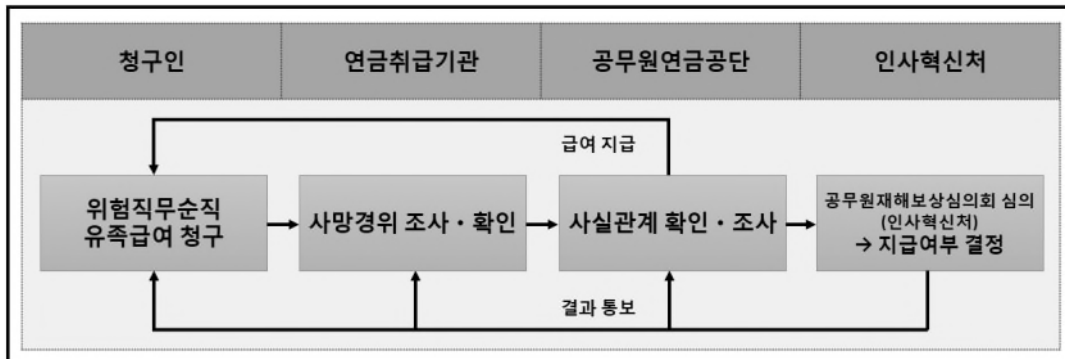
【 급여사유 발생과 기준소득월액 】

급여사유 발생	적용 기준소득월액
재직 중 사망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퇴직 후 사망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4) 청구 및 처리절차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하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이송한다.

【 업무처리절차 】



(5) 구비서류

- 구비서류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부검을 한 경우 부검감정서 1부 별도제출) 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1부. 3.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사망자의 배우자·부·모·19세미만자녀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 조부모: 사망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19세미만손자녀: 사망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양부모·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추가첨부 ※ 유족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작성제출 (서식: 공단 홈페이지 게재) 4.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합니다. 5. 사망경위조사서 1부.(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작성)	청구인 기 관																																																				
	질병의 경우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부.(내과질환에 한함) - 건강진단을 받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 2.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발병전 6개월 분) 사본 1부(감염성 질병 제외) - 수당 지급내역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 내역(지문인식기록지 등) 3. 자살 및 정신과질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비밀보호 해제하여 출력)	기 관																																																				
추가서류	사고의 경우	□ 사고유형별 제출서류 <table><tr><th>구 분</th><th>직무수행</th><th>출퇴근 중</th><th>출장 중</th><th>행사 중</th><th>당직근무</th><th>교육훈련</th></tr><tr><td>일반사고</td><td>④</td><td>①</td><td>③</td><td>⑥</td><td>④</td><td>③⑨</td></tr><tr><td>교통사고</td><td>②④⑤⑧⑩</td><td>①⑤⑧⑩</td><td>②③⑤⑧⑩</td><td>②⑤⑥⑧⑩</td><td>②④⑤⑧⑩</td><td>②⑤⑧⑨⑩</td></tr><tr><td>폭행사고</td><td>④⑦⑩</td><td>①⑦⑩</td><td>②③⑦⑩</td><td>⑥⑦⑩</td><td>④⑦⑩</td><td>⑦⑨⑩</td></tr></table> [해당 서류명] <table><tr><th>번호</th><th>서 류 명</th><th>번호</th><th>서 류 명</th></tr><tr><td>①</td><td>출·퇴근 경로도</td><td>⑥</td><td>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td></tr><tr><td>②</td><td>이동경로도</td><td>⑦</td><td>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td></tr><tr><td>③</td><td>출장명령부 사본</td><td>⑧</td><td>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td></tr><tr><td>④</td><td>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td><td>⑨</td><td>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td></tr><tr><td>⑤</td><td>교통사고사실확인원</td><td>⑩</td><td>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td></tr></table> ※ 상기 유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서류 제출 ※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서, 보건일지, 구급활동일지, 방학 중 교육활동일지, 교통카드이용 내역서 등 공무원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⑩ 합의서 사본의 경우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보험합의시 합의서 및 산출내역서)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③⑨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⑩	①⑦⑩	②③⑦⑩	⑥⑦⑩	④⑦⑩	⑦⑨⑩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	⑨	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청구인 또는 기 관
	구 분	직무수행	출퇴근 중	출장 중	행사 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④	①	③	⑥	④	③⑨																																																	
교통사고	②④⑤⑧⑩	①⑤⑧⑩	②③⑤⑧⑩	②⑤⑥⑧⑩	②④⑤⑧⑩	②⑤⑧⑨⑩																																																	
폭행사고	④⑦⑩	①⑦⑩	②③⑦⑩	⑥⑦⑩	④⑦⑩	⑦⑨⑩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①	출·퇴근 경로도	⑥	행사계획 관련공문 및 예산집행내역																																																				
②	이동경로도	⑦	사건처리부(송치서) 또는 공소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출장명령부 사본	⑧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④	각종근무일지(소방, 경찰 등 해당)사본	⑨	교육·훈련 관련공문 사본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⑩	합의서사본(합의한 경우 합의금액 기재)																																																				

(6) 급여상호 간의 조정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령자에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순직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유족급여를 부지급 또는 공제 지급한다.

급여종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지급방법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부지급 또는 공제지급

(7) 공제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또는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양가족수당 및 고령수당 수령 시, 매월 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됨. 다만, 고령수당 공제의 경우 2021.1.1. 사망자부터 적용함
 -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음
- 제3자의 가해행위(교통사고, 폭행 등)로 인해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일실수익액에 한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일실수익액에 한함)에 대해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8)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5년

12)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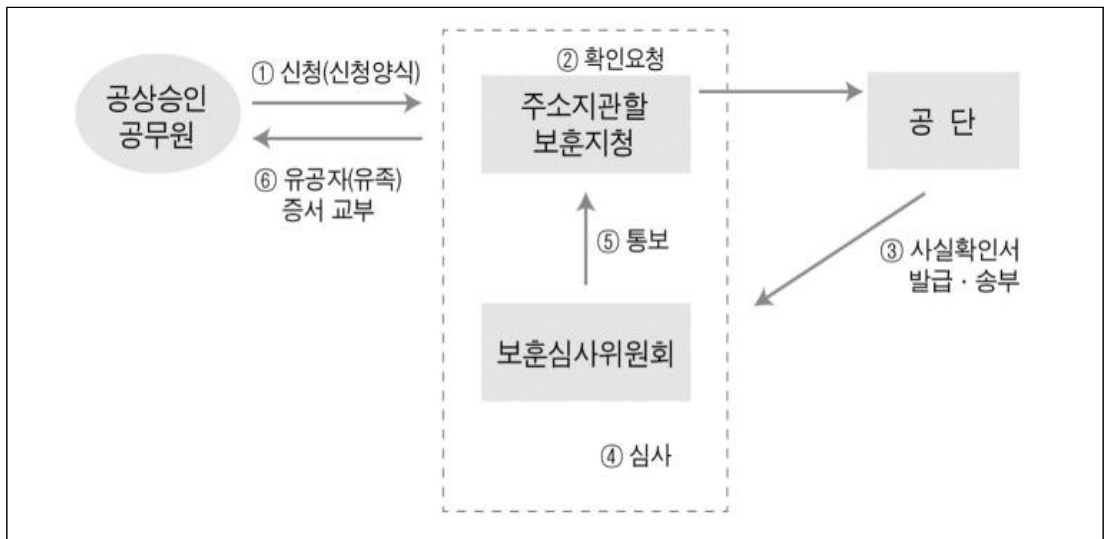
(1)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통보한다.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

(2) 신청절차

- 공무원 요양 승인, 장애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는 공단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 공단에서는 보훈지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자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공상 승인 관련자료 등을 국가보훈처로 이송한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단에서 이송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 2. 6.부터는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결정절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확인서 발급 절차도 동일

13) 급여지급의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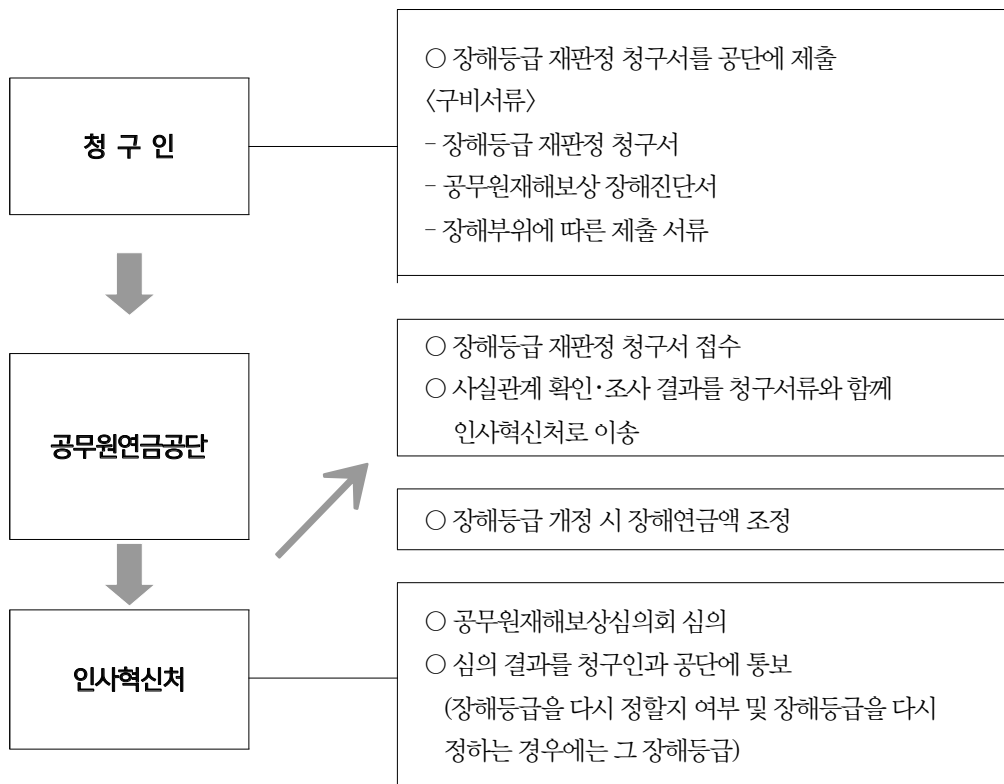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 ※ 유족 중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액
 - 순직(위험직무)유족연금 :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5항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 대상 아님
 - 순직유족보상금 : 원급여액의 2분의 1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전액지급

6.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01 장해연금 등급개정 및 수급권 소멸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의 직권에 의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연금액을 조정하며, 장해상태(1~14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됨

02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참고

03

구비서류

- 구비서류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공단 지정양식)
 -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 발행
 - 장해부위에 따른 제출 서류

7.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01

구상권 행사와 급여의 공제지급 및 환수

가. 취지

-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면탈 방지 및 이중보상 방지

나. 구상권의 행사

-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1항),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공단에 위탁(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제1항제5호)

다. 급여의 공제지급 및 환수

- 급여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2항)
- 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의 급여(손해배상금+재해보상급여)를 받았을 경우, 공단은 급여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그 급여를 환수하여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제1항)

02 손해배상과의 조정을 위한 신고 및 조사 의무

가. 신고 의무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재해보상급여 수급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권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나. 조사 의무

-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의·공탁·보험 등)을 조사하고, 동 사항을 신청서(또는 청구서)에 기재한 후 공단에 이송(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제3자(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않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상에 부지급조건부 요양승인신청을 하고, 만약 부지급조건부 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이 공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손해배상금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환수함
 -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제3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청구서와 손해배상 관련서류(합의서/공탁서 및 출급증명서/민사소송 소장 및 판결문 사본)를 제출하고, 공단은 배상액의 범위에서 재해보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함

03 구상권의 범위

가. 구상대상급여(공단이 지급한 급여액)

-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04

구상권의 발생사례

사례 1

- '18.10.20.(토) 경찰공무원 A가 공무수행 중 피의자 B의 폭행으로 부상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18.10.20. ~ '18.12.20.(60일간)
- '18.11.16. 요양급여 청구 : '18.10.20. ~ '18.11.15.까지 발생한 치료비 200만 원 수령

(1) 미합의한 경우

- 공무원 A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동안 지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
→ 공단은 공무원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를 가해자 B에게 구상권 행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후 합의(또는 공탁금 수령)한 경우 합의내역(합의서 또는 공탁금출급 사실증명원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2) 합의한 경우(합의금으로 500만원 수령)

- 공무원 A는 '18.10.20. ~ 11.15.까지 지불한 치료비 200만 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와 합의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 합의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급여 200만 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함
- 공무원 A는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18.11.16.~12.20.)에 대해 수령한 합의금으로 일반진료 치료를 받아야 함
※ 건강보험적용을 받거나 공단에서 치료비를 수령할 경우 환수권 발생

사례 2

- '18.10.20.(토) 교사 A가 본인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한 부상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18.10.20. ~ '18.12.20.(60일간)
- '18.11.20.합의 : 합의금으로 500만 원 수령(합의 이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
- 합의('18.11.20.) 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18.11.21.~ '18.12.20.)동안 본인의 건강 보험을 적용·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상공무원 A가 잔여 요양승인기간('18.10.20. ~ '18.12.20.) 내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치료비(본인부담금) 50만 원을 공무원 A에게 환급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건강보험적용급여 50만 원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20만 원을 합한 170만 원 청구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0만 원 지급(구상권 발생)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공무원 A의 공무상요양급여 170만 원(본인부담금 50만 원 +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20만 원)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공무원 A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무원 A에게 170만 원 환수해야 함
 - 공무원 A는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18.11.21.~ '18.12.20.)에 대해 수령한 합의금(또는 공탁금)으로 일반진료 치료를 받아야 함
(건강보험적용을 받거나 공단에서 치료비를 수령할 경우 환수권 발생)

사례 3

- '18.10.20.(토) 경찰공무원 A가 공무수행 중 피의자 B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단은 공상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로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 B는 법원에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

(1) 공무원 A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공탁유무와 상관없이 가해자 B를 상대로 구상 청구
 - ※ 변제공탁금이 구상금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손해배상금이 된다면 변제공탁금을 출급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가능

(2) 변제공탁

(2-1) 공무원 A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공무원 A에게 환수함

(2-2) 공무원 A가 이의를 유보하고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 공탁한 금액이 상당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 B를 상대로 구상 청구

(3) 형사공탁

- 피해공무원의 치료비 보전이 아니라 본인의 형사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사합의금이라고 추정
 - ※ 형사공탁금을 출급했다라도 피해공무원에게 환수하기는 어렵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8. 공무수행사망자 제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 시행령 제82조)

01 도입 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 조항 등이 새롭게 마련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할 경우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 제외) 및 예우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0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 청구

가. 청구 절차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소속 연금 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연금취급기관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송부한다.
-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에 송부한다.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말함)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여부와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여부는 별개 심의 대상으로,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상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나. 청구시 유의사항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사망자 인정만을 위한 단독 청구는 할 수 없다.
-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는 아래와 같이 각각 또는 동시청구가 가능하다.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 순직공무원 인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 청구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 소급적용

- 2017. 6.30.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된다.
- 다만, 2017. 6.30. 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017. 6.30.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청구시효 : 5년

- 청구시효는 5년이나
 2017. 6.30.에서 2018. 9.20. 사이 사망자는 법 시행일인 2018. 9.21.이 기산점이며,
 2018. 9.21.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이 기산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심판, 행정소송 포함)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마. 구비서류

-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 서식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 사망경위조사서(공단 지정양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험급여지급결정통지서)
 -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 서류제출 : 사망자의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03

보상 및 예우

가. 경제적 보상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는다.

나.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법상의 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등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수행사망자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제2절 / 부조급여

1. 재난부조금

01 지급요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시행령 제53조)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 지급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난의 범위
 -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02 재난으로 인한 피해정도별 부조금액

- 피해정도별 지급액(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피해정도	지급액
주택이 완전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 1. ~ 익년도 4. 30. 적용)

피해정도 관련 판단기준

[기준 1]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1/3 이상 파손 피해산정 기준

- 영 제53조제2항제3호 상「1/3 이상 파손」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실제 지출된 수리비용을 고려한「1/3 이상 파손」에 대한 추가적 판단 기준

□ 「1/3 이상 파손」에 대한 피해산정 기준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내력벽의 벽 면적을 2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의 2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2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2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벽, 바닥 등에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20㎡ 이상 발생한 것
 - 폭 0.3mm 이상 균열이 40m 이상 발생한 경우($40\text{m} \times 0.5\text{m} = 20\text{㎡}$)가 해당
 - ※ 피해면적 : 균열길이 \times 0.5m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상 위 기준에 따른 「1/3 이상 파손」 기재 시 지급

□ 수리비용을 고려한 추가적 판단 기준

○ 위 「1/3 이상 파손」 기준에 따른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된 수리비용이 주택가액 대비 1/3 이상인 경우로 인정되면 「1/3 이상 파손」으로 보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를 지급한다.

※ 주택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토지가액 제외)] 대비 실제 지출된 수리비용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반드시 실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징구·심사)

[기준 2] 아파트 등 화재 관련 피해 판정 기준 : 피해산정금액도 고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부화재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소실)와 피해산정금액 중 공무원에 유리한 기준으로 판정

□ 아파트 등 화재 관련 피해 판정 기준

○ 화재피해는 ‘화재피해조사서(소방서 발행)’에 따른 ‘피해규모ⁱ⁾’로 산정하되, 피해규모만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피해산정금액ⁱ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양 자 中 피해공무원에 유리한 기준 적용

i) **피해규모** : 소실면적*을 기준으로 재해정도(1/3, 1/2, 전소) 판단

▶ 그을음 등 경미한 피해 제한을 위해 손해율(보정지수) 0.2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소실면적 : 소실 바닥 면적 / 전체 주택 면적(베란다 면적 제외)

** 손해율(화재로 인한 피해정도) 0.25 : 내부장식재 소손 시 또는 피복콘크리트가 1/2 탈락한 경우

ii) **피해산정금액** : 피해액(주택가액*의 1/3초과, 1/2초과,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

* 주택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

(예시) 화재피해조사서 내역(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용도	구조	소실면적 ¹⁾ (㎡)	신축단가 ¹⁾ (㎡당,천원)	경과 연수	내용 연수	잔가율 (%)	손해율 ²⁾ (%)	피해액 ³⁾ (천원)
구체적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0	874	13	50	79	15	1,038

1) 신축단가 :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여 건축업계에서 배포하고 있는 건물신축단가표

2) 손해율(보정지수) :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

3) 피해액 : 신축단가 × 소실면적 × [1-(0.8×경과연수/내용연수)] × 손해율

< 손해율(보정지수) >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	지수
화재로 인한 수손시 또는 그을음만 입은 경우	0.01 ~ 0.03
경미한 균열발생의 경우	0.2
내부장식재 소손시 또는 피복콘크리트가 1/2탈락한 경우	0.25 ~ 0.4
피복콘크리트가 탈락하고 화열로 철근이 손상을 입은 경우	0.41 ~ 0.6
옥내외 마감재, 콘크리트 균열 및 간벽의 손실 등 대소실의 경우	0.7 ~ 0.95
주요구조부가 소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 적용 대상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 단독 또는 연립주택 등은 피해규모(소실) 기준만 적용, 피해산정금액 기준은 적용 제외

< 관련 사례 >

- ①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의 수리비용이 주택가격의 1/3에 미달하여 원처분 시 부결된 건에 대하여 주택소실면적(30㎡)이 주택면적(84.93㎡)의 1/3 이상으로 인정되어 재심에서 인용됨 (재심 결정)
- ②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분류 상 ‘소실’은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인데, 이 건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에 의한 피해는 김치냉장고 주변부 내지 주방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실 등 그 외의 부분은 그을음 등의 피해가 있었을 뿐이므로, 소방서의 화재피해조사서나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기재된 소실면적만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령상의 소실의 정도가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9.28. 선고 2016구합9510 판결)

03 청구 및 지급절차**(1) 결정 및 지급주체**

구 분	결정 및 지급주체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
지방직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구,군 등)
교육직 공무원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청구 및 지급절차

-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청구인)이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부)에 청구
 - 공단(지부)에서는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 ※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재난부조금 지급
- 지방직 및 교육직 공무원
 - 공무원(청구인)이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청구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

04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1) 재난부조금 청구서(공단 지정양식)

(2) 피해상황확인서

- 피해 주택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주택 소재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총면적과 피해면적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상황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다.
- 피해상황확인서로 화재증명원을 제출할 때는 화재피해조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 ※ 화재피해조사서 제출 시 ‘소실면적’, ‘손해율’, ‘피해액’ 기재 여부 확인

(3) 건축물대장

- 건물 사용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지급한다. (점포, 사무실 등 제외)
※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아도 [기준 3]의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되면 지급할 수 있다.
- 주택의 총면적은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모든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건축물대장의 주택 주소와 피해상황확인서의 주택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과 공무원의 관계를 확인한다.

문서확인번호 1441-6933-5606-4380									
일반건축물대장(갑)									
고유번호		2720010200-1-07080007		민원24접수번호		20150908 - 70294876		영청	
								특이사항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지번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부대지면적		159.5㎡		면적		289.96㎡		부지 면적	
건축면적		95.08㎡		용적률산정용 면적		271.72㎡		주구조	
부속면적		59.61㎡		부속면적		170.36㎡		높이	
조경면적				공개 공간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	
								건축선 후퇴거리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영칭)	주소	소유권	변동일	
주1	지1	철근콘크리트	대피실	18.24	주인(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변동일	
주1	1층	시멘트벽돌조	소매점	90.24		대구광역시 남구	1/1	2014.02.18	
주1	2층	시멘트벽돌조	주택	90.24				소유권이전	
주1	3층	시멘트벽돌조	주택	90.24					
부1	1층	시멘트벽돌조	면소	1					
			- 이하여백 -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동등함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2015년 09월 08일									
담당자 : 민원정보과									

(4)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한함)

- 피해 주택 주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통해 피해주택에 공무원의 상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구비서류 관련 판단기준

[기준 3] 사실상 주택·실질적 소유관계에 대한 인정기준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의 용도, 소유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나 「사실상 주택」, 「실질적 소유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난부조금을 지급

□ 「사실상 주택」 인정 기준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음 내용으로 ‘주택’ 인정 여부 판단

[①+② 기준 충족 시, ③의 기준으로 종합 판단]

- ① 피해상황확인서 등 재난 정도 입증서류에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② 건축물에 사업자등록이 아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건축물이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 공무원이나 배우자 또는 공무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요
 - ※ 공무원의 형제자매, 비친족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인정하지 않음
 - 건축물이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상시거주 요건 충족 필요
- ③ 그 외 다음사항들을 종합하여 사실상 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 건축물 내부 구조 및 형태가 주택의 구조인지 여부
 - 주택의 용도로 취사시설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 주택의 용도로 전기료 같은 공과금을 납부했는지 여부
 - 주소지에 본인 이외 가족(자녀, 부모 등)이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주택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등

< 관련 사례 > : 사실상 주택 인정

- ① 1956년 주택으로 건축되어 방 2개와 부엌 2개의 구조인 건물이 1997년 화재 소실시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딸린 부지에 주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 1992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하였고 1995년 주차장 영업을 그만두었으나 건물의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1998.11.10. 선고 98누6120 판결)
- ② 건축물대장에는 ‘조류사 및 관리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재건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수도요금 사용내역 및 청구지가 동 건물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및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각각 ‘주택’, ‘가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내역이 ‘동산 : 가전기구 및 가재도구 다수소실’로 기재된 점, 화재보험사의 보험금 약 8천8백만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 (재심 결정)

< 관련 사례 > : 사실상 주택 불인정

- 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등재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으로 전용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주택으로 활용하여 거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으로 불인정 (재심 결정)
- ②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교실, 숙직실, 창고, 급식소’ 등으로 되어 있는 폐교건물로서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불인정 (재심 결정)
- ③ 2009.1.15.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후 2009.3.30. 창고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2009.4.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2011.4.4. 황방리 335-5번지에서 같은 리 332-1번지로 전입한 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창고’에서 거주하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불인정 (재심 결정)

□ 「실질적 소유」 인정 기준

⇒ 형식적 요건인 ‘등기’가 없는 경우 아래 내용으로 ‘소유’ 인정 여부 판단[①+②+③ 충족 필요]

- ①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② 재산세 과세대장, 재산세를 납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③ 미등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세금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급한다.

< 관련 사례 > : 실질적 소유 인정

- ① 신축 중인 주택이 준공검사 전에 화재로 천장 및 내장재 일부가 소실된 경우(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라 하더라도 화재 당시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고, 사실상 주택으로 완성된 상태라면 재난부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법률자문)
- ② 주택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침범한 토지 소유자 전부터부터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동 주택 매수 시 매도자 등과 인접 토지 침범사실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하향 조정하고, 추후에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매도인의 재산권 포기 및 그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공증하였으며, 만약 추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매도인과 그 자녀들도 무조건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실질적 소유로 인정 (대법원 2018.11.16. 선고 2018두 53856 판결)

◆ 제출서류 등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단 지부·해당 지자체 등 심사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05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화재,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보조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난부조금청구서>에 확인 기재하여야 한다.
 - ※ 확인서류 : <재해복구비 지급사실확인서>(시·군·구 발행) 등
- 지급액 = 재난부조금 산정액 - 정부보조금 수령액
 - ※ 의연금(성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 재난범위 : 공무원 본인 소유 주택이 지진으로 전파
 - 재난발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00,000원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정부보조금 수령액 : 9,000,000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재난부조금 지급액 : 11,670,000원
 - (5,300,000원×3.9배) - 9,000,000원 = 11,670,000원

급여 조정 관련 판단기준

[기준 4] 재난부조금 지급 시 보조금 및 의연금 공제 기준

- 재난부조금 지급 시 보조금만 공제하고 의연금(성금)은 미공제
- 보조금 공제 시 개별 사례별 구체적 공제 기준

□ 법령상 공제원칙

-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급여로서 ②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재난부조금 지급 시 공제하여야 함
 - ※ 재난부조금 지급 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재난부조금을 공제 범위 내에서 환수

○ 공제 적용 여부

- 양 급여 전부 재해 구호 등을 위해 지급되는 유사한 성격이지만,
- 보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재원인 반면에 의연금은 예산이 아닌 성금 등 기부금품이 재원이므로 보조금만 공제 적용

□ 의연금 공제기준 : 기존 지침내용 변경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부조금 지급 시 보조금과 함께 의연금도 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부조금 지급 시 보조금은 공제하되 의연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사례별 보조금 공제기준

구분	사례 내용	공제 기준
세입자 (실거주자) 존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공무원이고 세입자(실거주자)가 따로 있는 주택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세입자에게 보조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주택 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보조금 전액을 공제한다
제3자와 공동 소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제3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실거주자인 제3자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중 공무원의 주택 소유권 비율만큼 보조금을 공제한다

06

그간의 재난부조금 지급결정사례

- 주택의 파손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재난부조금 청구권을 취득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상 상속인이 재난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축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화재 당시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고 사실상 주택으로 완성된 상태라면 재난부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산정할 때 화재증명원상 그을림에 의한 오손 등은 소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화재피해조사서의 ‘손해율’이 0.25 미만인 경우)
- 같은 건물 안에 개별등기가 된 원룸 1개가 완전 소실된 경우 완전소실된 것으로 본다.
- 건축물대장에 같은 번지에 한 동은 주택용도, 다른 한 동은 사무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용도인 건물을 기준으로 피해정도를 산정한다.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된 경우 주택에 대한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재난부조금 총액에 공무원 소유지분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자택에서 분신자살을 하면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이 전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에 의한 재난부조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난부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조급여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전보금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부조성격의 급여이므로 제3자인 가해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07

청구시효

- 재난발생일부터 3년

2. 사망조위금

01 지급요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서, 그 지급 범위 및 지급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 범위	지급 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포함), 자녀의 사망 ※ 법 제4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사망 ※ 법 제4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② 손자녀,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 ※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19.11.14. 선고 2019두42112)를 반영하여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인정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지급 기준(법 제43조제1항)]

지급 범위	지급 기준
배우자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혼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
부모의 사망 (배우자 부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배우자 포함)의 친생부모, 양부모 ※ 입양자의 경우,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인 양부모 뿐만 아니라 자연혈족인 친생부모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됨
자녀의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생자, 양자(입양한 자녀) 태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후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 지급 ※ 출생 후 바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됨 - 출생 전에 사망(사산)한 경우 : 부지급

02

수급권자의 순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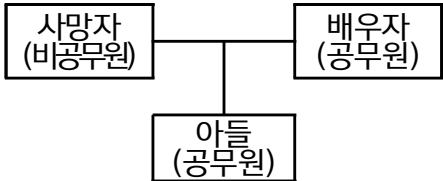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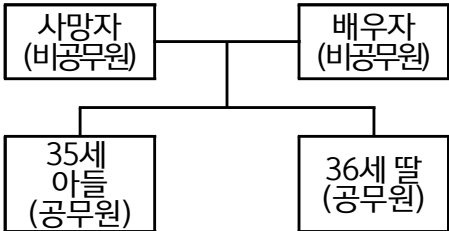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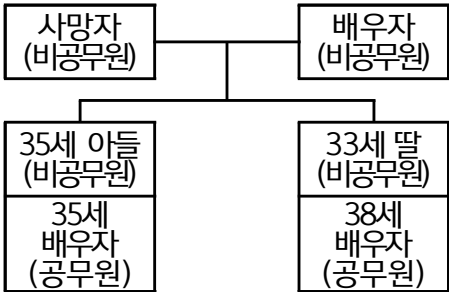
사 망 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 고
공무원의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당 해 공무원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 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 본인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장제자	1. 배우자 2.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 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순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 에게 지급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영 제54조에 따라 선순위자인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 사망조위금은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중복지급 불가 (공무원이 재직 중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님)

03

공무원의 가족 사망 시 사망조위금 청구인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청구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 시	청 구 인
<p>1. 사망자의 배우자 및 아들이 공무원인 경우</p> 	<p>영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인 공무원이 청구하여야 함</p>
<p>2. 사망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아들과 딸이 공무원인 경우</p> 	<p>영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딸이 청구하여야 함</p>
<p>3. 사망자의 배우자와 아들, 딸은 공무원이 아니고, 아들의 배우자와 딸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p> 	<p>영 제54조 제1항 3호에 따라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아들의 배우자인 공무원이 청구하여야 함</p>

※ 위의 예시 2와 3에서 부양하던 공무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위의 순위에 상관없이 그 공무원이 청구해야 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사실로 확인)

04

공무원 본인 사망 시 사망조위금 청구인 및 청구권 행사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 제43조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청구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 시	청구인 및 청구권 행사
<p>1. 사망자(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p> <pre> graph LR A[사망자 (공무원)] --- B[배우자 (공무원)] </pre>	<p>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가족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없음</p>
<p>2. 사망자(공무원)의 배우자가 없고(이혼·사망) 자녀의 배우자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p> <pre> graph TD A[사망자 (공무원)] --- B[배우자 (이혼·사망)] A --- C[35세 아들 (비공무원)] A --- D[33세 딸 (비공무원)] C --- E[35세 배우자 (비공무원)] D --- F[38세 배우자 (공무원)] </pre>	<p>영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최근친 직계비속인 35세 비공무원 아들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딸의 공무원인 배우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없음</p>
<p>3. 사망자(공무원)의 배우자가 없고(이혼·사망) 직계비속 중 비공무원인 아들과 공무원인 딸이 있는 경우</p> <pre> graph TD A[사망자 (공무원)] --- B[배우자 (이혼·사망)] A --- C[35세 아들 (비공무원)] A --- D[29세 딸 (공무원)] </pre>	<p>공무원인 29세 딸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35세 비공무원 아들은 영 제5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이 없음</p>

05

청구 및 지급절차

(1) 결정 및 지급주체

구 분	결정 및 지급주체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
지방직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구,군 등)
교육직 공무원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청구 및 지급절차

● 국가직 공무원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구비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등록)하거나,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지부)으로 제출
- 공단(지부)에서는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 ※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사망조위금 지급

● 지방직 및 교육직공무원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구비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등록)하거나,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

유의사항

- 수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하여야 함
단, 사망조위금은 수급권자(미성년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에서 다른 공무원(「2. 수급권자의 순위」참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우선 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는 3년이며,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됨

06 구비서류

구비서류	내 용
① 사망조위금 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참조
②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③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부모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부모 사망 당시 혼인 여부 확인
④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사망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조위금 청구 시 ●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07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公簿)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 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 구비서류 (아래 내용에 사실상 친생부모를 ‘친생부모’ 또는 ‘고인’으로 표기함)

(1) 기본서류

구비서류	내 용
① 사망조위금 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참조
②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③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부모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부모 사망 당시 혼인 여부 확인

(2) 필수서류

구 분	작성 및 확인사항
친생부모 사실관계진술서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사망조위금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 구 인 : 사실상 친생부모라는 주장을 서술형으로 작성(필요시 가족관계도 첨부) 심사담당 : 제출된 제적등본 및 선택서류 내용을 기초로 진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제적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공부(公簿) 상 부 또는 모 기준 제적등본 ※ 가계도 확인에 필요

(3) 선택서류

구 분	작성 및 확인사항	비고
①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과 동거기간(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한 기간) 확인 	3종 이상의 서류 제출
②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사항란에 고인을 부모로 기재여부 확인 	
③ 생활기록부(초·중·고)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사항란에 고인을 부모로 기재여부 확인 ※ 초·중·고 중 1개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④ 건강보험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이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여부 확인 	
⑤ 부의안내 등 장례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고인의 상주로 기재된 부고장 또는 고인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증빙서류 	
⑥ 청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혼인 시 제작된 청첩장에 고인이 부모로 등재 여부 확인 	
⑦ 입퇴원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인의 사망전·후 입퇴원확인서에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고인의 보호자로 기재 여부 확인 	
⑧ 보험료납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과 고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관계 여부 확인 	
⑨ 인우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를 인우보증인이 확인 ※ 최소 2명 이상 	
⑩ 고인 기준 제적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에서 선택서류로 변경 	
⑪ 주민등록등본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부 또는 모의 기준으로 발급 ※ 가계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서류 추가 	

※ 선택 서류로 위에 예시된 11종 이외에도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묘비석에 망인의 자로 기재된 자료 등)도 제출 가능

● 지급기준

구 분	작성 및 확인사항
인정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선택서류 중 3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함
불인정	• 필수서류 제출 미흡 • 선택서류 제출 미흡(3가지 미만 제출) • 선택서류를 3가지 이상 제출하였으나, 친생부모 사실관계 진술서 등 필수서류 심사 결과 사실상 친생부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택서류 제출 없어도 사망조위금 지급

※ 유전자 검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기관의 검사결과에 한하여 인정함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준>

-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의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예시 : 묘비석에 망인의 자로 기재된 자료 등)

※ 입양에 의한 양부모 관계는 지급 가능하므로, 입양을 통해 법률상 부모가 된 경우 지급 가능

08

혼인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 목 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부모’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함에 있어,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사망조위금 수혜상실 방지

● 청구대상

- 공무원이 결혼식 후 혼인신고가 지연되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조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배우자 부모 사망 후 3년) 완성 전에 혼인신고를 한 자

● 지급기준(요건)

- ① 공무원이 결혼식 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것
- ② 사망조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배우자 부모 사망 후 3년) 완성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것
- ③ 혼인신고가 지연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일이 배우자 부모의 사망일보다 늦을 것
- ④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3가지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 예시 >

결혼	배우자 부모 사망일	혼인신고	사망조위금 신청가능
2017. 7. 5.	2017. 8. 29.	2017. 9. 15.	2017. 9. 30.

* 단, 사망일보다 결혼일이 이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증빙서류

- 공무원이 다음의 필수서류 중 3개 이상을 제출함으로써 결혼일 증빙

구분	증빙자료	작성사항 및 인정조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첩장 • 결혼식 사진 • 결혼식 비용 정산내역서 • 결혼 관련 복무신청 서류 (결혼 휴가 등) • 경조사 고지 기관 게시문 • 기타 결혼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일자와 관련된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날짜가 표기되어있지 않거나, 사망일 이전에 결혼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09

그간의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사례

- 고인 사망 후 청구인(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전출을 하여 현재 소속기관과 고인 사망 시 소속기관이 상이한 경우, 사망조위금 청구는 현재 소속기관이 아니라 고인 사망당시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함
- 공무원 재직 중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효기간(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무원 퇴직 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조위금 청구 불가능
-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또는 공무원의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배우자(또는 공무원의 부모)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동 권리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됨
-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조위금 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며, 당해 공무원이 사망조위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동 사망조위금 청구권은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됨

- 공무원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사망조위금 청구 없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조위금 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속인들이 민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 청구권 승계
- 공무원을 살해한 배우자에게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무원의 분신자살을 배우자가 방조하였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의 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망조위금 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배우자가 당해 공무원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방조행위의 정도를 넘어 당해 공무원의 자살을 위해 직접 불을 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이는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 내지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될 것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사망조위금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등으로 수급권 행사가 곤란한 때에 대리수령은 급여수령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실종 또는 행방불명되어 권리행사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부재기간 2월 이상, 연금취급기관장 확인) 차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
- 1995.10.19. 행방불명, 1996.10.9.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나, 2000.6.7.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 객관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 청구권자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2000.6.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일반 사망과 마찬가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
 - ※ 실종선고 시 사망조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실종선고심판 확정일’부터 기산
- 임용결격 공무원에게 기지급한 사망조위금은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장제에 대하여 위로차원에서 지급한 부조금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환수하지 않음

3. 이중지급 방지

01 이중지급 점검

- 부조급여는 1인의 급여사유 발생에 대하여 국가직, 지방직을 불문하고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됨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는 타 기관 소속공무원과의 이중지급의 검색을 위하여 반드시 공단의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조급여 지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함

02 이중지급 시 환수조치 사항

- 환수절차
 - 각 기관의 급여지급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중지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단은 급여를 지급결정한 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이를 확인) 후 순위자에게 부조급여를 지급한 기관에 기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며,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환수조치를 해야 함
- 환수이자 등
 - 후순위자 등에게 지급된 부조급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 보아 환수 시에 환수이자(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의 이자, 영 제24조 제1항 후단)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법 제16조 제1항 후단),
 -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부과하며 (법 제16조 제1항 후단),
 -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가산하는 분할이자는 부과하지 아니함(영 제24조 제6항)
- 환수내역 통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순위자 등에게 지급된 부조급여를 환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중 지급사실을 통보한 공단(지부)에 환수 내역을 통보해야 함



제3절 / 기준소득월액 최고·최저 보상기준

01 기준소득월액 최고·최저 보상기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2항)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160%(최고 보상기준)를 초과하거나, 50%(최저 보상기준)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 적용대상 급여
 - 사망조위금(공무원 본인 사망 시),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02 적용 예시

● (예시 1)최고 보상기준

- 2021.03.01.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0,000원(상한액 8,624,000원)

구 분	본인 기준소득월액	최고 보상기준	실지급여
사망조위금	10,000,000원	8,624,000원	17,248,000원 (8,624,000원 × 2배)
순직유족연금	10,000,000원	8,624,000원	3,708,320원 (8,624,000원 × 43%)

● (예시 2)최저 보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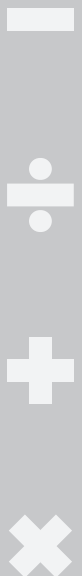
- 2021.03.01. 사망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390,000원(하한액 2,695,000원)

구 분	본인 기준소득월액	최저 보상기준	실지급여
사망조위금	2,000,000원	2,695,000원	5,390,000원 (2,695,000원 × 2배)
순직유족연금	2,000,000원	2,695,000원	1,158,850원 (2,695,000원 × 43%)

제7장 연계제도

제1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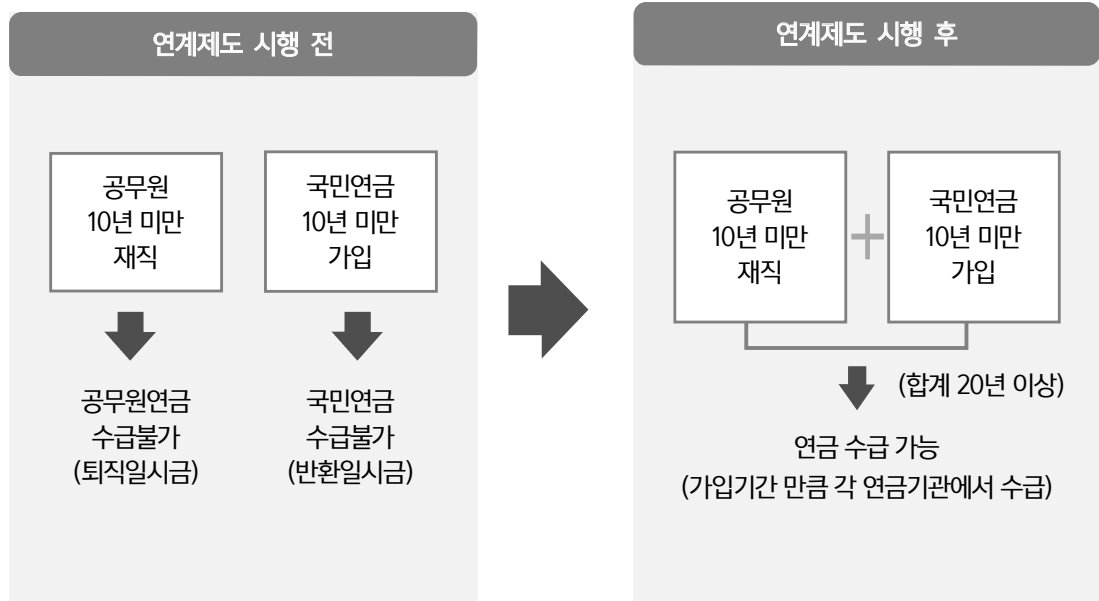
제1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1. 제도개요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최소가입기간

- ① 국민연금 : 10년
- ②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 2016년 이전 20년, 이후 10년
- ③ 군인연금 : 20년



2. 요건 및 대상

01 요건(연금연계법 제10조, 제3조)

-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과 국민연금법 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음
 - ※ 전체 기간은 20년 이상이라도 한쪽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함

예시

- 국민연금 17년 6개월 가입 + 공무원 5년 6월 재직
⇒ 국민연금 17년 6개월치 연계노령연금 + 공무원연금 5년 6개월 연계퇴직연금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
 - ※ 어느 한쪽이라도 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구제해 주는 법안

02 대 상(법률 제9431호, 2009. 2. 6. 연금연계법 부칙 제1조, 제2조)

- 원칙적으로 연계법 시행일('09. 8. 7.) 이후에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

【예외 : 연계신청 대상】

- ① 2007. 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즉,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했지만 2007. 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 ②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 이후(2009. 2. 7.)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연계신청(연금연계법 제8조)

01 연계신청 방법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퇴직수당은 반드시 청구하여 수령)
- 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연계신청한 후 퇴직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
※ 퇴직수당은 반납하지 않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 www.ppsl.or.kr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부, 국방부 군인연금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별정우체국연합회 중 본인의 가입이력이 있던 한 곳에만 연계신청

02 신청기한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함

03 연계반납금 납부(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함
 - 일시납부 = 퇴직일시금 + 이자
 - 분할납부 = 일시반납금 + 분할이자(분할납부 횟수로 균분한 금액으로 납부)
- ※ 형벌 등으로 급여를 제한받은 자가 연계신청 시 제한된 급여산정액에 이자 가산하여 반납하고, 연계연금도 제한된 금액으로 수령함

- 납부방법 (연금연계법 시행령 제3조)

-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
- 분할납부 횟수

직역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할납부 횟수	24회 이내	48회 이내	60회 이내

- 분할 납부액 재산정

-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
- 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분할납부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p 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연계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
 - * 조정된 이자율과 차이가 2%p 이상 되는 경우 다시 조정

04 연계반납금 납부방법의 변경

- 사유

- 반납금의 일시납부를 분할납부로 변경 또는 분할납부 도중 잔여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 분할납부 도중 납부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
 - * 납부기간 연장은 연계기간에 따른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 www.ppsl.or.kr에서 반납금 납부방법 변경 신청하거나 “연계신청(급여) 정보 변경 신청서”에 “반납금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 기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해당 부서에 신청

4. 연계신청의 취하

-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음
- 다만,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
- 연계신청을 한 자가 반납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연체기간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계신청을 취하하며 체납한 반납금을 정산했을 때에는 정산한 기간은 체납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관리기관(공단)은 반납금 등을 내지 않은 사실과 연계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4개월 체납 시 통보)
- 연계신청자가 직역연금에 다시 가입되어 연계 신청한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연계연금법 제8조의 2)
- 연계반납금의 반환
 - 연계신청이 취하된 경우 납부된 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반환

이자 계산기간	반납금 등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이자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5. 연계급여

1 연계급여 종류 및 산정방법

01 연계퇴직연금

급여종류	지급기관	산 정 방 법						
연계퇴직 연 금	공 무 원 연금공단	① 2009.12.31.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0%로 연금을 산정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자(2015.12.31.이전) 또는 10년 이상자(2016.1.1. 이후)는 2.5%로 연금산정 ② 2010. 1월부터 2015.12월까지 적용기간에 대해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로 연금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산식]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년수 × 1.9%</div> ③ 2016.1.1. 이후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부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 ※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적용하고 1%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적용하지 않음.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1.1. 임용 후 2018.12.31. 퇴직하고 연계승인자의 연계퇴직연금 산정• 평균보수월액 200만원,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350만원, 본인의 평균기준 소득월액이 330만원• 재직기간 : 1기간 5년, 2기간 6년, 3기간 3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간 연계퇴직연금액 : 250,000원 (2,000,000원 × 5년 × 2.5%)· 2기간 연계퇴직연금액 : 376,200원 (3,300,000원 × 6년 × 1.9%)· 3기간 연계퇴직연금액 : 189,744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tr><td style="text-align: center;">2016년</td><td>-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974원 (3,300,000원 × 1년 × 0.878%)</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7년</td><td>-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248원 (3,300,000원 × 1년 × 0.856%)</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2018년</td><td>-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7,522원 (3,300,000원 × 1년 × 0.834%)</td></tr></table> <p style="margin-top: 10px;">⇒ 연계퇴직연금 : 815,940원 (①+②+③)</p>	2016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974원 (3,300,000원 × 1년 × 0.878%)	2017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248원 (3,300,000원 × 1년 × 0.856%)	2018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7,522원 (3,300,000원 × 1년 × 0.834%)
		2016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974원 (3,300,000원 × 1년 × 0.878%)					
2017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8,248원 (3,300,000원 × 1년 × 0.856%)							
2018년	- 소득재분배 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 1년 × 1%) - 개인의 퇴직연금 : 27,522원 (3,300,000원 × 1년 × 0.834%)							
연계노령 연 금	국민연금 공 단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만큼(1년당 기본연금액의 5%)의 연금액을 지급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예시) 가입기간 10년인 경우 : 기본연금액 × 50% + 부양가족연금액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년 × 1/12						

02 연계퇴직(노령)유족연금

급여종류	지급기관	산정방법
연계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
연계노령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 가입기간을 1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연계연금의 수급연령

- 연계연금은 65세. 단,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지급연령 특례 적용 (법률 제9431호, 2009. 2. 6. 연계법 부칙 제3조)

[출생 연도별 수급 연령]

출생년도	~'52년생	'53년생~ '56년생	'57년생~ '60년생	'61년생~ '64년생	'65년생~ '68년생	'69년생 이후
연금개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 단,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따름

3 연계퇴직연금의 청구

- 연계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도달한 경우에는 연계 퇴직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연계퇴직연금을 청구
- 본인의 가입이력이 있었던 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부, 국방부 군인연금과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별정우체국연합회)의 한 곳에 같이 청구하거나 각각 청구 가능

4 중복급여의 조정(연금연계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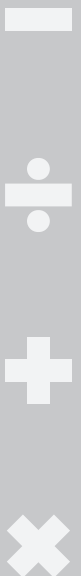
- ①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 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②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③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하거나 20% 지급
- ⑤ 기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권이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함.

【연계연금법상 중복급여의 조정 유형 및 지급액】

본인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선택한 급여	지급액
	연계연금법	직역연금법	국민연금법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선택 없음	연계퇴직연금 전액 +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의 50%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5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u>연계퇴직</u> <u>유족연금</u>		<u>퇴직연금</u>		선택 없음	퇴직연금 전액 +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의 50%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선택에 따라 결정	연계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선택하지 않은 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 유족연금 30%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	노령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장애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전액 + 연계노령유족연금 30%
			반환일시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전액 + 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전액

제8장 주택사업

제1절 사업개요	349
제2절 임대주택	351
제3절 주택분양	364





제1절 / 사업개요

1. 사업의 종류

구 분		내 용
주택 임대	임대 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무원과 전·출입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주택 분양	주택건설 분 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립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무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분양하는 사업
	국민주택 특별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에서 건립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무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연금수급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

2. 공급 실적

구분	계	주택분양	특별알선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계	83,697	32,058	34,035	17,604	-
1982	9,416	-	6,496	2,920	-
1983	6,223	-	3,348	2,875	-
1984	7,686	-	2,699	4,687	300(600명)
1985	5,358	-	2,708	2,650	-
1986	7,181	2,392	3,785	1,004	-
1987	4,420	-	4,060	360	-
1988	4,871	-	2,231	2,640	-
1989	1,758	-	1,758	-	-
1990	1,054	-	1,054	-	-
1991	2,307	2,042	265	-	-
1992	3,646	3,435	211	-	-

1993	2,653	2,116	537	-	-
1994	1,594	968	626	-	-
1995	2,537	1,840	697	-	-
1996	3,485	3,150	352	△17	-
1997	1,531	1,063	488	△20	-
1998	547	-	183	364	-
1999	1,293	1,212	190	△109	-
2000	1,430	1,585	144	△299	-
2001	395	-	639	△244	-
2002	661	1,014	-	△353	-
2003	3,062	1,841	149	1,072	-
2004	2,706	1,959	90	657	-
2005	1,656	644	213	799	-
2006	△235	-	64	△299	-
2007	1,151	959	71	121	-
2008	875	671	64	140	-
2009	17	-	36	△19	-
2010	1,247	1,503	37	△293	-
2011	480	627	96	△243	-
2012	1,884	1,405	96	383	-
2013	1,310	-	99	1211	-
2014	1,361	627	91	643	-
2015	1,620	1,005	100	515	-
2016	△564	-	100	△664	
2017	△2,304	-	99	△2,103	△300
2018	△32	-	69	△101	
2019	22	-	56	△34	-
2020	85	-	34	51	-

※ 독신자숙소는 2016.12.31.까지만 운영(해당단지 매각)



제2절 / 임대주택

1. 임대주택 운영 (2020. 7. 1.부터 적용)

01 입주신청 자격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음

-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
- 임대주택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02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

- 입주자모집
 - 입주자모집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2개월 단위)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퇴거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배정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통보된 날 또는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체결
 - 기일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예비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을 취소함
 - 임대차계약서는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제1조건)의 5%로 하며,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함

위약금 = 전세임대보증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금리* × 2년 × 10/100

*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21년 1.1%)

03

입주자 선정 순위

- 입주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순 위	선 정 기 준
제1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비수혜자
제2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비수혜자
제3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기수혜자
제4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기수혜자
제5순위	1~4순위 이외의 자

- **가점제 적용기준**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전국 무주택 기 간 (1)			10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0		
				무주택기간 5년 이상	8		
				무주택기간 1년 이상	4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정부 정책 배려자	입주신청자 소득 (2)		10	4분위 이하	10	태아 포함 (중복적용)	
				5 ~ 6분위	5		
				7 ~ 8분위	2		
	양육 가정	미성년 자녀(3)	10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영유아 자녀(4)	10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예비)신혼부부(5)			10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 이내	10	
	주거약자가정(6)			10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정(7)			10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신규 임용공무원(8)			10	임용 5년 이내	10	
인사교류 등(9)			10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10		
월임대료 가점(10)			5	월임대료비율 30%이상 선택	5	단지별 4년이상 (계약갱신권 포함)	
가점 계			95				
단독세대주(11)			-10		-10		
감점 계			-10				
가점계 + 감점계							

(1) 국토부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3)(4)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및 임신진단서로 확인, (5)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6)(7)(8)(9)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10) 입주신청서로 확인 후 계약시 적용 (11)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전국무주택기간이 긴 세대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가.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무주택기간은 입주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입주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입주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입주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다.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에서 나목까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2) 입주신청자 소득 : 매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4/4분기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신청자의 입주심사 당시 「공무원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분위로 한다.

(3) 미성년자녀 : 입주신청자(또는 그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의 수. 다만, 태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신청일 기간 사이에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하며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진단서를 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퇴거조치)

(4) 영유아 : (3)의 미성년자녀 중 6세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5) 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자로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자, 예비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 6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예비신혼부부로 입주 신청하는 자는 입주신청자와 결혼할 상대자(이하

‘예비배우자’만을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입주심사(가점 산정)를 한다. 예비신혼 부부는 별지 제29호의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거조치 할 수 있다.

- (6) 주거약자 가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2조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세대원이 입주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정(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제출)
- (7) 한부모가정 : 입주신청자의 해당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정으로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자(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 (8) 신규공무원 : 입주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자
- (9) 인사교류 등 : 근무지 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된 경우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교류 등 1년 이내인 자
- (10) 월임대료 가점 : 월임대료 비율 30%이상을 선택하는 자(4년간 임대조건 변경 불가. 다만 월임대료 비율의 상향변경은 가능)
- (11) 단독세대주 : 입주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04 소득분위 결정

-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 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
- 이때,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

【 통계청 발표 2020년 4분기 소득분위 】

(적용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구 분	근로소득	구 분	근로소득
1 분위	1,306,381	6 분위	4,685,154
2 분위	2,378,096	7 분위	5,566,480
3 분위	3,052,538	8 분위	6,217,643
4 분위	3,619,380	9 분위	7,587,418
5 분위	4,157,669	10 분위	10,357,576

※ 각 분위 근로소득(연간소득÷12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차상위 분위로 결정

※ 소득 10분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 10분위 적용

05 임대주택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가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1회 2년의 기간으로 재계약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재계약 가능
(단, 사유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① ~ ⑥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임대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①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 ②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 ③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④ 자녀가 1년 이내 상급학교(고교에서 대학)에 진학예정(입주중인 자에 한함)
 - ⑤ 「주거약자법」제2조제1호 해당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적용 대상자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자

- 입주자나 배우자가 임대주택 거주 중 주택을 분양받거나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임대주택에 월세로 입주한 자는 계약한 자는 재계약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재계약 가능(최초 입주일부터 최종 재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월세 조건 유지하여야 함)
- ※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대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 까지 단축 또는 연장 가능

06 임대조건 및 적용기준

-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재계약 시에만 변경 가능

【 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건	100%	-
제2조건	80%	20%
제3조건	70%	30%
제4조건	60%	40%
제5조건	50%	50%
제6조건	30%	70%
제7조건	20%	80%

※ 월세전환이율 : 2.50% (2020.09.29. 기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이전 임대보증금 등의 5% 범위 내에서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 (50~80% 수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 31.까지 적용

07

계약금·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절차 : 주택배정 → 계약금납부 → 계약체결 → 임대보증금 납부 → 입주
- 납부방법 (고지서상의 개별 가상계좌)
- 납부기한 :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납부
- 임대보증금 납부기한 경과 시 : 연체료* 가산(2021년 기준 연4.4%)
 - *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4배
 - ※ 연체료 산정 : 미납원금 × 연체일수 × 연체료율 ÷ 365일(10원 미만 절사)

● 월임대료 납부방법

① 개별납부

- 납부절차 : 공단 고지 ⇨ 문자안내(SMS) ⇨ 입주자 개별납부
 - ※ 고지서는 입주자 본인이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지서 확인 후 개별납부
- 납부방법 (고지서상의 개별 가상계좌)
- 납부기한 : 매월 말일까지 납부
- 납부기한 경과 시 : 연체료* 가산(2021년 기준 연4.4%)
 - *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4배
 - ※ 연체료 산정 : 미납원금 × 연체일수 × 연체료율 ÷ 365일(10원 미만 절사)

② 자동이체

- 신청방법 : 고객지원시스템 →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월임대료 자동이체 신청 또는 입주신청서 작성 시 자동이체 신청
- 납부방법 : 매월 10·17·20·25일 중 고객이 신청한 날짜에 자동 출금
 - ※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출금실패 시 매월 말일까지 개별납부 필요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안내 】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중 1가지만 적용 가능

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공단에서 매월 월임대료 납부금액을 익월에 일괄 등록(별도신청 필요 없음)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항목 금액에 포함되어 조회 가능

②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전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월임대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관제출 필요
 - ※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등록 금액에서 납부한 월임대료 금액만큼 차감 필요

08

퇴거신청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려는 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고객센터시스템을 통하여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함

09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 】

- 공단이 정한 모든 규정의 준수에 관련된 사항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사항
-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
- 공단이 실시하는 시설관리 및 개선업무와 관련된 협조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 임대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 임대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 예외)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타 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 다음의 사유로 퇴거한 자는 향후 임대주택에 추후 입주할 수 없음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위약금 부과

- 다음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임차인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임대보증금 반환금액에서 공제)

$$\text{위약금} = \text{전세임대보증금} \times \text{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금리}^* \times 2\text{년} \times 10/100$$

*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1년 1.1%)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2. 임대주택 시설관리

01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 전용부분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5장 임대주택 등 시설관리 제45조(공용과 전용의 구분)에 의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 현관,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을 말하며, 세부범위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세부내용 :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6] 참조

◆ 공용부분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5장 임대주택 등 시설관리 제45조(공용과 전용의 구분)에 의한 전용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전용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 전용부분 외의 주택의 모든 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은 공용부분으로 하며, 세부범위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세부내용 :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7] 참조

02 시설보수의 범위

◆ 전용부분 : 공단 또는 입주자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4)

● 입주자 부담

- 도배 및 장판 : 수선주기(10년) 이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기본 시설물의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 계기류, 배선 기구 등) 등은 입주자 부담
- 일상적인 유지관리[간단한 손질(고침), 나사 조임, 기름칠 등] 및 보수는 입주자 부담이며,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파손이나 보수가 요구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원상복구비용은 입주자 부담

- 공단 부담

- 10년 이상 세대 도배 및 장판 : 공단 시공기준
- 싱크대, 위생도기, 조명기구, 보일러 등 기본 시설물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교체 시 공단 부담
- ※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비 등의 비용부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공용부분** : 관리주체(공단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4)

- 입주자 부담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 수선주기 및 수선율”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 (전면교체, 전면수리 기준) 6년 이하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태가 양호하고 수선율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
- 그 밖에 소모적 지출항목

- 관리주체 부담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과 그 표준 수선주기 및 수선율”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 (전면교체, 전면수리 기준) 6년 초과
-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시설의 각종 장비류, 계기류, 그 부속시설물 및 도장공사 등
-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 6년 이하 중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

◆ **기타사항**

- 입주자 부담

- 입주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보수비
- 입주자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소모적 시설의 지출 비용
- 비단열 부위에서 발생하는 결로, 곰팡이 등은 시설물 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 및 도색

- 공단 부담

- 자본적 자산의 원상 복구
- ※ 명기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지역별 임대주택 보유현황]

2021. 04. 20. 기준

지부	지역	운영단지				매각 및 재건축				계
		집단화단지*		분산단지**		매각진행		재건축 추진		
합 계		13,091		3,860				2,396		19,347
서울	서울	고덕8	700					개포9	1,703	4,503
		상계	2,100							
경인	경기	부천상동18	670	인양석수아이파크	100					5,202
		부천상동19	581	남양주별내	249					
		파주교하	734							
		화성동탄1	707							
		성남판교	466							
		수원광교	533							
		김포한강	490							
		화성동탄2 (상록리슈빌)	672							
	인천			가좌	300					300
부산	부산			다대(푸르지오)	200					792
				엄궁(롯데캐슬)	100					
				화명롯데캐슬카이저	379					
				개금	60					
				망미	33					
				범천	20					
	울산			아움(롯데캐슬폴드)	80					160
				힐스테이트수암	80					
	경남	마산교방	395	창원명곡	183					767
				창원용지1(포스코더샵)	100					
대구	대구	동호	711	송현(화성파크드림)	370					1,491
				북현(명문세가)	410					
		경북안동	496	포항항구 우방비치	110					
	6 전	대전	노은	940	둔산	400			용운	1
				태평	80			중촌	6	
충남		충남내포	497							497
충북				청주사직(푸르지오캐슬)	160					212
			청주봉명2	52						
세종	세종	M2	632							1,661
		M5	600							
		M6	429							
광주	광주			송정중흥S클래스센트럴	71					378
								운암	249	
								염주	58	
	전남	무안남악	380	순천매곡	20					425
			여수둔덕	25						
전북	전북			남원죽향2	15			전주효자	247	381
				전주반월	40			군산나운3	79	
강원	강원			원주개운	70					161
				춘천우미린뉴시티	32			원주단케	27	
				춘천우두	12					
				동해천곡	20					
제주	제주	강정	358					이도	26	384

* 집단화단지 : 아파트 전체세대를 공단이 소유한 단지

** 분산단지 : 아파트 전체세대 중 일부만 공단이 소유한 단지

【 임대주택 지역별 담당자 안내 】

2021. 4. 20. 현재

지부명	단지명	입·퇴거 담당	시설담당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택사업실	남양주별내	02-560-2593	
서울지부	고덕8	02-560-2662	02-560-2679
	상계	02-560-2672	
경인지부	부천상동18, 부천상동19, 수원광교, 인천 가좌, 안양석수아이파크, 김포한강	02-560-2659	02-560-2673
	화성동탄1, 화성동탄2(상록리슈빌) 성남판교, 파주교하	02-560-2559	
부산지부	다대(푸르지오), 엄궁(롯데캐슬), 화명롯데캐슬카이저, 개금, 망미, 범천, 야음(롯데캐슬골드), 힐스테이트수암, 마산교방, 창원명곡, 창원용지1(포스코 더샵), 창원용지2(아이파크)	051-630-6755	051-630-6752
대전지부	청주사직(푸르지오캐슬), 청주봉명2, 충남내포, 둔산, 태평, 노은	042-600-0563	042-600-0564
세종지부	세종M2, 세종M5, 세종M6	044-410-1304, 1312, 1306	044-410-1312
광주지부	송정중흥S클래스센트럴, 무안남악, 순천 매곡, 여수둔덕	062-350-5016	
대구지부	경북안동, 포항항구우방비치, 동호, 송현 (화성파크드림), 복현(명문세가)	053-715-5443	053-715-5441
강원지부	원주개운, 춘천우미린뉴시티, 춘천우두, 동해천곡	033-854-4704	
전북지부	남원죽향2, 전주반월	063-281-7702	
제주지부	제주강정	064-802-1605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주택사업 > 임대아파트 > 지부 담당자 안내” 매월 갱신



제3절 / 주택분양

1. 주택건립 분양

01 사업개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직접 건립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사업수행 근거

구 분	내 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가목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03 분양절차

1. 신청자격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제외)

※ 인근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③ 충청북도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⑤ 전라북도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⑧ 강원도

2.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공단 고객지원시스템 이용

※ 접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공고문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함

3. 신청시 구비서류

공 통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주민등록 분리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해 당 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 혼인관계증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전 혼인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4.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해당 아래 각 순위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순위 내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재직기간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함

순 위	대상자	비 고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기 수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3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연금수급자	

※ 동일순위 내에서는 점수제 적용 고득점자 순

5. 점수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공무원을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2)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신청공무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3) 신청공무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계	100				
① 무주택 기간	35	1년 미만	0.5	8년 이상~9년 미만	18.9
		1년 이상~2년 미만	2.8	9년 이상~10년 미만	21.2
		2년 이상~3년 미만	5.1	10년 이상~11년 미만	23.5
		3년 이상~4년 미만	7.4	11년 이상~12년 미만	25.8
		4년 이상~5년 미만	9.7	12년 이상~13년 미만	28.1
		5년 이상~6년 미만	12.0	13년 이상~14년 미만	30.4
		6년 이상~7년 미만	14.3	14년 이상~15년 미만	32.7
		7년 이상~8년 미만	16.6	15년 이상	35.0
② 부양 가족수	30	0명(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 이상	30
		3명	18		
③ 공무원 재직기간	35	1년 미만	2	17년 이상~18년 미만	19
		1년 이상~2년 미만	3	18년 이상~19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4	19년 이상~20년 미만	21
		3년 이상~4년 미만	5	20년 이상~21년 미만	22
		4년 이상~5년 미만	6	21년 이상~22년 미만	23
		5년 이상~6년 미만	7	22년 이상~23년 미만	24
		6년 이상~7년 미만	8	23년 이상~24년 미만	25
		7년 이상~8년 미만	9	24년 이상~25년 미만	26
		8년 이상~9년 미만	10	25년 이상~26년 미만	27
		9년 이상~10년 미만	11	26년 이상~27년 미만	28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7년 이상~28년 미만	29
		11년 이상~12년 미만	13	28년 이상~29년 미만	30
		12년 이상~13년 미만	14	29년 이상~30년 미만	31
		13년 이상~14년 미만	15	30년 이상~31년 미만	32
		14년 이상~15년 미만	16	31년 이상~32년 미만	33
		15년 이상~16년 미만	17	32년 이상~33년 미만	34
		16년 이상~17년 미만	18	33년 이상	35

※ 동순위 동점자 처리

- ①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③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6. 3자녀 이상 특별공급

- 신청자격 : 공단으로부터 주택분양을 받았던 사실이 없고, LH공사 등으로부터 3자녀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 특별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
- 선정방법 : 신청자의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등을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 참고)
 - ※ 3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 미달 시 미달된 세대수는 일반공급(1~3순위)으로 전환됨
 - ※ 3자녀 특별공급신청 탈락자는 일반신청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 점수제 적용기준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 동 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가 40세 이상,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구 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35세 이상,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공무원재직기간 (4)		20	20년 이상	20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월단위 절사)
			19년 이상~20년 미만	19		
			18년 이상~19년 미만	18		
			17년 이상~18년 미만	17		
			~	~		
			3년 이상~4년 미만	3		
			2년 이상~3년 미만	2		
			1년 이상~2년 미만	1		
			1년 미만	0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택관리시스템 자동계산(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 동점자처리

- ① 자녀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7. 주택소유 확인방법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 ①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포함됨
- ②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함
- ③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되며 복합건물 소유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으로 용도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는 적용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법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 종전 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대상에 미포함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가점제, 추첨제 모두 해당)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0일) 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순위조정 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8. 유의사항

◆ 분양 신청 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당첨자로 등록되어 재당첨기간 내에 청약당첨이 제한됨
- 분양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공단 주택사업 기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주택 분양 시 후순위로 적용됨
- 신청 시 무주택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분양대상자 중 전산검색결과 무주택기간이 기재사실과 다르거나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순위조정 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확인방법 및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된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1인이 이중 신청하거나 부부공무원이 각각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모두 무효처리 됨(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3자녀 이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모두 무효처리하며(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 후 탈락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등에 따른 일반공급순위(1~3순위)로 전환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당해 주택에 입주 시까지 세대구성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 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고, 입주 기간이 입주 예정 기간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잔금을 입주 시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된 입주지정 기간 초일을 적용
-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단 주택사업실로 통보하여야 함(주소 변경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전화로 변경신청 불가)

2.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

01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된 국민주택 배정분을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6호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6.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 공단 주택도시시기금 예탁액 100억 원, 예탁기간 2018.12.31.~2021.12.30.

02 특별분양 알선절차

특별공급물량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해당 물량을 공고일 기준 7~15일 전 공단에 배정
↓
알선 안내 및 신청접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접수(인터넷)
↓
알선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정순위에 의해 알선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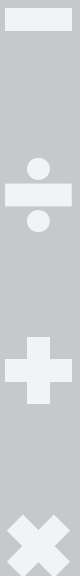
03

신청자격 및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분양대상자 선정방법 등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로 「주택건설분양」과 동일
- 알선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의 분양 일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신청·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주택사업 기 수혜자로 처리됨
- 예비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의 분양일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통보 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 수혜자로 처리됨

제9장 용자사업

제1절 공무원 연금대출	377
제2절 대여학자금 대부	389
제3절 금융기관 알선대출	414





제1절 / 공무원 연금대출

1. 연금대출 처리기준

가. 시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

나.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다. 대출 종류 및 대상

종 류		대 상
일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출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특 례 대 출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미취학자녀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공무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1955.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요양 기간(연장 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면책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입양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라. 대출종류별 요건

대출종류	대 상
일반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015.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단기재직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대출 요건을 충족하고 2020.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특례대출 재원 분리 운영

대출종류	재원 배정비율	적용 대출 종류
일반대출	25.8%	● 일반대출, 단기재직자, 면책대출
주택자금대출	14.7%	● 주택임차, 주택구입
특례대출	59.5%	● 미취학자녀,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한부모가족, 자녀결혼, 육아 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대출 재원별 지출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마. 대출시기 및 재원 배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출시기	1월	4월	7월	10월
대출재원	3,5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잔여재원

바. 대출한도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	일 반 대 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7,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2,500만원
515~66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2,000만원
0~514	최고 500만원	-	-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용 어 설 명 】

예상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공단 채무액	●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주의사항	● 공단채무액과 공단의 금융기관협약대출금(금융기관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사. 대출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상환 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의 차이가 2%p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 + 2%p까지로 조정
 - 대상 : 일반대출, 단기재직자, 주택자금대출
- 특례대출(정책적 배려자) 적용이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를 인하
 -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조정시기 및 기준금리

조정시기	기 준 금 리	적 용 기 간
1월 1일	전년도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당해연도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당해연도 4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당해연도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0월 1일 ~ 12월 31일

아.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등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

종 류	대 출 요 건	구 비 서 류
단기 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 퇴직급여의 1/2이 대부분도 최대 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주택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금납부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분양권매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 후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 심사(잔금일, 전용면적 등)에 따라 대출가능 ●매수금 범위 내에서 7,000만 원까지 대출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서) 또는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p><발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감정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p><분양권매매로 인한 권리의무승계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②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③ 가족관계증명서 <p>※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입주안내문, 잔금 납부고지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p>
주택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금납부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p><발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감정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p>※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p>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종 류	대 출 요 건	구 비 서 류
미취학 자녀	●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 부부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
자녀 결혼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1.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 2.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1955.12.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2.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 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작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 증명서(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 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작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 증명서(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요양 기간(연장 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양자 입양	●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입양관계증명서

2. 연금대출 상환처리 일반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대출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상환
- 이자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일수에 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나.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0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144개월 이내

다. 상환원금 및 이자산정

- 매월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원금 상환기간(원단위까지 산정)
 - 분할 원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고지(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이자계산 : 대출원금 잔액 × 이자율 × 경과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 최초 상환 월 :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 최초 상환 이후 : 당월 상환일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적용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기존 연금대출금을 상환 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마.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대출신청 시 등록한 입금계좌가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실제 보수지급일)에 상환계좌에서 출금
- 상환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 소속기관 보수지급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수지급일에 상환원리금 출금(전출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수지급일)
- 보수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이전 마지막 영업일이 정기상환일로 지정
- 당월 개별상환 여부와 관련 없이 정기상환일(보수지급일) 자동이체상환 처리됨(개별상환금은 대부잔액에서 차감됨)
- 상환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간 및 횟수는 은행에 따라 상이(해당은행 확인)

● 개별상환

- 연금대출은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이 가능함(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자는 대출잔액을 잔여 상환기간으로 균등 분할 조정(원금조정)
(중도 상환 시 입금일까지 경과이자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원금상환 처리)
- 보수지급일(출금일) 또는 보수지급일 전일 오후 3시 이후에 개별상환을 할 경우 당월 상환금이 추가로 출금됨

● 입금계좌

구 분	해당은행 및 계좌			
가상계좌	●입금은행(4개)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 예금주 : 공무원 성명)			
CMS 계좌	●CMS(거래처)코드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타행입금 불가(반드시 해당은행에서만 입금가능)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국민	360-01-0025-561	농협	011-01-441151
	우리	1006-001-281392	우체국	014159-01-003911
	부산	103-01-004920-2	대구	243-12-010458
	광주	210-107-330298	전북	401-13-0336462
	경남	572-07-0037050	하나	581-910006-15305
	신한	통합단말수납화면 7225	제주	49-01-020261

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액별 거치기간 한도 내에서 월 단위로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상환일 전일부터 정기상환일 당일에는 변경 불가 ●거치기간 조정하는 경우 총 상환기간 변동 없이 매월 원금상환금액만 조정
상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연장 및 축소 가능
신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후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사. 원천징수

- 보수에서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후 공단으로 신청
- 기관담당자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한 후 대출상환금을 보수지급일에 공단 계좌에 입금

아. 퇴직시 상환처리

구 분	처 리 기 준
대출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 미상환 연금대출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 지급)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유족)급여에서 일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회생기간 중이라도 퇴직급여 신청 시 연금대출금 일시공제 - 퇴직(유족)급여가 대출 잔액 보다 적을 경우 미공제 잔액은 일시상환 ※ 퇴직급여 공제일부터 완납일까지 미공제 잔액에 대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부과
이자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일, ②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접수일 중 늦은 날
퇴직(유족)급여 미청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산정하여 퇴직(유족)급여에서 상계 처리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퇴직(유족)급여 미청구</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연체 발생</div> </div>
재임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재임용자(퇴직급여 청구시 재임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재임용 전 결정한 대출금 상환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다만, 미납액이 재임용 후 퇴직금의 1/2 초과할 수 없음)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 여부에 관련 없이 유족급여에서 미납대출금을 공제함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11622, 2002.7.24. / 용자사업실-586, 2018.3.21.

3. 연체자 관리

가. 연체이자 산정

부과대상	●미납원금 + 미납이자
연체이율	●공무원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연체일수	●연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연체이자 계 산	● $\{(\text{미납 원금} \times \text{대출 이자율}) + (\text{미납 이자} \times \text{연 체 료 율})\} \times \frac{\text{연 체 일 수}}{365}$

나. 미납액 납부시 정산처리

- 정산순서 : 비용정산 → 연체이자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당월이자 → 당월원금

다. 부당대출금 환수

- 부당대출을 받은 경우 부당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라. 연체자에 대한 업무처리

- 매월 미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안내문 우편발송(10만 원 미만 소액 미납자 제외)
 - 정기 상환일에 자동이체 상환금이 부족한 경우 카카오톡 등 발송(상환일 익일)
- 장기 연체자는 기한이익상실예고 및 상실, 지급명령신청 등 진행

기한이익상실자에 대한 처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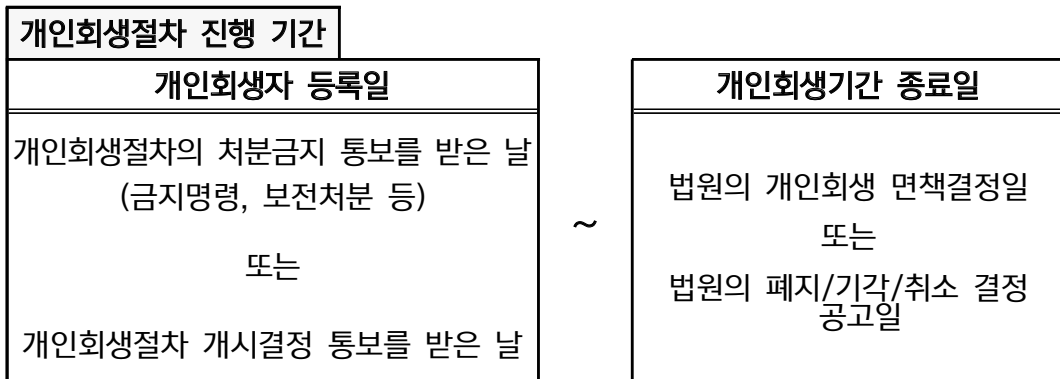
- 개념
 -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원리금 상환 시에는 채권자가 약정한 대출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수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약정사항 위배 시 대출기간을 단축하여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대상: 일정기간 연체중인 자
- 처리
 - 상환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잔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연체이자 발생
- 기한이익상실 전일까지만 이자발생, 이후부터는 미납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기한이익상실자 연체이자 계산

$$: (\text{대출 원금 잔액} + \text{미납 이자}) \times \text{연 체 이 자 율} \times \frac{\text{연 체 일 수}}{365}$$

4. 개인회생자 상환특례

가. 개인회생자 상환처리

- 연금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연금대출 상환 중지.
다만, 연금대출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 연금대출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순서



- 개인회생 기간 중 연금대출 개별상환 불가 안내 및 상환 확인 시 환불조치
- 공단의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대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있는 경우 변제금 수령 시 충당순서 : 연금대출 → 대여학자금(단, 대여학자금 착오대부자는 대여학자금 → 연금대출 순으로 상환 처리)

나. 개인회생자 이자 및 연체이자 부과

- 연금대출금 미상환원금(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미납한 원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부과함
- 상환이 정지 또는 유예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개인회생기간 종료 후 미납금액에 연체이자 부과)

다. 개인회생 종료 후 상환재개

- 개인회생자 등록일 현재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는 개인 회생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상환을 정지한 후 개인회생절차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을 재개함
 - ※ 면책결정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38조 및 개인회생자 변제계획안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공제 가능

* (개인회생자 변제계획안) 공무원연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 면책결정의 경우 미납원리금 최초 고지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개인회생절차 폐지자의 경우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연체이자 부과

5. 원금상환 유예제도

가. 원금상환 유예제도

-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

나. 원금상환 유예 대상

구분	육아휴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대상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유예신청은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 확인 후 접수
유예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남아있는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남아있는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횟수	●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 동일 대출건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제한 대상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을 연체중인 자	● (좌동)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유하거나 인사발령문 사본 또는 휴직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첨부하여 팩스(064-802-2836) 송부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4-802-2836) 송부

- (매월 정기상환) 고지 전에 신청시 당월부터 적용, 고지 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적용
- 보증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증보험사에 재가입 가능여부 확인 필요(유예가 불가할 수 있음)

6. 기타 변경신고

가. 상환계좌 변경 신고 (* 상환계좌는 공무원 본인 명의이어야 함)

인터넷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용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
콜센터	●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신청서 제출	● ‘상환계좌 변경 신청서’작성 ● 복지운영실 연금대출로 팩스(064-802-2836) 전송

나.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 필요
 - 출금이체 안내, 미납안내, 고지 및 정산내역 등 용자 관련 정보제공
- 변경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용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제2절 / 대여학자금 대부

1 대부 업무 처리기준

1. 일반기준(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가. 대부조건

구 분	세부내역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현직 공무원과 그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대부금액	◦ 국내대학: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범위 금액 ※ 장학금 또는 면제액은 제외 ◦ 해외대학: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로, 보험료 등은 제외
대부이자	없음 (무이자)
대상학교	【국내대학】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대학, 산업·교육·기술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각종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학사·석사 학위 통합과정을 둔 대학 - 학사+석사과정이 통합된 경우, 학사과정 기간만 지급대상 ※ 의학·법학·약학 등 전문대학원은 대부대상이 아님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부장관 학력인정)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대학 등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 ④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사과정 전문학사 과정에 한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부 후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⑤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3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 범위의 교육훈련기관 학습과정(1~3과정) 【해외대학】 ◦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국내의 학사 및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학위과정 ※ 어학연수과정, 비학위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등) 등은 대부대상이 아님

나. 대부신청기간

● 국내대학

1학기	2학기
1. 25.(월) ~ 4. 30.(금)	7. 26.(월) ~ 10. 27.(수)

※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대부기간 내 학기별로 1회씩만 대부신청 가능

연간 3학기제 운영 대학인 경우 1, 2학기 고지분을 합산하여 1학기에 1회 신청 또는 2, 3학기 고지분을 합산하여 2학기에 1회 신청하여 총 2회만 신청 가능

● 해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다. 대부금액

구 분	세부내역			
국내대학	【대부금액】 ◦ 당해 연도 당해 학기 별 실등록금 범위 금액 - 실등록금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 면제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으로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금액 < 예 시 >			
	등 록 금	장 학 금 (면제액)	실등록금 납부액 (고지액)	대 부 금 액
	3,097,000원			2,097,000원 범위 금액
	• 입 학 금 : 1,097,000원 • 수 업 료 : 2,000,000원	1,000,000원	2,097,000원	• 십원단위 금액 대부 (십원미만 절사)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등은 대부불가 (단, 항공운항학과 운항실습비는 대부가능) 【신청횟수】 ◦ 총 12회(연2회)까지 대부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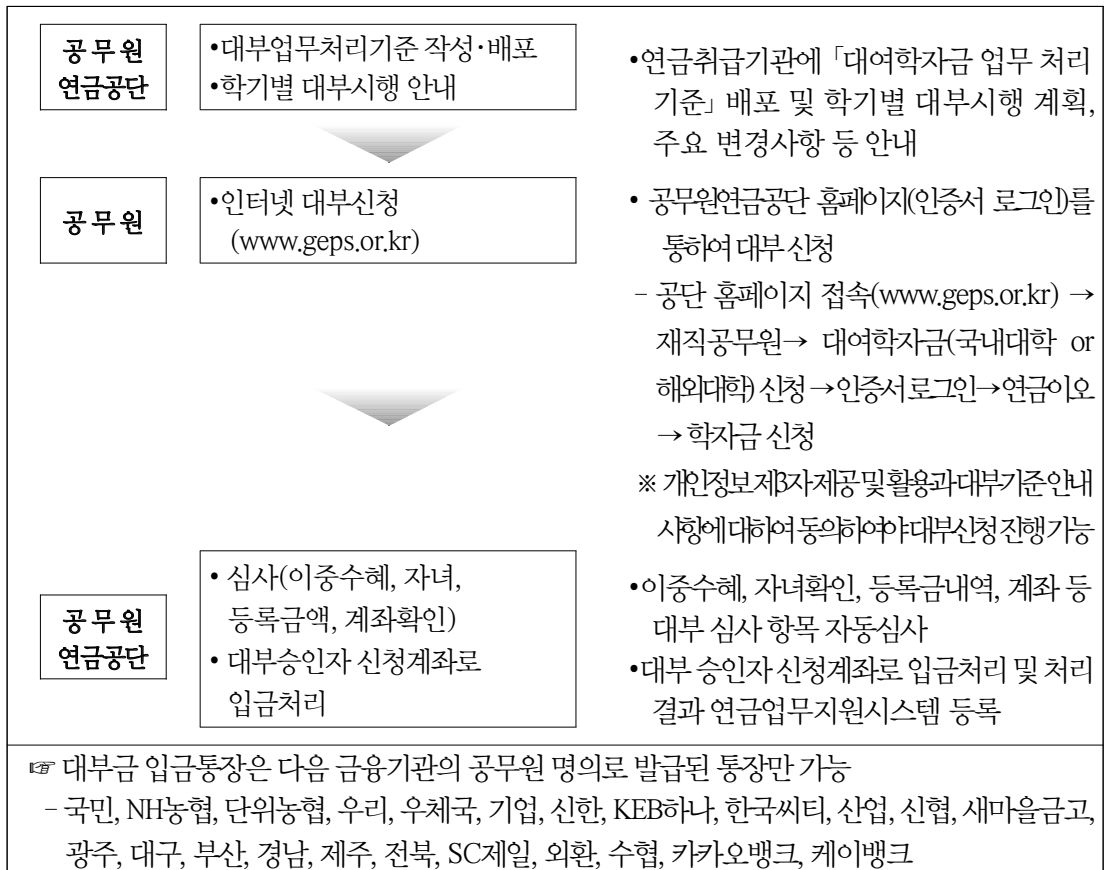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역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국내)	【대부금액】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 -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등록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 - 교육훈련기관의 평가(학점)인정 과정의 교육비(면제액 등 비대상 금액 제외)												
	【신청횟수】 ◦ 국내대학과 동일												
	【대부절차】 ◦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신청 방법												
	<table><tr><td>고지서 발급</td><td>납부</td><td>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td><td>대부신청</td><td>확인 후 대부지급</td></tr><tr><td>교육기관→공무원</td><td>공무원→교육기관</td><td>교육기관→공무원</td><td>공무원→공단</td><td>공단→공무원</td></tr></table>	고지서 발급	납부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	대부신청	확인 후 대부지급	교육기관→공무원	공무원→교육기관	교육기관→공무원	공무원→공단	공단→공무원		
	고지서 발급	납부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	대부신청	확인 후 대부지급								
	교육기관→공무원	공무원→교육기관	교육기관→공무원	공무원→공단	공단→공무원								
	◦ 교육비 선 대부 후 납부 신청 방법												
	<table><tr><td>고지서 발급</td><td>대부 신청</td><td>대부 지급</td><td>납부</td><td>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td><td>사후확인 정상지급 : 종결 부당지급 : 환수</td></tr><tr><td>교육기관→ 공무원</td><td>공무원→ 공단</td><td>공단→ 공무원</td><td>공무원→ 교육기관</td><td>공무원→공단</td><td>공단→공무원</td></tr></table>	고지서 발급	대부 신청	대부 지급	납부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	사후확인 정상지급 : 종결 부당지급 : 환수	교육기관→ 공무원	공무원→ 공단	공단→ 공무원	공무원→ 교육기관	공무원→공단	공단→공무원
	고지서 발급	대부 신청	대부 지급	납부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제출	사후확인 정상지급 : 종결 부당지급 : 환수							
	교육기관→ 공무원	공무원→ 공단	공단→ 공무원	공무원→ 교육기관	공무원→공단	공단→공무원							
- 교육비를 선 대부 받은 후 공단에서 요청한 날까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면제액 등 비대상금액이 있을 경우 환수함 이 경우 대부 제한자(과오대부자) 대부금 상환방법을 준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납부내역 등록여부는 교육생 본인이 확인													
【기 타】 ◦ 대부대상·대부기간·대부한도·학생 신상변동 사항은 국내대학 학자금 대부 기준을 준용함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구 분	세부내역												
독학 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국내)	<p>【대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3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 범위의 교육훈련기관 학습과정 교육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등록 42학점 이내의 1~3과정 교육비(연2회)- 4과정 대부 불가※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의 단계별 시험면제 기준은 최대 30학점이나, 학점인정 기준은 1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으로 제한됨 <p>【신청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대학과 동일 <p>【대부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인터넷 대부 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단 송부 → 대부 심사 → 공무원계좌 입금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대상·대부기간·대부한도·학생 신상변동 사항은 국내대학 학자금 대부 기준을 준용함												
해외대학	<p>【대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미화 \$10,000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금액(총 \$40,000)<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5년제는 \$50,000, 6년제는 \$60,000까지 대부가능- 실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충실비 등)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어학연수료(어학연수과정 포함), 기숙사비, 실습보험료 등은 제외- 지급방법 : 매주 월요일 최초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지급 <p>【신청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대부 한도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국내·외 대학 병행	<p>【대부금액 / 신청횟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대부 구분(국내대학 / 해외대학)에 따른 총 대부금액과 신청횟수 적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대 1학기 = 해외대 \$5,000로 계상◦ 동일 연도 중 국내대학↔해외대학인 경우, 연간 \$10,000한도액에서 기존대부액을 공제한 잔여대부액 범위에서 대부 가능 <p><예시></p> <table><tr><th>구분</th><th>기존대부</th><th>잔여대부액</th><th>비고 (\$1 = ₩1,150인 경우)</th></tr><tr><td>사례1</td><td>국내대 500만원</td><td>해외대 \$5,652</td><td>국내대 500만원 = \$4,348 (\$10,000 - \$4,348 = \$5,652)</td></tr><tr><td>사례2</td><td>해외대 \$6,000</td><td>국내대 ₩4,600,000</td><td>잔여대부액 : \$4,000 (\$4,000 × ₩1,150 = ₩4,600,000)</td></tr></table>	구분	기존대부	잔여대부액	비고 (\$1 = ₩1,150인 경우)	사례1	국내대 500만원	해외대 \$5,652	국내대 500만원 = \$4,348 (\$10,000 - \$4,348 = \$5,652)	사례2	해외대 \$6,000	국내대 ₩4,600,000	잔여대부액 : \$4,000 (\$4,000 × ₩1,150 = ₩4,600,000)
구분	기존대부	잔여대부액	비고 (\$1 = ₩1,150인 경우)										
사례1	국내대 500만원	해외대 \$5,652	국내대 500만원 = \$4,348 (\$10,000 - \$4,348 = \$5,652)										
사례2	해외대 \$6,000	국내대 ₩4,600,000	잔여대부액 : \$4,000 (\$4,000 × ₩1,150 = ₩4,600,000)										

2. 대부신청 및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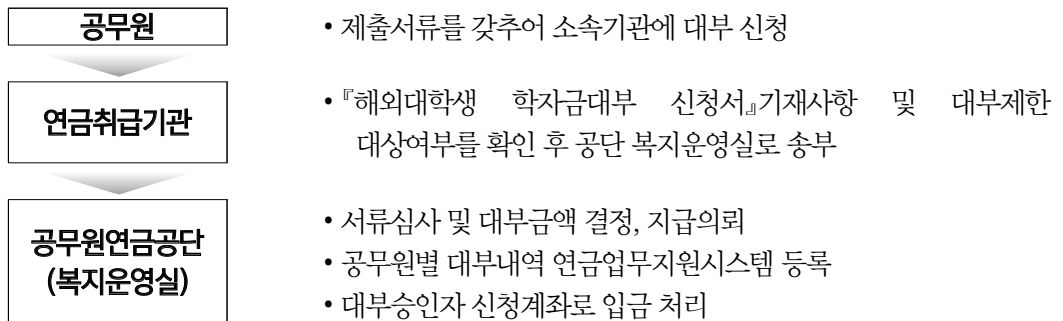
가. 대부절차

1) 인터넷 신청(국내대학, 해외대학)



※ 지정된 신청기간에만 대부 신청 가능

2) 수기 신청(해외대학, 인터넷 신청과 병행)



나. 제출서류

국내대학	해외대학
① 교육비 납입 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일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과 자녀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등) ※ ②항 서류제출은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①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 (수기신청인 경우)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각 1부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증명서 첨부 ③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과 자녀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등) ※ ④항 서류제출은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수기신청인 경우)
▶ 등록금 고지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함 ▶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건은 별도 등록금 고지서 공단에 제출	

※ 교환학생(국내·외 대학 간)의 대부는 해외대학 대부기준에 준함

다. 대부한도 및 보증보험 설정

구 분	세부내역
대부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퇴직금에서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대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퇴직금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 공단채무액 :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 합산반납금 납부 중인 자는 납부한 합산반납금과 퇴직금 예상액(합산 이외 재직기간)을 합한 금액 이내 대부 가능
보증보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채무액(금회 대부신청액 포함)이 예상 퇴직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설정 시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 단, 연금수급자(공무원연금법 · 사학연금법 · 군인연금법 적용)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합산한 경우는 보증보험 설정없이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 가능

참고. 보증보험증권 가입방법

1. [공무원] 대여학자금 신청
2. [공무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회원가입
※ 거래비밀번호 보관관리(평생사용)
3. [공무원] 개인정보 동의 :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계약체결 필수 동의순서
 - 1) 개인정보 동의 → 고객별 맞춤동의 → 2번 생활안정자금 : 2-3번 생활안정용조회동의(공무원연금공단용)
 - 2) 조회동의 “아래내용 모두 동의함” 체크
 - 3) 협약코드번호[생활자금/학자금(P3480)] 선택
 - 4) 인적사항 입력 후 동의완료
4. [공단] 대출신청서 심사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대상 금액산정 → SGI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증권발행용 대출신청서 팩스 송부
5.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가능 여부(보증한도, 신용상태 등) 심사 → 대출신청자 본인에게 통보
6. [공무원] 전자서명
 -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 2) 전자서명 클릭하여 ‘보험증권 또는 각종서식’중 증권선택 → 개인 인증서 로그인 및 암호입력
 - 3) 증권번호(파란색) 클릭
※ 증권번호, 보험료, 사서함번호 별도메모
 - 4) 청약내용확인 및 약관 동의 : 거래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 시 등록 번호)
 - 5) 인쇄방법 ‘사서함인쇄’ 선택 (사서함번호 별도 메모)
 - 6) 전자서명(인증서로 암호 입력) → 확인
7. [공무원] 보증보험료 결제 : 보험료결제 대상 선택체크
 - 1) 보험료결제 선택 : 지급결제, 나중 결제 중 선택
 - 2) 결제방법선택 : ① 무통장입금(가상계좌반기):5분후 처리가능, ② 전자지불(계좌이체), ③ 신용카드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처리 하고 보험료영수증을 출력보관 할 것
※ 무통장입금 선택은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가능
8.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보험료 입금확인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공단 송부
9. [공단] 대여학자금 지급 (SGI보증보험사로부터 증권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입금)
※ 보험료 영수증 출력 : 증권이 발행되면 증권 및 영수증 확인 가능
10. 시스템 오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문의

[문의전화]

SGI서울보증 선릉지점 해성대리점
TEL. (02)558-0488, FAX. (02)555-1911

라. 대부제한(과오대부)

1) 대상자

구 분	세부내역																								
비대상 교육기관	【국내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입·재학하는 공무원 또는 그 자녀 <예 시> -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 비인가 학교 등 - 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 계절학기 수강 【해외대학】 ◦ 국비 유학생, 정규 대학이 아닌 경우(전문학교, 학원 등), 정규대학에 다니더라도 어학연수과정, 비학위 과정 등(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퇴직금 예상액 초과분 보증보험 미설정자	◦ 공단 채무액(금회 대부신청액 포함)이 퇴직금(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등)예상액을 초과하였으나,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은 공무원 ※ 보증보험 미 설정 시, 대부신청액 중 예상 퇴직금 한도까지 대부 가능																								
학자금 중복대부자	◦ 공단에서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학자금 대부를 받고, 중복대부 대상기관에서 동일학기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공무원 본인(부모)과 자녀(대학생 본인)가 동시에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 부부공무원이 한 자녀에 대해 동일학기 대부를 받은 경우 등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 및 종류> <table><tr><th>대부기관</th><th>종 류</th><th>대부대상</th></tr><tr><td>공무원연금공단</td><td>대여학자금(인사혁신처)</td><td>공무원 및 자녀</td></tr><tr><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d><td>국고학자금(교육부)</td><td>교직원 및 자녀</td></tr><tr><td>군인연금공제회</td><td>대학학자금(국방부)</td><td>군인 및 자녀</td></tr><tr><td>한국장학재단</td><td>학자금대출(교육부) 농어촌장학금(농축부)</td><td>전국 대학생 본인 농어촌 부양의무자 자녀</td></tr><tr><td>근로복지공단</td><td>대학학자금(고용노동부)</td><td>산재근로자 및 자녀</td></tr><tr><td>고용노동부</td><td>근로자학자금</td><td>3년이상근로자소득자 성적우수자</td></tr><tr><td>국가보훈처</td><td>학자금</td><td>부사관이상 제대군인</td></tr></table> ※ 학자금 중복대부 대상기관(7개 기관) 이외의 기타 정부예산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 (기금 포함) 등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학자금대부도 중복대부에 해당함	대부기관	종 류	대부대상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인사혁신처)	공무원 및 자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고학자금(교육부)	교직원 및 자녀	군인연금공제회	대학학자금(국방부)	군인 및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교육부) 농어촌장학금(농축부)	전국 대학생 본인 농어촌 부양의무자 자녀	근로복지공단	대학학자금(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및 자녀	고용노동부	근로자학자금	3년이상근로자소득자 성적우수자	국가보훈처	학자금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대부기관	종 류	대부대상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인사혁신처)	공무원 및 자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고학자금(교육부)	교직원 및 자녀																							
군인연금공제회	대학학자금(국방부)	군인 및 자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교육부) 농어촌장학금(농축부)	전국 대학생 본인 농어촌 부양의무자 자녀																							
근로복지공단	대학학자금(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및 자녀																							
고용노동부	근로자학자금	3년이상근로자소득자 성적우수자																							
국가보훈처	학자금	부사관이상 제대군인																							

구 분	세부내역
등록금 전액(일부) 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전액 면제자는 대부 불가 ※ 등록금 일부 면제자는 면제액을 제외한 차액만 대부 가능
대부횟수 초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횟수(12회) 초과 시 대부제한 ※ 부부공무원이 각 대부를 받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대부횟수를 산정함
퇴직 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퇴직 월에는 대부 불가
중복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대부 후 각급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등 지원으로 실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 단, 실등록금을 제외한 초과지급된 대부액을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및 실등록금 초과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대부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단 대부 이후 실등록금을 초과하여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학이 직접 공단으로 장학금을 입금하여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음
기타 오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부를 받은 경우 ◦ 등록금을 대부받은 후 등록금 납부 외 다른 목적으로 대부금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오대부로 간주하여 상환처리 가능 ◦ 대부 후 학생 사정으로 등록 포기한 경우

2) 대부제한자(과오대부자) 자격제한

- 공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부 신청불가
 - ※ 단, 과오대부 전액(이자 포함) 상환완료 시 대부 가능

3) 유의사항

구 분	세부내역
연금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기관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준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대부 신청자)에 반드시 공지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소속기관 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및 재학생 대부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실시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중복대부 여부 실시간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대부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상환 조치하고, 미상환 시 자격제한 등을 연금취급기관에 통보

4) 대부제한자(과오대부자) 대부금 상환방법

구 분	세부내역					
상환절차 및 주요내용	<p>【상환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취급기관(담당자)에게 대부제한자(과오대부자) 안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과오 대부 확인</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일시상환 납부서 고지 (1차고지) 대부자격제한 : 과오대부액 완납 시까지</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15일 경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독촉 납부서 고지 (2차고지) 이자부과 시작</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15일 경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원천공제 납부서 고지 (3차고지) 미납액을 보수에서 균등분할 상환됨을 안내</div> </div>					
	<p>【상환절차별 주요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th style="width: 85%;">내 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1차 고지 (일시 상환 고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만 일시상환 ▶ 상환 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학자금대부 일시상환납부서」를 고지(기관으로 문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대부자격제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상환기한 내 전액 일시상환 시 대부자격 제한 해제 ▶ 2차고지 시작일부터 이자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2차 고지 (독촉 고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시기 : 1차 고지 후 15일이 경과한 날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 +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상환 ▶ 상환 기간 : 독촉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상환기간(15일)이 경과한 후 독촉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상환 ▶ 기한 내에 과오대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일시상환 시 과오대부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중복대부금 전액 상환 시 공단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과오대부 해제 </td></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1차 고지 (일시 상환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만 일시상환 ▶ 상환 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학자금대부 일시상환납부서」를 고지(기관으로 문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대부자격제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상환기한 내 전액 일시상환 시 대부자격 제한 해제 ▶ 2차고지 시작일부터 이자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 	2차 고지 (독촉 고지)
구 분	내 용					
1차 고지 (일시 상환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만 일시상환 ▶ 상환 기간 :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학자금대부 일시상환납부서」를 고지(기관으로 문서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대부자격제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상환기한 내 전액 일시상환 시 대부자격 제한 해제 ▶ 2차고지 시작일부터 이자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 					
2차 고지 (독촉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시기 : 1차 고지 후 15일이 경과한 날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 +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상환 ▶ 상환 기간 : 독촉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상환기간(15일)이 경과한 후 독촉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상환 ▶ 기한 내에 과오대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일시상환 시 과오대부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중복대부금 전액 상환 시 공단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과오대부 해제 					

	구 분	내 용
상환절차 및 주요내용	3차 고지 (원천 공제 납부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시기 : 2차 고지 후 15일이 경과한 날 ▶ 상환방법 : 과오대부 원금 + 이자 12회 균등분할상환(보수 원천공제) ▶ 상환기간 : 1년(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고지기간(독촉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정기 보수지급일부터 상환 - 개인회생자 등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단과 협의 하에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납부서 통보 시부터 과오대부금에 이자를 부과하며, 원천공제납부서 통보 시부터 거치기간 없이 매월 보수에서 균등분할 공제 - 「2021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의 상환 지침에 따라 정상 상환 도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급 기관은 매월 보수에서 공제 후 납부 - 공단의 과오대부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고 있는 기간 중에 타 기관의 학자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공단의 상환대상액(이자포함)은 상환기간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상환금액 완납 시 대부제한 해제)
		<p>【가산이자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이자산정: 2차 고지가 시작되는 날부터 과오대부액(이자포함) 상환 완료 시까지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가산이자를 산정하여 부과함 ◦ 일시 상환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이자 : 과오대부원금×이자 일수×이자율÷365 - 이자일수 계산 : 2차 고지가 시작되는 날부터 일시 상환일까지 ◦ 분할 상환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이자 : 과오대부원금×이자 일수×이자율÷365 - 이자일수 계산 : 매월 상환하는 달의 일수 <p>예) 4월 분할상환 : 4.1. ~ 4.30.(30일) / 5월 분할상환 : 5.1. ~ 5.31.(31일)</p> <p style="text-align: center;">* 1회차 납부이자 : 독촉기간(15일)의 일수를 가산한 이자액</p>

3. 학생 신상변동 신고 및 조기상환 신청

가. 학생신상변동 신고

- 신고대상 : 학자금 대부 학생의 신상변동사항(졸업, 중퇴, 휴학, 재입학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인터넷 신청 또는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졸업일	: 졸업증명서	휴학	: 휴학증명서(사직일과 종료일 기재)
중퇴	: 제적증명서	학교/학년	: 재학증명서
성명(개명)	: 주민등록초본(개명 전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나. 상환조정 신청

- 신청 대상
 - 조기상환 : 학자금 상환개시 전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 기간단축 : 학자금 상환 중 잔여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
 - ※ 상환기간 단축 시 월상환액이 증액될 수 있음
 - 지속공제 : 상환금이 과납되었으나,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지속 상환을 원할 경우
 - ※ 환불을 원할 경우 인터넷 환불 신청 또는 환불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또는 대여자자금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 제출

다. 상환시기 연장

- 연장대상 : 3자녀 이상의 대여자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제6항제4호)
- 연장방법 : 2자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나머지 자녀(추가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 연장
 -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연장 처리됨
- 연장기준 : 추가 자녀의 상환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상환대상액이 많은 자녀부터 상환

2 상환 업무처리기준

1. 일반기준(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재직자

구 분		대 학 별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졸 업		대 학 (4년제 이상)	졸업 익월부터 2년	4년	매월 원금 균분상환
		전 문 대 학	졸업 익월부터 2년	3년	
		학 점 은 행 제 교 육 기 관	학위수여 후 2년	3년 (전문학사과정) 4년 (학사과정)	
		독 학 학 위 제 시 험 면 제 교 육 과 정	학위수여 후 2년	3년	
중퇴	4학기 이상 대부자	학 교 구 분	중퇴 익월부터 2년	3년	
	3학기 이하 대부자	없 음	중퇴 익월부터 2년	2년	

<예시> 졸업자 : 2월, 8월 / 신규 도래자 상환예정 : 3월, 9월[중퇴는 익월부터(예 : 12월 중퇴는 1월)]

[유의사항]

- 대부 후 학생 사정으로 등록 포기 시 즉시 자진 상환하여야 함
- 상환도래자(급여원천공제자)의 상환시기는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과 관계없이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과 동일함

● 퇴직자

- 퇴직 시 퇴직급여 · 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 일시공제, 공제 후 미상환 잔액은 일시상환
- 단, 연금수급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3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2. 상환 방법(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가. 재직공무원

구 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총액(잔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분상환 * 1,000원 미만 금액은 최종 상환 월에 상환함
상환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고지(우편발송 미 실시)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상환대상자 및 납부서 출력
연금취급기관별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에서 원천공제 * 퇴직 월 상환금은 퇴직 월 보수에서 원천 공제하되, 퇴직금을 청구하여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보수지급일 이전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환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연금취급기관에서는 퇴직 월 보수에서 공제하지 않음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개별상환을 해야 하며, 미납된 경우 연체기간 동안 연체이자(해당 연도 1분기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적용) 가산
변동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전출자 및 상환금액 변동자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변동처리
납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지급일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 해당은행 납입지점에 상환금액 납부
연체료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이자 적용 금리: 해당 연도 1분기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납부기간 경과 후 상환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로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연체료 부과 <p><예시>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2021. 12월 현재, 보수지급일 17일 기준)</p> <div data-bbox="376 1237 1159 1407" data-label="Diagram"> </div> <p>▶ 12월 연체일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분 = 10.21. ~ 12.17.(11월 납부기간도 연체일수 포함) * 11월분 = 11.23. ~ 12.17.(해당월 보수지급일까지)
기 타 (개인회생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금지자, 개시 결정 및 인가자: 상환중이거나 상환도래시 고지중지로 연체료 미부과 개인회생 폐지(기각, 취소 등) 및 면책결정 후 상환금 재산정 미납금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폐지 및 면책결정 확정된 날 익월부터 미납금 포함하여 당월 고지생성 - 당월분 고지 회차 산정 * 대부잔액 ÷ (총대부액 ÷ 상환 회차) = 잔여 회차(소수점 이하는 절상)

나. 퇴직공무원

구 분	세부내역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연계자 퇴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급여(퇴직수당 포함)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 공제 (공무원연금법 제38조) ※ 퇴직급여보다 미상환 채권잔액이 많아 대여학자금 미상환잔액을 전액 공제하지 못할 경우, 미공제 차액은 일시 상환하여야 함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조기퇴직연금	<p>【퇴직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당시 대여학자금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급여(퇴직수당, 공제일시금 등)에서 전액상환 하거나, ②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퇴직급여청구서에 분할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 전액 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일부 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일부만 분할을 원할 경우(초과 금액은 퇴직수당 등 연금이외의 일시금 지급액에서 일괄 공제) ※ 퇴직연금에서 분할상환액을 공제하고 지급 <p><예시> 퇴직 당시 대부잔액이 4,000만 원, 연금월액 200만 원, 3년 분할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공제할 경우 100만 원까지 공제 - 분할대상금액은 3,600만 원이고, 400만 원은 퇴직수당 등 기타일시금에서 일괄공제 <p>【퇴직연금이 바로 개시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퇴직수당, 공제일시금 등)에서 대여학자금 미상환 잔액을 전액 공제 ※ 퇴직급여액이 부족하여 전액공제(일시상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분할상환(개별납부)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상환 부족액 금액별 분할상환 기간></p> <table> <tr> <th>일시상환 부족액</th><th>분할상환 기간</th></tr> <tr> <td>5백만 원 미만</td><td>일시상환</td></tr> <tr> <td>5백만 원~1천만 원 미만</td><td>12개월 이내</td></tr> <tr> <td>1천만 원~2천만 원 미만</td><td>24개월 이내</td></tr> <tr> <td>2천만 원 이상</td><td>36개월 이내</td></tr> </table>	일시상환 부족액	분할상환 기간	5백만 원 미만	일시상환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12개월 이내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4개월 이내	2천만 원 이상	36개월 이내
일시상환 부족액	분할상환 기간										
5백만 원 미만	일시상환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12개월 이내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4개월 이내										
2천만 원 이상	36개월 이내										
분할기간 중 개인 회생인가 결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상환금에서 개인회생에 의한 월 변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공제 - 개인회생 중 연금공제금액 : 기존 분할상환금액 -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 ※ 상환완료 시 공단에서 법원으로 통보함 										
분할 상환 기간 중 개별상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상환하던 연금수급자가 일부 금액을 개별 상환한 경우, 미상환 잔액을 잔여기간으로 분할하여 공제(월 상환금액 재산정) 										

구 분	세부내역
연금정지 및 연금제한 등 공제불가	<p>【퇴직연금이 전액 정지 및 종결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 급여가 전액 정지될 경우(공무원연금법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말일까지 대부 상환금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2) 공무원연금수급권 자격을 상실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권 자격 상실 시 남아있는 대부 잔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대부 잔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3) 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서 대부잔액 일시공제 <p>【퇴직연금이 일부 제한되어 상환금 공제가 불가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정지 정산차액, 환수 등 타 공제발생 및 형벌 확정 등의 사유로 연금월액의 일부가 제한되어 공제금액의 합계가 연금월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 상환금을 연금에서 계속 공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여학자금 초과공제 신청서」 제출 시 잔여 연금월액에서 공제 후 연금 지급 - 대여학자금 초과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연금월액의 1/2를 초과하는 상환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분할연금 수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에게 대여학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을 시 연금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대여학자금 공제 ※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대여학자금 등 미납금의 분할비율을 연금분할비율과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퇴직(유족)급 여 미청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 미청구자 중 상환 중이거나 상환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재직자에 준하여 상환처리 함(미상환 시 연체료 부과) ◦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유족)급여에서 대여학자금 채무액을 상계처리 가능
연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이자 적용 금리: 해당 연도 1분기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 연금 미공제자 납부기한: 매월 말일까지 개별적으로 납부(상환)하여야 함 ◦ 납부기간 경과 후 상환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납부일 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연체료 부과 ※ 연체지속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채권 회수 조치 가능

구 분

세부내역

대여금

7,200,000원

재직 상환

월 200,000원,
36개월 납부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177,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최초월 차액 92,000원
납부, 매월 200,000원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재 직

2020-03

200,000

-

2020-04

200,000

-

2020-05

200,000

-

퇴 직
(연금수급)

2020-06

200,000

-

2020-07

-

177,000

2020-08

-

177,000

2020-09

-

177,000

2020-10

-

177,000

재임용

2020-11

292,000
(200,000 + 92,000)

-

2020-12~2023-02

200,000

-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

418,000

2019-03

-

418,000

재임용
(상환 미도래)

2019-04 ~ 2021-03

-

-

재퇴직
(연금수급)

2021-03

11,173,000(퇴직금일시상환)

-

2021-04 ~ 2021-12

-

293,000

대여금

15,070,000원

퇴직시 상환
(연금분할)

월 418,000원,
36개월 납부

재임용

상환액 없음
(상환
미도래)

재퇴직

11,173,000원
(퇴직금
일시상환)

연금상환

월 293,000원,
잔여개월 납부

구 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퇴 직
(연금수급)

2019-01

-

418,000

2019-02

3. 상환변동자 처리방법(연금담당자)

가. 개 요

구 분	세부내역			
상환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지급일 15일 전 조회 및 출력 가능(전월 상환금 처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상환도래예정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익년 상환예정자 조회 <p>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상환대상자구분을 신규상환도래자 선택 및 해당연월 선택 → 보고서클릭 → 인쇄</p>			
최초상환 예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개시연도의 해당 월부터 상환개시 (졸업 또는 중퇴 익월부터 상환) <p>• 2월, 8월 졸업자 : 3월, 9월 상환개시 • 중퇴자는 중퇴 익월부터 상환개시(2년 거치) - 12월 중퇴자는 1월, 4월 중퇴자는 5월</p>			
상환총회차	대학별	3학기 이하 대부 중퇴	전문대학 졸업, 4학기 이상 대부 중퇴	4년제 이상 졸업
	상환기간	2년 상환	3년 상환	4년 상환
	납입회차(월)	24회	36회	48회
매월상환금 산정방법 (신규도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잔액을 총 상환회수로 나누어 1,000원 미만은 최종 회차에 합하여 고지 <예시> 대부총액 32,060,000원, 2021년 3월 상환개시, 4년 상환대상자 - (상환기간) 48회 (2021년 3월 ~ 2025년 2월) 			
	구분	산정방법		매월상환금
	매월상환	$32,060,000\text{원} \div 48\text{회}$ $= 667,916.666\text{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25.1, 47회) 667,000원 ◦ ('25.2, 48회차) 711,000원
	상환 개시 전 300만 원 선납 상환할 경우	$(32,060,000\text{원} - 3,000,000\text{원}) \div 48\text{회}$ $= 605,416.666\text{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25.1, 47회) 605,000원 ◦ ('25.2, 48회차) 625,000원

나. 상환변동자(전출, 퇴직, 개별수납, 전입 등) 처리

구 분	세부내역
전출자 발생 시	① 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상환대상자→② 정상고지-조회(메뉴)클릭→ ③ 학생성명클릭(팝업창생성)→④ 변동코드(전출)→⑤ 변동기관찾기(조회검색)→ ⑥ 금액0원 확인→⑦ 등록클릭 ※ 두 자녀 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하면 자녀 모두 자동처리 됨
퇴직자 발생 시	① 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상환대상자→② 정상고지-조회(메뉴)클릭→ ③ 학생성명클릭(팝업창생성)→④ 변동코드(퇴직)→⑤ 금액0원 확인→⑥ 등록클릭 ※ 두 자녀 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하면 자녀 모두 자동처리 됨
미납일 경우 (개별수납)	① 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상환대상자→② 정상고지-조회(메뉴)클릭→ ③ 학생성명클릭(팝업창생성)→④ 변동코드(정상)→⑤ 금액0원 확인→⑥ 등록클릭
전입자 발생 시	① 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상환관리→상환대상자→② 상환대상자구분(고지변동내역)→ ③ 『전입』(메뉴) 클릭(팝업창 생성)→④ 주민등록번호 입력→⑤ 상환대상 학생확인→ ⑥ 변동코드(전입)→⑦ 금융기관(기관사용 금융기관으로 변경)→⑧ 수납예정금액 입력→ ⑨ 등록 클릭 ※ 두 자녀 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 변동처리하면 자녀 모두 자동처리 됨

[상환변동처리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전출입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공무원은 보수지급기관에서 상환하여야 함 • 전출입 발생 시 변동처리 누락으로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상환 미도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이 도래하지 않은 학생이 고지되었을 경우에는 수납예정금액을 0으로 수정 후 별도로 인터넷 신청 또는 학생신상변동신고서를 공단 복지운영실로 제출하여 익월부터는 고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다. 상환금 납부

구 분	세부내역																		
당월 납부내역출력 (급여작업 시 출력공제)	①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②상환대상자 ③상환대상자 구분(당월납부 내역) -『출력』(메뉴) 클릭 ④출력 클릭 <div>당월납부내역에 수납예정총금액과 급여원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div>																		
상환납부서 (고지서 출력)	①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②상환대상자 - ③상환대상자 구분(당월 납부내역) -『상환납부서』(메뉴) 클릭 ④상환납부서 출력 클릭 <div>전출·입 및 퇴직자 처리시 납부서에 증·감액이 나타나며, 수납예정금 액과 납부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div>																		
납부은행, 납부일자 수정	<div>◦ 대여학자금관리 → 상환관리 → 수납예정등록/수정 → 조회 → 수납 예정일 및 납부은행 선택 →『저장』(메뉴) 클릭</div> <div>은행영업일 3일 이내가 익월이 되거나,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 당 월을 초과할 수 없음</div> <table><tr><th colspan="3">[예 시] 2021년 납부기한일</th></tr><tr><th>급 여 일</th><th>1월 납부기한</th><th>2월 납부기한</th></tr><tr><td>10일</td><td>13일</td><td>17일</td></tr><tr><td>17일</td><td>20일</td><td>22일</td></tr><tr><td>20일</td><td>25일</td><td>24일</td></tr><tr><td>25일</td><td>28일</td><td>(3월)4일</td></tr></table>	[예 시] 2021년 납부기한일			급 여 일	1월 납부기한	2월 납부기한	10일	13일	17일	17일	20일	22일	20일	25일	24일	25일	28일	(3월)4일
[예 시] 2021년 납부기한일																			
급 여 일	1월 납부기한	2월 납부기한																	
10일	13일	17일																	
17일	20일	22일																	
20일	25일	24일																	
25일	28일	(3월)4일																	

3 부담금 업무처리기준

1. 개요

가. 법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1항

나. 부담금의 정의

-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구 분	정 의
순부담금 (수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운영부담금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금액

다. 부담금 납부기관(269개 기관)

부담회계		납부기관(회계코드)
일반회계		인사혁신처(11), 도시환경개발원(44), 국방부(45), 방위사업청(47)
기업특별회계		우정사업본부(24), 조달청(25), 특허청(55), 국립아시아문화전당(56)
지방 자치 단체	교육청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52)
	광역시·도 및 시·군·구	광역시 및 자치구청, 도·시·군(53)
	서울특별시 소속	본청 및 자치구청(54)

라. 부담금 업무 절차

공단		인사 혁신처		부담금 납부기관		공단		부담금 납부기관		공단		부담금 납부기관
예산 편성	⇒	예산확정 및 통보	⇒	예산 반영	⇒	정산 및 1학기 고지	⇒	부담금 납부	⇒	정산 및 2학기 고지	⇒	부담금 납부
3~6월		10~12월		10~12월		1월		1월말		7월		7월 말

2. 부담금 예산반영 및 관리

가. 부담금 예산 반영

- 법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2항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통보받은 부담금 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나. 부담금 관리

구 분	주요내용
고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고지액은 순부담금과 운영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단이 고지한 금액을 학기별로 납부함 ◦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에서 공단이 고지한 부담금액을 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조정 가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부담금 고지액 = 순부담금 + 운영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부담금) 대부예상액 - 상환예상액 ± 전학기이월액 - (운영부담금)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산정 </div>
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매 학기 개시 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 중, 2학기분은 7월 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이자 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기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차입금의 이자는 대부금 및 상환금을 부담기관별로 산정(평잔)하여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해당 부담기관별로 고지하여 납부 ◦ 다음의 해당기관은 차입금 이자부과 비대상 기관으로 처리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부담금 정산 결과 부담금 납부액이 실제 대부액을 초과하여 이월액이 발생한 기관 - 당해 연도 부담금예산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고지한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기관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기관 ②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과(법 제75조 및 영 제72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는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구분	주요내용
납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금액 등록 및 납부서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납부금액을 등록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 <div>대여학자금관리 → 부담금관리 → 부담금고지(상세) → 상단조회버튼 클릭 → 납부예정액등록 클릭 → 부담금납부예정등록(납부예정일, 은행, 금액입력) → 출력구분 부담금납부서 선택 → 출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납부서 등 내역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출력 및 활용 (우편발송 안함)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정산내역 출력 <div>대여학자금관리 → 부담금관리 → 총괄부담금정산(상세) → 조회 → 출력</div> - 전 학기 부담금 정산내역 및 고지액 산출내역 출력 <div>대여학자금관리 → 부담금관리 → 부담금고지(상세) → 출력구분 부담금 고지내역 선택 → 출력</div>
부담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정산액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금액(전 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부담금 납부 시 정산 <div> $\text{전학기 이월액} + \text{상환액} + \text{부담금 납부액} - \text{대부액} = \text{정산액}$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액은 대부재원을 부담한 기관별로 대부 실적을 집계하고, 상환액은 대부 당시 부담금 납부기관으로 상환액을 재분류한 후 상환 실적을 집계함 ◦ 부담금 정산순서 <div>납부지연이자 → 운영부담금 → 공무원연금기금 차입이자 → 순부담금</div>

3. 수탁금(순부담금) 잉여액 반환

가. 반환근거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2704호('14.9.17 개정)

- 2015년부터 잉여액 반환

나. 반환기준

구 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 발생기관
반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이월액) - 당해년도 대부예상액</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학자금 상환액은 대여준비금으로 반환대상에서 제외
반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중) ※ '20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후 반환금은 '21. 1월 확정되어 '22년 예산 반영

다. 연금지원시스템을 통한 잉여액 반환처리

- 부담금 반환신청 및 세부내역 조회

① 연금담당자화면 바로가기 ⇨ ② 융자사업-대여학자금관리-부담금관리-부담금반환

[참고: 대여학자금 회계코드]

- ※ 대여학자금 회계코드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지급 회계코드로 기재해야 함
 - 대여학자금 회계코드는 기관별 대부 및 상환실적 정산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예산의 산정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대여학자금 회계코드가 틀린 경우에는 연금담당자 화면 바로가기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관리 → 인터넷대부 → 학자금회계코드조회에서 대부일 기준 보수지급 회계코드로 정정

예) 지방자치단체(지방비) 소속 공무원이 대부받을 경우

- 정 : 회계코드 “53”기재 → 지방자치단체 해당기관의 대부 실적으로 처리됨
- 오 : 회계코드 “11”기재 → 인사혁신처 일반회계의 대부 실적으로 착오 처리됨

[대부금 지급 회계코드]

회 계 명		회계 코드	대 상 공 무 원
일 반 회 계	인사혁신처	11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국가일반회계 소속 공무원
	도시환경개발원	44	도시환경개발원 및 그 소속 공무원
	국 방 부	45	국방부 (군부대 포함) 및 그 소속 공무원
	방위사업청	47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 공무원
특 별 회 계	통 신 사 업	24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공무원
	조 달 사 업	25	조달청 및 그 소속 공무원
	특 허 청	55	특허청 및 그 소속 공무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지 방 자 치 단 체	시·도 교육청	52	교육청 소속 공무원 • 교육청 공무원 → “52”회계 • 교육청 공무원 중 국가일반회계 소속 공무원 → “11”회계
	광역시·도 및 시·군·구	5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 “53”회계 • 지자체 공무원 중 국가일반회계 소속 공무원 → “11”회계
	서울특별시 소 속	54	서울특별시(본청 및 구청)소속 공무원 •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 “54”회계 • 서울시 공무원 중 국가일반회계 소속 공무원 → “11”회계



제3절 / 금융기관 알선대출

1. 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구 분	금융기관 알선대출	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취급은행	● NH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 NH농협, 국민,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대출한도	● 퇴직급여 1/2범위 내 5,000만 원	●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0만 원 ●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0만 원
대출이율	● MOR 또는 COFIX +2.0% 이내로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함	좌 동
상환방법	● 3, 5, 10년 원금균등상환 또는 3, 5년 내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며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 가능	좌 동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용자추천서 발급 후 은행 방문 대출 ●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용자추천서 은행전송 후 인터넷 대출 신청(NH농협, 국민, 우리, 부산은행의 신규 및 추가 대출자)	좌 동
유의사항	● 일반 알선대출과 단기재직자 상품을 중복하여 대부 받을 수 없음 ● 공단에서는 용자추천서 발급을 통한 대출 알선만 진행하며,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취급 - 대출진행 및 상환과 관련한 기타의 내용은 은행을 통해 확인 가능 ● 종전 신한, 기업, 씨티, 제주은행 대출자는 협약은행으로 대환하여 증액 및 기간연장 가능	

2. 연금수급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구 분	연금수급자 알선대출
취급은행	● NH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 단, 월 상환액이 연금 수령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이율	● MOR 또는 COFIX +3.0% 이하로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함
상환방법	● 5년 이내 매월 원리금 균분상환 ※ 대출완납 이전 연금수급계좌 변경 불가
신청방법	●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연금수급 은행 방문(용자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음) ※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타 은행으로 연금수급 계좌 변경 후 신청

3. 금융기관 알선대출 완납 이전 퇴직 시 처리기준

대출은행	대출 완납 이전 퇴직 시 처리기준
협약 은행 (NH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은행 계좌로 퇴직급여 신청 가능. 단, 우리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종전과 같이 우리은행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함* * 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건은 원하는 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가능 ● 대출 은행으로 퇴직 정보 제공
협약 해지은행 (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받은 은행 계좌로 퇴직급여 신청 ● 대출 은행으로 퇴직 정보 제공

4. 융자추천서 상 대출용도

대출용도	내용
신규대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알선대출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기존대출 전액 상환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대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자가 한도 이내에서 기존대출과 별도로 대출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대출받으신 내역이 있고 추가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경우 * 예시) A은행 2,100만 원 대출자가 동일 은행에서 2,900만 원 신청 시 대출내역 : (기존)1건-2,100만 원 → (대출 후)2건-2,100만 원/2,900만 원 융자추천서 발급 시 추가로 받을 금액만 입력 대출 취급여부에 따라 기존 대출은 변동사항 없음 - 대출이 여러 건으로 관리될 경우 기간 연장 및 상환관리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재약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연장: 대출 약정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 대출 받는 경우 - 대출금증액: 기존 대출자가 한도 이내에서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는 경우 (추천서 발급 시 기존 대출액에 증액할 금액 가산하여 입력) * 예시) A은행 2,100만 원 대출자가 2,900만 원 증액 시 대출내역 : (기존)1건-2,100만 원 → (대출 후)1건-5,000만 원 ● 기타 대출조건 변경 등 기존 대출내역에 변동을 주는 경우
은행대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자가 대출 은행을 변경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중대출은 불가하므로, 은행 변경 시 기존 대출금액을 전부 옮겨야 함 - 은행 변경 시 한도 이내에서 대출금 증액도 가능 * 예시) A은행 2,100만 원 대출자가 B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며 2,900만 원 증액 시 대출내역: (기존)A은행 1건-2,100만 원 → (대출 후)B은행 1건-5,000만 원

5. 대상별 업무 내용

구 분	진행사항	내 용
공 무 원 (고객지원 시스템)	<div> <div>용자추천서 발급신청</div> <div>↓</div> <div>문서확인번호 은행제출</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본인이 직접 용자추천서를 발급신청함 → 용자추천서 발급확인서 출력 또는 문서확인번호 및 검증번호 메모 후 은행방문 대출 신청
협약 은행	<div> <div>용자추천서 출력확인</div> <div>↓</div> <div>대출 진행</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홈페이지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문서 확인번호 및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용자추천서 출력 ● 용자추천서 내용 이상 없으면 대출자격 심사 후 대출 진행
공 단 (통추 시스템)	공 단 ↔ 공무원	
	<div> <div>용자추천서 발급내역 관리</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추천서 발급내역 조회, 발급 취소, 발급 불가자에 대한 발급 대행* 등 * 콜센터 전화녹취로 신청 시 FAX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급
	<div> <div>퇴직 심사</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추천서 발급 직후 퇴직 시 용자추천서 사용여부 확인 심사 ● 협약해지은행(신한, 씨티, 기업, 제주) 대출자는 퇴직 시 대출 받은 은행계좌로 퇴직급여 신청 제한
	공 단 ↔ 협약 은행	
	<div> <div>전산 자료 송·수신</div> <div>1. 퇴직자료 전송</div> <div>2. 대출내역 및 변동자료 수신</div> <div>3. 오류자료 전송</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공무원 퇴직 후 퇴직급여 신청 시 퇴직일, 급여수령일, 계좌 등의 정보 제공(매일) 2. 대출 취급, 상환 등 변동내역 공단시스템 반영(매일) 3. 기 퇴직자, 은행이중대출자 등 오류자료 전송(매주 금요일)

부 록

부록1 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419
부록2 맞춤형복지시스템 이용안내	423
부록3 제휴복지사업 이용안내	428
부록4 은퇴자 공동체 마을 안내	433
부록5 모바일 앱 이용안내	435
부록6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40
부록7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513





부록1 / 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1. 개요

전·현직 공무원의 복리향상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골프장,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원증, 연금수급증,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2. 후생복지시설 운영현황

01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14)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우31251)
- 규모 : 1,675,016㎡
- 주요시설

○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27홀(9,806m, 남·중·동코스), 골프연습장 : 24타석 165m
* 벙커 84개소, 연못 5개소
- 클럽하우스 248석(홀76석, 룸10개 172석)
- 그늘집 5개소
- 프로숍, 휴욕실(라커 남454개, 여210개)
- 주차장(304대)

○ 숙박 및 연수시설

- 숙박시설 : 가족호텔 116실(한실, 양실, 단체실), 일반형콘도 84실(13평, 24평), 단체형 유스호스텔 22실(16평)
- 부대시설 : 식음(해오름, 휴플레이스, 가든플레이스), 사우나, 커피숍, 편의점
- 연수시설 : 대(1실 200석)·중(2실 각 100석)·소(4실 각 25석), 강당 및 분임토의장 등
- 체육시설 : 다목적 잔디구장(14,876㎡, 10,000명 수용), 족구장(2코트), 산행코스(2.5km), 농구장, 배구장

○ 공원시설

- 아쿠아피아: 실내풀(바디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터, 파도풀, 유스풀, 어린이풀, 편의 시설, 식당), 야외풀 등 3,500명 동시수용
- 놀이시설: 바이킹 등 16종, 스넥바, 상품매장, 공원대식당, 의무실, 수유실, 유모차대여소
- 눈썰매장: 슬로프(성인 / 어린이 / 유아), 썬썬하우스, 의무실, 수유실, 물품보관함, 상품매장

○ 교통편

- 자가용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 목천IC ⇒ 바로 앞 4거리에서 병천방향 우회전 ⇒ 약 9km(약 10분)
- 버스 이용 시: 고속터미널, 천안역 : 500번

○ 주변관광지

-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관, 박문수묘, 이동녕선생 생가, 홍대용 과학관(천문대), 천안삼거리 온양온천, 현충사, 성불사 등

02

화성상록골프장(☎031-371-0101)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폴무골로 60번길 80 (우18465)
- 규모 : 1,587,884m²
- 주요시설

○ 골프장

- 규모: 대중골프장 27홀(9,677m, 남·동·서코스)
- ※ 벙커 80개소, 연못 25개소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248석(홀68석, 룸12개 180석)
- 그늘집 3개소
- 프로숍, 휴욕실(라커 남425개, 여160개)
- 주차장(412대)

○ 교통편

- 경부고속도로 ⇒ 기흥 IC 나와서 우회전 ⇒ 동탄순환대로 24길 교차로 중리IC방향 좌회전 ⇒ 동탄 지동천로 사거리 중리IC방향 좌회전 ⇒ 중리교 삼거리에서 우회전

○ 주변관광지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독산성, 수원화성, 물향기수목원 등

03

남원상록골프장(☎063-630-1400)

- 위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월계길 11 (우55780)
- 규모 : 1,144,717㎡
- 주요시설

○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18홀 6,670m(춘향코스, 몽룡코스)
- ※ 벙커 58개소, 연못 8개소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126석(홀66석, 룸4개 60석)
- 그늘집 2개소
- 프로숍, 휴욕실(락커 남240개, 여136개)
- 주차장(215대)

○ 교통편

- 자가용 이용 시 :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익산분기점(장수, 완주 방향) 우측도로
⇒ 완주분기점(남원방향) 우측도로 ⇒ 북남원IC(出) 우회전

○ 주변관광지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만인의 충,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04

김해상록골프장(☎055-340-1410)

-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98 (우50850)
- 규모 : 972,828㎡
- 주요시설

○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18홀 6,310m(황세코스, 여의코스)
- ※ 벙커 44개소, 연못 7개소

○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 레스토랑 및 스타트하우스 124석(홀24석, 룸4개 64석, 스타트하우스 홀36석)
- 그늘집 2개동, 캐디교육장 1개동, 코스관리동 1개동
- 프로숍, 휴욕실(락커 남238개, 여98개)
- 골프텔 8실(침대3, 온돌5)
- 주차장(240대)

○ 교통편

- 남해고속도로 ⇒ 서김해 IC 직진 ⇒ 24번국도(진영방향) ⇒ 병동 농공단지 ⇒ 이정표지판 참조(2.7km)

○ 주변관광지

- 김해수로왕릉, 김해천문대, 가야테마파크, 봉화마을 등

05

수안보상록호텔(☎043-845-3500)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우27497)
- 규모 : 12,846㎡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101실

- | | |
|-----------------|-------------------|
| - 한 실(일반) : 51실 | - 한실탁실(단체실) : 10실 |
| - 가 족 실 : 4실 | - 로얄스위트 : 1실 |
| - 양 실(트윈) : 11실 | - 양실(특트윈) : 24실 |

○ 부대시설

- 온천시설 : 남자사우나(155명), 여자사우나(142명)
- 식 당 : 해오름(250석), 별실(12석), 특실(12석)
- 연 회 실 : 그랜드홀(350석), 대(100석), 중(80석), 가야금홀(70석)
- 편의시설 : 커피숍, SS마트, 비즈니스룸, 북카페, 헬스장, 노래방(코인), 뽕래방(코인), 탁구장, 당구장
- 주차시설 : 150대

○ 교통편

- 영동선 : 영동고속도로(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IC ⇒ 괴산IC ⇒ 수안보(2차선도로)
- 중부선 : 중부고속도로(증평IC) ⇒ 괴산 ⇒ 충주IC ⇒ 괴산HC ⇒ 34국도 ⇒ 연풍 ⇒ 수안보(4차선도로)

○ 주변관광지

-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호, 충주미륵대원지, 탄금대, 송계계곡, 계명산 종댕이길, 하늘재, 괴산산막이옛길, 문경새재 등



부록2 / 맞춤형복지시스템 이용안내

1. 맞춤형복지 시스템 개요

● 개요

공단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와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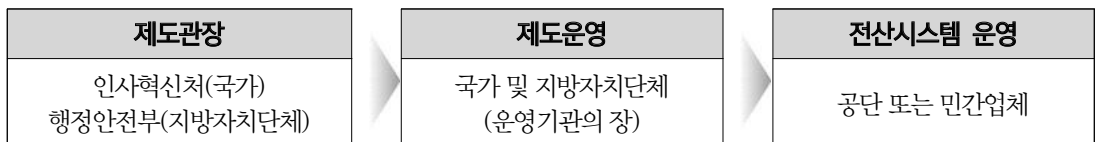
맞춤형복지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운영기관에서 공단 또는 민간시스템을 자율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관에게 공단 맞춤형복지 통합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도입 당시('06년) 각 기관별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공단 수탁운영 근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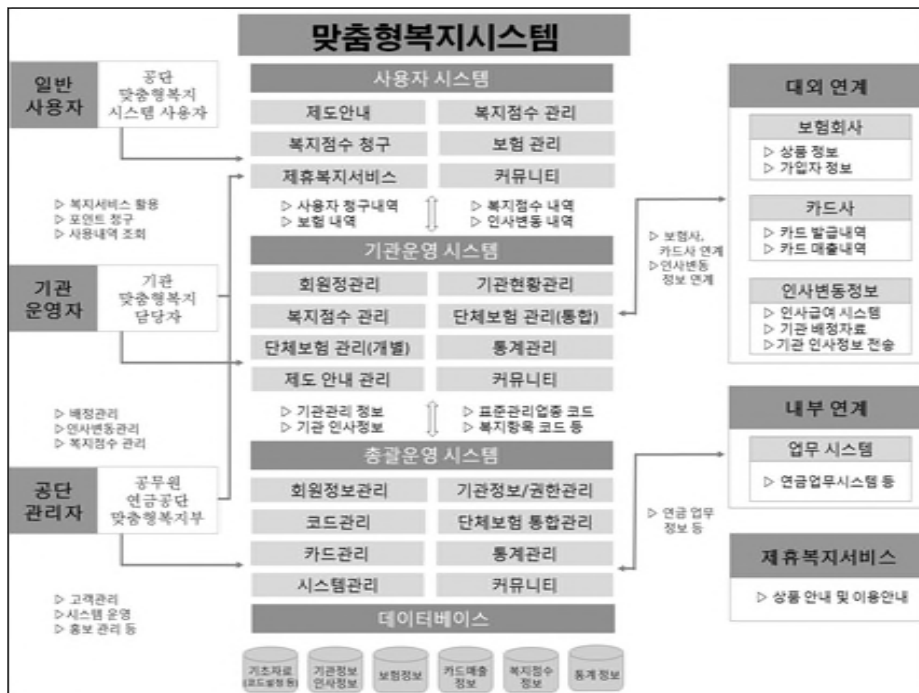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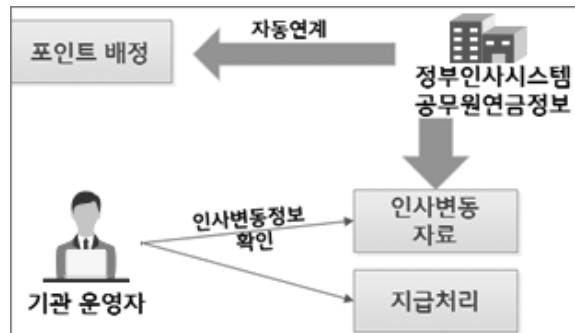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체계



● 맞춤형복지 시스템 사용기관 현황 ('20년 기준, 203개 기관 82만 명)

구 분	중앙부처	교육청	교육부산하	지자체 등	합 계
사용기관(개)	66	43	77	17	203
사용인원(만 명)	20.7	52.7	3.5	5.2	82.1

●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절차



2. 다양한 신용카드로 복지점수 청구

- 공무원연금카드(8개 카드사 제휴카드)
 - 삼성, 국민, 신한, 농협, 현대, 롯데, 하나, BC(우리/IBK기업/부산/대구/전북/광주)
 - 주요혜택 : 연회비 면제(초년도 납부), 무이자 할부, 주유/쇼핑/의료할인 등
 - ※ 공무원연금카드는 앞면에 '공무원연금'이 표기되어 있음

- 일반카드
 - 공단과 제휴된 카드사의 모든 일반카드 (롯데카드 제외)
 - 다양한 일반카드 지원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기관 제휴카드 이용 가능
 - 기존의 기관 자체 제휴카드 이용 가능 (8개 카드사에 한함)

3. 맞춤형복지시스템 모바일웹 서비스

- 맞춤형복지시스템 모바일웹 접속방법
 - 네이버, 크롬 등 포털사이트에서 “맞춤형복지”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gwp.or.kr를 입력하고 맞춤형복지시스템 직접 접속
- 맞춤형복지시스템 모바일웹 로그인 방법
 - 로그인은 공단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디 / 인증서)
 - ① 아이디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 ② 인증서 로그인
 - PC에서 인증서 등록 → 아이디로 로그인 → 인증센터 이동 → 인증서 등록
 - 모바일로 이동 → 전용앱(앱프리) 로그인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 맞춤형복지시스템 모바일웹 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고객의 원하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주 찾는 서비스 신설하고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보험조회가 가능하며, 단체보험 사전선택 및 사전선택 항목 변경처리, 보험사 연락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단체보험

● 개요

- 공단은 단체보험 계약을 위탁한 기관에 한하여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 각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 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공단에 위탁하였고, '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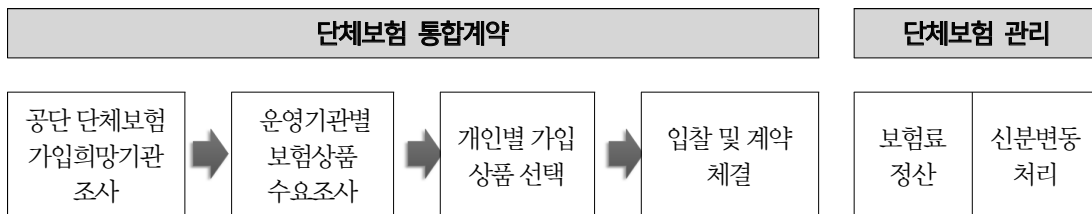
● 공단 수탁 근거

-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규정 제14조(통합운영 등)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10장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 단체보험 상품내역('20년 기준)

구 분	본 인							가 족		
	생명 상해	의료비 보장		입원 일당	2대질병 진단비	암 진단비	순직 사망	생명 상해 (배우자)	의료비 보장 (배우자·자녀)	
		입원	통원						입원	통원
보장액	3천만원~ 2억원	3천만원 (실비)	30만원 (실비)	2만원/ 3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1.5억원	3천만원	30만원 (실비)

● 공단 단체보험 운영체계



● 통합계약 가입기관('21년 기준)

구 분	중앙부처	교육청	교육부산하	지자체 등	합 계
가입기관(개)	81	30	47	12	170
가입인원(만 명)	19.1	47.2	3.2	3.8	73.3

● 통합계약과 개별계약 비교

통합계약 기관	개별계약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수수료 절감 및 저렴한 보험료 제공 · 시스템을 통한 보험상품 사전선택 · 인사변동자료 보험과 자동연계 · 까다로운 보험료 정산업무 자동화 시스템 제공 · 보험청구서 및 약관 등 시스템 조회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개별계약으로 다소 높은 보험료 · 보험상품 사전선택 수작업 처리 · 인사변동 자료 보험연계 수작업 처리 · 보험료 정산업무 엑셀 등 수작업 처리 · 보험 청구 시 매번 청구서식 등 개별 안내 필요

5. 맞춤형복지시스템 이용 신청 안내

- 맞춤형복지시스템 가입 의뢰 문서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발송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연락처
 - 가입문의/배정 등 : 064-802-2237, 2227
 - 단 체 보 험 : 064-802-2366, 2225
 - 제휴복지사업 : 064-802-2223, 2267



부록3 / 제휴복지사업 이용안내

1. 개 요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숙박(호텔, 리조트, 펜션 등), 여행, 건강검진, 상조, 쇼핑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회원가입 후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gwp.or.kr)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휴복지사업 운영현황('21. 1월 기준)

제휴신용카드

- 제휴카드사 : 삼성, 신한, 하나, 농협BC, 국민, 현대, 롯데, BC(기업, 우리, 부산, 대구, 전북, 광주)
- 주요혜택 : 연회비 면제(초년도 납부), 청구할인서비스, 주유·쇼핑·의료 할인, 포인트 적립 등
- 신청방법 :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gwp.or.kr) 내 카테고리- 제휴카드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

여 행

순번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혜택
1	모두투어	02-771-2114	국내·해외여행 3~5% 할인 등
2	롯데관광	02-2075-3535	패키지 상품 3~7% 할인 등
3	하나투어	02-560-2850	여행상품 2~3% 할인 및 1% 적립
4	코레일관광개발	1544-7755	국내여행 5~10% 할인, 숙박여행 3~7% 할인
5	그린카	온라인(모바일)	회원가의 15% 추가 할인
6	제주도모바일	1899-3929	제주도 관광지 최대 7%
7	선민투어	온라인	항공예매 수수료 면제, 렌터카예약 10%
8	웹투어	온라인	KTX 예매 최대 35% 할인 + 3% 추가 할인

숙박시설

(지역별 정렬)

순번	지역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율
1	전국	금호리조트	02-737-5400	업체별 할인율 상이
2		한화리조트	1588-2299	
3		소노호텔앤리조트	1588-4888	
4		켄싱턴리조트	지역별 상이(내륙) 064-739-0280(제주)	
5		라운빌리지	031-932-8188	
6		신라스테이	02-2230-0700	
7	서울 인천	The-K호텔서울	02-571-8100	
8		노보텔엠버서더독산	02-838-1101	
9		포포인즈바이쎄라튼강남	02-2160-8990	
10		세종호텔	02-3705-9115~6	
11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서울	02-2108-9000	
12		켄싱턴호텔 여의도	1670-7461	
13		호텔 포코	02-462-9610	
14		소테츠호텔즈	02-772-0900	
15		네스트호텔	032-743-9000	
16	충청도	보훈휴양원	043-854-2121	
17		대전인터시티호텔	042-600-6000	
18		대전파레브호텔	041-933-3489	
19		리솜리조트	02-6177-5918~9	
20	전라도	스위트호텔 남원	063-630-7100	
21		라한호텔 전주	1644-8005	
22		The-K지리산가족호텔	061-783-8100	
23		유탑마리나호텔앤리조트	061-690-8100	
24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	1644-8005	
25	강원도	설악아이파크콘도	02-558-4373	
26		현대수리조트 횡성	1577-4778	
27		오색그린야드호텔	033-670-1000	
28		스위트호텔 낙산	033-670-1100	
29		The-K설악산가족호텔	033-639-8100	
30		켄싱턴호텔 설악	1670-7463	
31		하이원리조트	1588-7789	
32		세인트존스호텔	033-660-9000	
33		켄싱턴호텔 평창	1670-7462	

순번	지역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율
34	경상도	스위트호텔 경주	054-778-5300	업체별 할인율 상이
35		The-K호텔경주	054-770-9144	
36		경주코오롱호텔	1600-8668	
37		라한셀렉트 경주	1644-8005	
38		금강송 에코리움	02-3677-6677	
39		라한호텔 포항	1644-8005	
40		바람의언덕리조트	055-632-6377	
41		호텔 현대바이라한 울산	1644-8005	
42		골든비즈니스호텔	055-756-0031	
43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051-678-1000	
44		부산비즈니스호텔	051-808-2000	
45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	051-749-7777	
46		켄트호텔 광안리	1670-7464	
47		펠릭스바이STX	051-969-5000	
48		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	051-933-1000	
49		폴에이리조트 해운대	051-731-1112	
50		부산 아르피나	051-731-9800	
51		라마다양코르해운대	051-610-3000	
52		센텀프리미어호텔	051-755-9000	
53		그랜드조선부산	051-922-5000	
54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	064-729-8100	
55		라마다제주시티호텔	02-512-8886	
56		마레보리조트	064-799-2090	
57		아스타호텔	064-710-1111	
58		라온호텔&리조트	064-796-7740	
59		그라벨호텔	064-740-8000	
60		호텔더원 제주	064-798-0001	
61		유탐윙블레스호텔 제주	064-780-9311	
62		베스트웨스턴제주	064-797-6000	
63		서귀포월드컵리조트	064-739-3001	
64		위호텔제주	064-730-1200~1	
65		세리리조트	064-739-8254	
66		더그랜드섬요름	064-800-7240	
67		스위트호텔 제주	064-738-3800	
68		아트스테이서귀포하버	064-801-9888	
69		제주신화월드	1670-8800	
70		코업시티호텔하버뷰	064-731-9977	

숙박 예약대행사

순번	업체명	예약방법	할인율
1	인터파크투어	공단 재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인터파크투어) 예약	온라인 판매가의 3%
2	편앤비즈	공단 재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편앤비즈) 예약	온라인 판매가의 4%
3	야놀자	공단 재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야놀자) 예약	온라인 판매가의 5%

문화관람

순번	업체명	문의방법	우대혜택
1	YES24티켓	온라인	공연 할인 쿠폰(3천원) 제공 등
2	스펙코		영화예매권(2인) 16,500원 판매 등
3	쑥쑥공연		인기공연 3% 추가 할인
4	박스		음원듣기 1개월권 30% 할인
5	문화N티켓		중소공연업체 지원

도서

순번	업체명	문의방법	비 고
1	교보문고	온라인	도서정가제 시행
2	알라딘		
3	YES24		
4	인터파크도서		
5	밀리의서재		구독권 17~25% 할인

육아교육

순번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혜택
1	해피케어	02-2237-3579	산모도우미 예약금의 10% 할인
2	하늘궁	044-862-0775	전용 육아도우미(20명) 인력제공
3	키자니아	1544-5110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할인(30~35%)
4	에어클래스	온라인	온라인 강의 상시 할인(10~30%)
5	월스트리트잉글리쉬		온라인 강의 30% 할인
6	인프런		온라인 강의 20% 할인

레저

순번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혜택
1	라운CC	064-795-8000	그린피 15~30% 할인 등
2	플라자CC제주	064-727-9000	그린피 28~33% 할인 등
3	해비치CC	064-766-6200	그린피 10~20% 할인 등

건강관리

순번	구분	업체명	문의전화	할인혜택
1	건강 검진	건강관리협회	지역별 문의	검진상품 22% 할인
2		의학연구소(KMI)	지역별 문의	기본형 15만 원, 고급형 30만 원
3		인터케어	1588-1018	기본형 10만 원, 고급형 29만 원
4		우리원헬스케어	02-750-0000	고급형 24만 원, 프리미엄형 35만 원
5		서울메디케어	1644-0336	기본형 10만 원, 고급형 23만 원, 특화형 29만 원
6		서울성모병원	1588-8668	전 검진 프로그램 10% 할인
7		녹십자아이메드	1644-0808	종합검진 10만 원, 정밀검진 25만 원
8		부천우리병원	032-672-4112	기본형 15만 원, 고급형 29만 원
9		나은병원 (서구, 연수구)	1661-0033	기본형 19만 원, 고급형 29만 원
10		유성선병원	042-589-2000	기본형 15만 원, 고급형 25만 원
11		대전성모병원	042-220-9891	기본형 15만 원, 고급형 25만 원
12		전주병원	063-220-7364	단일형 30만 원
13		전남대병원	062-220-6906	기본형 30만 원, 정밀프로그램 40만 원 등
14	병원	경희의료원	02-958-2997(경희의료원) 02-440-7000(강동경희대병원)	검진 및 진료비 10~40% 할인
15		하늘안과	010-4908-7279	30~50%
16		밝은눈안과	02-6956-5303	25~48%
17		미켈란치과	1599-7402	10~46%
18		이수스마트치과	02-534-1027	27~42%



부록4 / 은퇴자 공동체 마을 안내

1. 개 요

초고속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단이 새롭게 제시한 복지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체험 및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소개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maeul.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현황('21년도)

● 운영방향

- 초고령화 시대에 웰에이징(well-aging) 및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기·장기 체험형, 체류형과 귀농귀촌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운영형태	거주기간	내 용
단기체험형	2~3개월	공동체 생활, 체험, 탐방 위주 운영
장기체험형	8~10개월	농작물 파종 및 수확, 사계절 살아보기 형태
체 류 형	1년 이상	장기 거주 적합마을(자자체·마을 요청) 체류형 마을로 전환
귀농귀촌형	10개월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귀농교육 중심 운영

● 운영대상 : 공적연금생활자* + 일반국민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생활자

- 운영기간 : '21. 2월 ~ 12월
- 운영장소 : 23개 지역 35개 마을(예정)
- 운영방식

운영형태	내 용
공 단	마을 선정, 입주자 모집, 유관기관 협업 관계 형성 등
지자체·마을	정주여건(빈집, 체험마을 등) 제공, 지역 일손돕기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자	각자 부담으로 자율적 생활(부부 또는 지인 동반 가능)

- 마을현황
 - 단기체험형(26개 마을), 장기체험형(2개 마을)

체 험 형					
단기체험형					장기체험형
2개월			3개월		8개월
제주(호근)	제주(하논)	제주(명도암)	예산	부여	문경(관음)
제주(신평)	영월(포도)	영월(삼굿)	문경(상내)	양구(약수)	
태백	거창(월성)	거창(깊은골)	고창	양구(두무)	10개월
진주	밀양(꽃새미)	예천(출렁다리)	산안(암지도)	신안(지도)	남원(상동)
남원(삼화)	* 3개 마을 신규발굴 예정		여수	양양(황룡)	

- 체류형(1개 마을), 귀농귀촌형(6개 마을)

체류형(1년 이상)	귀농귀촌형(10개월)
문경(지곡)	제천, 구례, 홍천, 영천, 고창, 익산

- 모집일정
 - (단기체험형) 연 3회 모집, (장기체험형, 체류형, 귀농귀촌형) 연 1회(1차) 모집

구 분	1차	2차	3차
입 주 자 모 집	1.18.(월) ~ 1.26.(화)	3.10.(수) ~ 3.19.(금)	7.7.(수) ~ 7.16.(금)
입 주 자 심 사	1.27.(수) ~ 1.28.(목)	3.22.(월) ~ 3.26.(금)	7.19.(월) ~ 7.23.(금)
입 주 자 발 표	1.29.(금)	3.30.(화)	7.27.(화)



부록5 / 모바일 앱 이용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 제공서비스 안내

【 고객지원서비스 】

- ① 재직정보 : 재직정보와 합산/사병 확인
- ② 퇴직급여안내 : 급여안내와 퇴직급여 직접청구
- ③ 재해보상 :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정보 확인
- ④ 융자업무 : 대출정보 확인
- ⑤ 주택 : 임대주택 및 주택분양 정보 확인
- ⑥ 민원서류발급 : 민원서류 발급 신청
- ⑦ 연금수급정보 : 연금수급 정보 확인
- ⑧ 연금신분증 : 연금신분증 발급

02 서비스 카테고리

업무분야	업무	제공서비스 내용
고객지원	재직정보	재직자 기본정보, 재직기간 합산/사병
	퇴직급여	급여안내, 퇴직급여본인직접청구, 공적연금연계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융자업무	연금대출, 대부총괄내역
	주택분양/임대	임대주택, 주택분양
	민원서류발급	민원서류발급신청, 민원서류 신청내역, 내민원 빨리보기
	연금수급정보	연금수급사항, 연금일부정지, 연금과세
	연금신분증	공무원연금신분증

03

모바일앱 설치 안내

【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 】



-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공무원연금을 검색합니다
- 설치 버튼을 터치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아이폰(IOS용) 】



- App Store를 실행합니다.
- 우측 하단에 검색을 눌러 공무원연금을 검색합니다
- 받기 버튼을 터치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04 인증서 복사

PC에서 사용 중인 인증서를 스마트기기로 이동(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에서 인증번호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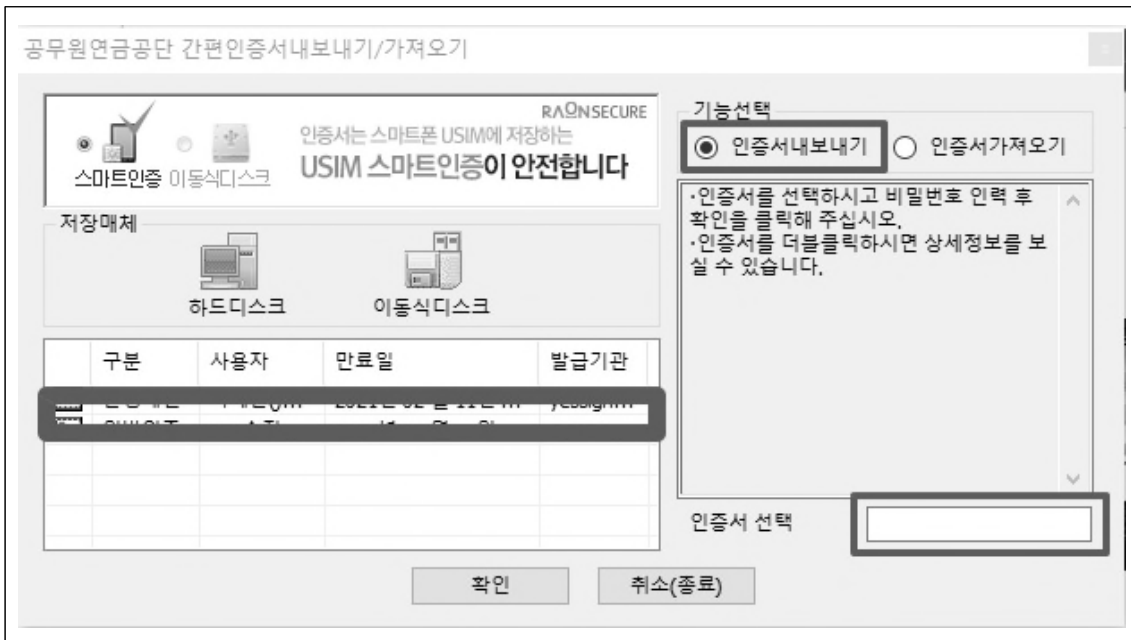


- ① 공무원연금 모바일 앱 실행 후 하단의 인증센터 선택
- ②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 ③ 인증서를 가져오기 위한 인증번호 12자리를 확인

STEP 2.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사할 인증서 선택 후 인증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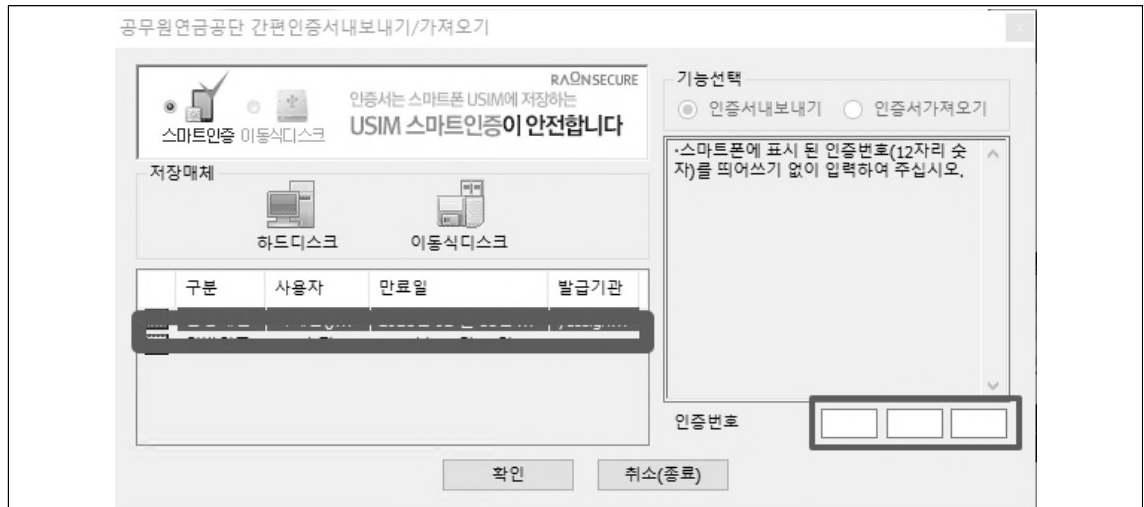


- ① PC 홈페이지 상단 인증센터 > 모바일(스마트폰) > 인증서 복사 메뉴 클릭
- ② 인증서 복사 아이콘 클릭



- ③ 인증서내보내기 선택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사할 인증서 선택 및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STEP 3. 스마트폰의 인증번호 PC에 입력



- ① Step1에서 확인한 스마트폰의 인증번호 12자리 PC에 입력 후 **확인** 클릭
- ② “인증서를 전송하였습니다. 받으시려는 단말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메시지 확인

STEP 4. 스마트폰에서 복사된 인증서 확인



- ① Step3에서 내보내기 완료 후, 스마트폰에 ‘인증서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
- ② **로그인 하러가기** 선택
- ③ 내보내기 한 인증서 정보 확인 후,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단 서비스 이용가능



부록6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전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23호 타법개정 2018. 4.17. 법률 제15554호 타법개정 2019. 12.10. 법률 제16760호 타법개정 2019. 12.31. 법률 제16851호 일부개정 2020. 12.22. 법률 제17752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p>전부개정 2018. 9.18. 대통령령 제29181호 타법개정 2020. 7.15. 대통령령 제30833호 일부개정 2020.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일부개정 2021. 3.16. 대통령령 제31537호</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p>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p> <p>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p>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p>	<p>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한다.</p> <p>③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p> <p>④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p> <p>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받은 전년도(前年度) 보수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당의 종류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1천 원 미만의 금액은 1천 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2.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 <p>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p> <p>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div 12 \times (1 + \text{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p> <p>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div 12 \times (1 + \text{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p> <p>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div 12 \times (1 + \text{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p> <p>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times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div 12$]</p> <p>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 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이하 “공무원보수인상률”이라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 당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p>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p> <p>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p> <p>제9조(소득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각각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매년 1월 3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급여사유 발생 즉시 3. 제5조제3항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기분과 제6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 <p>②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무원연금공단</p> <p>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p> <p>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p>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종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한다)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법 제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2에 따른 사람(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치·인원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 외의 기관의 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연금취급기관장 소속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무원연금공단</p> <p>제12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공고의 방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2. 명칭</p> <p>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p> <p>4. 임직원에 관한 사항</p> <p>5.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p> <p>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p> <p>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p> <p>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p> <p>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p> <p>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p> <p>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p> <p>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p> <p>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p>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p> <p>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p>제13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 정관변경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치·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p>	<p>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p>
<p>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적립금·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3조에 따라 공단이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여금·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수납 2. 급여의 지급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推尋)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터 매입, 건설·분양 또는 임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터 매입, 건설·운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8. 법 제85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호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운용 <p>제17조(규정의 제정·개정) 공단은 그 내부 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장 재직기간</p> <p>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 	<p>제3장 재직기간</p> <p>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비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p> <p>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p> <p>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p> <p>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p> <p>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p>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시행 2020.6.11.)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p>	<p>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와 통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해당하는 휴직·직위해제·정직 또는 강등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p> <p>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p> <p>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p> <p>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p> <p>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해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급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애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공무상 장애연금 나.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4. 퇴직수당 <p>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급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제59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여부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에 따른 장애 상태 해당 여부 4.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5. 그 밖에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p>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p> <p>②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p> <p>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p>	<p>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p> <p>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한 총액을 전체 공무원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1만 원 미만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p> <p>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p> <p>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p>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p> <p>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 급여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p> <p>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p> <p>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p> <p>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p>	<p>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p> <p>[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p> <p>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 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p> <p>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p> <p>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채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12월까지 적용한다.</p> <p>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p>	<p>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으로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p> <p>제3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p>	<p>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p>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p> <p>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60회 <p>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⑦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67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p>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p> <p>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 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p>	<p>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p> <p>⑧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5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 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p>② 공단은 제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p> <p>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p> <p>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p> <p>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애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p>	<p>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의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수급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같은 조 제3호기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일시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p>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p>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 법 제28조 제3호가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p>
제2절 퇴직급여	제2절 퇴직급여
<p>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p>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p>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p> <p>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現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left[\frac{975}{1,000} + \frac{65}{10,000} (\text{재직연수} - 5) \right]$ </div> <p>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p>	<p>퇴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보내야 한다.</p> <p>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법 제43조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란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p> <p>제41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3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장애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책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p> <p>②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와 임용 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p> <p>제43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공제재직연수} \times \left(\frac{975}{1,000} + \frac{65}{10,000} \times \text{공제재직연수} \right)$ </div> <p>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p> <p>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p>	<p>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p>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p>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p>③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p> <p>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p> <p>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p> <p>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p> <p>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분할연금 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신청구 및 신청구의 취소는 각각</p>	<p>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p> <p>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p> <p>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1회로 한정한다.</p> <p>④ 분할연금을 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신청구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p>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p> <p>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p>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것으로 본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p>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p> <p>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 (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p> <p>2. 초과소득월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5만 원 + 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p> <p>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경우: 3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p> <p>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60만 원 +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p> <p>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90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p> <p>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7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 (1만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가 있는 후에 정산한다.</p> <p>④ 공단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p> <p>⑤ 공단은 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는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p> <p>⑦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p> <p>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p>	<p>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p> <p>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제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한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48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신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p>② 법 제5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p> <p>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p> <p>제53조(공사와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그 임직원의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그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0조(공사와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여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해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제3절 퇴직유족급여</p> <p>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p> <p>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p>	<p>제3절 퇴직유족급여</p> <p>제51조(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p> <p>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p> <p>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p> <p>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p> <p>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p> <p>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p> <p>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36 -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p> <p>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p> <p>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p>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p>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p> <p>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p> <p>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p>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p> <p>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등) 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등급의 구분 및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의 정도에 관하여는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영 별표 3과 별표 4를 준용한다.</p> <p>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급~제2급: 26퍼센트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제5급~제7급: 19.5퍼센트 <p>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애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비공무상 장애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애연금”은 “비공무상 장애연금”으로 본다.</p> <p>제61조(비공무상 장애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퇴직수당</p> <p>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재직기간} \times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div> <p>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4</p>	<p>2. 장애경위서</p> <p>제56조(장애등급의 개정 등) ① 비공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장애등급 개정신청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제44조·제57조 및 제60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는지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진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퇴직수당</p> <p>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p>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58조(퇴직수당)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p>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6절 급여의 제한</p> <p>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부상·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p>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p>	<p>제6절 급여의 제한</p> <p>제59조(고의·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공무상 장애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애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p>②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p> <p>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감액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1 다. 퇴직수당: 2분의1 2.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1 다. 퇴직수당: 4분의1 <p>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의 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p> <p>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법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비용부담</p> <p>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p>	<p>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p>⑥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p> <p>⑦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p>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p> <p>⑨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비용부담</p> <p>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드는 비용</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애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p> <p>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월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p> <p>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p> <p>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 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p> <p>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p>	<p>은 공무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p> <p>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반납금·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여금·반납금·환수금 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납부한 기관에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은 전(前)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p> <p>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임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한다.</p> <p>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 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p> <p>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p> <p>⑥ 연금부담금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p>	<p>금을 매월 낼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p> <p>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p> <p>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더 내거나 덜 낸 기간(일단위로 계산한다)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더 내거나 덜 낸 달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p> <p>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p>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p> <p>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p> <p>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p> <p>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p>	<p>부담한다.</p> <p>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p> <p>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확정된 경우 <p>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p> <p>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⑩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p> <p>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p> <p>④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4항(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분명히 밝혀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등 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p> <p>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단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74조 전단에 따른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p> <p>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p>	<p>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대신 받는 일시금 및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p> <p>④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74조 및 이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유족연금수급권 또는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공단은 국방부장관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p> <p>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기울·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p> <p>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p> <p>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공무원연금기금</p> <p>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p> <p>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p>	<p>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p> <p>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p> <p>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p> <p>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p> <p>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p> <p>4. 세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p> <p>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금액·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공무원연금기금</p> <p>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p> <p>1. 수입</p> <p>가. 기금적립금</p> <p>나. 기금전출금</p> <p>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p> <p>라. 원금상환금</p> <p>마. 차입금</p> <p>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p> <p>사. 그 밖의 수입금</p> <p>2. 지출</p> <p>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p> <p>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p> <p>다. 그 밖의 지출금</p> <p>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2. 금융회사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p>	<p>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금액·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다른 체육시설업</p> <p>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p> <p>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운영</p> <p>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p> <p>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p> <p>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p> <p>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p> <p>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p> <p>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p> <p>3. 퇴직연금수급자</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p> <p>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p> <p>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이내</p> <p>3. 퇴직연금수급자 2명 이내</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명 이내</p> <p>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단의 상임이사 중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다) 6명 이내</p> <p>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제7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76조제1호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p> <p>2. 제76조제2호부터 제5호(이 항 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까지의 위원: 2년.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p> <p>3. 제76조제5호의 위원 중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운영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서</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p> <p>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제82조(기금의 이율)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p> <p>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p>	<p>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p> <p>② 간사장·간사 및 서기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p> <p>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p>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p> <p>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에 예입 2. 정부 각 회계예의 예탁 3. 국채·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p>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이율 2. 부동산의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2퍼센트 이상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p> <p>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의 출산·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2.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생활안정 지원 3. 공무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4.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을 위한 사회적응 및 퇴직준비 지원 5. 그 밖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수립·추진 2.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공공행정, 사회복지, 경제, 고용, 안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8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p> <p>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 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심사의 청구</p> <p>제87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p>	<p>필요한 자료</p> <p>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p> <p>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2.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 3.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위탁 등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병원·체육시설·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및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자금 대부 및 사무실 임대를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자금의 이율: 연 3퍼센트 이상. 이 경우 대부자금의 구체적인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사무실의 임대료율: 재산가치의 2퍼센트 이상.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p>③ 법 제86조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 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p> <p>④ 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심사의 청구</p> <p>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라 한</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p>	<p>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보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보칙</p> <p>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p> <p>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p> <p>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90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보칙</p> <p>제93조(시효기산일)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88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p> <p>② 제61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88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요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p>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p>⑤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p>	<p>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p> <p>② 법 제9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③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제정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p> <p>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 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 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p> <p>제10장 벌칙</p> <p>제95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 <제15523호, 2018.3.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 법 제45조·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 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 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 법 제53조에 따른 공사와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 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 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 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 법 제67조·제71조·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 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 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 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p>제9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p> <p>부 칙 <제29181호, 2018. 9. 1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2</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정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p>③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정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p> <p>제5조(혼인기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p> <p>제7조(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 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사람으로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p>	<p>조 전단 및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4조(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51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등이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7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집행계획은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사업계획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23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퇴직수당을 반납한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 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p> <p>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p> <p>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p> <p>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p>	<p>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 제2항·제3항 및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8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p>③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p> <p>제12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제1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 1.878퍼센트 2. 2017년: 1.856퍼센트 3. 2018년: 1.834퍼센트 4. 2019년: 1.812퍼센트 5. 2020년: 1.79퍼센트 	<p>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13년 5월 1일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등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등을 뺀 차액을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27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6. 2021년: 1.78퍼센트 7. 2022년: 1.77퍼센트 8. 2023년: 1.76퍼센트 9. 2024년: 1.75퍼센트 10. 2025년: 1.74퍼센트 11. 2026년: 1.736퍼센트 12. 2027년: 1.732퍼센트 13. 2028년: 1.728퍼센트 14. 2029년: 1.724퍼센트 15. 2030년: 1.72퍼센트 16. 2031년: 1.716퍼센트 17. 2032년: 1.712퍼센트 18. 2033년: 1.708퍼센트 19. 2034년: 1.704퍼센트</p> <p>②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table border="1" data-bbox="166 979 667 1528"> <thead> <tr> <th>퇴직 전 3년 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법률 제 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구간</th><th>적용 비율 (%)</th></tr> </thead> <tbody> <tr><td>0.3 미만</td><td>300</td></tr> <tr><td>0.3 이상 0.4 미만</td><td>216.67</td></tr> <tr><td>0.4 이상 0.5 미만</td><td>175</td></tr> <tr><td>0.5 이상 0.6 미만</td><td>150</td></tr> <tr><td>0.6 이상 0.7 미만</td><td>133.33</td></tr> <tr><td>0.7 이상 0.8 미만</td><td>121.43</td></tr> <tr><td>0.8 이상 0.9 미만</td><td>112.5</td></tr> <tr><td>0.9 이상 1.0 미만</td><td>105.56</td></tr> <tr><td>1.0 이상 1.1 미만</td><td>100</td></tr> <tr><td>1.1 이상 1.2 미만</td><td>95.45</td></tr> <tr><td>1.2 이상 1.3 미만</td><td>91.67</td></tr> <tr><td>1.3 이상 1.4 미만</td><td>88.46</td></tr> <tr><td>1.4 이상 1.5 미만</td><td>85.71</td></tr> <tr><td>1.5 이상 1.6 미만</td><td>83.33</td></tr> <tr><td>1.6 이상</td><td>81.25</td></tr> </tbody> </table> <p>③ 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종전의 제23조제3항 및 이 법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법률 제13387</p>	퇴직 전 3년 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법률 제 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구간	적용 비율 (%)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p>⑧ 제1항·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제7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p> <p>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로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p> <p><별첨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p> <p>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날 사이에 퇴직한 사람 중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종전의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보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급여를 산정한다.</p> <p>⑫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률 제169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p>
퇴직 전 3년 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법률 제 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2항제1호의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구간	적용 비율 (%)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4항(이하 이 항에서 “중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4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p>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td><td>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전의 제42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1호가목에 따른 퇴직연금</td><td>제2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1호가목에 따른 퇴직연금	제2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중전의 제42조제1호가목에 따른 퇴직연금	제2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1호나목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td><td>제2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1호나목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제2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1호나목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제2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1호다목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td><td>제28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1호다목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28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1호다목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28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1호라목에 따른 퇴직일시금</td><td>제2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1호라목에 따른 퇴직일시금	제2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1호라목에 따른 퇴직일시금	제2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에 따른 유족급여(같은 호 비목부터 아목까지의 급여를 제외한다)</td><td>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에 따른 유족급여(같은 호 비목부터 아목까지의 급여를 제외한다)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중전의 제42조제3호에 따른 유족급여(같은 호 비목부터 아목까지의 급여를 제외한다)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가목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td><td>제28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가목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28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중전의 제42조제3호가목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28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td><td>제2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	제2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중전의 제4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	제28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유족연금특별부가금</td><td>제28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28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중전의 제4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28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라목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td><td>제28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라목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	제28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3호라목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	제28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유족일시금</td><td>제28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유족일시금	제28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유족일시금	제28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2호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td><td>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2호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중전의 제42조제2호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2호가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td><td>제28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2호가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	제28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중전의 제42조제2호가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	제28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2호나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보상금</td><td>제28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2호나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보상금	제28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중전의 제42조제2호나목 중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보상금	제28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table border="1"> <tr> <td>중전의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td><td>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td></tr> </table>	중전의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중전의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p>제45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p>	<p>⑬ 제1항·제2항 및 부칙 제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 해당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0년 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더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p> <p>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산정된 장기급여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금지급일부터 지급한다.</p> <p>제11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12조(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수납기관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13조(반납금의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이자율을 적용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을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 전부터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법률 제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른다.</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p>	<p>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2013년 5월 1일 전에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기간 계산은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당시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을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1988년 1월 23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 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로 본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을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p> <p>제14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p> <p>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14항에서 “중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⑬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p> <p>⑭ 제12항에 따른 중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중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중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중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 	<p>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하고,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1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⑮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7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2010년 1월 1일 전의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p> <p>제19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p>	<p>전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여 그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에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종료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영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은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7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18조(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0퍼센트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5퍼센트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30퍼센트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한 대통령령 제</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1년 10월 1일 이후의 휴직기간(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4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7년 1월 19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0조(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1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초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p> <p>제2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p>	<p>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p> <p>제19조(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096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 납부를 마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기여금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p> <p>제21조(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같은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제65조의2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p> <p>제2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p> <p>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금액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에 따른다.</p> <p>제23조(연금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p> <p>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제43조제4항·제5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p>제25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4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를 적용한다.</p> <p>제2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p>	<p>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p> <p>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p> <p>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p> <p>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p> <p>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③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p> <p>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p> <p>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p> <p>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p> <p>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p> <p>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5일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27조(비공무상 장애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장애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다.</p> <p>제28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제67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제1항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2010년: 6.3퍼센트 2. 2011년: 6.7퍼센트</p> <p>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2016년: 8퍼센트 2. 2017년: 8.25퍼센트 3. 2018년: 8.5퍼센트 4. 2019년: 8.75퍼센트</p> <p>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산입하는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기간을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30조(소급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사람은 제25조 및 제26조의</p>	<p>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p> <p>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p> <p>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p> <p>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p> <p>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p> <p>⑪ 농림수산물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3호 중 “제7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p> <p>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p> <p>③ 제항에 따른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p> <p>제31조(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및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p> <p>제3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다.</p> <p>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다.</p> <p>제34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p>	<p>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p> <p>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p> <p>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의견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p> <p>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p> <p>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p> <p>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p> <p>⑰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p> <p>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p> <p>⑲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5조(대여장학금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대여장학금은 같은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급한 대여학자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p> <p>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p> <p>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p> <p>③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p> <p>제1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p> <p>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p> <p>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p> <p>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p> <p>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p> <p>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p>	<p>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p> <p>⑳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p> <p>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p> <p>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p> <p>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㉒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p> <p>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p> <p>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p> <p>㉓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9. 공무원연금공단</p> <p>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p> <p>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p> <p>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p> <p>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p> <p>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p> <p>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p>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p>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p> <p>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로 한다.</p> <p>제3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15554호, 2018. 4.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단서 생략> 제 2조부터 제 8조까지 생략</p> <p>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p>	

시행령 [별표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 정 기 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 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연금취급기관장 (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구 분	연 금 취 급 기 관 장
1. 입법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2. 사법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3. 행정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라. 대학의 장, 교육감, 교육장 마. 각 군 참모총장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비고 : 국내에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국외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3]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제94조제1항 관련)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9. 그 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별표 4]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94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과세·환급자료, 직장 및 사업장의 종류 관련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및 「노인장기요약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 종류별 대상기관과 보수월액에 관한 자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 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8.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9.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기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1.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4.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1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6.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17.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
21.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 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 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6.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3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부칙 제10조제10항〕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총전 기간 이후 기간	32년 이상	31년 이상 ~ 32년 미만	30년 이상 ~ 31년 미만	29년 이상 ~ 30년 미만	28년 이상 ~ 29년 미만	27년 이상 ~ 28년 미만	26년 이상 ~ 27년 미만	25년 이상 ~ 26년 미만	24년 이상 ~ 25년 미만	23년 이상 ~ 24년 미만	22년 이상 ~ 23년 미만	21년 이상 ~ 22년 미만	20년 이상 ~ 21년 미만	19년 이상 ~ 20년 미만	18년 이상 ~ 19년 미만	17년 이상 ~ 18년 미만	16년 이상 ~ 17년 미만
~ 1년이하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67.46	84.33	84.33	84.33	84.33
1년초과 ~ 2년이하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67.94	76.43	84.92	84.92	84.92
2년초과 ~ 3년이하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68.42	74.12	79.82	85.53	85.53
3년초과 ~ 4년이하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68.91	73.22	77.52	81.83	86.14
4년초과 ~ 5년이하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69.48	72.95	76.43	79.90	83.37
5년초과 ~ 6년이하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69.91	72.82	75.74	78.65	81.56
6년초과 ~ 7년이하							70.49	70.49	70.49	70.49	70.49	70.49	70.49	73.01	75.53	78.05	80.57
7년초과 ~ 8년이하								71.01	71.01	71.01	71.01	71.01	71.01	73.23	75.45	77.67	79.89
8년초과 ~ 9년이하									71.39	71.39	71.39	71.39	71.39	73.37	75.36	77.34	79.32
9년초과 ~ 10년이하										72.00	72.00	72.00	72.00	73.80	75.60	77.40	79.20
10년초과 ~ 11년이하											72.39	72.39	72.39	74.03	75.68	77.32	78.97

적용하는 비율>

(단위: %)

15년 이상 ~ 16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월 이상 ~ 1년 미만	신 규 자
84.33	84.33	84.33	84.33	84.33	84.33	83.69	83.04	81.90	81.76	81.11	80.47	79.83	79.18	78.54	77.90	77.25
84.92	84.92	84.92	84.92	84.92	84.92	84.53	83.88	82.72	82.58	81.93	81.28	80.63	79.98	79.33	78.68	78.03
85.53	85.53	85.53	85.53	85.53	85.53	84.87	84.22	83.06	82.92	82.26	81.61	80.96	80.31	79.66	79.00	78.35
86.14	86.14	86.14	86.14	86.14	86.14	85.48	84.82	83.65	83.51	82.85	82.20	81.54	80.88	80.22	79.57	78.91
86.85	86.85	86.85	86.85	86.85	86.85	86.18	85.52	84.34	84.20	83.54	82.87	82.21	81.55	80.89	80.22	79.56
84.47	87.39	87.39	87.39	87.39	87.39	86.72	86.05	84.87	84.72	84.05	83.39	82.72	82.06	81.39	80.72	80.06
83.08	85.60	88.12	88.12	88.12	88.12	87.45	86.77	85.58	85.43	84.76	84.09	83.41	82.74	82.07	81.40	80.72
82.11	84.33	86.55	88.77	88.77	88.77	88.09	87.41	86.21	86.06	85.38	84.70	84.03	83.35	82.67	82.00	81.32
81.30	83.29	85.27	87.25	89.24	89.24	88.56	87.88	86.66	86.51	85.83	85.15	84.47	83.79	83.11	82.43	81.75
81.00	82.80	84.60	86.40	88.20	90.00	89.31	88.63	87.40	87.25	86.57	85.88	85.19	84.51	83.82	83.13	82.45
80.61	82.26	83.90	85.55	87.19	88.84	89.79	89.10	87.87	87.72	87.03	86.34	85.65	84.96	84.27	83.58	82.89

종전 기간	32년 이상	31년 이상 ~ 32년 미만	30년 이상 ~ 31년 미만	29년 이상 ~ 30년 미만	28년 이상 ~ 29년 미만	27년 이상 ~ 28년 미만	26년 이상 ~ 27년 미만	25년 이상 ~ 26년 미만	24년 이상 ~ 25년 미만	23년 이상 ~ 24년 미만	22년 이상 ~ 23년 미만	21년 이상 ~ 22년 미만	20년 이상 ~ 21년 미만	19년 이상 ~ 20년 미만	18년 이상 ~ 19년 미만	17년 이상 ~ 18년 미만	16년 이상 ~ 17년 미만
이후 기간																	
11년초과 ~ 12년이하												73.09	73.09	74.61	76.14	77.66	79.18
12년초과 ~ 13년이하													73.89	75.31	76.73	78.15	79.58
13년초과 ~ 14년이하														76.13	77.46	78.80	80.14
14년초과 ~ 15년이하															78.24	79.50	80.76
15년초과 ~ 16년이하																80.35	81.55
16년초과 ~ 17년이하																	82.29
17년초과 ~ 18년이하																	
18년초과 ~ 19년이하																	
19년초과 ~ 20년이하																	
20년초과 ~ 21년이하																	
21년초과 ~ 22년이하																	

15년 이상 ~ 16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월 이상 ~ 1년 미만	신 규 자
80.70	82.23	83.75	85.27	86.80	88.32	89.16	89.97	88.73	88.58	87.88	87.18	86.49	85.79	85.09	84.40	83.70
81.00	82.42	83.84	85.26	86.68	88.10	88.84	89.56	89.70	89.55	88.84	88.14	87.43	86.73	86.02	85.32	84.62
81.47	82.81	84.14	85.48	86.81	88.15	88.80	89.43	89.50	90.64	89.93	89.21	88.50	87.79	87.07	86.36	85.65
82.03	83.29	84.55	85.81	87.07	88.34	88.91	89.47	89.46	90.53	91.04	90.31	89.59	88.87	88.15	87.43	86.70
82.75	83.95	85.14	86.34	87.54	88.74	89.26	89.75	89.68	90.68	91.13	91.55	90.82	90.08	89.35	88.62	87.89
83.44	84.58	85.72	86.87	88.01	89.15	89.61	90.04	89.91	90.86	91.25	91.62	91.97	91.22	90.48	89.74	89.00
84.29	85.38	86.47	87.57	88.66	89.76	90.16	90.54	90.36	91.26	91.60	91.92	92.22	92.50	91.75	91.00	90.25
	86.14	87.19	88.24	89.29	90.34	90.70	91.03	90.80	91.66	91.95	92.22	92.48	92.72	92.95	92.19	91.42
		87.86	88.87	89.88	90.89	91.20	91.50	91.21	92.04	92.28	92.52	92.73	92.93	93.12	93.29	92.52
			89.67	90.64	91.62	91.89	92.14	91.82	92.60	92.81	93.01	93.19	93.35	93.50	93.63	92.86
				91.47	92.41	92.64	92.86	92.49	93.25	93.42	93.58	93.72	93.85	93.97	94.07	93.30

종전 기간 이후 기간	32년 이상	31년 이상 ~ 32년 미만	30년 이상 ~ 31년 미만	29년 이상 ~ 30년 미만	28년 이상 ~ 29년 미만	27년 이상 ~ 28년 미만	26년 이상 ~ 27년 미만	25년 이상 ~ 26년 미만	24년 이상 ~ 25년 미만	23년 이상 ~ 24년 미만	22년 이상 ~ 23년 미만	21년 이상 ~ 22년 미만	20년 이상 ~ 21년 미만	19년 이상 ~ 20년 미만	18년 이상 ~ 19년 미만	17년 이상 ~ 18년 미만	16년 이상 ~ 17년 미만
22년초과 ~ 23년이하																	
23년초과 ~ 24년이하																	
24년초과 ~ 25년이하																	
25년초과 ~ 26년이하																	
26년초과 ~ 27년이하																	
27년초과 ~ 28년이하																	
28년초과 ~ 29년이하																	
29년초과 ~ 30년이하																	
30년초과 ~ 31년이하																	
31년초과 ~ 32년이하																	
32년초과																	

15년 이상 ~ 16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월 이상 ~ 1년 미만	신 규 자
					93.26	93.46	93.64	93.24	93.96	94.10	94.23	94.34	94.44	94.52	94.59	93.81
						94.46	94.61	94.16	94.86	94.97	95.07	95.15	95.22	95.28	95.32	94.53
							95.64	95.16	95.84	95.92	95.98	96.04	96.08	96.11	96.12	95.33
								96.10	96.75	96.80	96.84	96.87	96.88	96.89	96.87	96.07
									97.86	97.88	97.90	97.90	97.89	97.86	97.82	97.02
										98.90	98.89	98.86	98.83	98.78	98.72	97.90
											100.08	100.03	99.97	99.90	99.81	98.99
												101.12	101.04	100.94	100.84	100.00
													102.17	102.06	101.93	101.09
														103.23	103.08	102.23
															104.30	103.44



부록7 /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 정 2018. 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2018. 4.17. 법률 제15554호 일부개정 2021. 3.23. 법률 제17977호</p>	<p>제 정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2019. 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2020. 6. 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 일부개정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70호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p>
<h3>제1장 총칙</h3>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p> <p>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 	<h3>제1장 총칙</h3> <p>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에게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p> <p>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p> <p>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p> <p>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p> <p>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p> <p>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p> <p>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p> <p>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p> <p>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p> <p>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p>	<p>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p> <p>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과 제2항의 장해 상태에 있던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p>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p>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p>	<p>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p>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p> <p>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p> <p>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p> <p>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p> <p>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p> <p>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p> <p>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p> <p>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p> <p>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p> <p>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p> <p>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p> <p>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p> <p>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p> <p>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p> <p>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보안정보 수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 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p>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p>	<p>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37조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5. 제40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①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p> <p>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회의 위원 및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① 인사혁신처장[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은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그 밖에 공무원상 부상 또는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급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급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애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연금 나. 장애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p>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p>	<p>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급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급여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에 관한 결정서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도 보내야 한다.</p> <p>④ 공단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를 받으면 각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p> <p>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p> <p>⑥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요양급여를 말한다.</p> <p>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① 급여는 법 제61조제6항과 이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와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이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청구한 사람(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급여를 선택하여 청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p>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p> <p>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받은 급여는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 정기에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p> <p>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해급여 2. 법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金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12조(급여의 지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p> <p>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p>	<p>② 제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p>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div data-bbox="739 796 1233 88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36 - (\text{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div 36]$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 원급여액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요양급여 나.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활급여(이하 “재활급여”라 한다) 다. 법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이하 “장해일시금”이라 한다) 라.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 마. 법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바.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부조급여(이하 “부조급여”라 한다) 3. 법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보상금”이라 한다): 원급여액의 2분의 1 <p>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등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등의 분묘·제기(祭器)·기념비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연금지급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급여분을 지급한다.</p> <p>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 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p> <p>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p> <p>제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p> <p>제5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한다.</p> <p>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p> <p>제24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는 금액 <p>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p> <p>③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애급여,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2. 제32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p>②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이하 “퇴직유족</p>	<p>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60회 <p>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⑦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p> <p>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25조(결손처분) 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연금”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1항·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p>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p> <p>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이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p> <p>②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미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p> <p>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p>	<p>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p>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③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p> <p>④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p> <p>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p> <p>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p> <p>⑦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p> <p>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p>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p> <p>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등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등을 당하였다는</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원수행 중인 공무원 <p>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p> <p>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제2절 요양급여	제2절 요양급여
<p>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p>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하고,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p> <p>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23조(재요양)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p>	<p>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과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p> <p>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p>③ 제2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④ 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공무상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① 공단이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재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된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과정술로 삽입된 금속편 등 내과 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p>② 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무원 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과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p>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 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p> <p>⑥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과 이 영 제29조를 준용한다.</p> <p>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재활치료 등에 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p> <p>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p>제3절 재할급여</p>	<p>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p> <p>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p> <p>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공무원 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34조를 준용하고, 그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p> <p>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요양의 종결)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3절 재할급여</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p>② 제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p> <p>③ 제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심리상담비)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p> <p>② 제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p> <p>③ 제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애 2. 척추의 변형, 기능장애 또는 신경장애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애(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3에 따른 장애등급 제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p>② 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항의 장애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공무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p> <p>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장애급여</p> <p>제28조(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p>제29조(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의 금액) ① 장애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p>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심리상담은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장애급여</p> <p>제40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규정된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p> <p>②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장애급여의 청구)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애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장애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p> <p>제42조(장애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p> <p>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p> <p>②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p>	<p>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에 보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p>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6급제5호, 제8급제2호(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는 장애(척추 신경근장애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p> <p>3.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제7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3호·제15호, 제10급제7호·제10호·제11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애(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p> <p>4.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별표 3에 따른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와 공단에 알려야 한다.</p> <p>⑤ 제3항 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와 공단에 보내야 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31조(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p> <p>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p>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장해연금</p>	<p>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⑧ 제7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각각 제40조제1항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p> <p>제46조(장애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 상태의 변경 또는 장해등급의 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진단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사망한 날이 제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내야 한다.</p> <p>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p>	<p>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p> <p>②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p> <p>③ 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간병급여</p> <p>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간병급여</p> <p>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5와 같다.</p> <p>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p> <p>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재해유족급여</p> <p>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p> <p>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p> <p>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의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재해유족급여</p> <p>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접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p> <p>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p>②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p> <p>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 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p>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부조급여</p> <p>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p> <p>② 제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p> <p>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p> <p>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부조급여</p> <p>제53조(재난부조금)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p> <p>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p>③ 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표 등본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43조(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p> <p>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p>	<p>2. 건축물대장 등본</p> <p>제54조(사망조위금) ①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p>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p>③ 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급여의 제한</p> <p>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급여의 제한</p> <p>제55조(고의·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p>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p> <p>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p>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p> <p>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p> <p>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계획의 마련 2.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해예방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원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4. 공무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4장 비용부담</p>	<p>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p> <p>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p> <p>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재해로 인해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원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p>③ 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 질병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직무·사회심리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계획의 마련 2.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 4. 공무원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p>제4장 비용부담</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할·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p> <p>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p>	<p>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p> <p>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p>②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9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연도 총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요예상액을 각 호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제8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3. 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4. 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p>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p> <p>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심사의 청구</p> <p>제51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p>	<p>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심사의 청구</p> <p>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과 그 밖에 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가 인사혁신처장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 그 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공단(심사청구가 공단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것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p> <p>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인사혁신처장·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1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는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p> <p>⑤ 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 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 지원 2.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p>②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p> <p>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① 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 관련 법적·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 심사 관련 공무원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 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p>② 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한다.</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의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p> <p>⑥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p> <p>②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청구인이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회의 위원이 그 안건의 대상이 된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p>② 안건의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②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p> <p>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p> <p>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p> <p>제56조(기관장의 확인)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p>	<p>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p> <p>② 간사 및 서기는 제67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p> <p>제75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77조(시효기산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하여야 한다.</p> <p>② 기관장은 제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57조(조사·보고 등) 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요한 보고·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p>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p> <p>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p>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p> <p>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란 별표 6에 따른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7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p>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p>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p> <p>②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규정과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이라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③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의 인정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기관장(소속 기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④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순직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을 사유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날부터 그 급여의 지급 결정(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까지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①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이하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이라 한다)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연금취급기관장(소속 연금취급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을 관할하는 연금취급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연금취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와의 고용관계 및 담당 사무를 증명하는 자료 2. 사망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근거 자료 3. 사망경위 조사서 <p>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을 위한 청구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류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등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공단에 보내야 한다.</p> <p>⑥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하여 법 제5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 제54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수행</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 재할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결정 3. 급여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채납 처분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 7.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8.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4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업무의 범위, 재위탁대상자, 재위탁비용지급 등 필요한</p>	<p>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의 인정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p> <p>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5. 제16조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7. 제80조에 따른 사실 확인의 통보 8. 제8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p>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2항제2호에 따라 재위탁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 2. 위원회의 위원 3. 제61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한 업무(제61조제6항에 따라 재위탁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 	<p>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여의 환수금 등,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 제84조제2호에 따른 급여 차액 등, 제84조제5호에 따른 급여 종류의 변경에 따라 반납받는 금액 등의 수납 3. 법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 <p>② 공단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p>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급여 청구의 접수·심의·결정·지급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57조제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15조에 따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연금 등의 지급 4.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5. 법 제17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 지급 6.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7. 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재요양 급여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개정 및 둘 이상 장해의 병합처리 10. 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1. 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급여의 지급 12. 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3.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15. 법 제51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16.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사·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 17. 법 제59조 및 이 영 제81조에 따른 보훈 등 예우 18. 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19.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벌칙 적용 및 과태료 <p>② 법 제7조제6항 및 제5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 및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기관 등 또는 법 제57조제항 및 제58조제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8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2.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 <제15522호, 2018. 3.20.></p>	<p>부 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1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 제10조제2항(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및 부칙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급여 등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는 이 영 시행 당시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p>	<p>제3조(급여 등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22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는 이 영 시행 당시 급여 등이 청구되어 급여의 결정을 위한 심의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종합장애등급 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비고 단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장애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중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애유족연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함께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직권에 의한 장애등급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p>	<p>제6조(장애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유족인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손자녀의 아버지를 포함한다) 및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심사 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5조(간병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p>	<p>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17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이후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발생한 사람(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p> <p>①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p> <p>제8조(보훈 등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보훈 등 예우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9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제59조(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는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제59조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제2항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밖의 사항은 중전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p> <p>제11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3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중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741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공단에 같은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하여 심의 중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제10조(심의회 위원 및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또는 제83조의3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또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3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정한다.</p> <p>제11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을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38조, 제63조, 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p> <p>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p>	<p>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0년 5월 31일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같은 영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같은 영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재요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6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공무상요양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및 같은 영 제33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그 장해보상금의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 이후부터 같은 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4조(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같은 법 제47조제2항(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부조급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에 한 행위와 인사혁신처장 등이 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을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한 행위 또는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연금공단, 기관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p> <p>②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한다.</p> <p>제15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140 1451 667 1764"> <tr> <td>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상요양비</td><td>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 급여</td></tr> <tr> <td>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재해보조금</td><td>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td></tr> <tr> <td>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사망조위금</td><td>제8조제6호나목에 따른 사망조위금</td></tr> <tr> <td>종전의 「공무원연금법」</td><td>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td></tr> </table>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상요양비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 급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재해보조금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8조제6호나목에 따른 사망조위금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	<p>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09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급여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15조(시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을 적용한다.</p> <p>제1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p> <p>제1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p> <p>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③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상요양비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 급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재해보조금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8조제6호나목에 따른 사망조위금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	급여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가목 및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	제8조제3호가목에 따른 장해연금	⑥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나목 및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보상금	제8조제3호나목에 따른 장해일시금	제57조의7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유족급여(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급여를 제외한다)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⑦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가목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바목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⑨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사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아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급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
		⑬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공무원

제16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법률 제1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급여의 지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급여의 지급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18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요건, 환수 절차, 환수금 및 이자의 가산, 결손처분,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다.</p> <p>제19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57조(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57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p> <p>제20조(요양 및 재요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요양 및 재요양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요양비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공무원요양 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요양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그 요양기간 동안 공무원요양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1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p>	<p>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로 한다.</p> <p>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⑯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의2제12호 중 “공무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공무원연금 가입과 수급자료 및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자료”로 한다.</p> <p>⑰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1급·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을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한다.</p> <p>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p> <p>⑲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3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제3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제42조의3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제46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⑳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6항을 적용한다.</p> <p>제22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을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 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3조(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원 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p> <p>제24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p> <p>제25조(「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 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 다)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당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p> <p>②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순직 공무원의 범위는 법률 제7907호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 례에 따른다.</p> <p>제26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일인</p>	<p>령」 제28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 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 로 한다.</p> <p>제6조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을 “「공무원 재해보상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으로,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를 “제41조에 따른 장애경위 조사서” 로, “제52조”를 “제50조”로 한다.</p> <p>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 금·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p> <p>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 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공무원 재해보상법」</p> <p>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p> <p>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 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 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원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p> <p>⑦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 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한다.</p> <p>⑧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2016년 1월 1일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7조(순직공무원 등의 용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및 그 수급자로 본다.</p> <p>② 법률 제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본다.</p> <p>③ 법률 제392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당시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는 같은 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과 그 수급자로 본다.</p> <p>제28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선임,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의2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p> <p>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p> <p>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5조제4항제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p> <p>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p>	<p>제15조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③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한다.</p> <p>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p>⑤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p> <p>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⑦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 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p> <p>⑦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5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p> <p>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p> <p>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p>	<p>원 재해보상”으로 한다.</p> <p>㉞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p> <p>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교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㉞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p> <p>㉞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38조의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p> <p>㉞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㉞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p> <p>㉞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제33조의7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p> <p>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제30256호, 2019. 12. 24.></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p> <p>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초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p>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p>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p> <p>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p> <p>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부터 ⑩까지 생략 <p>제3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30760호, 2020. 6. 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별표 7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부터 ⑧까지 생략 <p>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30893호, 2020. 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및 ③ 생략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p>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⑧부터 <65>까지 생략 <p>제4조 생략</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p> <p>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p> <p>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p> <p>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⑬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p>	<p>부 칙 <제30970호, 2020. 8. 2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재해보상부담금 부담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재해보상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p> <p>부 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경우</p> <p>⑭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p> <p>제6조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원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로 한다.</p> <p>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⑯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p> <p>⑰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7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p> <p>제64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p> <p>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종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5554호, 2018. 4.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p>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p>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생략</p> <p>부칙 <제17977호, 2021. 3. 2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1]

공무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환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장애등급 (제40조제1항 본문 관련)**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교: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2개 부위 이상의 장애 상태에 대한 종합장애등급표 (제40조제1항 단서 관련)

장애등급(1) \ 장애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 비고: 장애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애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
 (예: 장애등급이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이 제5급으로 된다). 다만,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장애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애등급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제48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요건
상시 간병 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 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애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6]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제79조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8.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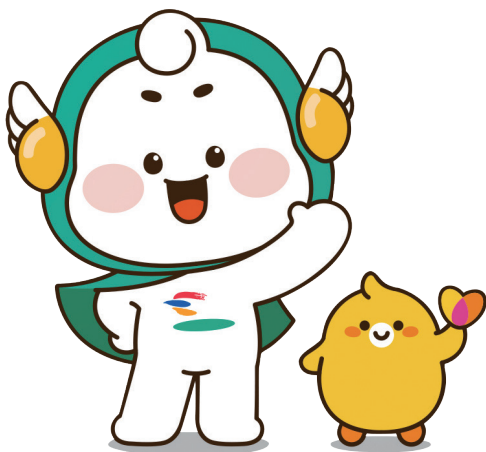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79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세에 관한 자료
7.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4.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16.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19.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6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공무원연금 실무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열정적인 슈퍼히어로 ‘믿음이’

안녕~내 이름은 믿음이~

나는 국민과 공무원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태어났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야. 너무 멀리 있다고?

아니, 우린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

국민과 공무원 가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전국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는 요술 망토를 입고
어디서든 소통 가능한 헤드셋을 끼고 있거든.

요술 망토와 헤드셋만 있으면 난 어디라도 날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는
슈퍼히어로란다. 언제든지 나를 불러줘~



귀여운 파트너 ‘동행이’

반가워~

나는 행운을 나눠주는 황금앵무새 동행이~

국민과 공무원 가족에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믿음이와 함께 행복을 전파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고객과 항상 함께하듯
나도 믿음이 옆에서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있어.

얼마 전에 믿음이가 선물해준 행복을 배가시켜주는
‘HAPPY U’ 하트 스톤으로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